



2023.12.31.

국회미래연구원 | 연구보고서 | 23-11호

국민과 미래대화 연구: 이머징 시티즌을 찾아서

박성원, 박현석, 이상직, 김태경, 전 준, 오재환, 조근희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국민과 미래대화 연구: 이머징 시티즌을 찾아서



연구진

■ 내부 연구진 ■

박성원 연구위원(연구책임)

박현석 연구위원

이상직 부연구위원

김태경 부연구위원

■ 외부 연구진 ■

전준 교수(충남대 사회학과)

오재환 부원장(부산연구원)

손헌일 책임연구위원(부산연구원)

권태상 연구위원(부산연구원)

박해림 위촉연구위원(부산연구원)

이용인 위촉연구위원(부산연구원)

박홍열 위촉연구위원(부산연구원)

김선우 연구위원(부산연구원)

김형규 위촉연구위원(부산연구원)

조영헌 위촉연구위원(부산연구원)

하지훈 위촉연구위원(부산연구원)

정세화 위촉연구위원(부산연구원)

김창희 전문분석위원(부산연구원)

조근희 대표(퓨처씽킹센터)

-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 보고서를 무단 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 ◆ 본 보고서의 내용은 국회미래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발 | 간 | 사

국민과 미래대화 연구는 연구진이 국민과 함께 미래를 전망하고 바라는 미래사회를 논의하는 연구과제입니다. 미래연구가 일부 전문가나 정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을 세심하게 고려하면서 다양한 개인의 참여로 완성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부산지역 주민들, 청년정치인들, 원폭피해자, 원전마을 사람들, 다문화이주민 여성들, 가족돌봄청년들, 대안학교 교사, 지방의 인문사회대학원생들, 소년범 변호인, 탈북여성들과 이들의 자녀들, 성소수자들 등 다양한 시민을 만났습니다. 이들과 함께 여러 가능한 미래를 전망하고 이 중에서 실현되기를 희망하는 미래와 필요한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미래를 전망하는 자리에서 이분들은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본 연구는 소수와 약자의 관점에서 우리사회가 어떤 미래를 지향해야 하는지 연구했습니다. 이런 노력은 2021년 국회미래연구원이 제시한 선호미래상으로 '무엇보다 소수와 약자를 돌보는 성숙사회'를 실현하는 데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연구진은 소수와 약자라는 표현보다 창발적 시민(이머징 시티즌, emerging citizen)이라는 표현을 더 선호합니다. 우리사회 소수와 약자들은 사회가 돌봐야 하는 일방적 수혜의 대상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연구진은 이들이 발신하는 문제들은 우리사회가 미래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은 수혜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사회 혁신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이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음을 올해 연구에 참여해주시고 협력해주신 시민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면의 시민들을 만나 깊이 있는 인터뷰를 진행하고 미래전망워크숍을 개최하면서 연구를 추진한 연구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연구에 참여해주신 지역 시민들, 사회활동가, 전문가, 청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의 활동에서 미래의 대안을 찾을 수 있고, 이들과 함께 도출하는 정책이야말로 유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과 미래대화는 지속하여야 합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우리사회에 대안적 미래를 제시하고 진전시키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12월

국회미래연구원장 김 현 곤

제1장 국민과 미래대화의 시작	1
제1절 미래대화의 정의와 사회변화이론적 배경	3
제2절 성장사회의 한계와 성숙사회로 가는 길	10
제3절 이머징 시티즌에 주목하는 이유	13
제2장 지역의 미래에서 온 시민들	21
제1절 왜 지역주민을 만나는가	23
제2절 부산시민과 미래대화	27
제3장 에너지와 안보의 미래에서 온 시민들	43
제1절 원전마을 주민	45
제2절 원폭피해자	59
제4장 노동과 교육의 미래에서 온 시민들	79
제1절 싸우는 이주 여성	81
제2절 가족돌봄청년들(영케어러)	98
제3절 지방대학 인문사회대학원생들	108
제4절 대안학교 교사	121

제5장 미래 시민성을 묻는 시민들	133
제1절 소년범	135
제2절 탈북 여성 및 제3국 출생 자녀	157
제3절 성소수자	174
제6장 정치의 미래에서 온 시민들	193
제1절 청년정치인들과 미래대화	195
제2절 성장사회의 대안과 실천 과제	207
제7장 이머징 시티즌과 함께 성숙사회로	217
제1절 이머징 시티즌의 미래 인식은 사회적 경고등	219
제2절 혁신적인 시민들의 미래인식과 대안	225
제3절 미래대화의 심화 과정 고도화	230
제4절 ‘더’ 포용적 사회를 위한 미래대화 연구	238
부록	243
참고문헌	251
Abstract	259

[표 1-1] 2021년 소수비전 인터뷰 대상자	17
[표 1-2] '이머징 소수' 세미나 참석자	18
[표 2-1] 부산시민 미래대화 참가자 인구학적 특성(총58명 답변)	27
[표 2-2] 부산시민과 미래대화 프로그램	30
[표 2-3] 사전 선택	31
[표 2-4] 사후 선택	32
[표 2-5] 미래대화 이후 시민들이 답한 미래별 키워드	33
[표 2-6] 참여자들이 쓴 미래 앞에 붙여보고 싶은 단어	37
[표 3-1] 원폭피해자 자문	59
[표 3-2] 전체 피폭자 현황	61
[표 3-3] 한인 피폭자의 재판투쟁 일지	68
[표 3-4] 한국인원폭피해자 지원 관련 국회 발의 추이	76
[표 4-1] 가족돌봄청년 참여자의 인적 구성	100
[표 4-2] 지방대학 대학원생들 인터뷰 참여자 인적 구성	109
[표 5-1]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현황(2023년 6월말 기준)	157
[표 5-2] 탈북 여성 자녀들의 정치적 소속과 지위	159
[표 5-3] 차별금지사유 비교	183
[표 5-4] 차별금지법안 목록	190
[표 6-1] 청년정치인 미래대화 참가자 인구학적 특성	197
[표 6-2] 미래대화 개최 전, 사전설문에서 응답자의 선택	199
[표 6-3] 4가지 미래그룹별로 '왜 그 미래가 등장했는지' 이유를 논의한 내용	204
[표 6-4] 4가지 미래그룹별 '그 미래에 새롭게 떠오를 미래 이슈' 논의 내용	204
[표 6-5] 미래대화 이후, 사후설문에서 응답자의 선택	205
[표 7-1] 최근 10년 혐오와 차별의 대상 및 복합차별을 다룬 문헌 분류	221

그림 목 차

[그림 1-1] 이머징 시티즌의 등장과 사회적 전환의 시작	13
[그림 1-2] 새로운 미래로 진입할 때 일어나는 변화들	15
[그림 1-3] 이머징 시티즌과 함께 가는 미래 한국	16
[그림 2-1] 부산시민과 미래대화 추진과정	26
[그림 2-2] 다가올 4가지 미래의 유형과 주요 요인들	28
[그림 2-3] 숙의토론으로 가능미래와 선호미래를 논의하는 부산시민들	29
[그림 2-4] 부산 청년인구 연령계층별 순이동(2001~2020)	39
[그림 4-1] 5개 오디세이 학교 위치와 특성	121
[그림 4-2] 2011~2021년 한국인의 자살 동기	123
[그림 4-3] OECD 국가별 장애출현율	126
[그림 4-4] 한국의 장애판정기준과 WHO 권고 장애판정기준	127
[그림 6-1] 청년정치인과 미래대화 과정	198
[그림 7-1] 시민들의 마음에 그려져 있는 붕괴의 원인과 파장	225
[그림 7-2] 선호미래 실현을 위한 시민들의 제안	227
[그림 7-3] 부산시민과 미래대화의 3단계 추진 과정	229

요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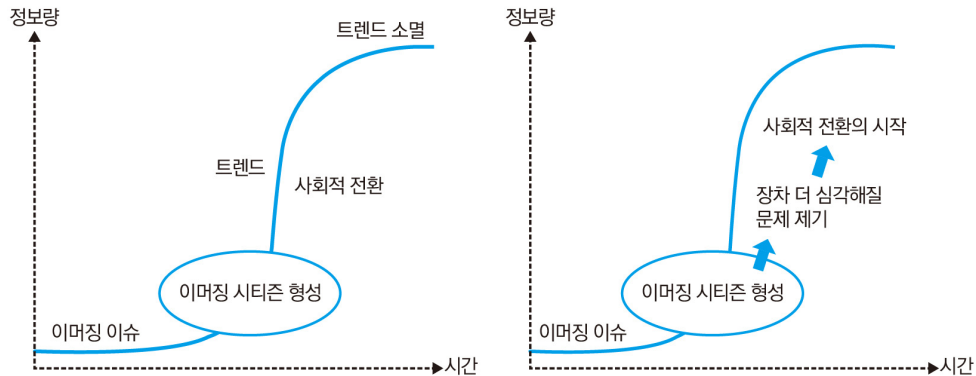
1 국민과 미래대화의 시작

□ 국민과 함께 미래를 예측하고 사회전환의 비전을 제시

- 국회미래연구원은 2018년 창립부터 국민을 미래전망 파트너로 초대
 - 2019~2022년까지 한국사회의 새로운 비전으로 ‘도전과 분배의 사회’와 ‘성숙사회’를 제시
- 정책영역에서 ‘미래대화’는 중요한 방법론
 - 미래대화는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살고 싶은 미래를 전망하고 실현의 방안을 찾는 과정
 - 유럽은 2014년부터 유럽의회의 모든 국가가 의무적으로 시민들과 미래대화를 추진, 5년 동안 유럽 시민 26만 명이 미래대화에 참여

□ 이머징 시티즌(창발적 시민)에 주목하는 이유

- 이머징 시티즌(emerging citizen)은 소수약자로 불렸던 개인을 사회 혁신의 주체로 보자는 생각에서 새로 만든 말
 - 이들이 당면한 사회문제는 곧 사회 전체 구성원의 문제로 확대될 것
 - 지금은 소수지만 앞으로 다수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개인들
- 사회가 당면할 미래 이슈를 앞서 경험한 이머징 시티즌에 주목
 - 앞서 미래 이슈를 경험했기에 문제를 풀 대안을 실험하고 적용한 시민들(그림1 참조)
 - 이들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이며 연구자는 이들의 사회적 파급력을 예측해야 미래를 좀 더 균형감 있게 전망할 수 있음



[그림 1] 이머징 시티존의 등장과 사회적 전환의 시작

2 지역의 미래에서 온 시민들

□ 부산시민과 미래대화

● 지역주민과 미래대화 프로젝트 추진

- 국회미래연구원은 2022년부터 ‘선호미래연구’를 ‘국민과 미래대화 연구’로 확장, 17개 시도의 주민들과 지역의 미래를 예측하는 프로젝트를 수행
- '23년에는 부산연구원, 부산시청과 함께 ‘부산시민과 미래대화’ 추진

□ 부산시민들이 경고한 ‘붕괴의 미래’에 적극적 대응

● 시민 참여자들은 가장 가능한 미래로 ‘붕괴사회’를 예상

- 전통산업 쇠퇴와 일자리 감소로 청년층의 지역 이탈이 증가, 고령화에 대응하지 못해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안감(돌봄 공백 등)에 대안 제시 필요
- 수질 오염, 핵발전소 사고, 다양한 환경 파괴로 전염병의 창궐, 기후위기의 해수면 상승은 부산이 타지역과 달리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래 사건
- 원도심 노후 주택 증가, 지역 간 인프라 격차, 도심의 녹지공간 부족 등도 시민들이 우려하는 요인이며 중장기적 대안 마련 필요

□ ‘보존사회’라는 선호미래에 다가가는 정책의 개발

● 참여자들이 가장 바라는 미래는 ‘보존사회’, 다양한 성장에 주목해야

-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만 매진한 시민들이 이제는 환경보존, 문화예술, 정신 건강, 교육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목소리에 주목해야 함
- 시민들은 아파트 위주의 도시보다 작은 주택들이 모인 주거문화와 다채로운 골목길이 형성되면 전국의 청년들이 부산으로 모여들 것이라고 예측

3 에너지와 안보의 미래에서 온 시민들

□ 원전마을 주민

● 원전을 둘러싼 거대 담론이 간과하고 있는 목소리의 주체들

- 일본이 방류한 ‘오염수’를 통해 전세계인들은 구조적으로는 월성 주민들과 같은 위치, 이들의 목소리는 ‘선체험자’로서의 의미
-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표현에 압축적으로 담겨 있는 주류적 전망은 희망사고적 바람임을 이들이 드러냄
- 원전마을 주민은 과연 우리가 폐로를 할 수 있는가, 라고 묻고 있음
- 이들의 목소리는 에너지 전환과 핵 오염수 문제에 지역성과 역사성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 원전의 운영 과정 전반에 시민의 참여 확대 필요

□ 원폭피해자

● 원폭피해자는 미래의 최악의 위험을 이미 경험한 시민들

- 인류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유일한 핵무기의 참화를 몸으로 체험한 생존자, 증언자로서의 의미
- 식민, 전쟁, 강제동원 및 인종적 차별, 피폭, 해방 이후 구조적 차별과 배제, 원폭증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 등 숏한 인권의 침해를 경험한 이들은 미래 인권, 평화, 통합 의제에 대한 중요한 증언자, 생존자로서 함의

- 한국인원폭피해자는 한국 사회와 정부는 물론 미·일 정부 및 세계 시민사회에 한국인원폭피해자의 존재를 인식시키고 성찰을 촉구
- 궁극적으로 한국이 원폭피해자의 경험, 유산을 바탕으로 글로벌 비핵평화운동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사회로 탈바꿈해야 함을 요구

4 노동과 교육의 미래에서 온 시민들

□ 싸우는 이주 여성

● 충청북도 옥천 ‘옥천군결혼이주여성협의회’ 이야기

- 한국사회에서 이주자는 지난 20년간 증가, 미래에도 늘 것으로 전망
- ‘지금 여기서’ 나로 살기 위해 공동체를 만드는 투쟁을 전개하는 이주여성의 삶을 지역의 맥락에서 고찰
- 좁게는 결혼이주여성을, 넓게는 이주자를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도구적, 차별적 시각을 확인
- 이들의 목소리는 한국사회에 시민 관계를 새롭게 재편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창발적 시민성의 위치성을 가짐

□ 가족돌봄청년들(영게어러)

● 돌봄 대상자에 따른 돌봄 서비스 및 정책과 제도 필요

- 부양가족의 연령과 성별을 고려해서 지원 서비스의 양을 고려할 필요

●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서비스 및 정책과 제도

- 이들이 미래 진로탐색 및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 및 컨설팅 필요

● 커뮤니티 연결과 단절을 고려

- 자신의 돌봄 상황에 대해서 이웃, 친구, 지인 등에게 공개하게 되면서 도움을 받거나 정서적 지지를 받는 등 긍정적으로 작용

- **실효성 있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조례 제정**

- 지원조례 제정에 있어 선언적이기보다 실효성 있는 조례가 필요

□ **지방대학 인문사회대학원생들**

- **이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를 고민**

- 소액의 정책지원만으로도 자신들의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으며, 최소한의 국가적 지원은 이뤄져야 함
- 생산성과 효율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투자의 개념으로 수행되어 온 국가 연구개발 정책이, 사회적 의무의 개념을 바탕으로 수행되어야 함
- 상당수의 국가적 지원은 이미 궤도에 다다른 소수의 연구자에게 집중적으로 지원, 지방 대학원생들은 이로부터 발생하는 낙수효과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 대학원생들을 집중 대상으로 하는 정책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함

□ **대안학교 교사**

- **21세기 대안학교의 의미**

- ‘기승전-입시’로 귀결되는 초중고 학창 시절에 1년 동안 새로운 배움을 제공하는 대안학교 오디세이는 새로운 혁신적 실험
- 학생들은 나와 공동체를 엮어서 생각하는 방법, 목소리가 없거나 작더라도 사회의 다양한 소수약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방법, 나의 생각을 지속해서 이야기하고 같은 뜻을 품은 친구들을 발견하는 방법, 다양한 방식으로 배우고 배움을 지속하는 방법, 어른들과도 동등한 시민으로 의견을 나누는 방법을 배우고 있음
- 학교와 교사, 학생들은 학생 스스로 미래를 기획하고 실현하는 역량의 향상을 도모

5 미래 시민성을 묻는 시민들

□ 소년법

●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에서 활동한 소년법 변호사 인터뷰

- ‘위기청소년’ 뒤에는 위기 사회가 있음을 이해, 소년법의 이야기는 한국사회의 형사법체계 전반의 문제를 새롭게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제시
- 특히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을 어떠한 관점에서 설정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 최근 교권 대 학생권의 대립 구도나 학교폭력에 대한 쟁점 등은 이 이야기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구도가 잘못되어 있음
-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거나 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거나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거나 하는 식의 엄벌주의적 조치는 문제를 푸는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
- 통고 제도를 없애거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 보호시설을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중재할 수 있게 하는 것의 필요

□ 탈북 여성 및 제3국 출생 자녀

● 탈북, 이주의 연쇄에서 경험하는 초국적 네트워크

- 이들의 가족 구성·실천 자체가 드러내는 무국적, 초국적 차원에서 미래 지속될 이주, 난민의 경험, 통합 문제에 대한 참조점 제공
- 더불어 ‘먼저 온 통일’이라고도 할 이들은 미래 통합, 평화의 단위로서 한반도를 설정하고 한반도 전략을 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 대상
- 초국적 월경과 이주 맥락의 이주민으로서 실질적으로 ‘분리정책’에 가까운 정착지원 정책이 아니라 다문화 사회통합을 향한 한국 사회의 준비, 문화적 역량을 요구함
- 탈북여성 및 제3국 출생 자녀들은 초국적 이주 정착 과정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살아가며 노동, 교육 등 일상의 영역에서 취약성을 경험함

- 탈북여성 및 제3국 출생 자녀들의 한국 사회 적응은 한국 출신 원주민과 이주민들의 접촉, 공존의 과정에서 불평등, 배제의 동학과 함께 어떤 성격의 질적인 상호작용, 한국 사회의 문화적 역량 여하에 따라 통합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줌
- 현행 북한이탈주민지원법에 포괄되지 않는 탈북여성의 제3국 출생 자녀 부양과 관련된 복지 혜택 관련 입법과 함께 이들의 다문화 사회통합을 위한 공동체적 노력이 필요함

□ 성소수자

● 보편적 기본권, 차별과 혐오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삶의 기회를 요구

- 이들의 투쟁이 근미래에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 최근 이들의 가시화를 위한 투쟁이 부상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목됨
- 이들이 몸으로 겪는 인권 문제는 기존의 이성애규범성, 정상성의 체제가 배제하고 혐오, 폭력의 위험을 부과하는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로써 다양성과 포용,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는 미래비전에서 중요한 의미
- 성소수자들은 성소수자 인권, 평등을 보장하는 법제의 완비, 성소수자 현실에 대한 전반적 인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교육의 확립을 통해 거주, 직장, 의료 등 일상의 영역에서 동등한 시민권을 보장받기를 요구
- 성소수자는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등의 다양한 조합으로 이해될 수 있는 성정체성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차별, 혐오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된다는 점에서 기본적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임
- 또한 거주, 직장, 보건, 공중생활 등 수많은 일상의 영역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누리는 데 제약이 뒤따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성소수자들의 공동 주거와 같은 노력은 비성소수자들의 문제와도 공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소수자의 대안은 모두의 인권, 시민권을 확장하는 데 의미
- 21대 국회에도 계류중인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을 통한 성소수자 인권 보호와 함께 일상의 다양한 계기에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배제, 차별받지 않는 여건을 위한 교육 및 인식 개선이 필요함

6 정치의 미래에서 온 시민들

□ 청년정치인들과 미래대화

- 20년 뒤 이들이 전망하는 회피 미래와 선호 미래 논의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정당바로세우기, 민생당, 미래당, 정의당 등에서 참여, 전·현직 정당 대표, 최고위원, 비대위원, 대변인의 이력이 있는 청년들이 참여
- 3시간 동안 국회미래연구원이 제시한 숙의토론형 미래전망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한 미래와 선호하는 미래를 논의

□ 보존사회의 미래에 적극적 대응

- 시민 참여자들은 가능미래와 선호미래로 ‘보존사회’를 예상

- “경제 하락과 개혁의 실패를 자성하고 보존사회로 향할 것”, “붕괴보다 보존의 가능성이 큼”, “성장의 한계 봉착”,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 “인구 감소는 불가피”, “기후위기 등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침체를 맞이해도 적정 시점에서 적응할 것으로 전망” 등의 의견을 제시
- 이들에게 보존사회는 ‘브레이크 사회’로 해석되고, 특징은 사회에서 혁신적 도전보다는 사회가 지켜야 할 최저선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회임

□ 시사점

- 청년정치인들의 새로운 역할

- 청년을 굳이 청년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기존과는 다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좀 덜 때 묻은 것들 때문,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많이 참여할수록 변화 가능성이 크다고 믿음
- 지방자치가 발전할수록 정치인들이 해야 할 게 많아 정치인들이 차근차근 성장해야 하는데, 여전히 현재의 정치 구조는 명망가 정치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

- 이들은 24년 총선을 앞두고도 “인재융합 이런 것뿐이고, 지금까지 잘 키워 놓은 어떤 인재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생각 못한다”고 지적
- “기초의원들 가보면 지역위원장들한테 계속 줄서기 하고 있으니 능력은 좀 떨어져도 충성한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다”며 “결국, 지역 유지라든지 돈 많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이 정치하게 되어 어디 가나 청년정치인의 성장 경로가 닫혀 있다”고 주장
- 이런 상황에서 “청년정치인들은 정치적 의제를 계속 내놓아야 하고, 시대는 계속 바뀔 거고 거기에 준비된 사람들은 기회가 온다”는 믿음을 갖고 있음

7 이머징 시티즌과 성숙사회로

□ 이머징 시티즌의 미래 인식은 사회적 경고등

● 이들이 발신하는 우리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근원과 파급성 재검토

- 이들의 경고를 듣지 않는다면 우리사회는 ‘붕괴’의 경로로 진입
- 붕괴가 한국사회의 전멸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한국사회가 유지했던 방식의 붕괴를 의미
- 이제까지 성공을 일궈왔던 방식, 문제를 풀었던 방식이 더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붕괴의 가능성 전망

□ 시민들의 미래인식은 혁신적

●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는 새로운 성장과 대안 도출에 필수 요소

- 미래대화에 참여한 시민들은 기성 연구자들의 해법이 겨냥하는 문제보다 더 복잡한 문제를 제시
- 부산시민들은 인구 감소와 청년층 이탈의 연쇄작용으로 돌봄의 공백, 주거 환경의 낙후를 제시

- 독거노인의 증가, 고령장애인의 증가 등은 고령화 추세에서 피할 수 없는 요소들이고, 이 때문에 이들을 돌봐줄 사람들이 더욱 필요하지만, 가족의 해체, 공동체의 와해, 의료인의 부족 등으로 돌봄 문제는 악화함을 지적
- 시민들은 우리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비전, 중장기적 전략과 단기적 과제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은 미래대화에서 얻은 성과

□ 미래대화의 심화 과정을 고도화할 필요

● 변화를 구체적으로 일으켜볼 섬세하고 구체적인 과정 필요

- 사회전환에 공감하는 주민들을 조직하고 이들이 실제 실천할 수 있는 조건과 제도를 만드는 데까지 나아가야 함
- 2024년 연구과제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을 토대로 실제 지역사회의 변화를 일으켜보는 실험으로 진전할 계획

□ 더 포용적 사회를 위한 미래대화 연구

● 더 포용적 사회가 되려면 미래사회를 상상하는 힘 필요

- ‘더 포용적 사회’로 나아가려면 다양한 이머징 시티즌들을 찾아내고 이들을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이들에게 동등한 권리와 사회 참여의 기회를 줄 방안을 논의해야 함
- 미래시민들을 향한 편견, 혐오, 차별을 예방하는 것은 이머징 시티즌 연구의 또 다른 전략적 과제임

제 1 장

국민과 미래대화의 시작

제1절 미래대화의 정의와 사회변화이론적 배경

제2절 성장사회의 한계와 성숙사회로 가는 길

제3절 이머징 시티즌에 주목하는 이유

제 1절

미래대화의 정의와 사회변화이론적 배경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국민과 미래대화 연구의 배경

“역사의 교훈은 일종의 경제태세로서 단기적 시간 속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가장 소란을 떠는 행위자들만이 진정한 행위자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역사에는 그 들 말고 침묵을 지키는 행위자들도 있다. 하지만 그것을 이미 알지 못했던 사람이 어 디 있단 말인가?” (페르낭 브로델, 신용하 편, 1982 : 275-276)

위의 인용문은 프랑스 역사학자 페르낭 브로델이 ‘역사와 사회과학: 장기지속’이라는 글에서 따온 문장이다. 긴 역사의 맥락에서 미래를 전망할 때 장기적 시계(視界)를 갖출 것, 당대의 시끄러운 ‘떠버리들’이 아닌, 비록 입을 다물고 있어도 변화를 모색하는 개인 들을 주목하고 이들의 의견을 듣는 것의 중요성을 브로델은 강조하고 있다.

그는 같은 글에서 이런 문장도 남겼다(278쪽): “환한 표층에서 어두운 심층으로, 소음 에서 정적으로 한 발 내딛는 것은 어렵고도 위험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각자의 일상생활 너머에 어떤 거대한 집단적 역사를 의식하고 있다... 그 방향을 안다기보다 그것이 지니 는 힘과 강제력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장은 앞에서 언급한 침묵하는 행위자들이 새로운 변화를 어렵듯이 감지하고 그 변화의 실체와 힘에 관해 두려워하고 있음을 나타낸 다. 그래서 정보가 부족한 새로운 미래로 한 발을 내딛는 것이 어렵고 위험한 일이라는 것 이다. 그러나 시대의 전환을 의식하는 개인만이 이런 불안함도 느낄 수 있다.

시대적 전환이라는 말이 난무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논의는 전환 전후의 변화는 물론이 고 사회의 장기적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전환은 ‘도약’을 전 제하고 도약은 아직 미지의 세계로 담대하게 한 발 내딛는 것이기에 사회는 장기적 지속

보다는 단기적 생존에 에너지를 쏟는다. 미지의 세계로 계속 전진하기보다는 과거의 패턴에 의존해 사회발전의 방향을 억지로 짜 맞추는 데 급급하다. 이런 사회적 경향은 극복 가능한 것인가.

국회미래연구원은 2018년 창립 때부터, 침묵하고 있지만 현상 너머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는 행위자, 즉 국민을 미래전망의 파트너로 초대하고 함께 미래를 예측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그 결과 2019~2022년까지 한국사회의 새로운 비전으로 ‘도전과 분배의 사회’와 ‘성숙사회’를 제시한 바 있다(박성원 외, 2019; 박성원 외, 2020; 박성원 외, 2021, 박성원 외, 2022). 전국 단위로 시민들을 모집해 수백명이 한 자리에 모여 미래를 예측하고 선호하는 미래사회를 선택하는 과정은 즐겁기도 했지만 사회구조의 전환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무거운 공적 의제를 제기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미래 비전으로 제시한 ‘성숙사회’는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추진했던 ‘성장사회’의 대안이다.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워 추진했던 성장사회의 한계는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 김세직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30년 동안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경제성장률이 1%씩 하락했다.¹⁾ 대통령의 정치적 진영을 막론하고 벌어진 일이다.

성장의 종말을 걱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지금까지 누려온 경제성장은 많은 희생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임을 자각하는 일이다. 환경파괴, 기후위기, 경제사회적 양극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발전, 과로사회의 심화, 끝없는 경쟁주의로 저출산의 고착화 등 수십 년째 거론된 이런 문제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난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사회는 ‘경제성장주의 중독’에 걸려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도넛경제학의 저자 케이트 레이워스(Kate Raworth)는 “2050년의 시민들은 1950년 교과서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는 다시 1850년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경제적 사고방식을 배우고 있다”고 질타했다.²⁾ 경제성장이 불평등을 대폭 감소시킬 것이라는 생각이나 인간은 단지 이기적인 개인일 뿐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이론임을 폭로하고 있는 레이워스는 현재 사회에 적합하지 않은 경제 개념으로 우리의 사고가 어떻게 제약을 받았는지 보여주고 있다.

1) 김세직. “경기 부양에 힘빼지 말고 인적자원 키우는데 힘써라”. 중앙일보 2023년6월6일자.

2)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23/jun/08/the-planets-economist-has-kate-raworth-found-a-model-for-sustainable-living>

시대적 전환을 일궈내는 대안은 시민과 주민의 생각과 행동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연구진은 ‘국민과 미래대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미래대화(Dialogues on the futures)는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미래를 전망하면서 어떤 미래를 선호하는지 논의하는 대화’로 정의한다. 여기서 ‘다양한 미래’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현재의 추세를 미래로 단순 확장하는 사고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향성을 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라면 인구가 정체되거나 역으로 증가하는 미래도 전망해보는 것이다. 누군가는 아마 ‘인구는 이미 정해진 미래가 아니냐’며 ‘인구감소의 추세를 뒤집을 수는 없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역사는 그렇게 단언하지 않는다.³⁾

1980년대 초반 우리사회는 지금과는 상반된 인구 급증의 불안에 시달렸다. 당시 4천만 명이던 인구가 20년 뒤 5천만 명으로 증가한다는 전망에 사회 전체가 인구증가에 따른 일자리, 도시 구조, 주거, 산업형태 등에서 일대 변화가 필요하다고 떠들었다. 그때 어떤 전문가도, 관료도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불과 20년 만에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했다. 2003년 위원회 출범보다 앞서 저출산의 징후가 포착된 것이 1990년대임을 고려한다면 인구가 증가한다는 우려가 나온 지 불과 십수 년 만에 우리는 인구증가에서 인구감소를 걱정했다. 다시 강조하지만 앞서 페르낭 브로델이 지적한 ‘가장 소란을 떠는 행위자들’을 경계할 일이다.

국민과 미래대화는 다양한 미래전망을 바탕으로 선호하는 미래 사회의 모습까지 논의하는 기회다. 미래예측은 전망에서 끝나면 안 된다. 나와 미래세대가 함께 살고 싶은 미래를 전망하고 실현의 방안을 찾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미래대화는 정책담론에서 낯선 방법론이 아니다. 유럽은 2013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장클로드 융커 위원장의 주도로 2014년부터 유럽의회의 모든 국가가 의무적으로 시민들과 미래대화를 추진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53개 시민 대화를 시작으로 해마다 시행되었고, 2019년에는 1200개의 미래대화가 추진되었다. 5년 동안 유럽 시

3) 유럽의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다룬 아래 논문은 출산을 증감을 **반복적인 형태**로 파악하는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저출산 세대가 고출산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저렴한 집값, 경쟁이 덜한 취업시장 등)에서 사회에 진출하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져 출산율이 다시 높아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Kohler, H., Billari, F., Ortega, J. (2002). The Emergence of Lowest-Low Fertility in Europe During the 1990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8(4):641-680

민 26만 명이 미래대화에 참여했고, 140만 명이 이 대화를 지켜보았다(European Committee of the Regions, 2019; 박성원, 2020에서 재인용).

유럽에서 추진한 미래대화의 결과는 2020년 발표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의 발발로 연기됐다. 대신 유럽집행위원회는 2020년부터 ‘전략적 미래 보고서(Strategic Foresight Report)’를 해마다 발표하면서 유럽이 맞이할 미래와 시민들이 바라는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 싱가포르도 2015~2016년 시민 8,300명이 미래대화에 참여했고, 121개의 논의 주제를 만들어 선호하는 미래사회를 구상한 바 있다(박성원, 2020). 해외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대화’를 통해 도시와 지역의 미래비전을 논의하고 이를 정부의 계획에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예컨대, Ortegón-Sánchez & Tyler, 2016).

싱가포르는 한술 더 떠 시민 참여 미래예측 활동을 *SG Future*(싱가포르 미래)라는 브랜드로 개발했다. 이 나라는 2015~2016년 미래대화에 8,300명 시민이 참여했고, 121개의 논의 주제를 만들어 선호하는 미래사회를 제시했다. 누구든 선호미래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프로젝트를 제시할 수 있었고, 이중 선별된 프로젝트는 공적인 자금을 지원받았다. 싱가포르 국가예술위원회, 국가문화유산위원회, 국가청년위원회 등이 함께 운영하는 기금(MCCY’s Our Singapore Fund)이 시민들의 프로젝트에 지원됐다.

2 새로운 사회계약의 필요성

정보화 등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 경제성장의 둔화, 고령화 및 인구감소 등 새로운 사회경제적 환경이 조성되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사회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세대간의 균열,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 젠더 갈등, 환경 문제, 교육 개혁, 돌봄 등은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문제들이다.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새로운 환경에 맞도록 정치, 경제, 사회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변화를 촉구해 왔고 주요 언론에서도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다뤘지만,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지만, 변화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하고 기존의 틀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갈등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정치 리더십이 부재하며 사회적 동력 또한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변화와 혁신이 어려운 이유는 다각도에서 조명해 볼 수 있으나 우리가 주목하는 원인은 변화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세력들이 사회적 약자들이라는 점이다. 청년, 지역 주민,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다문화이주민 등은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현재의 제도와 질서 속에서 정치적으로 충분히 대표되지 못하는 집단이다. 미성년의 청소년들은 참정권이 제한되어 있으며, 출생률이 급속히 하락하는 시기에 태어난 20~30대 청년들은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중장년 세대와 비교할 때 수적으로 열세에 놓여있다. 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청년 실업률이 높은 현실 속에서 다양한 개혁 조치가 필요하지만,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되는 단순다수제 선거제도에서 양대 정당들은 청년들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일 유인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사회 또한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지역사회가 소멸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제기되지만, 수도권 중심의 정책의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영남과 호남은 지역주의 정치가 여전히 견고하게 작동하면서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선거 승리를 독식하며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는 실질적인 일당 체제가 유지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정당 간의 경쟁이 부재한 상황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게 되어 국가적인 정책의제도 절대다수가 거주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다.

청년과 지역사회의 경우 수적인 열세에서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면 젠더 갈등은 남성과 여성의 인구수가 대략 비슷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가부장제의 문화 속에서 고도 경제성장 시기 가부장의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가족 질서가 조직되면서 여성들의 역할이 수동적으로 규정되어 왔다. 하지만 남녀 간의 교육 격차가 사라지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급속도로 확대된 데 비해서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기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는 부족한 상황이다.

청년들의 일자리·주거·교육 문제, 지역사회의 인구 유출 및 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 여성의 사회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제약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은 정부가 나서서 우리가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를 기대한다. 주어진 조건 속에서 개인이 각자 노력하거나 가족의 지원을 통해 교육에 시간과 자

원을 투자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여 안락한 집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모든 개인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 차원의 해법은 모두에게 적용되기 어렵다. 지역사회의 공동화 현상은 지역 공동체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개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으로 기회를 찾아 이주하는 것이 해답이 될 수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한 사회적·제도적 변화는 남성 중심의 기존 질서의 전환을 의미하며 여성들이 개인 혹은 집단적인 투쟁을 통해 달성할 수 있지만, 여성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투쟁의 비용을 감안하면 가부장 질서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결국, 중요한 사회문제들은 공동체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청년, 지역, 젠더 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공동체의 차원에서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구성하며 살아가는 개인들에게도 이롭지만, 개인적 차원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불가능하거나, 혹은 공동체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비용과 노력, 그리고 결과의 측면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공동체 차원에서 의견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대표적인 예가 정부의 정책을 통한 사회문제의 해결이다. 이와 같은 접근을 개념적으로 접근한다면 사회계약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홉스, 로크, 그리고 루소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계약은 정치적 권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혹은 개인들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억압받지 않는 자유를 지키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연역적으로 도출하는 접근방식이다. 사회계약론은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선택한 결과를 정부의 권위를 정당화하거나 정부의 권능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오늘날 민주정부의 법률과 정부 정책을 사회계약과 등치 시킬 수는 없겠지만 시민들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자발적으로 주권을 선출된 대표에게 위임하며 민주적인 선거과정을 통해 정부가 해야 할 바를 논의하고 정부의 권능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보면 현대적인 의미의 사회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동체의 번영과 지속을 위한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

가 형성되어 있지만, 변화의 방향에 대한 합의가 부재하며 변화의 동력 또한 찾기 어렵다. 오늘날 우리의 민주정치가 사회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상실한 이유는 제도와 행위자 등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해 보아야 하겠지만 우리는 시간의 문제에 주목한다.

고전적인 사회계약론은 보편적인 정치 원리를 연역적으로 추론해내기 위해 모든 사람이 자연 상태라는 같은 조건에 있다고 가정한다. 사회계약론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롤즈의 정의론 역시 ‘무지의 베일’이라는 개념을 통해 자신이 처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사회의 작동원리를 결정하는 것을 상정한다.

하지만 현실의 의사결정은 사회계약론에 대한 많은 비판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현재의 시점에서 현재의 시민들이 만드는 것으로 오늘의 사회적인 권력 관계를 반영한다. 청년, 지역 불균형, 젠더 등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기성의 세대들보다는 미래세대들의 생존과 복리에 영향을 미치며, 오늘의 사회계약을 통해 중장기적인 미래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 지역, 소수약자들의 선호가 적절하게 대표될 수 있는 미래와의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제2절

성장사회의 한계와 성숙사회로 가는 길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성장사회의 한계

오늘날 우리의 삶의 방식을 형성하는 정치·경제·사회 제도는 고도 경제성장 시기에 형성된 정책들을 토대로 하고 있다. 정부는 수출주도형 산업화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경제성장에 가용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을 추구하였다. 제조업 중심의 성장을 통해 새로운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고 젊은 시절에는 높지 않은 임금으로 시작하여 경력이 쌓일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구조를 도입하여 노동자들이 장기 근속하도록 하였다.

정부가 경제성장에 자원을 동원하는 동안 육아 및 노인 부양은 경제활동을 하는 가장이 책임지는 사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규범이 되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여성들은 가사를 전적으로 부담하였다. 이 시기에는 다소간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빠른 경제성장을 통해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부국강병을 통해 남북한 대립이라는 안보환경 속에서 생존을 모색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경제성장의 가치가 사회를 지배하는 시기를 성장사회라고 규정한다. 성장사회의 가치가 이 시기의 사회계약에 반영되어 있었으며 다양한 문제에도 성장사회의 사회계약은 경제성장과 안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였다.

고도성장의 시기 한국 사회는 민주화라는 변화를 경험한다. 정치 리더십을 시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민주주의라는 정치 원리를 정착시키면서 우리는 성장시대의 사회계약을 한 단계 향상했다. 성장시대의 사회계약은 1970년대 이후 고도 경제성장 시기에 자리 잡았지만, 변화의 동력을 내장하고 있었다. 성장사회의 사회계약은 성장을 통해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만 빠른 성장을 위해 강압적인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구조를 전제하고 있었다.

성장이 지속하면서 노동자 계급도 수적으로 성장하였다. 1987년 민주주의로 이행하면서 노동자들의 요구가 분출되기 시작하였고 우리 사회는 성장사회의 사회계약을 다소 변

형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내부의 변화동력은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라는 두 가지 거대한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었다. 경제성장과 인구의 증가가 더디었다면 노동자 계급의 성장도 없었을 것이다.

성장사회의 사회계약은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정보화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하면서 제조업 정규직 중심의 일자리 정책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형태의 직업군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보화 기술을 습득한 숙련 노동자들과 비숙련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 격차가 커지고, 연공서열식 임금구조를 전제로 하는 장기근속의 구조 속에서 청년 실업률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청년세대들은 정규직에 종사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기득권 때문에 기회를 얻지 못한다고 믿고 있고, 기성세대들은 청년들이 충분히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본다. 청년세대들의 사회진출이 어려워지면서 인구증가율이 급속도로 낮아졌고 이제 인구감소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경제성장의 활력이 낮고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사회부터 인구감소의 영향을 받고 있다.

2 성숙사회로 가는 길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갈등을 장기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과거 성장하는 노동자 계층이 성장사회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듯이 청년세대들이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성장하여 새로운 사회계약을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청년 실업률이 날로 높아지고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청년세대가 새로운 사회계약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일은 노동자 계급이 성장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도래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의 감소라는 미래 속에서 청년들과 지역사회가 우리 사회의 주류로 성장하기는 어려운 일일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 후에도 인구의 다수를 점유하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집단으로 남을 것이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추세에서 지역사회가 다시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청년세대가 사회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담하다. 세대 간의 연대

를 전제로 하는 국민연금을 예로 들어보면 갈등의 구조가 명확하게 나타난다. 베이비붐 세대의 처지에서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한국에서 자신들은 부모를 부양하고 자식들의 교육에 투자하며 어려운 시대를 지나왔지만, 자신들은 자식들이 부양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의 소득감소 위험을 다소나마 낮춰가야 하는 상황이다.

청년세대의 처지에서 자신들이 기여하는 만큼 노후에 연금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경제성장이 둔화하면서 청년세대들은 자신들이 부모 세대보다 더 잘 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고도성장의 시기에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부모 세대보다는 자식 세대가 더 나은 경제적 과실을 누릴 수 있었지만, 성장이 둔화되면서 이와 같은 구조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불균형의 문제도 비슷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고도 경제성장의 시기 지역사회는 도시의 제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통로였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농어촌 지역의 청년들은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찾아 대도시로 이주하였고 도시에서 취업에 성공한 가장들은 노년에 접어든 부모님들을 부양하였다.

하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는 소멸할 것이라는 위기감에 처해 있다. 지역 소멸은 1차산업의 붕괴와 직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 활용,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다양성의 측면에서도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하지만 소멸하는 지역사회가 우리 사회의 다수 집단으로 등장하여 지역의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주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미래의 문제에 의식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이들의 목소리가 적절하게 대변될 수 있도록 인식을 전환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우리는 다양한 소수약자들과 지역사회의 구성원들, 그리고 현재의 제도 속에서 대표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에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 다양한 그룹들을 ‘이머징 시티즌’으로 정의하고 미래와의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기초를 닦기 위해 이머징 시티즌과의 미래대화를 지속해서 수행할 계획이다. 이런 과정에서 성장사회를 넘어설 대안, ‘성숙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믿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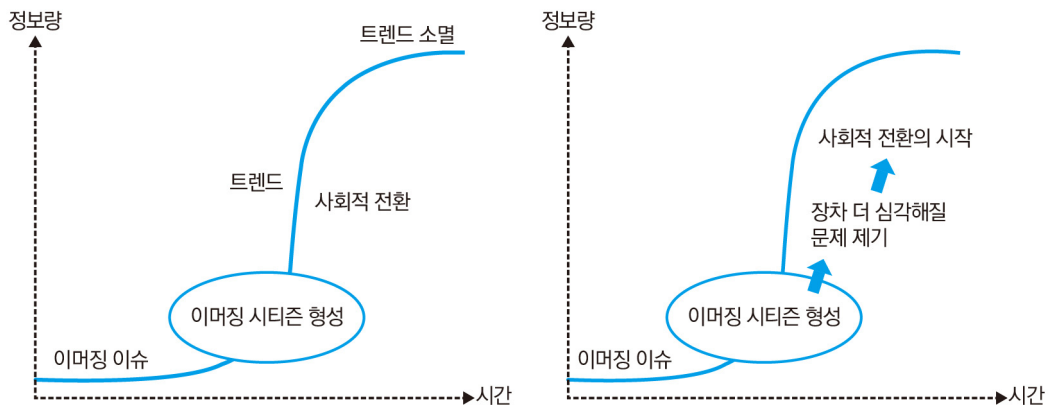
제3절

이머징 시티즌에 주목하는 이유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이머징 시티즌(emerging citizen)은 종래 소수약자로 불렸던 개인을 더는 수혜의 대상이 아닌 사회 혁신의 주체로 보자는 생각에서 새로 만든 말이다. 이머징 시티즌은 두 가지 측면에서 미래연구에 중요하다. 첫째는 이들이 당면한 사회문제는 곧 사회 전체 구성원의 문제로 확대될 것이란 점이다. 예를 들어 고령장애인과 돌봄노동자가 당면한 문제는 곧 우리사회 전체의 문제가 될 것이다. 초고령화 추세와 가족의 해체, 독거노인의 증가는 고령장애인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들을 돌봐줄 돌봄노동자의 수요 증가를 예고한다.

둘째, 이머징 시티즌은 여러 미래변화를 전망해볼 때, 지금은 소수지만 앞으로 다수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에서도 미래연구의 중요한 대상이다. 예를 들어 다문화이주민들은 앞으로 우리사회의 인구와 부족한 노동력 해결을 위해 점차 그 숫자가 증가할 것이다. 이들은 단순히 우리사회에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한국사람이 된 시민들이 아니다. 한국의 시민이 되려고 온 사람들이다. 우리의 미래세대를 이어줄 주민이면서 우리사회를 이끌어갈 리더로 활약할 시민이기도 하다.



[그림 1-1] 이머징 시티즌의 등장과 사회적 전환의 시작

그림1-1은 이머징 시티즌이 사회적 전환을 앞서 일궈내는 시민임을 묘사하고 있다. 이머징 이슈(emergin issue)는 장차 트렌드가 될 이슈를 말한다. 모든 트렌드는 소멸하고, 다시 이머징 이슈가 탄생한다. 이런 점에서 이머징 이슈의 생애는 영문으로 'S' 모양을 보인다(그림1-1 참조). 이머징 이슈는 통상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촉발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구조적 변화를 앞서 겪을 개인들을 잉태하기 마련이다. 우리는 이런 개인들을 이머징 시티즌으로 개념화했다.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직면한 시민들은 이머징 시티즌이 되며, 이들은 장차 사회적으로 더 심각해질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이 문제를 제대로 풀어낸다면 사회는 긍정적인 전환을 이뤄낼 수 있지만, 이들의 문제의식과 대처능력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회라면 전환은 지체되고 문제는 더 악화한다.

요약한다면 이머징 시티즌은 사회가 당면할 미래 이슈를 앞서 경험한 사람이면서, 앞서 경험했기에 문제를 풀 대안을 실험하고 적용한 시민들이다. 우리는 이들의 문제의식과 대안 도출의 경험이 필요하다. 이런 점 때문에 이들을 수혜나 동화의 대상이 아니라 혁신의 주체로 보자는 시각이 요청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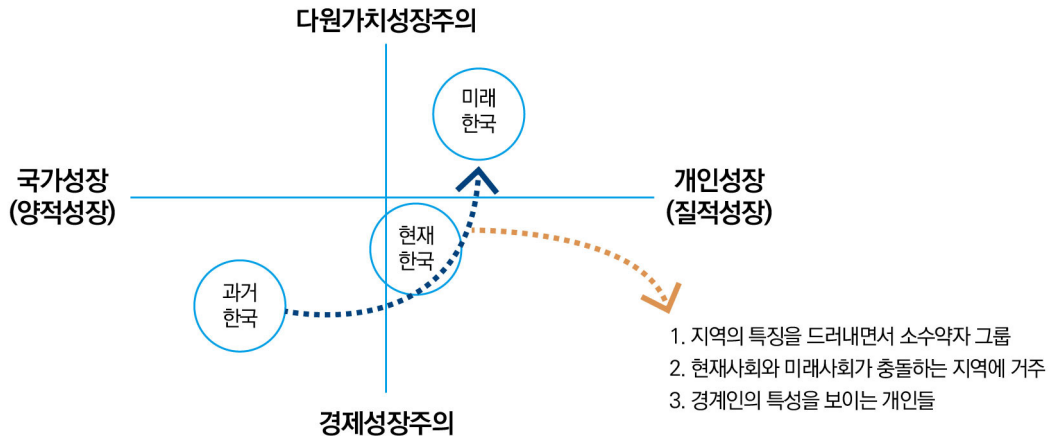
우리가 이머징 시티즌에 주목하는 이유는 사회 변화를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하고 싶어서다. 미래예측이 어려운 이유는 미래가 과거와 현재의 연장선에 있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해서다. 모든 사물은 항상 변하기 마련인데 우리는 여러 심리적 이유로 변화 그대로를 인식하려는 노력보다 과거에 식별된 변화의 틀을 고집하려고 한다. 새로운 현상을 인식할 때 불안감이 생기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사실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불안의 정서를 내재한다. 새로운 변화에 적응한다는 것은 늘 어렵고, 자신이 어렵게 쌓아온 노하우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인간은 변화를 볼 때 불안하기 마련인데 이 불안을 다루기 위해 '방어기제'를 동원한다. 대표적인 방어기제로는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보다 '나는 잘 될 거야, 우리는 별문제 없을 거야'라는 회피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또 다른 방어기제로는 그 문제가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문제를 일으킨 대상을 다른 사람으로 돌리는 것이다. 또는, '그 문제는 중요하지만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방어기제도 있다. 현재까지 하던 방식을 멈추지 않으려는 또 다른 회피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방어기제들의 공통적 특징은 미래를 단선적으로 본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미래는 과거와 현재의 추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시공간이라는 생각이다. 이렇게 미래를 인식

하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에게 미래는 정해져 있어서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거나 문제는 없다고 회피하는 태도를 강화한다.

우리가 이머징 시티즌 연구를 하는 이유는 미래를 결정론적 시각으로 전망해서는 사회 변화의 본 모습을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우리는 ‘이머징 시티즌’이라는 새로운 시민을 가정, 이들을 발굴하고 이들이 인식하는 미래의 걱정, 위기, 희망, 기대를 듣고 분석했다. 미래는 사회의 여러 행위자에 의해 바뀐다. 미래연구자들이 중요하게 다뤄야 할 변수는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이며 연구자는 이들의 사회적 파급력을 예측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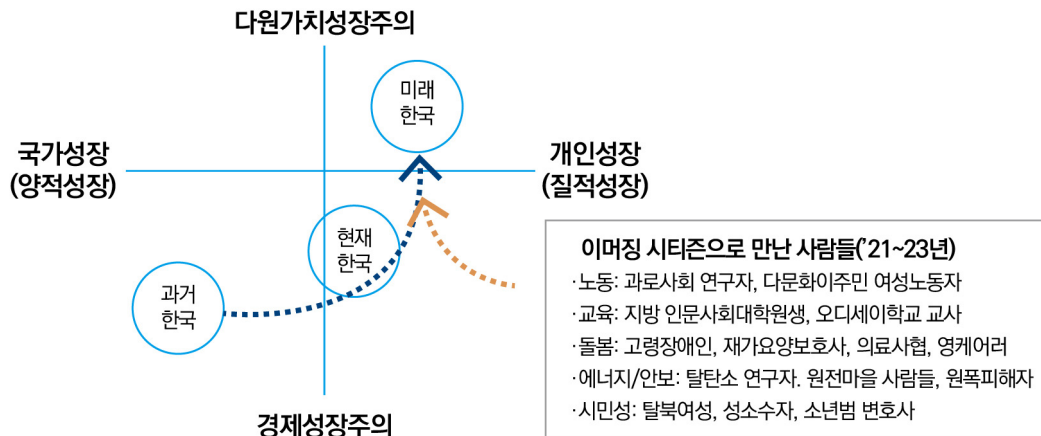
[그림 1-2] 새로운 미래로 진입할 때 일어나는 변화들

그림1-2는 앞서 언급했던 성장사회를 넘어 성숙사회로 가는 길을 나타낸다. 과거 한국이 성장사회의 모습이라면 지금의 한국은 경제성장을 고수하면서 개인의 성장을 추구하는 사회로 볼 수 있다. 여러 조사를 통해 확인한 미래 한국의 모습은 경제성장주의를 넘어 다원가치성장주의로(사회적 연대와 신뢰, 환경적 가치 등), 국가성장과 양적성장 위주에서 개인성장과 질적성장으로 나아가는 사회다(박성원 외 2021).

우리가 이머징 시티즌에 주목하는 이유는 한국사회가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들을 마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환과 도약이 이뤄지는 미래 사회는 아직 활짝 열려 있지 않

다. 정보가 적어 불안하다. 그러나 이머징 시티즌은 이미 미래한국에서 현재한국을 불러오고 있다. 이들이 요구하는 사회적 변화, 전환은 미래한국을 만들어 내는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림1-3은 이런 이머징 시티즌을 연구진이 2021년부터 올해까지 만난 사례를 보여준다. 올해 우리 연구의 초점을 ‘이머징 시티즌’에 맞췄다고 했지만, 21년부터 우리는 국민의 선호미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이머징 시티즌을 만나왔다. 분야로 나눠보면 노동, 교육, 돌봄, 에너지와 안보, 시민성 등이다. 분야별 우리가 만났던 시민들을 그림1-3은 열거하고 있다.



[그림 1-3] 이머징 시티즌과 함께 가는 미래 한국

올해 우리는 ‘지역의 미래에서 온 시민들(제2장)’, ‘에너지와 안보의 미래에서 온 시민들(제3장)’, ‘노동과 교육의 미래에서 온 시민들(제4장)’, ‘미래 시민성을 묻는 시민들(제5장)’, ‘정치의 미래에서 온 시민들(제6장)’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이머징 시티즌을 만났다.

방법론은 두 가지를 활용했는데, 다수의 시민과 만나는 자리에서는 미래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는 숙의토론형 미래대화인데, 다양한 미래사회상을 사전에 참여자들에게 제공하고 학습하도록 했다(사전숙의자료는 부록에 수록). 이후 3시간 동안 진행되는 미래대화를 통해 ‘가능미래’와 ‘선호미래’를 논의하고, 사전과 사후에 참여자들의 의견이 바뀌는 과

정과 이유를 분석했다. 부산에서 지역주민 60명을, 서울에서 청년정치인 16명을 이런 방식으로 만났다.

소수의 그룹 또는 활동가들을 만날 때는 개별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우리가 만난 이머징 시티즌은 에너지, 안보, 환경, 노동, 교육, 시민성 등의 분야로 나뉘었다.

우리는 2021년 작업(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2021: 58-63)과 2022년 작업(박성원 외, 2022: 4장)의 연장선상에서 ‘대화’의 대상을 고민했다. [표 1-1]은 2021년 작업에서 우리가 만났던 이들의 명단이다.

[표 1-1] 2021년 소수비전 인터뷰 대상자

	이름	소속	제목	분야
1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이사	2050 탄소중립과 그린 뉴딜 지방정부의 역할	기후
2	홍덕화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	원전 체제의 과거, 현재, 미래	에너지
3	윤병선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농업과 먹거리 문제의 대안 모색	먹거리
4	변수용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 교육학과 교수	교육영역에서 우리사회가 나아가야할 미래	교육(체제)
5	서덕희	조선대 교육학과 교수	생활세계의 교육 실천공동체의 자기조직적 생성과 확산의 관점에서 본 국가 차원의 미래교육의 설계	교육(실천)
6	양선희	계명대 동산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산업재해 예방: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노동(안전)
7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과로사회의 여가풍경	노동(구조)
8	김명수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교수	내 집에 갇힌 사회: 생존과 투기 사이에서	주거
9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미래 소득보장의 원리: 필요 vs 배당	복지
10	김종희	원주의료사협 밝음의원 의사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포괄적 환자돌봄 모델	돌봄(보건의 료)
11	여준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시설의 역사: 배제와 구분의 역사	장애(시설)
12	이정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보통 사람의 시대	기술(사회)

2021년 당시 우리는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핵심 차원을 몇 가지로 규정하고 각 차원에서 거시적 환경과 정책적 맥락, 주요 의제를 포괄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섭외해 발제를 듣고, 대화를 나눴다. 기후·에너지, 먹거리, 교육, 노동, 주거·복지, 보건·의료, 기술·사회 등이 그러한 차원이었다. 우리가 만난 이들은 대개 연구자나 현장활동가였다.

2022년에는 좀 더 구체적인 맥락에서 대화를 나누고자 했다. [표 1-2]는 이 당시 우리가 만난 이들의 명단이다. 가족, 장애, 빈곤, 동물, 죽음이라는 키워드로 활동가, 사회적기업가, 사진작가, 교수 등을 만났다.

[표 1-2] '이머징 소수' 세미나 참석자

	이름	지위	제목	키워드
1	정은주	전국입양가족연대 활동가	가족 관계의 미래: 핏줄 신화를 넘어 또 다른 가족을 상상하며	가족(입양)
2	백정연	사회적기업 '소소한소통' 대표	장애인과 함께 사는 법: 다양한 몸 사이의 경계를 허물기 위하여	장애
3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반빈곤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말하다	빈곤
4	문선희	사진 작가	문다: 가족 살처분과 매장공간에 대한 인문학적 시선	동물
5	김형숙	순천향대 간호학과 교수	한국인의 죽음	죽음

출처: 박성원 외(2022: 101)

2021년 작업과의 차이는 관점의 전환이었다. 이때부터 우리는 이머징 시티즌, 즉 창발적 시민이라는 개념을 잠정적으로 설정하고 이들의 관점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미래를 전망한다는 기획을 세웠다. 이들의 일차적인 특성은 '소수자성'이다.

“우리는 다수성보다는 소수성에, 일반성보다는 특수성에, 대표성보다는 전형성에 주목하고자 했다. 그러한 성격을 표현한 것이 ‘창발적 시민’(emerging citizens)이다. 이 장에서 창발적 시민은 보통 소수자라고 불리는 이들이다. 질문은 크게 다섯 가지다. 첫째, 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가? 둘째, 그들은 누구인가? 셋째, 어떻게

계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가? 넷째, 그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다섯째, 그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보통 소수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이유로 언급되는 것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정상성을 낮설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들이 다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다수자는 없기 때문이다.”(박성원 외, 2022: 98)

물론 여기서 창발적 시민의 성격은 소수자성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이들은 “우리 사회가 경험할 문제를 앞서 경험했다”(박성원, 2022: 6)는 점에서, “나름의 대응 전략”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위치성은 우리사회가 겪을 문제의 대안을 시사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들은 ‘창발적’ 존재이다(박성원, 2022: 7).

즉 이들은 특정한 ‘속성’을 공유하는 이들이라기보다는 우리사회의 관계성의 성격을 드러내는, 우리사회의 주류적 질서의 이면을 드러내는 관계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들을 특정한 속성으로 환원되는 ‘소수자’로만 볼 수 없다. 특정한 맥락에서의 소수자성이 다른 맥락에서는 다른 성격의 소수자성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화를 정리하고 글쓰기로 표현한 방식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서사적 인터뷰, 또는 내러티브 분석의 철학 및 기법(최종렬, 2012; Creswell and Poth, 2021)을 고려해 사회현상의 성격이 최대한 맥락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터뷰이들의 구술을 재가공했다. 대화의 형식을 살려서 구술자가 말한 것을 하나의 의미 있는 스토리로 구성해보고자 했다. 요컨대 2022년 작업은 2021년 작업에서 탐색한 주요 차원의 맥락을 좀 더 구체적인 수준에서 개인의 서사라는 형식으로 풀어내고자 한 것이었다.

제2장

지역의 미래에서 온 시민들

제1절 왜 지역주민을 만나는가

제2절 부산시민과 미래대화

제 1절 왜 지역주민을 만나는가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연구의 배경

가. 지역주민과 미래대화 추진의 필요성

국회미래연구원은 2022년부터 ‘선호미래연구’를 ‘국민과 미래대화 연구’로 확장하고, 17개 시도의 주민들과 지역의 미래를 예측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미래대화’는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미래를 전망하면서 이들이 어떤 미래를 예상하는지, 어떤 미래를 선호하는지 논의하는 자리로 개념화할 수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에 소속되어 있어 시민 중심 또는 시민이 이끌어가는 미래연구를 표방하고 있다. 미래연구에서 중요한 성취를 일궈나가고 있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서 국회미래연구원도 시민들과 미래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22년에는 강원, 경북, 대전, 전북, 전남, 제주연구원과 협업해 지역 주민 120명을 만나 미래대화를 개최했다(박성원 외, 2022). 이런 기회를 통해 지역사회의 현안은 물론 주민들이 인식하는 미래의 모습, 걱정, 두려움, 희망, 기대 등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23년에는 부산연구원, 부산시청과 공동으로 ‘부산시민과 미래대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우리사회는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라이프스타일이 마치 표준인 것처럼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사회의 비전이라고 할 때는 그 비전의 당사자는 서울과 수도권 주민들이다. 특히 서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빨아들이는 곳으로 성장과 확장의 욕구가 강하다.

예를 들어 최근 김포시에서 떠온 서울 편입론을 보자. 서울이 주변 지역을 흡수해 거대한 도시로 확장하는 ‘메가시티’론은 김포에 이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서울로 편입을 바라는 주민들은 서울 중심부와 더 긴밀하게 연결되기를 소망해 도로와 철로의 증설

을 요구할 것이다. 교육, 문화, 의료, 일자리에서 서울은 전국의 인적자원과 재원을 빨아들이는 것이다.

지역의 주민으로서 서울과 수도권의 삶과 다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메가시티론이 당황스럽다. 그러나 성장과 확장을 지속해서 추구한 대한민국의 욕망에서 이들의 우려와 걱정은 이슈가 되지 못한다. 다른 삶은 용납되지 않는 사회에서 지역주민의 요청과 비전은 부각될 기회가 거의 없다.

우리가 앞서 정의한 이머징 시티즌에는 지역주민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우리사회의 지배적인 비전과 다른 사회의 방향을 요청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실상 지역사회 주민들을 만나보면 다양한 사회적 비전을 마음에 품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은 다른 삶을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지 않다. 직접 행동으로 실천한 시민들이다. 그래서 지역으로 이주하고 그 지역 공동체에서 작지만 의미있는 실험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조선마술사> <방각본 살인 사건> <불멸의 이순신> 등 수많은 장편소설을 펴낸 작가 김탁환은 다양한 생명과 섞여 살려고 전라남도 곡성의 한 폐교(지금은 발아현미에 적합한 품종을 연구, 생산하는 농업회사 미실란이 있는 곳) 2층에 작업실을 마련했다. 그는 이곳에서 소설을 쓰고, 생태서점을 운영하며, 농사도 짓고, 흙과 나무를 주제로 학생들을 가르친다.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지역에서 다른 삶을 실천하는 예는 많다. 작은 시골 마을의 캄캄한 겨울밤에 주민들이 마을의 미래를 논의하는 모습을 볼 기회가 있었다. 2023년 11월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의 마을 강당에 20대의 청년 농부들을 포함해 10여명의 주민들이 모였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주민도 여럿이었다. 논의 주제는 ‘마을공동체수당이 매년 마을에 주어진다면’이었고, 마을만들기 행정사업의 근본적 혁신 방안이라는 부제가 붙어있었다.

도시와 농촌의 삶은 다르다. 유지하고 보존하는 방법도 다르고 이를 실천할 주체들도 다르다. 삶이 다른데 같은 미래비전을 추구할 수도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 우리가 이같은 지역주민의 삶을 관찰하고 분석하려는 이유는 이들의 미래인식과 그에 따른 대안이 우리사회의 생존과 번영에 참고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김탁환 작가는 인구감소로 지역의 소멸 가능성을 걱정하기보다는 ‘서울 소멸론’을 제기한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생명의 시각에서 보면 소멸에 대한 걱정은 서

울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생명과 함께 공존하는 법을 모르고, 다른 생명과는 일정한 거리감을 두어야 한다는 기본도 모른다. 서울 사람들이 다른 생명의 소멸을 걱정할 계기도 기회도 없다. 서울 소멸론은 환경파괴와 기후위기가 심화하면서 우리에게 빨간 경고등을 켜고 있다. 이들의 경고를 흘려 들으면 한국사회의 미래가 어두워진다.

나. 연구의 목적

미래대화는 시민들이 예측한 다양한 미래의 모습과 바라는 미래를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다. 평범한 시민들이 모여 30년 뒤의 미래를 예측하고, 바람직한 미래사회의 모습을 논의한다. 이들의 논의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인식하는 미래사회의 모습이 내포되어 있고, 시민사회의 희망, 기대, 걱정, 우려의 요인들이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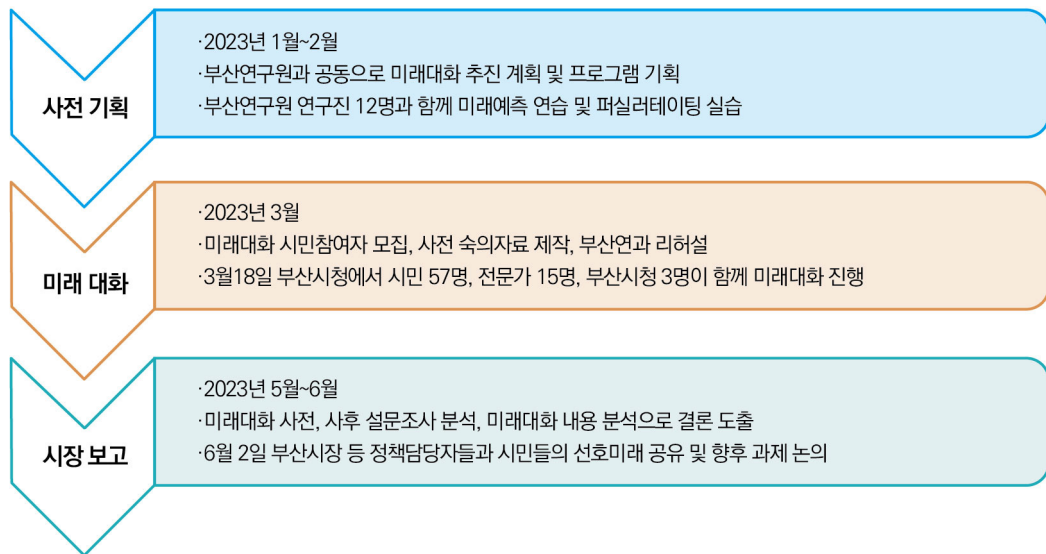
이런 요인들은 새로운 미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며, 반대로 새로운 미래의 도래를 막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정부 정책담당자들이 이런 요인들을 사전에 이해하고 대응한다면 사회가 원하는 미래사회의 청사진을 만들고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미래대화를 추진하는 또 다른 목적은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추진하는 ‘변화창조시민’(change agents)을 양성하는 것이다. 미래는 정부와 전문가, 시민 등 3자의 협력으로 만들어지며 이 3각 체계에서 시민들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정부와 전문가들이 원하는 미래라도 시민들의 이해가 없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추진하기 힘들다. 변화의 창조자이자 추진자로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미래계획이나 비전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고 정례화하는 정책 필요하다. 지역주민들과 미래대화는 시민 개인이 지역사회의 변화 창조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추진한 부산시민과 미래대화는 시민과 미래대화를 지역정부의 최고 의사결정자까지 연결하는 과정을 실험하는 의미도 지닌다. 부산시민과 미래대화는 국회미래연구원의 독자적 연구 프레임과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전문가집단인 부산연구원, 지역정부인 부산시청과 공동으로 기획하고 추진한 프로젝트다(그림2-1 참조).

국회미래연구원은 부산연구원 연구진을 대상으로 미래예측의 이론과 방법론, 미래대화 촉진자(facilitator) 역할에 대해 학습시키고 실습하면서 미래대화를 준비했다. 시민과

숙의토론에서 나온 결론을 부산시장에게 보고해 시민들이 걱정하는 미래와 희망하는 미래를 공유하고 필요한 정책적 과제를 논의했다. 이를 통해 미래대화가 단순히 시민 간의 대화로 끝나지 않고 주요 정책담당자에게 전달되어 미래를 향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그림 2-1] 부산시민과 미래대화 추진과정

제2절

부산시민과 미래대화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미래대화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진행 과정

가. 참여 시민 모집 방법 및 인구학적 특성

참여자 모집 과정은 다음과 같다. 부산연구원의 홈페이지 배너광고를 통해 ‘부산시민과 미래대화’에 참여할 시민 모집했다. 10대 청소년을 포함, 총 58명의 시민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소정의 교통비 지급). 2023년 3월18일(토요일) 오후 1~5시까지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미래대화에 참여한 시민들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2-1에 나타나 있다. 미래대화에 참여한 부산시민은 여성(60.3%)이 남성(39.7%) 보다 상회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29.3%)와 30대(20.7%)의 참여가 가장 많았으며, 중고생을 포함한 10대(19%)와 50대(19%)의 참여율이 다음으로 높았다. 직업으로는 직장인(50%)이 가장 많았고, 학생(24.1%), 주부(12.1%)와 자영업자(12.1%), 무직(1.7%) 순으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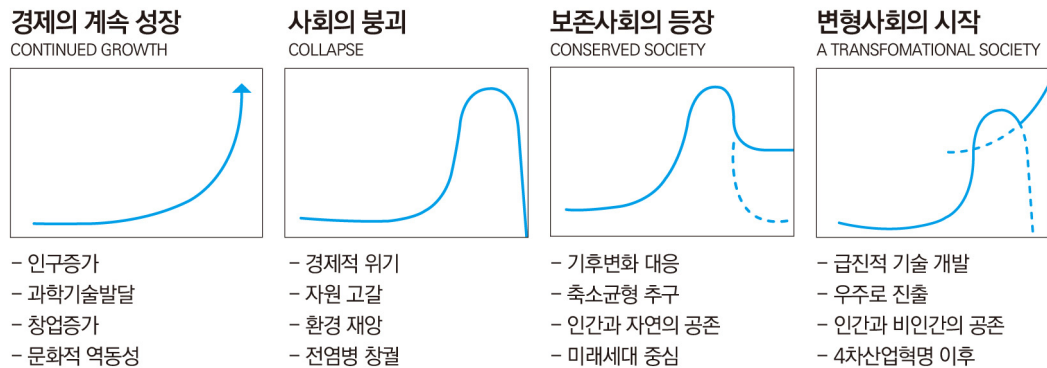
[표 2-1] 부산시민 미래대화 참가자 인구학적 특성(총58명 답변)

성별	연령	직업
여성(35명, 60.3%) 남성(23명, 39.7%)	10대(11명, 19%)	학생(14명, 24.1%)
	20대(3명, 5.1%)	주부(7명, 12.1%)
	30대(12명, 20.7%)	직장인(29명, 50%)
	40대(17명, 29.3%)	자영업자(7명, 12.1%)
	50대(11명, 19%)	무직(1명, 1.7%)
	60대(4명, 6.9%)	

나. 미래대화 진행 과정

우리는 참여자들에게 사전 숙의자료를 제공하고 미래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부산의 2050년 미래 가능성과 선호하는 미래 조사를 위해 연구진은 행사 3주 전부터 참석자들에게 사전 숙의 자료를 제공하고 학습하도록 요청했다. 사전숙의자료(부록1 참고)에는 국회미래연구원이 2022년 연구한 미래전망의 주요 결과를 담아 다양한 미래변화의 요인을 설명했다(박성원 외, 2022).

숙의자료를 읽은 참여자들은 4가지 미래상(그림 2-2 참조)을 이해하고 이 중에서 ‘이대로 가면 맞이할 부산의 미래’와 ‘미래세대까지 고려했을 때 바람직한 부산의 미래’를 선택하도록 했다. 4가지 미래상은 국내외 미래학계에서 활용하는 예측방법론으로 다가올 미래를 4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한 것이다(Dator, 2002; Park, 2018). 사전 조사 자료는 ‘미래대화’ 이후 다시 같은 내용을 조사한 것과 비교해 시민들이 미래대화를 통해 어느 정도 의견 변화가 있었는지 대조하면서 확인했다.



[그림 2-2] 다가올 4가지 미래의 유형과 주요 요인들

출처: 박성원, 2019

미래는 숙의토론형으로 진행한다.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중장기 미래의 변화를 논의하면서, 다가올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과제를 도출한다(표2 미래대화 프로그램 참조). 이를 위해 총 6개 팀으로 참여자를 나누고 팀별 2명씩 부산연구원과 국회미래연구원의 연구자들이 ‘미래대화 촉진자(facilitator)’로 참여하고 논의 내용을 상세히 기록했다.



[그림 2-3] 숙의토론으로 가능미래와 선호미래를 논의하는 부산시민들

사진출처: 부산연구원

미래대화 촉진자는 미래대화에 필요한 여러 질문을 제기하고 참석자들이 골고루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한다. 미래의 변화를 4가지 관점에서 논의하고(그림 2-3), 지역사회가 4가지 미래사회 중 어느 미래로 갈 가능성이 큰지, 어느 미래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숙의하면서 토론을 진행한다. 바람직한 미래(선호미래)로 가려면 필요한 정책과 사회적 과제가 무엇인지도 참여자들이 제안하도록 한다.

미래대화가 끝나고 참여자들은 자신이 예측한 가능미래와 선호미래의 근거를 작성한다. 연구진은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에서 참여자들의 의견 변화를 조사하고 분석한다. 참여자들이 제시한 ‘이대로 가면 맞이할 미래’(가능미래)와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바람직한 미래(선호미래)’의 다양한 이유를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한다. 이를 통해 부산시민 참여자들의 미래에 관한 희망, 기대, 걱정, 우려를 파악하게 된다.

조사 결과와 분석 보고서는 부산연구원과 부산시청과 공유하고 선호미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미래정책을 논의하고 발굴하는 데 활용한다. 시민과 미래대화의 성공 요건 중 하나는 미래대화의 내용이 시민들 간의 대화로 끝나지 않고 부산시의 미래 계획에 관여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연구기관 및 지역정부와 공유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이 확립되어야 미래대화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열정을 끌어낼 수 있고, 과거와 현재의 문제를 풀어 더 나은 미래사회를 만들어간다는 믿음을 줄 수 있다.

[표 2-2] 부산시민과 미래대화 프로그램

일정		내용
13:00~14:00(60분)	준비	회의장 준비 및 참석자 자리 안내, 참석자들과 라포(신뢰, 친밀감) 형성
14:00~14:20(20분)	오프닝	국회미래연구원장, 부산연구원장, 부산시청 인사 및 축사
		미래대화 목적 및 미래 개념 소개
14:20~15:00(40분)	세션1	부산의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전망, 인공지능의 발전이나 기후위기까지 다양한 미래변화 요소를 고려함
15:00~15:20(20분)	질의응답	세션1에서 논의한 내용 중 참여자들의 질문에 전문가 그룹의 답변 (전문가는 미래에 관한 정답을 제시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시민이 스스로 미래를 예측하도록 돕는 정보를 제공) *전문가 그룹: 미래예측의 역량을 갖추며 미래실현을 위한 정책을 두루 이해하는 그룹
15:20~15:30(10분)	휴식	
15:30~16:20(50분)	세션2	부산시민들이 맞이할 4가지 미래 논의 (부산엑스포, 양자컴퓨팅, 미중 대립, 인구 증감 등 미래의 주요 동인과 그 파급효과까지 토론)
16:20~16:50(30분)	전체토론	4가지 미래 중에서 '이대로 가면 맞이할 미래' 및 '미래세대까지 원하는 선호미래' 투표 및 토론
16:50~17:00(10분)	클로징	질의응답 및 사후설문

2 부산시민과 미래대화 결과

가. 미래대화 이전 참여자들의 미래 선택

미래대화 참여자들은 사전숙의자료를 읽으면서 ‘이대로 가면 맞이할 부산의 미래’와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선호미래’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표 2-3 참조). ‘이대로 가면 맞이할 부산의 미래’에서 사회의 붕괴가 43.8%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보존사회의 등장 35%, 변형사회 14.2%, 경제의 계속성장이 가능하다고 본 참여자들은 7%로 가장 낮았다.

[표 2-3] 사전 선택(총 58명 중 57명 답변)

미래유형	이대로 가면 맞이할 미래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선호미래
경제의 계속 성장	7%(4명)	24.5%(14명)
사회의 붕괴	43.8%(25명)	3.5%(2명)
보존사회 등장	35%(20명)	21%(12명)
변형사회의 시작	14.2%(8명)	51%(29명)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선호미래’에서는 변형사회가 51%로 가장 높았다. 가능미래에서는 가장 낮은 비율로 선택된 ‘경제의 계속 성장’ 미래가 선호미래 2위(24.5%)로 꼽힌 점은 주목된다. 사회의 붕괴 미래를 바라는 시민들은 2명(3.5%)이었고, 이들은 ‘붕괴’보다는 ‘붕괴 뒤의 대안적 사회’(예를 들면, 느린 사회의 실현)를 바라는 것으로 추정(미래대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 미래대화 이후 참여자들의 미래 선택

참여자들은 미래대화 이후 ‘이대로 가면 맞이할 부산의 미래’와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선호미래’를 선택했다(표 2-4 참조). ‘이대로 가면 맞이할 부산의 미래’에서 사회의 붕괴가 62%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보존사회의 등장이 29%, 변형사회는 9%, 경제의 계속성장이 가능하다고 본 참여자들은 0%였다.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선호미래’에서는 보존사회가 46.5%로 가장 높았다. 사전 조사에서 선호미래 2위를 차지했던 ‘경제의 계속 성장’ 미래는 선호미래 3위(15.5%)로 한 단계 하락하고, 변형사회가 2위(36.3%)로 선택되었다.

[표 2-4] 사후 선택(총 58명이 숙의토론하고 결정)

미래유형	이대로 가면 맞이할 미래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선호미래
경제의 계속 성장	0%(0명)	15.5%(9명)
사회의 붕괴	62%(36명)	1.7%(1명)
보존사회 등장	29%(17명)	46.5%(27명)
변형사회의 시작	9%(5명)	36.3%(21명)

다. 사전 조사와 사후 조사의 결과 차이 분석

미래대화 이후 참여자들은 부산의 붕괴 가능성을 43.8%에서 62%로 더 높게 예측했다. 사후설문 조사의 결과, 참여자들은 인구감소와 저출산, 일자리 감소와 산업의 쇠퇴, 고령화, 환경파괴 등을 ‘붕괴’ 예측의 근거로 제시했다(표 2-5 참조).

특히, 참여자들은 인구감소에서 청년층의 부산 이탈을 매우 걱정했다. 부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세대의 이탈은 부산의 미래를 어둡게 보는 강한 근거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사전조사와 달리 사후조사에서 붕괴의 미래를 가능하다고 답변을 바꾼 응답자들은 ‘저출산’ ‘고령화’ ‘산업쇠퇴’ ‘환경파괴’ ‘바이러스 창궐’ ‘계층과 지역간 갈등’ ‘공무원의 무능력’을 언급했다. 부산의 경제가 지속성장할 것으로 보는 의견은 7%에서 0%로 급락했다. 변형사회의 선호도는 사전조사에서 51%였으나 사후조사에서는 36.3%로 감소한 것도 주목된다.

[표 2-5] 미래대화 이후 시민들이 답한 미래별 키워드(괄호 안은 언급빈도)

미래상	‘이대로 가면 맞이할 미래’의 이유	‘실현을 바라는 미래’의 이유
계속성장	세계적 관광도시(1), 낮은 물가(1)	지속적 성장(3), 외국 투자 증가(1), 청년 증가(2), 발전(1)
붕괴사회	인구감소/저출산(15), 일자리 감소/산업쇠퇴(11), 고령화(8), 환경파괴(5), 공무원의 무능력(3), 자연재해(2), 지역 격차(2), 바이러스 창궐(2), 계층 갈등(1), 전쟁(1), 청년공간 부족(1), 주거환경 악화(1)	경쟁 감소(1)
보존사회	지역 성장의 정체 또는 유지(5), 인구 유지(4), 시민협력(2), 자연파괴(2), 탈세계화	지속가능(11), 삶의 질(2), 복지(1), 예술(1), 정신건강(1), 주거환경개선(1), 자연과 조화(1), 관광산업 발전(1), 인간성(1)
변형사회	새로운 성장동력/기술(2), 탄소중립(1)	인공지능(로봇) 등 신기술 혁신(10), 산업전환(2), 4차산업혁명(2), 부산 엑스포(1), 의료도시(1), 해양휴양도시(1), 제도 개선(1), 공동체 강화(1), 흥미(1), 대안(1)

라. 미래대화에서 시민들이 언급한 주요 내용

우선, 미래대화에서 시민들이 언급한 **붕괴의 이유**들은 다양했다. 이를 분야별로 주목할 내용만 추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구문제] “부산에서는 젊은이들이 감소하고 노령 인구가 많아 미래에 청년들이 노인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힘들지 않을까, 결국 부산은 노인과 바다만 남겠다.”

[일자리 문제] “기술이 발달해서 로봇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증가하고, 반면 로봇들이 못하는 그런 일들은 현재로서는 조금 안 좋은 일자리인데 과연 부모님들은 저희가 그런 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할지?” “인재는 다 외국이나 서울에서 데려오는데 부산 사람들은 되게 낮은 일자리만 차지할 것 같다.”

[돌봄문제] “초고령 사회가 되면 100세가 되어도 사는데 옆에 간병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주거환경] “부산의 마린시티 말고 초량이나 인근의 집들은 다 비게 될 거예요. 그러면 범죄 도시가 될 수 있고요. 거기에 살던 분들은 삶의 질이 너무 낮아질 것 같아 걱정입니다.”

[재난] “부산 인근에 노후한 원자력 발전소가 많다. 여기서 폭발 사고가 나면 부산은 그냥 그 자리에서 당한다. 요새 지진도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환경문제] “10년에서 20년 뒤에 낙동강 물은 현재보다 더 나빠져 있지 않겠나. 거기서 재배하는 벼에도 독소가 있고 그거를 섭취하는 사람의 몸에 축적되면 안 좋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 일본에서 방사능 유출 냉각수도 나오잖아요.”

[기후위기]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이 계속 상승하는데 부산(의 일부 지역)은 20년 뒤라면 침수될 것 같아서.”

[보건문제]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빈번하게 창궐할 것 같다. 한 번 더 이런 문제가 오면 부산은 버티지 못하고 붕괴할 것.”

[국제분쟁] “중국과 미국이 대립하고 이미 러시아는 전쟁 중이고. 서로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하면 갈등이 고조되는 이런 세계에서 국제무역이 쇠퇴하면서 부산항만의 기능이 감소하면서 인구가 더 감소할 것 같다.”

‘이대로 가면 맞이할 미래’ 2위, ‘보존사회’의 이유는 무엇일까. 참여자들은 보존사회가 가능한 미래로 인식된 이유로 지역 성장의 정체, 인구 유지, 시민협력 증가, 자연파괴 완화, 탈세계화 등을 거론했다. 한 참석자는 “대도시와 지역사회의 불균형 발전이 지속되어 부산이 과거처럼 성장하지 못하지만, 동남권 인프라가 부산에 집중되어 현상 유지는 가능하다”고 예측했다.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선호미래’에서 보존사회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사전조사에서 21%의 선호도를 나타냈으나 사후조사에서 46.5%로 급증했다. 사후설문 조사 결과, 참

여자들은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 삶의 질 향상, 복지와 예술의 도시 구현, 정신건강, 주거환경 개선, 자연과 조화, 관광산업 발전, 인간성 회복 등을 선호미래의 근거로 제시(표 3-5 참조)했다.

사전조사와 달리 사후조사에서 보존사회를 선호한다고 답변을 바꾼 응답자들은 ‘분배’ ‘문화와 예술’ ‘윤리’ ‘정신건강’ ‘복지’ ‘양적 성장의 지양’ ‘더불어 사는 공동체’ 등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대화 이후 선호를 보존사회로 변경한 참가자는 그 이유로 “성장사회가 자원 부족과 같은 미래를 마주하면 한순간에 붕괴할 수 있어 지속적인 미래사회가 좋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미래대화에서 언급된 ‘**보존사회**’ 선호 이유들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지속가능] “더 성장을 바라는 거는 지금의 청년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장보다는 지속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다양한 성장] “인구가 적어지면 사회의 다양성은 더 커진다고 봅니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꼭대기에 서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게 되고 거기에 너무 많은 힘을 소비해 다른 것을 할 기회를 놓쳐버려요. 경쟁이 완화되면 각자 사회가 필요한, 그러나 비어 있는 구석을 찾아가지 않을까요.”

[삶의 질] “저는 더 성장하지 않고 더 나빠지지 않는 것도 과제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경제) 성장 말고 우리가 노력해야 할 환경보존이나 교육, 분배, 문화예술, 정신건강 등 할 건 많거든요.”

[인간성 회복] “보존사회에서는 부산시민들이 책을 읽을 시간이 늘어나 정신적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다양한 인문학적인 얘기도 나눌 거고 미래(세대)와 대화도 더 자주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거환경] “주거 빈곤 퇴치 프로그램이 많아질 것 같다. 작은 단독주택 위주의 주거 문화가 형성되면 부산에 청년들도 증가할 것 같다. 이들이 할 일도 많아지고.”

선호미래 2위로 꼽힌 변형사회(36.3% 응답)의 주요 이유는 무엇일까. 인공지능(로봇) 등 신기술 혁신, 산업전환, 4차산업혁명, 부산 엑스포, 의료도시, 해양휴양도시, 제도 개선, 공동체 강화, 흥미 등이 변형사회를 선호하는 이유로 언급되었다. 시민들이 언급한 내용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신기술 혁신] “제가 스마트팜을 구축해 작물을 키워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 안에서도 충분히 농업으로서 먹거리 산업을 발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얻었습니다.”

[산업전환] “자율주행을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우리 부산에 했으면 좋겠다. 부산은 산과 강, 바다가 다 있고 해안선도 길어 자율주행을 위한 환경이 훌륭하다.”

[안전] “바다 위에 집을 짓는다는지 아니면 약간 우주선처럼 떠있는 집을 짓는다는지 새로운 생활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지진이나 쓰나미의 위험에서 보호될 수 있는 그런 집.”

[해양휴양도시] “가상 현실에서 일하는 것(재택근무 등)이 정착되면 부산의 해운대 바닷가가 있는 곳이라든지 낙동강 강을 끼고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람이 몰릴 것.”

[흥미] “지구를 떠나서 우주로 향하는 인류의 모습 너무 근사하다. 나는 그 미래에 살고 싶다.”

3위 선호미래로 꼽힌 경제의 계속 성장(15.5% 응답)의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발전] “해양도시로서 앞으로 세계엑스포 유치되면 좀 좋아지지 않겠나”

[새로운 투자] “의료기술이 좋아지면 부산이 실버타운으로 성장할 수 있고, 은퇴하신 분들이나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오면 인구가 증가할 것 같다.”

[사업기회] “중소기업들이나 벤처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전국 각지에서 부산으로 올 것.”

4위, 붕괴미래(1명)를 선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新공동체 형성] “진짜 세상이 망해 살 수 없을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아지면 개개인은 슬픔에 대한 연대가 생긴다.”

마. 부산시민들은 미래 앞에 어떤 단어를 붙이고 싶은가?

사후조사에서 참여자들에게 미래 앞에 붙이면 좋을 단어나 문장을 쓰도록 요청했다. 시민들은 ‘함께 잘 살고 행복한’ 미래를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그 다음으로 바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2-6 참조).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미래, ‘친환경적’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 ‘인간다운, 인간이 존중되는’ 미래를 바라는 시민들도 다수였다. ‘다양성 존중’ ‘건강한’ ‘혁신적’ 미래를 원하거나 ‘시련이 있어도 강한’ 부산의 미래를 원한다는 답변도 주목된다.

[표 2-6] 참여자들이 쓴 미래 앞에 붙여보고 싶은 단어

미래 앞에 붙여보고 싶은 단어	언급된 빈도
함께 잘 살고 행복한	10
안전한/평화로운	6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5
친환경적	5
지속가능한	4
인간다운/인간이 존중되는	4
다양성 공존/존중	4
희망	3
건강한	3
첨단/혁신적/과학적	3
가족의 안녕, 학생들이 자유로운, 입가에 미소가 띄는, 미래세대를 위한, 시련이 있어도 강한, 천천히 성장하는, 여유로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1

3 정책적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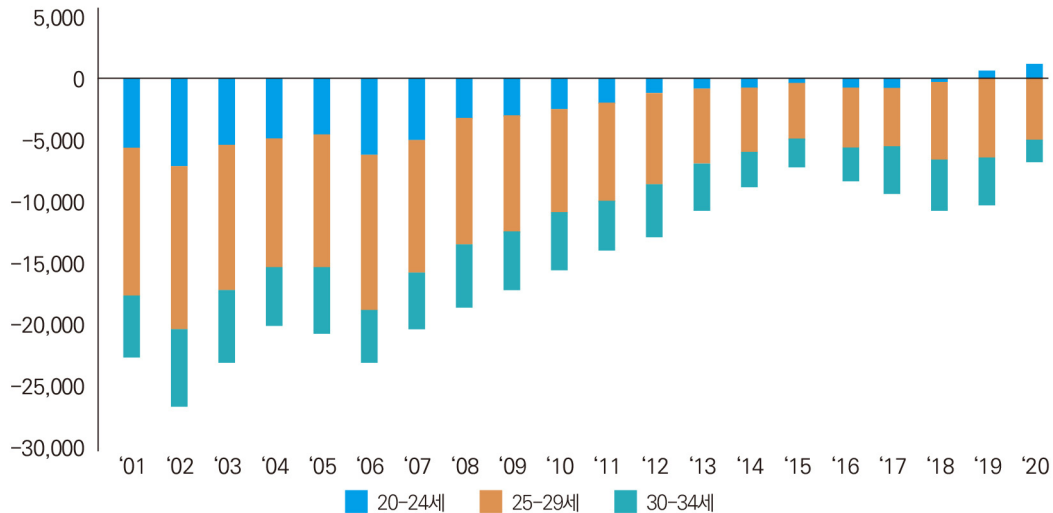
가. ‘붕괴사회’의 경고음에 적극적 대응

시민 참여자들이 지적한 붕괴의 사회구조적 이유를 분석하고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전통산업 쇠퇴와 일자리 감소로 청년층의 지역 이탈이 증가하고,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안감(돌봄 공백 등)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부산시민들이 붕괴의 요인으로 지목하는 수질 오염, 핵발전소 사고, 다양한 환경파괴로 발생하는 전염병의 창궐, 기후위기로 비롯되는 해수면 상승 등은 부산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래 사건들이다.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확고한 미래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도시의 회복력과 자연과의 조화, 건강한 시민들의 삶이 지속하는 환경을 창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원도심 노후 주택 증가, 지역 간 인프라 격차, 도심의 녹지 공간 부족 등도 미래대화에 참여한 시민들이 우려하는 요인이며 중장기적 대안 마련이 긴요하다.

2000년 이후 부산 청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그림 2-4 참조). 25~29세의 순유출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30~34세 유출이 높다. 부산 청년의 수도권 순이동은 연평균 9,000명 수준인데, 경남이나 울산 등 부산 인접 지역으로의 순유출은 심화, 특히 경남 지역으로 순유출이 눈에 띈다.

부산 청년들이 부산을 빠져나가는 이유는 직업, 가족, 주택 구입 등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에서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김경수 외, 2022). 부산연구원 김경수 외(2022)의 연구는 청년들의 타지역 유출을 막기 위해 1) 일자리 및 산업분야에서 “보건 및 사회복지 산업의 일자리 확충” “부산의 산업 자원에 기반을 둔 특화 분야 산업 기반 조성”을, 2) 삶의 질 측면에서는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설립” “청소년, 청년, 대학, 공공기관이 연계한 창의적 영화인 양성과정 도입” 등을, 3)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청소년과 청년 활동 공간 설치에 국비 지원” “공공기관에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지역인재 채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2-4] 부산 청년인구 연령계층별 순이동(2001~2020)

출처: 김경수 외, 2022

나. ‘보존사회’라는 선호미래에 다가가는 정책의 개발

인구감소가 가장 걱정이지만 지역별로 특화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지역별로 경쟁우위를 따져보고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전략을 내놓는다면 목표 달성은 하지 못하더라도 공동체 연대를 이루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예컨대, 미래대화를 상시적으로 정례화해서 개최한다면 주민들의 지역사회 관심도를 높이고, 정책가나 전문가가 생각지 못한 새롭고 기발한 아이디어도 제시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시민들과 미래대화를 ‘SG Future’(싱가포르 미래)로 브랜드화 하고, 대규모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회를 만든 바 있다. 2015~2016년 미래대화에서 나온 시민들의 아이디어에 대해 싱가포르 정부는 국가예술위원회, 국가문화유산위원회, 국가청년위원회 등이 함께 운영하는 기금(MCCY’s Our Singapore Fund)을 활용했다(박성원, 2020).

삶의 질 향상, 인간성 회복 등을 원하는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미래사회를 전망해야 한다. 경제성장이라는 하나의 목표만 매진한 시민들이 이제는 환경보존, 문화예술, 정신건강, 교육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에 주목해야 한다. 시민들은 차량 통행

이 제한되는 다양한 골목길에서 편하게 산책도 하고 책도 읽고 이웃과 담소도 나누는 문화를 원한다.

아파트 위주의 도시보다 작은 주택들이 모인 주거문화가 형성되면 전국의 청년들이 부산으로 모여들 것이라고 예측하는 시민들의 아이디어도 유용하다. 걷고 싶은 도시, 골목길과 마을이 살아있는 도시, 개성 있는 주민문화와 거리문화가 있는 도시는 탈산업화 시대에 지역발전의 모델이 될 수 있다(모종린, 2022). 이와 관련 부산시는 22년부터 ‘15분 도시’ 정책을 제시, 도보와 자전거로 생활, 일, 상업, 의료, 교육, 여가 등 도시의 필수기능을 누릴 수 있는 미래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다. 전국에서 국회 주도의 미래대화 추진

국회 차원에서 정례적으로 국민과 미래대화를 시행할 필요도 있다. 국회가 정쟁의 장소만이 아니라 중장기적 미래를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추진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국회는 수많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있어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주민들과 미래대화에 나선다면 단기적, 중장기적 과제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현안은 이해관계자가 많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만,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교환, 공감을 불러일으켜 건설적인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 미래의 걱정을 유발하는 요인을 현장의 관점에서 조사할 수 있으며, 미래 기회의 관점에서도 유용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평상시 자신의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시민들(청년층)이 목소리를 내며 지역의 비전을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부산시민과 미래대화에서 한 시민이 말한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20년 후에 미국 뉴욕타임스의 1면을 부산이 장식하는 것을 상상했어요. 그 시작은 오늘 시민과 미래대화였을 것 같아요. 좀 더 자주 시민과 미래대화하고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발판으로 더 나은 미래사회를 만들어간다면 세계가 주목하지 않을까요?”

라. 미래 과제

부산에서 개최한 미래대화는 부산연구원의 연구진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시민들과 섞여 미래대화의 촉진자(facilitator)로 참여하면서 시민들과 다양한 미래 논의를 이끌어 갔다. 이들은 미래대화 이후 따로 시간을 마련해 이 연구가 갖는 의미, 시민들로부터 배운 점, 장차 부산연구원이 추진해야 할 연구과제 등에서 논의했다. 이들이 남긴 후기는 연구자의 관점에서 시민들과 미래대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한다. 후기의 주요 내용을 별다른 가감 없이 나열해본다.

“다수의 시민이 생각하는 현재 부산의 문제점과 선호하는 미래를 확인했다. 시민들의 생각을 들으면서 우리가 바라는 미래가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그 미래에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향성을 배울 수 있었다.”

“부산시민들이 토론을 통해 생각이 변해갈 수 있음을 확인했다. 미래는 막연할 수 밖에 없지만, 시민과 소통으로 미래가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웠다.”

“정책연구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시민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해당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연구자로서의 소명감을 느꼈다.”

“시민들 간 다양한 의견에 대해 경청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좋았고, 연령, 직업, 거주지역 등 배경마다 다양한 관심사와 문제의식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다.”

“시민들이 세대 간 어려움에 대해 공유하고 어려움이라 느끼는 부분을 서로 해결해주고 싶어 하는 태도에 감명받았다. 나이 어린 청소년들도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모습이 좋았다.”

“앞으로는 하루에 미래대화를 끝내지 말고, 여러 차례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도 좋을 것 같다.”

제3장

에너지와 안보의 미래에서 온 시민들

제1절 원전마을 주민

제2절 원폭피해자

제 1절 원전마을 주민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그들은 왜 상여를 끄는가?”

이 절에서는 원전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는다. 2021년 작업에서 우리는 ‘한국사회가 에너지를 어떻게 얻고 있는가’, ‘그 방식에서 초래된 불평등의 구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에게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듣고, 대화를 나눴다. 이어서 홍덕화 교수에게서 한국의 원전체제의 역사와 특징에 대해 발제를 듣고, 대화를 나눴다.

이번에는 에너지 문제를 구조와 정책이 아닌, 일상의 삶의 차원에서 접근해 보고 싶었다. 특히 우리가 주목했던 것은 지역이라는 맥락이었다. 에너지 전환의 당위성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삶의 맥락에서 체제 지속의 조건과 변화의 과제를 생각해보고자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원전마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한국사회에 ‘창발적 시민’으로서의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원전마을 주민의 이야기는 김우창 작가가 ‘저자’의 관점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 주는 형식을 갖는다.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저자’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창발적 시민으로서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김우창의 책 『원전마을』(2022)은 기존의 탈핵담론에서 드러나지 않은 ‘지역’이라는 맥락을 드러낸다.

대화의 형식과 대화를 제시한 글쓰기 방식은 작년과 동일하다(박성원 외, 2022: 102). 저자에게 해당 주제에 대한 1시간 가량의 발표를 요청했고, 발표 후에 연구진이 질문을 하고 발표자가 답을 하는 문답 시간을 1시간 30분에서 2시간 가량 가졌다. 이 대화를 녹음했고, 녹취록을 작성했다.

다음 소절에서는 이 세미나 내용을 구술 기록의 형태로 정리해 제시하고자 한다. 인터뷰가 말하는 형식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구술 내용이 일관된 흐름으로 읽힐 수 있도록 연구자가 일부 내용을 생략, 수정, 재배치했다. 중간의 소제목은 발표자의 구술 내용을 참고해 연구자가 붙인 것이다.

거리감 느끼기

남태제 감독님의 영화 ‘월성’ 첫 장면에는 세 개의 숫자가 나와요. 1과 4와 309. 모두 월성핵발전소와 떨어진 거리를 의미해요. 주민 ○○○ 씨 집은 1km. 집에서 월성원전의 뚝이 보이니까요. 4는 감은사지와 거리의요. 309는 한강 성산대교와의 거리고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습관적으로 거기를 따져 보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국회는 직선거리로 따지면 한 340-350km 정도가 되겠죠. 저도 사실 몰랐고, 이런 발표를 할 때마다 “경주에도 원전이 있었어?”라는 질문을 들을 정도로 천년의 고도로 관광도시로 유명한 경주에도 원전이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제가 월성에 내려가 8개월을 머물면서 현장연구를 했던 이유도 그들의 일상 속에서 그들이 어떤 말을 하고 행동하는지 살펴보고 싶어서였어요. 말이 어색하긴 하지만 원전과 함께 살고 또 원전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을 현장에서, 그냥 서울에서 2박 3일, 3박 4일 잠깐 내려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30-40년 살아온 시간에 비하면 체험 정도였지만, 8개월이라는 시간이 저에게는 많은 것들을 주었던 것 같아요.

저는 환경 쪽으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에너지 쪽으로는 전혀 관심도 없던 사람이었고 학부 전공은 국문과고요. 졸업 후 2년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막연히 기자가 되고 싶어 준비하던 사람이었는데 밀양 송전탑 갈등을 알게 되면서 그때 처음으로 ‘어? 전기를 이렇게 써도 될까?’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자기의 몸에 불을 붙이고 자기의 눈 위에서 발 위에서 왜 죽었지?’ 송전탑이라는 단어조차 너무 익숙하지 않았고요. 막 찾아가면서 송전탑, 그 너머의 원전, 그리고 전기를 쓰는 나. 이런 고민이 생기면서 밀양 송전탑 갈등의 일종의 연대자로 서울과 밀양을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활동가가 돼야겠다, 한 1년 정도를 밀양에서 활동가로 살다가 에너지 정책, 에너지 문제를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 해서 서른이 넘는 나이에 환경대학원 석사 과정을 밟게 되었어요. 석사 논문은 밀양 송전탑 갈등을 한전은 어떻게 관리했는가, 돈 주거나 소송으로 쫓겨나 그런 식으로 갈등을 관리했다는 취지의 논문을 썼어요.

박사과정에서는 주변에서 현장연구를 고민할 때 월성을 많이 추천해 주셨어요. 월성에서는 한수원 본사도 내려가 있고 원전도 있고 중저준위도 있고 맥스터라는 고준위도 있고. 그러니까 원전 관련한 종합선물세트가 있는 거고 다른 지역에서는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일종의 퍼포먼스라도 하는 이주 상여시위운동 하는 사람이 없는데 여기 가면 이주

요구하는 사람들 있으니까 다양한 것을 볼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월성에 가게 되었어요.

원래는 2020년 초에 가려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막 터지기 시작해서 못 가다가 10월 중순쯤에 우연히 경주에 가서 “이런 연구를 좀 하고 싶은데 현장에서 살면서 연구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주민들이 환영해 주시고 신서리에 집도 마련해 주셔서 신서리에서 살았어요.

원전(연구)에 대한 통념과 상반된 시각

원전 연구하면 한편에서는 탈핵을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탈핵 무당’이라고 비판하는 것 같아요. 틀린 말은 아니죠. 월성에서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원전 혹은 한수원 혹은 저런 방사능 물질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래서 이주를 요구하는, 거의 10년째 이주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라고 말하는, “너희가 잘 모르니까, 너희가 원전에 대해서 모르니까 감성적으로 대응하고 환경단체에 일종의 부화뇌동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만 듣고 이렇게 너희가 계속 위험하다고 말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현장에 있는 것 같고요.

월성만이 아니죠. 최근에 오염수 문제도 그렇고 항상 뭔가 찬성 반대 거의 극단적인 의견들이 오고 가는 것 같은데요. 부산에, 광주에, 월성에, 울진에 저렇게 원전이 계속 들어서는 이유, 또 원전 관련 시설이 빼곡하게 클러스터화되는 이유는 “지원금 때문이지. 핵발전소에 그 지역 주민들이 의존하기 때문이지.”라고 쉽게 결론 내려요. 그곳은 왜 원전에 혹은 원전이 주는 돈에 의존하게 되었나, 그런 얘기는 잘 없어요.

경주 안의 경주, 외부 밖의 외부

경주에 원전이 있다는 말도 맞는 말이긴 한데 경주 안에서도 가장 오른쪽 가장자리에 동경주라고 불리는 곳이 있어요. 한수원 본사, 그리고 중저준위, 또 최근에는 맥스터로 상징되는 고준위 폐기물, 핵발전소 단지, 연구소가 밀집해 있어요. 동경주라는 말이 없었는데요. 원전이 한 기, 한 기, 한 기 들어서니까 경주 안에서도 동경주라고 불리는 마치 ‘서울vs경주’, ‘경주vs경주 안의 또 다른 동경주’. 복수의 외부와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외부 안의 외부 안의 외부 안의 외부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우리 안에 타자를 끊임없이 만들고 마치 Divide and Rule이 저거잖아요, 끊임없이 상대방을 쪼개어 나가는 것. 동경

주 안에도 양남면. 예전에는 동경주라는 이름으로 3개 면이 같이 싸웠는데 이제는 그 안에서도 양남면 따로, 문무대왕면(예전의 양목면), 그리고 감포읍 따로. 그리고 또 양남면 안에서도 원전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 나아리이고요.

월성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래된 미래의 느낌? 다른 데는 개수는 더 많지만 원전만 있는데 여기는 방폐장도 있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지금 당장 보관할 곳이 없으니까 임시로 여기에 넣자고 해서 맥스터라고 고준위 핵폐기물 보관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월성원전이주대책위원회

제가 궁금했던 것은 흔히 안전신화 혹은 안전 혹은 안전하다고 믿게 만드는 신화 속에서 주민들이 30년, 40년을 살아오다가 어떻게 이분들이 이렇게 이주대책위를 만들고 한수원에 반하는, 원전에 반하는 활동들을 하셨을까였는데요.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후쿠시마 사고가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만나는 전문가는 한수원 혹은 한수원 직원이 전부였는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는 기자들도 그렇고 환경단체 활동가도 그렇고 의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이곳을 방문하면서 지금까지 한수원이 주었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거짓 혹은 거짓 너머의 진실들을 조금씩 알게 된 거죠. 한수원은 “사고가 나지 않으면 방사능 새지 않아.”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하다못해 전기밥솥 할 때도 김을 빼는 작업이 없으면 팽 터지는 것처럼 원전도 사고가 나지 않아도 매 순간 지금도 기체와 액체 상태로 방사능 물질이—특히 삼중수소가 가장 여기서는 이슈가 되는데—빠져나온다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되고, 한수원이 지금까지 말했던 건 의도적인지 비의도적인지 모르겠지만 거짓이구나, 저건 신화였구나라는 것을 주민들이 알게 되고요.

위험의 비가시성을 어떻게 가시화할 것인가,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의 싸움에서 핵심적인 발견은 소변검사였어요. 소변검사를 통해서 ‘정말 그 위험하다는 삼중수소 방사능 물질이 내 몸속에 있네?’ 내 남편 몸속에 있고 내 5살짜리 손자 몸속에 있고 그 손자의 방사능 수치가 성인에 비할 정도로 굉장히 높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 이 위험한 곳에 오래 머물고 이곳에서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마시고 더 많이 숨 쉴수록 저 수치가 높은 거구나.’라는 걸 깨닫고 일종의 가시화된 이 위험을 통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그리고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한수원 내부에서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짝퉁 위조 부품을 쓰거나

그 안에서 마약을 하거나 다양한 문제들이 한수원 내부에서 벌어지면서 주민들이 이제는 못 믿겠다, 못 살겠다를 외치면서 2014년 8월에 이주대책위를 결성해서 농성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상여 시위

월성원전 정문에 있는 2개의 차로. 굉장히 협소한 지점이죠. 2개의 왕복 도로에서 매주 월요일 출근길에 일종의 출근투쟁을 하시는 건데요. 한 360m, 그냥 걸으면 왕복 15분도 안 걸리는 지점이 상여를 끌고 관을 끌고 뒤에 일종의 핵폐기물을 상징한 드럼통을 끌고 피켓을 들고 걸어요.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월요일 출근할 때마다 저러면 한수원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특히나 월요일 차도 많이 막히는데.

상여시위에 저도 참여를 계속했었는데요. 상여시위를 통해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지만 계란들의 바위치기 같은 느낌. 저희가 갈 수 있는 곳은 정문 너머도 아니고 딱 정문. 그냥 항상 돌아서고. 한수원 정문을 향해서 갈 때는 차가 저희 뒤에 있으니까 모르는데 튄 하고 돌아올 때는 우리 뒤에 이렇게 차가 있었음을 알고. 차들이 막 뺑 거리는 차도 있고요. 정말 창문 열고 너무 차가운 시선으로. 그래서 돌아오는 10분 안 되는 저 길이, 300m 안 되는 길이 저는 나중에는 치욕스럽기도 하고 저분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2등 국민처럼 느껴지는. 왜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되는가. 서울에 사는 저처럼 아무런 고민 없이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건강하게 사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당연한 건데 저분들은 그 당연한 누군가의 삶을 위해서 저렇게 싸워야 되는 것들이 저분들 입장에서는 한탄스러운 매주 월요일의 풍경이기도 하고요. 원래는 월, 목 매주 2회였었는데 계속 사람들도 빠지기도 하고 해서 지금은 매주 월요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상여시위를 하고 계세요.

처사 국장 지 구(處士 局長 之 樞). 그러니까 국장, 사무국장의 관. 자기의 직함을 관 위에 적은 거죠. 그러니까 위원장의 관, 부위원장의 관, 누구누구의 관. 그러니까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삶이다 보니까 상여시위가 그냥 보여주기가 식이 아니고 정말로 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저 상여가 처음에는 바퀴도 없었는데요. 사람들이 점점 없고 이분들이 고령이 되니까 저 상여와 관에도 바퀴를 달면서 이분들 나름대로의 싸움의 기술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계세요.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사 가면 되지 않아요? 왜 이주를 시켜달라고 그래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곳에 있는 땅, 집을 누가 살 것이며,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팔려야 나가는 건데 창살 없는 감옥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한 분은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탈출할 기회가 있었는데 2016년 경주에 큰 지진 있었을 때 경주에 지진이 있기 몇 주 전, 몇 달 전에 누구와 일종의 가계약 내지는 구두계약을 맺었대요. “3층짜리 집을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계약하자.”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는 ‘드디어 이곳을 팔고 나는 나갈 수 있겠구나.’ 그랬는데 지진이 팡 이렇게 생기면서 계약을 맺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미안한데 나 그 집 못 살 것 같은데? 거기 원전도 있다며?” 지진이 나고 지진과 관련한 뉴스는 원전을 향하고 있다 보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이게 참 웃어야 되는 건지 울어야 되는 건지 마지막으로 도망갈 기회조차 그렇게 지진이 발생한 이후로 사라진 거죠.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사를 가고 싶어도 도망을 가고 싶어도 어딜 나가서 살고 싶어도 자기가 평생 일군 땅, 아주 조그마한 논밭이 여전히 묶여 있다 보니까 도망을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주를 시켜달라는 싸움을 하고 계신 거고요.

그분들의 요구는 그겁니다. “우리는 더 많은 지원금도 필요 없고 딱 우리가 지금 사는 집, 논, 우리들이 갖고 있는 자산, 부동산 등을 처분해 주면, 그러니까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처분해 주면 우리가 그냥 알아서 살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마을 전체 이주 혹은 이전이 아니고, 한수원은 관련된 법이 없다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법을 만들어야 돼서 국회라든지 법으로 가면 산업부 입장에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가령 예전에 했을 때 몇 조, 몇십 조 이런 일종의 용역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전히 이주 요구를 건강의 문제나 권리의 문제가 아닌 경제학적인 관점으로—물론 그것도 고려는 해야겠지만—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바라지도 않고 그냥 여기서만 나가게 해달라는 수준 같아요.

어려운 싸움

이 싸움은 가장 어려운 것이 “이게 정말 위험한 거야?” 일종의 위험 논쟁 같은 거잖아요. 핵발전소도 그렇고 GMO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지금이야 가슴기 살균제도 그렇고 석면이 위험물질로 인정받았지만 방사능은 정말 위험한가 아닌가 하는 논쟁이 여전히 끝

나지 않았기 때문에 원전 확대 주장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더 다수의 목소리로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근거이자 증거이자 힘이 주민 입장에서는 마치 가슴기 살균제 당시에 가장 안타까웠던 사례 중의 하나가 조부모, 부모가 자기의 자녀 혹은 손자·손녀를 위해서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산 가슴기가 그들을 죽이거나 아프게 하거나 장애를 일으키거나 했던 것처럼 아까 ○○○ 씨 같은 경우도 자기의 첫째 딸 내외에게 “들어와 살아라. 너 울산 북구에 사니까 가깝기도 하고 내가 너희 애들 키워줄 테니까, 돌봐줄 테니까 들어와 살아라.” 당연히 거기가 지금처럼 위험하다는 거 알았으면 그렇게 들어오라는 말은 안 했겠죠.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함과 동시에 본인이 가해자가 된 느낌,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그분 입장에서는 너무 미안한 거죠. 당연히 5살짜리, 10살짜리 사내아이가 뛰어놀다가 피가 날 수도 있고 코피가 날 수도 있는데 ‘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위험이라는 것이 특히나 주민들 입장에서도 여기서는 적지는 못했지만 일종의 주민들 스스로 국가가 위험을 규명하거나 조사해 주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물어 물어 묻는 것. “저 집에 살던 할아버지 암 걸리지 않았어요?” 혹은 “중학생, 초등학교 옛날 그 친구 백혈병 걸리지 않았어?”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스스로 기록하고 정리하면서 물론 그 누구도 그게 증거가 될 수는 없지만 주민들 스스로 얻게 되는 경험들 혹은 지식들이 자기에게 돌아와서는 ‘내 자식은, 내 자식의 자식들은 이곳에서 살아도 되는 건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증거로 돌아오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셨고요.

“나는 탈핵 운동하는 거 아니야”: 피폭과 생계 사이

왜 탈핵이 아니고 왜 더 센 저 원전을 향한 게 아니고 왜 이주를 요구할까. 경주가 울산 북구랑도 굉장히 가까이 있는데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원전에 대한 더 직접적인 요구, “멈춰라”, “탈핵해라”, “반핵해라”라는 요구보다는 이주를 요구하고, 울산 북구에 계신 조금은 떨어져 있는 분들이 오히려 건설 반대 혹은 조기폐쇄를 요구해요. 어쩌면 원전과의 거리가 그냥 단순한 어떤 물리적 거리만이 아니고 원전과 가까울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다 보니까 더 많은 지원을 받으면 그걸 끊어낼 수 없는, 그래서 탈핵을 외치기보다는, 탈핵을 아예 외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외치더라도 이주를 요구하는 것이고.

맥스터가 일종의 고준위 핵폐기물을 임시로 저장하는 시설을 말하는 건데, 원전 관련 시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플래카드에 적힌 저 말은 한마디로 “너희 한수원이나 원전 반대하니까 우리 양남농협은 일종의 보이콧 할 거야.”인데 저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까지 조금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농협장이 지역에서 세력으로 따졌을 때 Top 3 내지는 Top 5 안에 든다 하더라고요. 지역에서는 몇 백억, 몇 천억 규모의 돈을 쥐고 있는 양남농협장을 맥스터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까고 있는 겁니다, 한수원 노동조합이. 농협장도, 여기에는 없지만 시의원도. 그러니까 맥스터 반대하는 시의원, 국회의원, 양남농협장 모두가 다 아래에 있는 거죠. 실제로 월성원전 내부에 양남농협 지점이 있었는데 진짜 뺏습니다. 왜? 자기들을 반대하니까.

오른쪽도 마찬가지인데요. “맥스터 건설을 찬성합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청송갈비, 태화갈비 갈비집 주인들이 저런 플래카드를 단 건데요. 저것도, 저 찬성이 정말 찬성일까. 한수원이 내부 인트라넷에 일종의 화이트리스트 같은 걸 만듭니다. “청송갈비, 태화갈비 우리 지지한다. 여기 되게 착한 가게야. 근데 우창갈비, 우창족발, 우창막창은 맥스터 건설 반대해. 여긴 나쁜 가게야.” 일종의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착한 가게와 나쁜 가게를 만들고. 한수원 내부의 직원들은 어딜 갈지 뻔하잖아요. “당연히 우리 찬성하는, 우리 지지하는, 우리 말 듣는 청송갈비로 가야지.”로 가다보니까 이런 일종의 생계 문제와 피폭 문제 사이에서 주민들은 늘 고민하게 되는 거죠.

경주 경실련이 만들어진 지 당시에 30년이 돼서 지역사회에서도 굉장히 힘 있고 의미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하는 시민단체였는데 참 아이러니하죠, 30년 된 당시에 드디어 소식을 만드는데, 많이 받은 것도 아닙니다. 300만 원, 100만 원 받은 게 더 화가 나는 지점인데.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100만 원, 300만 원 받고 그 이후로 사고부지로 지정돼서 결국 30년, 35년 된 경주 경실련이 해체가 되는 것. 우스갯소리로 경주 안에서는 경주환경운동연합을 제외하면 한수원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시민사회단체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YMCA도 그렇고 경실련은 아예 사라졌고요.

그래서 비판을 못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비판을 하지 않는 사회로 점점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 보니까 한수원 입장에서는 기고만장이 아니고 그냥 한수원 천하가 돼서 자기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그냥 잘라 버리고 보이콧 하고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내 말만 듣는 사람들에게 돈만 주는 그런 사회로 점점 만들어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싸움을 포기하거나 싸우다 포기하거나 싸움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이주를 요구하는 것이 “에? 뭐 이주밖에 요구 안 해?”가 아니고 한수원 천하에서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다는 것을 감안하면서 이주를 요구하는 거예요.

피해와 가해 사이

두 번째는 왜 이주를 요구할까. 탈핵을 요구하는 순간 지금 일본 오염수 문제,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산물의 피폭 문제로 이어지는 것처럼 이분들이 탈핵을 혹은 조기폐쇄를 요구하는 순간 그동안 약간 터부시되어 왔던 토양 및 농수산물 문제, 피폭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걸 거론하는 순간 내 주변에 있는 이웃 혹은 내 가족 혹은 경주시 혹은 양남면 자체가 농수산물로 혹은 그것과 관련한 서비스업으로 먹고사는 곳이 이것을 외치는 순간 일종의 모든 피해들이 다시 이분들에게 전가되는 거죠. 마치 내부에서 휘슬블로어처럼 뭔가를 나눈 외치고 싶은데 외친 이후에 모든 피해가 다시 전가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외칠 수 있는 건 그냥 오염되고 질병이 있는 내 몸. “내 몸이 오염됐고, 그래서 이곳이 위험하기 때문에 나를 빼내 줘, 나를 이주 해줘.”라는 요구가 굉장히 한편으로는 타당해 보이기까지 했고요.

탈핵의 정의를 아주 사회적인 개념으로 범위로 보자면 가동을 중지하고 신규로 안 짓고 재생에너지 늘리는. 근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오케이, 지금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멈춰 줘서 고마운데, 근데 거기 여전히 핵폐기물 있잖아. 그리고 우리 폐로도 해야 되고 핵폐기물 처리·보관 이거 수십만 년, 백만 년 간다는데 멈추는 건 좋은데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저의 탈핵의 정의는 가동 중지 및 신규 건설 금지였는데 주민들이 생각하는 탈핵은 저 폐로,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및 보관까지였던 거죠. 실제로 이걸 할 수 있느냐. 현실 가능성의 측면에서도 탈핵은 사실 지금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탈핵이 원전 가동 여부로만 봐도 문제인 정권에서 했던 게 이루어지기만 했어도 2080년. 독일이 최근에 4월이었나 5월이었나 진짜 탈핵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현실 가능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폐로 문제. 지금 폐로와 관련한 기술이 70%, 80% 있다고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폐로에 대한 기술이 없고요. 그리고 고준위 핵폐기물은 전 세계적으로도 핀란드 한 곳 지금 만들었다고 하지만 글썽요, 몇만 년, 몇십만 년, 몇백만 년 그 안에 폐기물이 처리되고 보관될 수 있을지.

주민들의 관점에서는 현실 가능성이 부재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낭만적으로 보이는 탈핵을 그냥 막연하게 외치는 것보다 가장 현실적이고 유일한 대안이 이주대책이었던 거죠.

탈핵의 정의

지금까지 우리는 가동 중지, 건설 중지, 재생에너지 확대로만, 그러니까 에너지원으로만, 그래서 에너지를 어떻게 쓰고 발전시키고 생산할지만 생각했지 폐로, 해체, 핵폐기물 처리, 그리고 원전과 함께 살아갔던 사람들 혹은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에서 이뤄졌던 의미 있는 에너지 전환 두 가지가 탈원전과 탈석탄인데요. 탈석탄은 끊임없이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초보적인 수준이었지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원전 문제를 언급할 때 정의로운 전환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단 한 번도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는 원전 문제 하면 친원전 아니면 반원전, 원전을 찬성하는 거 아니면 반대, 원전을 찬성하면 핵마피아, 원전을 반대하면 탈핵 무당. 이렇게 이분법적이고 흑백논리. 윤석열 아니면 문재인, 윤석열 아니면 이재명, 원전을 찬성하는 후보 아니면 원전을 반대하는 후보.

감히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전 이슈는 단 한 번도 정치화된 적이 없는 그냥 흑백논리. 찬성 아니면 반대. 그렇게 생각을 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저렇게 많은 이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은 여전히 그냥 에너지원, 산업 혹은 돌리거나 말거나. 그리고 신고리 5, 6호기도 결국에는 한국형 공론화. 지을 거냐 말 거냐 OX 식으로 전략했죠. 원전 이슈는 우리나라에서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지만 찬성 아니면 반대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지역사회에서 바라봤던 원전 혹은 원전과 함께 살아가는 의미, 혹은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원전은 무엇을 의미할까. 지금까지 탈핵 진영 입장에서는 약간 사람이 빠진, 그러니까 일종의 발전소만 생각하고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늘리는. 근데 그 원전과 함께 살아왔던 주민들은 어떻게? 이주 문제, 건강 문제, 피폭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그런 이야기 없이, 재산권에 대한 문제 고려 없이 그냥 거대 담론 탈핵으로 그냥 헤쳐모인.

한 분이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계속 말하는 박정희 당시에 흔히 말하는 탑다운 식으로 원전 설치했지. 그래, 그걸 너는 지금 비민주적이라고 말을 하지.” 근데 본인한테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도 탑다운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민주적이었어? 도대체 박정희 식의 원전을 건설하는 방식과, 그러니까 이걸 비교하자는 건 아니고, 그 주민의 입장에서는 원전을 지을 때도 국가 마음대로, 원전을 멈출 때도 국가 마음대로. 어디에도 나는 없었다는 거죠. 지역은 없었다, 주민은 없었다. 그냥 오롯이 너희가 필요할 땐 지었고 너희가 위험하다고 가동 중지하자고 했고.

지역의 관점에서

지역사회에서 원전을 바라보다 보니까 지역사회의 경제를 일정 부분 책임지는 기업으로서의 의미도 있고, 준정부 그러니까 지역사회와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들, 노인, 복지, 여성, 청년, 교육 다양한 것들이 안타까운 건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원전에서 나오는 수백억, 수천억 원으로 준정부의 역할을 원전이 지역사회에서는 하고 있었고, 또 때로는 원전지원금을 주는 아주 착한 기업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위협과 압박을 서슴지 않는 양아치 혹은 용역보다 더 깡패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경주라는 도시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경주는 지방자치 제도라든지 재정 자립도의 관점에서 보면 원전이 없을 경우에는 20%인 도시이기도 하고 위로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것들을 생산하고 포항의 핵심인 포스코가 있고 아래로는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박 3일 잠깐 놀러 가는 관광객인 저희의 관점에서 보면 되게 아름답고 예쁘고 역사적으로 너무 좋은 도시인데 집수리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관광이라는 거로 일종의 지역사회가 먹고 살지만.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도 끊임없이 경마장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뭘 계속 유치하려고 했었대요. 근데 계속 번번이 떨어지고 이들이 마지막으로 했던 게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 ‘왜 도대체 원전 시설을 계속 유치할까? 왜 원전을 계속 받아들이일까? 왜 게다가 중저준위까지 경쟁투표로 참여해서 가장 높은 득표를 했을까?’를 보면 이 원전이 저에게는 위험한 발전원이자 발전시설인데 경주라는 도시 혹은 경주를 이끄는 경주시장의 관점에서는 유력한 산업으로 이거를 계속 유치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경주 그리고 경상북도는 아예 원자력발전 클러스터화가 일종의 발전 방식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원전의 의미도 위험, 사고, 윤리, 도덕 이런 접근 말고, ‘사고가 나니까 제2의 사고를 막아야지’도 좋고 윤리 도덕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데, 문재인이 탈원전을 지역 사회에서 특히 가장 반발했던 이유는 기업, 준정부, 지원금, 위험과 압박 혹은 기후변화 리스크와 관련한 원전의 또 다른 이슈들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8개월을 있으면서 주민들과 살면서 주민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전을 이 지역사회에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중에서 몇 살 대가 가장 지지하는 것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당연히 나이가 많을수록 지지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은 “40대 후반 아니면 50대가 가장 강력하게 원전을 지지하는 것 같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월성원전 1호기가 건설되고 가동된 게 지금 딱 40년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40대 중후반, 50대 초반 이분들이 태어났을 때 이미 원전과 함께 살고 있고 이분들이 국민학교에 갔을 때 원전 한수원 마크가 찍혀 있는 기자재, 공책이 있고, 이분들이 청년이 됐을 때 원전 관련 알바든 일을 하고 있고,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리더가 되는 40대, 50대가 됐을 때는 한수원이 주는 원전지원금으로 마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40대와 50대가 가장 강력하게 원전을 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제는 원전과 이분들이 함께 살아가는 과정, 이분들의 삶을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이해해야 탈원전이든 친원전이든 원전에 대한 안전이든 원전을 해체하든 이런 논의가 지역사회에서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들이 우리여야 하는 이유

소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우리 모두의 고민이자 목소리라고 생각해요. 탈핵 혹은 이런 이슈가 일종의 전환과도 관련이 있잖아요. 에너지 전환, 사회 전환 혹은 좀 더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일 때 전환을 지금까지는 보통 에너지원의 관점에서 접근해서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에너지믹스의 관점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원전과 이렇게 엮여 있는 주민들의 삶, 생계, 생계와 피폭 사이의 고민들을 제대로 녹여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전환은 고탄소에서 저탄소로 혹은 원전 중심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그러니까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이었던 거죠. 에너지 지리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전환은 의존을 해체할 때 이루어진다.”고 표현했는데

저도 공감해요.

주민들이 원전 없는 삶을, 혹은 원전이 위험하지만 위험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생계의 문제 혹은 의존의 문제, 또 그것을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역사성. 단순히 그냥 먹고사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30년, 40년 원전과 함께 살아가면서 원전이 그들 삶에 녹아 있고 뿌리박혀 있고 임베드 되어 있는 그런 삶과 일상을 저희가 이해해야만, 그래서 그 의존을 긍정적인 의존은 당연히 더 강화시켜야 되고 부정적인 의존은 줄이고 해체시켜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현장연구 내지는 아주 소수의 사례연구였지만 이를 통해서 전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의존을 해체시키는 것, 그리고 회복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 식으로도 이 원전 연구를 혹은 원전과 함께 살아가는 주민들을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2 원전마을 사람들이 말하는 것

원전마을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창발적 시민인가? 김우창이 전한 원전마을 주민의 이야기는 무엇보다 원전을 둘러싼 거대 담론이 간과하고 있는 목소리를 드러낸다. 그것은 바로 원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이다. 그것은 사실 우리가 외면해온 목소리이지만, ‘피폭과 생존 사이’에서 ‘이주’라는 어찌 보면 소극적인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위치성은 우리 모두에게로 확장할 수 있다. 실제로 일본이 방류한 ‘오염수’를 통해 전세계인들은 구조적으로는 월성 주민들과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들의 목소리는 우리가 이제는 맞닥뜨린 문제의 성격을 드러내는 ‘선체험자’로서의 의미를 갖는다.⁴⁾

4) 연구진의 대화에서 나온 한 연구자의 발언은 이 점을 잘 표현하고 있다.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이 생계와 피폭 문제 사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탈핵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그런데 그걸 외치면 여기서 먹고사는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 누가 우리를 보호하고 책임져 줄 거야?’라는 이야기가 저는 되게 마음에 크게 들어왔거든요.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온 방식, 우리의 경제 작동 방식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물러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탈핵을 주장할 수가 없는데, 사실 내 머리도 알고 내 몸도 알지만 지금의 이 상황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아서 ‘그러면 결국 우리는 그냥 끊임 없이 회피하고 도망가야만 하나?’라고 고민하는 약간 jeopardy에 약간 끼어 있는 상태. 그 끼어 있는 상태가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이 주민들이지만 사실 넓은 의미에서 현대사회의 모든 시민들인 것 같아요. 뭔가 우리의 삶의 조건을 구성하는 것들을 희생할 용기와 자신이 없고 그걸 상상하고 싶지 않는데 사실 문제가 뭔지 머리로는 알고 있고 거기서 도망갈 방법을 모색

이들의 미래전망이 다른 시민들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 사회의 미래를 더욱 정확하게 전망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표현에 압축적으로 담겨 있는 주류적 전망은 어떤 의미에서는 희망사고적 바람일 수 있다. 이들의 전망은 한국사회가 가진 모순을 직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전망’한다는 점에서 더욱 현실성 있는 전망을 제공한다. 원전마을 주민은 과연 **우리가 폐로를 할 수 있는가**, 라고 묻는다. 그것은 물어야 마땅한 질문이지만, 마땅히 떠올려야 할 미래의 과제이지만 아무도 묻지 않고 있는 질문이다.

이들의 목소리(주장)이 내포하는 우리사회 미래 이슈와 대안은 무엇인가? 원전마을 주민의 이야기는 미래가 아닌 이미 현재의 이슈가 되었다. 에너지 전환의 문제나 핵 오염수로 상징되는 위험의 문제 등은 더는 외면할 수 없는 이슈가 되었다. 이들 이슈는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한, 중대한 문제가 될 것이다. 원전마을 주민의 이야기는 이 문제를 당위적인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역성과 역사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원전의 운영 과정 전반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 외에 그 이상의 목소리를 낼 용기가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이 소수들이 이 현대사회의 되게 많은 시민들을 대변하는 느낌이 사실 좀 들었거든요.”

제2절

원폭피해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왜 이들을 만났는가?

여기서는 이머징 시티즌으로서 원폭피해자에 초점을 맞춰 이들이 미래전망과 미래선택, 의제 및 대안적 시각을 다룬다. 연구진은 당사자, 연구자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머징 시티즌으로서 현재에까지 이어오는 이들의 어려움, 당면해온 문제, 이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해온 투쟁과 대안적 접근, 미래 사회에 대한 교훈을 청취했다.

우리는 경남 합천 등지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국내 원폭피해자들의 심층 인터뷰와 함께 두 명의 연구자 전갑생(서울대학교 연구원), 오은정(강원대학교 교수) 인터뷰를 진행했다.

[표 3-1] 원폭피해자 자문

	당사자	연구자	창작자
원폭피해자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한국원폭피해자2세환우회	전갑생 오은정	

국회미래연구원의 미래대화는 시민들의 미래전망, 미래선택을 함께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시민들이 전망하는 복수의 미래 시나리오와 함께, 미래선택을 토론하는 소그룹 대화 형식으로 진행된다. 본 절에서 살피는 이머징 시티즌과의 대화에서는 이러한 미래대화 템플릿을 지키기보다는 원폭피해자들의 과거의 역사, 현재 문제, 미래의 지향을 밀도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당사자 및 연구자들과의 심층 인터뷰로 진행했다.

따라서 방법론적으로 이들과의 대화는 미래대화 형식에 엄밀히 따르는 대신, 원폭피해자와 같이 특수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머징 시티즌의 특성을 고려했다.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로 연결되는 이들의 현실을 당사자의 직접적 ‘증언’, 인터뷰 및 관련 연구를 통해 이해하고 이머징 시티즌으로서 이들이 제공하는 미래 이슈 및 대안에 대한 참조점, 입법적 시사점을 풍부하게 끌어내는 방식으로 서술했다는 점을 밝힌다.

가. 원폭피해자 현황

이머징 시티즌은 현재는 비주류, 주변화된 사회집단이나, 미래에 이들과 같은 집단이 크게 확산되거나 향후 전망되는 위험을 미리 경험하고 사회구조적 문제를 먼저 제기하는 집단으로 이해한다. 여기서 이머징 시티즌으로 고려하는 한국인 원폭피해자는 우선 미래를 이야기하기 전에 현재적 관점에서 이들의 ‘시민권’(citizenship)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이들 집단의 이머징 시티즌은 일차적으로 법적 보호, 사회적 인정의 측면에서 진정한 ‘시민권’을 누리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경계에 위치한다. 특히 시민적, 정치적 권리 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측면에서 이들이 보호받고 있는가를 고려할 때, 원폭피해자의 한국 사회에서의 지위는 문제적이다.

아래에서는 이들이 왜 이머징 시티즌인가를 조명하는 한편, 이들이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춰 이머징 시티즌으로서 이들이 갖는 특징적 조건을 살펴본다.

1945년 8월 6일, 8월 9일 미국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 당시 현장에서 피폭을 당한 원폭피해자는 일본인, 조선인, 중국인, 연합군측 포로 등 다양한 민족, 국적 구성이 존재한다. 1945년 당시 약 237만명의 조선인이 일본에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일본 인구(7,500만명 추산)의 3.16%를 차지했다(키무라 2018). 당시 미쓰비시 중공업, 조선소 등 군수시설, 탄광이 있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징용, 이주 등으로 다수의 조선인들이 유입되었다. 1945년 히로시마에 5만여 명, 나가사키에 2만여 명으로 총 7만여 명의 조선인이 거주했고 피폭에 의한 조선인 사망자는 총 4만여 명으로 추계되며, 생존자 중 일본 잔류가 아닌 한반도로 귀국한 수가 2만 3천 명 정도에 이른다. [표 2]에 따르면, 1945년 전체 일본인구 중 3.16%를 차지한 조선인 중 히로시마, 나가사키 피폭율은 10%에 달해, 당시 피폭 조선인들의 열악한 상황을 방증한다. 2023년 4월 현재 한국원폭피해자협회(1967년 설립, 1971년 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에서 개칭)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는 1,834명으로 평균 83.3세 고령을 보이고 있다(대한적십자사 2023).

탈냉전 민주화 시기에 이르러서야 한국 사회에서 원폭피해자 투쟁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국인 원자폭탄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2016년에 한국인 원폭피해자는 오랜 ‘인정 투쟁’의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2-3세 후손을 원폭피해자에

포함시킨다는 당초 입법 취지는 달성하지 못했고, 특별법에 명시된 추모기념 사업이행은 현재까지 미완의 상태이다. 전후 오랫동안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문제는 한국 정부, 한국 사회의 책임이라기보다 일본 정부, 일본 사회의 문제로 치부되었고, 이들의 존재 자체에 대한 뿌리깊은 사회적 무관심과 무지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 3-2] 전체 피폭자 현황

지역	전체(일본)		한국인				
	피폭자	사망자	피폭자	사망자	생존자 잔류자		
					계	귀국자	잔류자
히로시마	420,000	159,283	50,000	30,000	20,000	15,000	5,000
나카사키	271,500	73,884	20,000	10,000	10,000	8,000	2,000
계(명)	691,500	233,167	70,000	40,000	30,000	23,000	7,000

출처: 한국원폭피해자 원호협회 현황보고서(1972년 4월); 정용하(2019, 9)에서 재인용

한편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현실에서 특기할 지점은, 식민지기 전쟁 피해자들 중 원폭피해자들이 누리는 예외적 지위이다. 원폭피해자는 일본에 관련 원호법이 존재하는 특수한 경우로,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배제된 이후 2000년대에 이르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장기간의 법정 투쟁을 거쳐 일본 ‘히바쿠샤’(被爆者)와 동등한 복지혜택을 쟁취하게 되었다. 즉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은 직접 일본 정부에 대한 소송을 통해 일본 ‘히바쿠샤’로 인정을 받는 투쟁을 통해 여타 전쟁 피해자들과는 다른 위치를 가지게 되었고, 그 이면에는 여타 전재자(戰災者)들과 차별화된 일본 ‘히바쿠샤’의 지원 법제가 자리잡은 일본의 사정, 한일협정에서 배제된 원폭피해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오랜 방치와 사회적 무관심, 차별이 자리한다.⁵⁾

5) 일본 법정이 국가적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 차원에서 복지적 수혜를 허용한 전쟁 피해자는 원폭피해자, 한센병 환자 뿐이다. 두 범주는 관련 일본 국내법이 존재하는 사례로, 일본 국내법이 전시 재외 피해자에 확대 적용됨으로써 정부의 의료 지원 및 수당 지급이 이뤄졌다(김재형·오하나 2019; 광귀훈 2013).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일본 ‘히바쿠샤’ 인정은 글로벌 피폭자에 대한 일종의 ‘초국적 시민권’을 드러내는 한편, 일본 정부의 관료제적 통과의례에 종속되는 편입과정에서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역사적 정체성, 즉 이주, 식민, 강제징용·징병, 피폭 등 복합적 차별과 수난의 역사는 은폐하는 효과를 초래했다(오은정 2014). 1970년대 손진두 소송투쟁,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 박귀훈 소송투쟁을 통해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은 행정관료제적 승인(피폭수첩)을 통해 일본 ‘히바쿠샤’로서 인정받는 과정은 그 자체로 한일 원폭피해자 연대 및 일본 반핵평화 지향 시민사회의 지원이 이룬 성과였다(양동숙 2018; 김원 2017; 오은정 2018). 한일청구권협정에서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배제에 따라 한일 정부당국의 한국인 원폭피해자에 대한 일관된 무시와 차별에도 불구하고, 한일 피폭자 및 시민사회의 헌신적 투쟁의 결과 재외 피폭자에 대한 일본 원폭원호법의 인정이 이뤄졌으나, 남은 심각한 문제란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기억, 역사는 국가의 공식적 집단기억, 정체성에 여전히 통합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다.

한국인 원폭피해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최근 국제정세에서 다시금 그 위험이 증대되는 핵전쟁과 관련해, 인류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유일한 핵무기의 참화를 몸으로 체험한 생존자, 증언자로서 **미래의 최악의 위험을 이미 경험한 이들로 이머징 시티즌**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현재에도 지속하고 있는 식민, 전쟁, 강제동원 및 인종적 차별, 피폭, 해방 이후 구조적 차별과 배제, 원폭증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 등 숱한 인권의 침해를 경험해왔다는 점에서, 미래의 인권, 평화, 통합 의제에 대해 숙고하고 대안을 준비하기 위해 참조할 사례로서 이머징 시티즌이라 볼 수 있다.

나. 이들의 미래전망과 미래선호

이머징시티즌으로 이들이 전망하는 미래, 이들이 선호하는 미래는 무엇인가. 여기서는 당사자, 연구자들의 인터뷰에 바탕해 이머징 시티즌 관점에서 바라보는 미래전망과 선호를 드러낸다.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은 피폭 78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무지와 무관심, 뿌리깊은 터부와 차별에 저항하며 한국 정부와 일본·미국 정부에 ‘인정 투쟁’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원폭 2세 환우로서 원폭피해자 후손들의 실태조사, 건강 검진 및 의료 지원을 2003년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고 관련법 제정 운동을 요구했던 고 김형률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은 2016년에 제정되었으나, 원폭피해자 1세와 2세 간 갈등, 원폭피해의 유전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 미흡을 이유로 한 정부 부처의 부정적 입장으로 2·3세대 지원 문제는 특별법에서 배제되었다. 특별법 개정을 둘러싸고 1세를 중심으로 한 원폭피해자협회가 실태조사, 국가추모기념사업 등에 보다 적극적인 반면, 2세 환우회 입장은 후손을 원폭피해자 정의에 포함시켜 의료 및 생활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에 방점을 둔다. 따라서 내부의 일정한 입장의 차이는 있으나, 원폭피해자들은 한국 사회와 정부는 물론 미·일 정부 및 세계에 한국인원폭피해자의 존재를 인식시키고 반성, 성찰을 촉구하며 궁극적으로 한국이 원폭피해자의 경험, 유산을 바탕으로 글로벌 비핵평화운동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사회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요구를 드러낸다.

국제무대에서 한국인원폭피해자 증언

한일 반핵 평화연대, 일한 반핵 평화연대 해서, 우리가 한국과 일본.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 이번에 방문을 하게 됐어요. 11월 13일부터 3주간. 12월 3일까지. 그래서 이제 그거(방미증언단)를 하게 되면 1세 세 분, 2세 세 분, 이제 시민단체, 시민단체분들하고 같이 이제 여기서 한국에서 한 9명, 10명 정도로 갈 거고요. 일본에서도 이제 같이, 같이 이제 거기서 합류를 해서. 미국에, 미국 상대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원폭피해자로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고, 이렇게 힘들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처음으로 이제 증언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가요.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먼저 알려야지만이, 그 사람들도 생각을 할 것이고 우리가 다음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거의 연세드신 분들은 거의 지금 다 세상을 떠나시고 다 돌아가시고, 안 그러면 고령이시고. 그래서 이번이 아마 거의 마지막이 아닐까 예상하고 있거든요.

한국인원폭피해자의 수난과 미·일 정부의 배제와 차별

그러니까 히로시마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때(2016년) 온다고 했어요. 그때 저도 갔었어요. 같이 갔었는데 사실 거기 일본의 원폭비하고 우리 한국분들의 원폭비하고는 별로 거리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거기만 참배를 하고 여기는 하지 않는. 한국에도 원폭 피해자가 있다라는 걸 언급은 했지만, 거기까지 오시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정

말 너무... 일단 왔으면은 거기를 둘러보고, 한국을 언급을 했으면은 한 번 왔다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우리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또 울먹하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거기서 비를 이렇게 돌면서 고향의 봄을 이렇게 같이 부르고 하면서. 고향의 봄이랑 아리랑. 그러면서 그게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이 노래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얼마나 참... 그 지긋지긋했던 그 일본 땅에서 육신마저도, 돌아가시고 그 육신마저도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에 묻혀야 했던 그 억울함이 얼마나 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는,,, 정말 거기 갔는 사람들 다 통곡을 하듯이 울었어요. 정말 너무 이렇게... 왜냐하면 차라리 오지를 말든지, 거기서 거리가 얼마 된다고 잠깐 와서 참배만 좀 하고 가더라 해도. 우리 한국인들이 이제 거기서 왜... 그것도 우리가 물론 자기 스스로 간 사람들도 있지만 징용이나 징병이나 이렇게 가신 분들도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억울하게 거기서 얼마나 지긋지긋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나가사키에 가서 보니까, 나가사키에는 일본에는 우리는 묘를 돌아가시면 이제 묘를 하잖아요, 봉분을. 거기는 비석을 이렇게 세워놓더라고요. 비를 세워놓는데. 이제 일본에는 요즘 부잣집 사람들 개와 고양이도 예쁘게 비를 이렇게 세워놓는데. 우리는 일본 사람들의 개와 고양이보다도 못한 사람들, 죽어서 이렇게 묻은 자리 있잖아요. 단지 로 해서 이렇게 묻은 자리에 돌멩이 하나씩, 이렇게 표시로 돌멩이를 하나 놔두고 그게 다예요. 땅에, 맨 땅에. 그런 걸 생각하니까 돌아가셔서까지도 이런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 너무...

원폭 2세 환우들의 현실과 정부의 역할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저만 그런 줄 알았고. 저는 또 밖으로 더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던 게, 2세일 뿐만 아니라 3세 아들이 또 뇌성마비로 있다보니. 그러다가 이제 내가 (환우회 활동으로) 막상 나와 보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정말 더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저는 수술을 하고 나면은 그래도 걸어다닐 수 있고 남들 앞에 가 표현이라도 할 수가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근이완증이라고 근육병 있잖아요. 근육이 죽어들어가는 그런 병을 가진 사람들도. 참 제가 수없이 이렇게 경기도 부천까지 가서 방문도 하고. 거기도 이제 참 마지막 가는 것까지 제가 보게 되고. 또 대구에 있는 한 분도 근이완증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런 걸 생

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그 심정을 좀 그래도 좀 헤아려주고. 우리 정부에서나 일본 정부에서나, 이거는 누구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미국, 핵무기를 사용한 미국도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전쟁을 일으킨 일본도 책임을 져야 하고. 우리 정부는 그때 그 당시에... 물론 지금 이 사람들이 만든 건 아니지만, 지금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왜 필요합니까? 그 1인자인 저기 그 대통령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식민지배 속에서 살았던 것도 우리 국민들이 원해서 했던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원해서 그 식민지 생활을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상황들을 인정을 하고 서로 같이 책임을 지고 해나가야 된다는 그런, 그런 마음은 1도 없고.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 개정

왼손만 있어서도 안 되고 오른손만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 활동을 하면서 제일 내가 좋아하는 단어, “함께”. 함께라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라고 보는 게. 모든 게 왼손과 오른손 함께라야 소리가 나고 함께라야 뭔가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모든 게 모든 게 다 함께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소중하고, 우리한테는 소중한, 소중한 것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소중함을 간직할 수도 있고, 소중함을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그래도 다행이다. 물론 평화의 집만 있다고 해서 우리 피해자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소용없는 거지만. 또 우리가 있어서. 또 이제 우리는 또 평화의 집 이런 공간을 또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거. 서로의 감사함을 서로 나누고, 함께하는 데에... 지금 우리가 꿈꾸고 있는 특별법 개정도, 하루 속히 이제 특별법 개정이 되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이제 환우들도, 그런 말라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편하게 좀 지원이 되어서, 이제 치료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마지막 가는 길에 그런 마음의 짐마저도 내려놓고 갈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특별법이 하루 속히 개정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 개정은 꼭 내가 있을 때 개정이 되도록 해야겠다. 그게 이제 제 꿈이고.

국가추모기념사업으로서 비핵평화공원 조성

(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가) 2003년도부터 연구를 했던 것이 2009년도 하고는 연구를 하기를, 세계비핵평화공원을 만들어야겠다. 이제 공원을 생각한거지, 처음에 비석을 하려고 돈을 모았던 건데 합천을 위해서. 이제 세계평화공원, 비핵평화공원. 왜냐하면 우리나라 원폭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 원폭 세계에서 주 최국이 돼야 하는데 일본은 전쟁한 나라이기 때문에 못하고, 우리나라가. 일본은 히로시마 가면은 평화도시라고 세계 정상들이 8월 6일 40-50명씩 오고 4만 명 5만 명 오는데 왜 한국엔 조용하냐 말이야. 그 사람들이 합천을 봐야 되겠다. 합천으로 불러야 되겠다. 일본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합천으로 가야 된다. 왜 그러냐 일본은 전쟁을 한 나라고, 우리나라를 인정해 주는 거다. 그래 생각하고 계획을 따로, 그쪽으로 이제 쳐져버렸어. 그래도 이제 돈이 없잖아. 어떻게 저기 뭐 조정 계획서를 만들라 하니까, 군수한테 들어갔어 2009년도에. 이제 그때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세계비핵평화공원 안이 된 거예요.

다. 미래 이슈와 대안

이머징 시티즌이 미리 겪은 일상으로서 미래 이슈, 그리고 먼저 온 미래를 경험한 이머징 시티즌으로서 이들이 주장하는 이슈에 대한 해법, 대안을 고려한다. 여기서는 기존 연구 및 관련 입법 분석을 통해 이슈와 대안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 당사자, 연구자의 인터뷰를 인용함으로써 핵심 이슈, 대안적 가능성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냉전 독재하 한국 정부는 원폭피해자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채 방치했고 한국인원폭피해자들은 일본 시민사회와 연결을 바탕으로 1970년대부터 일본 ‘히바쿠샤’로 인정받는 법정투쟁을 발전시켰다. 1950년대 한일 협상과정에서 국내에서도 원폭피해자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원폭피해자는 일본군 위안부, 사할린 동포 문제와 함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김승은 2012; 박미아 2022).

정부의 무시, 배제 정책에 따라 국내 피폭자들은 1967년 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1971년 한국원폭피해자협회 개칭)를 설립하는 한편, 피폭자에 대한 전사회적 민감성이 높고 원폭법 체계가 이미 구축된 일본 시민사회에 원호를 요청해 한일기본조약 체결 이후

한일 시민연대 토대가 구축되었다(오은정 2018). 1970년대 국내 피폭자들의 밀항, 도일 배경으로 손귀달, 손진두 소송투쟁 결과, 일본인이 아닌 재외 피폭자들의 피폭수첩 획득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으나, 판결 직후 일본 후생성 ‘통달 402호’ 하달에 따라 일본을 벗어나면 재외 피폭자는 관련 복지혜택은 수혜할 수 없도록 조치함에 따라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데 이르지 못했다(김지영 2017, 19).

한일 피폭 시민연대에 바탕해 재외 피폭자에 대한 일본 원폭법의 보편적 적용은 손진두 재판 이후 제2의 수첩 재판이라 불린 1998년 광귀훈 소송이 2002년 최종 승소 판결을 성취하면서 비로소 가능해졌다. 광귀훈이 주장한 “피폭자는 어디에 있어도 피폭자” 논리는 2001년 지방법원, 2002년 오사카고등법원 승소에서 확인되었고 이후 일본정부 항소 단념으로 최종 승소를 이뤘다. 이후 한국인원폭피해자들은 피폭수첩 교부 과정에서 ‘진짜’ 피폭자를 증명해야 하는 행정관료제적 절차를 통해 일본 ‘히바쿠샤’로서의 복지혜택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오은정 2014).

[표 3-3] 한인 피폭자의 재판투쟁 일지

제소자	재판종류	재판소 (제소일)	판결날짜	판결/국가배상	비고
손진두	수첩교부신청 각하취소소송	후쿠오카 (1972.10.2.)	1974.3.30.	승소	2014.8 사망(후쿠오카) 한국인원폭피해자 문제 최초제기
			1975.7.17.	승소	
			1978.3.30.	승소	
신영수	수첩교부신청	동경 (1974.7.22.)	1974.7.25.	교부(제1호)	
정철선	건강관리수당	히로시마	1976.5.	지급인정	한국인 피폭자에게 최초인정
김순길	미쓰비시 중공업	나가사키 (1992.7.31.)	1997.12.2.	패소	402호 통지 위법 확정 일본 상고포기
			1999.10.1.	패소	
동지회 회원 6인	미쓰비시 중공업	히로시마 (1995.12.11.)	1999.3.25. 2005.1.19. 2007.11.1.	패소 승소 승소/패소	병합재판, 2007.11.1. 원고 46인 중 생존자 15인, 강제연행에 대한 국가배상은 제척기간경과, 한일청구권을 이유로 원고패소
동지회 회원 40인	미쓰비시 중공업	히로시마 (1996.8.29.)			
곽귀훈	피폭자원호법 재판	오사카 (1998.10.1.)	2001.6.1.	승소/패소	
			2002.12.5.	승소/패소	국외거주자 최초수당지급 판결
			2002.12.18.		일본정부 상고포기
이강녕	피폭자원호법 재판	나가사키 (1999.5.31.)	2001.12.6.	승소/패소	2003.3.1. <402호 통지폐지> 수당지급주체를 도도부현으로 판결
			2003.2.7.	승소/패소	
			2006.6.13.	승소/패소	
피폭자 6인	한국미쓰비시 재판	한국부산 (2000.5.1.)	2007.2.2.	패소	시효소멸로 판결
이재석	국가배상재판	오사카 (2001.10.3.)	2003.3.20.	승소/패소	원고/피고 상고포기
최계철	수당재판	나가사키 (2004.2.22.)	2004.9.28.	승소	피고 상고
			2005.9.26.	승소	
	시효재판	나가사키 (2004.5.18.)	2005.12.20.	승소/패소	재역전 승소로 최초로 국가배상명령
			2007.1.22.	역전패소	
			2008.2.18.	재역전승소	
	장례비각하 취소소송	나가사키 (2004.9.21.)	2005.3.8.	승소	나가사키 시 상고 단념
2005.9.26.			승소		
이상엽	수첩재판	히로시마 (2005.6.16.)	2006.9.26.	패소	2007.4 사망(가족승계)
			원고 항소	항소 후 미확인	
주창윤	수당재판	히로시마 (2005.6.16.)	2006.9.26.	패소 항소	원고 항소이후 상황 미확인
재한피폭자 7인	수첩재판	오사카 (2006.8.1.)	미확인	2008.2. 생존자 2643명, 수첩취득자 2420명 2018년 3월 현재 대한적십자에 등록된 국내원폭피해자 2344명	
정남수	수첩재판	나가사키 (2007.2.21.)	미확인		
이흥현 씨 외 2인	피폭자 원호법 재판	오사카	2015.8.	일본 최고재판소 확정 판결	재외국민 치료비 전액 보상판결

출처: 정용하(2019, 18)

그러나 분명히 지적해야 할 것은 관료제적 통과의례 통한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일본 ‘히바쿠샤’ 인정이 가능해졌음에도, 일본 정부가 국가 차원의 전쟁 책임에 따른 보상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일본 내 피폭자들의 국가보상에 대한 요구에 대한 일본 정부 입장은 1990년대 이후 변화했으나, 근본적으로 종래의 ‘수인론’⁶⁾에서 완전히 변화한 것은 아니었다. 피폭자들이 요구한 일본 정부의 국가보상 인정은 군인·군속 등 국가가 고용한 피해자에만 해당되었고 민간인 피폭자는 “국가보상적 배려”라는 법적 용어로 정리되었다(오은정 2014; 양동숙 2019).

이러한 제약 하에서 한국인원폭피해자의 일본 ‘히바쿠샤’ 의료 수혜는 그 자체로 한일 피폭자운동, 일본 시민사회 연대가 이끌어낸 일본 정부에 대한 오랜 소송투쟁의 전취물이나, 미국 정부의 원폭투하, 일본 정부의 전쟁 발발, 강제징용·징병 책임, 그리고 냉전, 독재 시기 한국 정부의 방치 문제가 여전히 ‘침묵’되었다는 점은 주지되어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원폭피해자 인정 투쟁의 지속, 반핵평화 담론의 결핍

2005년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 이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배제된 위안부, 원폭피해자들은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대한 책임을 묻는 헌법소원을 진행했고,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의 보상 청구권 소멸 여부에 대해 한일간 해석상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 판결했다.⁷⁾

한일수교회담문서 분석에 따르면, 1970년대 한국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에서 다뤄지지 않은 원폭피해자에 대해 ‘국내문제’라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일본 정부의 ‘인도적 지원’ 제공을 위해 한일간 협상을 최소적으로 진행했다(김승은 2012). 한국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에서 배제된 원폭피해자의 ‘국내문제’, 즉 일본에 대한 청구권 없음을 확인하는 한편, 한일 시민사회의 일본 정부의 인도적 지원 압력이 높아지며 손진두 수첩재판이 승소로 마무리되는 변화 속에서 일본의 인도적 지원을 요구했으나 1978년까지는 기존 대일경제협력사업 축소를 우려해 한일교섭에 소극적 태도를 견지했다.

6) 샌프란시스코체제 하 일본정부는 전재자(戰災者) 전체에 그냥 받아들이라는 입장, 수인론(受忍論)을 요구했다.

7) 「2008헌마648-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재판소 결정, 2011.8.30

일본은 1965년 이후 시종일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법률론상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1978년 손진두 재판 최고심 승소 이후 한국은 기존의 입장에서 선회해, 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일본 정부가 한국인피폭자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명분을 들어 청구권협정의 한계를 주장했으나, 10년 이상 지연된 관련 교섭 결과, 인도적 지원 중 최저·최소 수준에서 1980년 ‘환자의 도일치료’만 성사되었다.

한국인원폭피해자가 걸어온 길을 반추하면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들이 제기하는 의제는 해방 이후 한국, 한반도 현대사에서 원폭피해자들에 구조적으로 강요된 망각을 어떻게 새로운 통합적 집단기억의 형성, 공식적 국가 서사제로의 통합으로 전환할 것인가의 문제라 볼 수 있다. 피폭 78년을 맞은 2023년 현재에도 국내 원폭피해자의 존재에 대한 사회적 무지와 무관심은 한일청구권협정에서의 배제로 ‘국내문제’로 처리될 수 밖에 없었던 원폭피해자 문제에 대한 국가적 외면, 방치가 낳은 결과이다. 더불어,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전후 한국인원폭피해자들의 구호, 보상 요구가 일본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연대를 배경으로 일본 정부에 대한 직접적 소송투쟁의 형태로 전개되면서 한국인 피폭자들이 일본 사회에 엄청난 윤리적 파장을 던진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 사회는 이들의 문제에 어둡거나 여전히 대응을 미루는 현실도 존재한다.

전후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의 책임과 반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세계 유일의 피폭국 담론을 통해 평화국가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확립하고 전쟁에 대한 반대, 평화에 대한 희구를 발신하는 과정에서, 피폭자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상징이 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인원폭피해자의 존재는 전사회적 범위에서 여전히 침묵, 어둠 속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서명 운동을 이렇게 해보면요, 거기 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거리에, (대구) 중앙로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를 아시나요?” 해서 우리가 서명 운동을 해봤어요. 서명 운동을 해봤는데 아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모르더라는 겁니다. “어, 원폭 피해자라고 하면 일본 아녜요? 일본에 그 원폭이 떨어졌는데 한국인 원폭 피해자가 왜 거기 갔습니까?” 또 간혹 그런 사람, 젊은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저기 뭐야, “원자

폭탄은 일본에 떨어졌는데 일본에 원자폭탄 구경하러 갔습니까? 그거 뭐 하러 갔습니까” 한국인이 왜 거기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10명 중에 8명은 모르고 2명 정도는 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몰랐어요. 그래서 서명 운동도 이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초창기에는. 그런 것도 좀 많이 하고 했는데.

일본으로의 이주와 식민, 강제동원과 징병, 그리고 피폭, 한반도 귀환 이후 분단과 전쟁, ‘원폭증’과 생활고, 터부와의 투쟁. 한국인/조선인원폭피해자⁸⁾들이 몸에 새긴 겹겹의 수난의 서사를 한국, 한반도 사회의 집단기억이 통합하고 있지 못한 현실의 결과는 한반도 내부의 반핵평화담론·실천의 공백, 결핍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1950년대 말 미국의 한국내 전술핵 도입과 1991년 전술핵 철수(미국의 핵우산 지속), 한국의 소련과 중국과의 수교와 북미·북일 수교 실패에 따라 고립된 북한의 1990년대 핵무장 시도와 최근의 핵·미사일 고도화, 핵 doktrin 변화(전술핵 고려) 흐름은, 한반도의 핵위기가 갖는 역사성을 보여준다. ‘이머징 시티즌’으로 호명한 한국인/조선인원폭피해자의 인정 투쟁이 한반도에서 더 오래 전에 가시화되었더라면, 그들의 반핵평화 담론·실천이 열어놓았을 현재는 다른 얼굴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핵의 역사에서 드러난 권력구조, 새로운 글로벌 피폭자 문제

현재 한국인원폭피해자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 개정은 원폭피해자 범주에 2·3세를 포함할 것과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으나 진척이 더딘 국가추모기념사업을 의무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 두 가지 내용은 이머징시티즌으로서 원폭피해자가 던지는 중요한 미래 이슈로 볼 수 있다. 현재 1,800명 아래로 감소한 원폭피해자 1세를 고려할 때, 원폭증으로 고통받는 후손들의 처지를 인정하는가의 문제는 1세 및 2·3세 내부 갈등에서 보듯, 이들의 사회적 적응, 정치적 측면에서 결코 간단치 않은 문제가

8) 북한에 남아있는 원폭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일본의 원수금, 사회당의 방북에 따라 실태조사 관련 지원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일본 정부는 북한과 국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원호, 지원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원수금에 따르면, 2008년 382명으로 조사된 재북 원폭피해자들의 10% 가 넘는 최소 51명이 2018년 현재 사망했다는 것이 북한 원폭피해자협회 실태조사의 중간결과이다. 일본 피폭원호법 소송 결과, 재외 피폭자 지원을 인정하게 된 2001년 일본 정부는 최초로 재북 피폭자들에 대한 조사단을 파견했으나 이후 지원 관련 진척은 없는 상태다(가네코 데쓰오 일본 원수금 대표 인터뷰, 2023.8.6)

면서도 원폭 방사능이 인체에 미치는 장기간의 영향과 관련해 진지한 질문을 던지는 의학 적, 생물학적 문제이기도 하다. 추모기념사업은 앞서 지적했듯 한국, 한반도가 발신할 수 있는 비핵평화의 메시지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의제로 미래세대의 글로벌 평화시민교육, 실천과 맞닿는 문제이다.

한편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피해는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재난에 따른 방사능 피폭 및 환경오염, 기존에 미국, 영국 등 핵국가들의 핵실험에 피폭된 섬(마셜제도 등), 체르노빌과 같은 원전재난 등의 문제로 확장되어왔다. 이른바 글로벌 피폭자들의 광범한 범주의 부상과 히로시마·나가사키, 마셜제도,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의 연결을 생각하는 것이다. 20세기 핵 역사의 과거부터 현재는 물론, 미래로 연결될 핵무기 실험 및 핵 에너지 생산·사용이 어떤 비대칭적인 권력구조 하에 글로벌 피폭, 오염의 위험을 부과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다양한 피폭자들을 통해 확인한다. 글로벌 피폭자 이슈는 각지에서 새로운 피폭 문제를 둘러싼 과학-정치적 통제의 상호작용과 이에 대응하는 다양한 시민적 평화연대를 보여준다. 미래 지속해서 심화, 확대될 수 있는 이러한 이슈에 대한 대안으로서 한국인원폭피해자를 포함한 다양한 글로벌 피폭자들의 참여와 연대, 전문가·시민들의 인식공동체 등이 주목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일본에서 굉장히 많은 방사선량 측정 단체, 시민과학단체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제가 나중에 얘기 들어봤더니 일본에서는 원래 체르노빌 사고 때 이미 이런 시민 방사능 측정실이 많이들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주로 했던 단체들이 생활협동조합. 일본에 왜 생협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곳들에서 많이 했대요. ... (그 중에) 타라치네라고 하는 건데, 여기도 피난 구역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후쿠시마 사람들이 많이 피난 온 지역의 사람들이예요. 여기 좀 남부인데, 도시가 꽤나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많이 피난, 임시 거처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엄마들이 아무리 우리는 피난구역이 아니지만 불안하니까 자기가 먹는, 자기가 수퍼에서 사는 그런 식재료들이라든가 이런 거 가져와서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을 들고,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측정을 한 게 자기들이 샘플링하는 것도 있지만, 의뢰를 하면 의뢰가 오면 의뢰한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해주고, 그래서 그거 데이터들을 자기들이 이렇게 다 공표를 합니다. 그래서 뭐 고사리 이런 거, 이제

미소, 미소시루, 그러니까 된장, 여기 사과, 그 동네가 사과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사과, 그다음에 콩, 양파 이런 거 많이 버섯.

그리고 이분들은 그런 활동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에 오른쪽에 보이는 이 물통이 셀라필드라고 영국에서 원전 사고 났던 지역이거든요. 거기에서 그 원전 사고 났던 지역에 바닷물 같은 거 가져와서 같이 이제 대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편은 원전 사고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만의... 일본 정부는 이제 이거는 도쿄 전력이 나 일본 정부는 이거는 “상정 외에, 자기들이 상정할 수 없었던 자연 재해로 인한 거다.”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으로, 일회성 그런 사건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분들의 활동은 그런 거죠. 이걸 일회성이라기보다는 사실은 20세기 핵의 역사에서 여러 지점에서 만들어졌던 그런 피해라는. 굉장히 비대칭적인 권력 구도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희생한 거잖아요. 도쿄 전력의 전기는 이쪽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다 도쿄로 가져거든요. 이 사람들은 도호쿠 전력 전기를 써요. 원전도 아니에요. 도호쿠 전력은 화력이에요. 사실은 수도권에 전기를 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삶의 어떤 그런 터전을 완전히 다 희생시킨 결과인 거잖아요.

그게 후쿠시마에서만 그랬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원전, 그다음에 핵실험도, 무기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광산에서 우라늄을 채굴을 해야 되고, 핵실험하면 그 주변에 그런 땅들도 오염시키는 거고, 굉장히 다양... 아까 핵실험 같은 것도 보편은, 중국 소련에서 핵실험했는데 다른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다 희생을 하는 그 구조 위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활동이 사실은 이런 전 지구적인 어떤 형태의 불평등한 그런 권력 구도를 보여주는 그런 활동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20세기의 핵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불확실하면서 굉장히 장기 지속할 것으로 얘기되는 피폭이라는 위험을 굉장히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방식으로 생산해내는 그런 군사과학기술 인프라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머징 시티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편은, 사실 안전의 문제에서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이리지만, 결국은 핵이라고 하는 것을 독점해 온 권력, 그러니까 비민주적이고 중앙 집권적인 권력 내에 대한 대항이나 정의 문제로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금을 왜 사재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소금 사면서 IAEA까지 들이대면서 소금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걸 고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전, 그다음에 핵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런 권력의 문제, 그러니까 안전의 문제, 당연히 안전이나 위험이 불균등하게 되는 그런 문제로 근본적으로는 사실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입법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이 현재 한국, 한반도의 집단기억에 정당한 자리를 허용받고 통합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1990년대 재외 피폭자들이 모두 연대한 한일 및 국제적 반핵평화 시민연대 결과, 재외 피폭자로서 한국인 피폭자들은 일본 원폭법의 확대 적용을 통해 일본 정부로부터 수해를 획득했다. 2002년 광귀훈 소송 승소 및 이후 지속된 일본정부 상대 소송투쟁 결과, 재외 피폭자에 일본 피폭자와 동등한 권리로 의료복지 등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간 한국, 한반도 현대사에서 그 존재 자체가 ‘침묵’, ‘방치’된 원폭피해자의 위치는 실질적으로 변화된 바가 없다. 이는 피폭자들 스스로가 일본 법정투쟁을 통해 일본 ‘히바쿠샤’로서 인정 투쟁에 승리한 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로 접근되어야 한다.

1945년 8월 원폭피폭될 수밖에 없었던 조선인들이 위치한 역사 특수적 조건 때문에 사실상 일본과 한국의 피폭자를 동일선상에서 말하는 것의 한계는 분명하다(허광무 2004).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의 이주와 식민, 강제노동 등 구조적·인종적 차별, 원폭피폭, 귀환과 이후의 사회적 배제와 차별, 가난과 질병의 수난사는 한국, 한반도 현대사에서 이들에 대한 매우 복잡적이고 다차원적 이해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일본 ‘히바쿠샤’ 인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의 기억의 통합,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인정이 장기 지연되는 현실은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문제다. 현재 원폭피해자들은 2·3세대들의 인정 및 실질적 지원 요구와 국가 추모기념사업 시행을 통해 사회 전반적 인식과 역사적 평가 제고를 요구하고 있다.

2016년 제정된 원폭피해자법(제14조 기념사업)은 국내 원폭피해자 추모, 인권과 평화

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서 추모묘역 및 위령탑, 그 외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으나 현재 까지 추모기념 사업은 미완의 상태이다. 원폭피해자협회는 장기간에 걸친 국내 원폭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물이해를 극복하고 후대를 위한 추모·교육의 장으로서 비핵평화박물관 등 건립을 통해 합천을 **비핵·평화·정의에 대한 담론, 실천을 발신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원폭피해자협회는 아직 한 번도 실행된 적 없는 한국인 원폭피해자 실태조사와 국가적 추모기념 사업을 통해 공식적 국가 서사에 이들의 역사적 위상, 기억이 통합되기를 호소하고 있다.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중인 한국인 원자폭탄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현행 원폭피해자 정의를 원폭피해자 후손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적 추모기념 사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원폭피해자2세환우회 등은 피폭자 범위에 2-3세 후손을 포함시키는 입법 취지에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2016년 특별법 제정 당시 후손을 포함시키는 데 실패하면서 이후 개정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국내 피폭자들은 현행법에 관련 조항이 있으나 후속 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현실에서 개정안에 국가적 추모기념 사업 관련 의무조항을 넣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한국, 한반도의 집단기억에서 구조적으로 소외, 배제되었던 원폭피해자들의 기억을 통합적으로 포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표 3-4] 한국인원폭피해자 지원 관련 국회 발의 추이

제안자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강기정의원등 79인	172053	원자폭탄피해자의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촉구결의안	2005- 06-16	2008- 05-29	임기만료폐기
조승수의원등 23인	172353	한국인 원자폭탄피해자 진상규명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2005- 08-04	2008- 05-29	임기만료폐기
유기홍의원등 51인	172965	1965년 한일협정에서 제외된 일본군위안부·사할린억류자·원폭피 해자에 대한 피해 배상 촉구결의안	2005- 10-18	2008- 05-29	임기만료폐기
조진래의원등 103인	1802250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피해자 자녀의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2008- 11-25	2012- 05-29	임기만료폐기
조진래의원등 13인	1813641	원폭피해자 실태조사 및 대일 배상청구권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지원 촉구 결의안	2011- 10-27	2012- 05-29	임기만료폐기
김정록의원 등 10인	1903054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2012- 12-07	2016- 05-19	대안반영폐기
이학영의원 등 17인	1903910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2013- 02-28	2016- 05-19	대안반영폐기
이재영의원 등 11인	1905013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2013- 05-20	2016- 05-19	대안반영폐기
김제남의원 등 11인	1905421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2013- 06-12	2016- 05-19	대안반영폐기
(보건복지위원 회) 위원장	1918699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2016- 05-18	2016- 05-19	원안가결
김상희의원 등 17인	2014870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08-14	2020- 05-29	임기만료폐기
김종회의원 등 10인	2015687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09-20	2019- 04-05	원안가결
김태호의원 등 12인	2110509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06-02		소관위심사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3년 10월 15일 검색

상존하는 핵전쟁의 위협, 원전사고 사례를 고려할 때, 핵재난을 몸으로 체험한 원폭피해자는 최악의 미래를 이미 경험한 인류로 볼 수 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피폭자는 인류 유일의 핵참화를 경험한 이들로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반핵평화의 직접적 상징이다. 일본 시민사회는 현재 11만 명대로 줄어든 원폭 1세대의 고령화를 우려하며 더 이상 증언자가 없는 반핵평화운동, 평화국가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적 변화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한국사회에서 현재 1800명대로 떨어진 원폭피해자들 이후의 미래에 대한 담론·실천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관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전후 장기간 소외된 한국인원폭피해자들의 존재, 증언은 한반도를 넘어서는 ‘인정투쟁’을 통해 동아시아, 글로벌 차원에서 미래 평화구축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대안적 성찰을 제공할 수 있다. 한국인원폭피해자들은 이주와 식민, 강제동원, 피폭과 해방 이후 구조적 차별과 배제를 몸에 새긴 존재로 이들의 증언은 기존의 국제질서, 한국사회가 통용해 온 정의, 평화, 인권에 대한 심중한 문제제기를 촉발한다. 아직까지 한국, 한반도의 집단 기억, 정체성에 그 자리를 허용받지 못한 원폭피해자들의 기억, 서사를 통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미래 한반도의 평화구축에 중요한 교훈을 확립하는 의제다. 한반도발 반핵평화담론의 발신자로서 한국인원폭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중장기 미래 한반도는 국제정치, 안보에 대한 기존의 독해를 넘어 글로벌 반핵평화의 지평에서 새로운 연대를 창출하는 전복적 담론·실천의 토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제4장

노동과 교육의 미래에서 온 시민들

제1절 싸우는 이주 여성

제2절 가족돌봄청년들(영케어러)

제3절 지방대학 인문사회대학원생들

제4절 대안학교 교사

제 1절

싸우는 이주 여성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근대 사회의 핵심을 근대 국가체제라고 봤을 때에 사람들을 구별하는 핵심 차원은 바로 국적이다(발리바르, 2010). 이 차원을 지난 작업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다는 자각에서 올해에는 이주자 문제를 살펴보고자 했다. 특히 ‘여성’의 위치와 이주자의 위치가 교차하면서 만들어 내는 ‘소수자성’의 관점을 확인해 보고 싶었다.

한인정의 책 『어딘가에는 싸우는 이주여성이 있다』(2022)는 이주여성을 ‘싸우는’ 주제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주민에 대한 통상의 시각과는 다른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가 말하는 형식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구술 내용이 일관된 흐름으로 읽힐 수 있도록 연구자가 일부 내용을 생략, 수정, 재배치했다. 중간의 소제목은 발표자의 구술 내용을 참고해 연구자가 붙인 것이다.

1 그 이주 여성은 왜 도망쳤을까?

옥천에서 이주여성 만나고 책을 쓰기까지

저는 일산 신도시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살았어요. 대학원 박사과정도 하고 속칭 배웠다는 사람이었고, 부모님도 배운 사람이에요. 배운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만큼 가지고 있는 자본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랬기 때문에 여성으로서의 억압이 저에게 되게 부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억압되는 게 크게 없는 사회에서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피하고 싶은 소수자성이고, 그 소수자성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찌찌해방단’이라는 운동이 저한테 극적으로 와 닿았어요. 페미니스트로서 이런 이야기들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기자 역할에 선다는 건 저에게 매우 의미가 있었어요.

석사과정 이후에 기사를 생각했는데 ○○기자님이 석사생이 기자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지역 신문이나 이런 공간에 가서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해서 옥천이라는 공간에

갔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옥천에 간다는 게 좀 두렵기도 했었고, 지역에 가서 내가 뭐를 어떻게 하고 살 수 있을까. 소위 말하는 스타벅스나 이런 커피도 없고 뭐가 있을까.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는 것 같고. 도대체 여기서 내가 찌찌해방단 활동도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되고, 청년도 없을 것 같고 이런 고민이었는데, 의외로 지역에 살고 있고 먼저 문화운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되게 재미있게 지역 활동을 했고, 지역 활동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마주하지 못했던 자연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도 저에게 되게 큰 의미였거든요. 행복하게 지역 생활 기사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마주했던 게 이주여성 기사였어요.

오일장에서 늘 장을 봤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이주여성과 대화를 해봤던 것 같아요. 삼십몇 년을 살면서 이주여성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제 삶에는 없었거든요. 일산 신도시 자체가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 중산층 계층이 살고 있고, 주변에 한살림이나 이런 좀 좋은 마켓들, 그리고 부모님들은 복토크 하시고 들어오시고 그런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주민이 우리 사회에 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뉴스가 아닌 일상에서 마주했어요. 그 이주여성과 대화를 하는데 나이가 저랑 동갑인 거예요. 그런데 아이의 엄마였고. 그냥 ‘그런 사람이 있구나.’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얼마 후에 그 이주여성이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왜 도망쳤을까?’라는 궁금증이 저에게 다가왔고, 그렇게 취재를 시작했어요.

옥천신문에서 일하면서 이 정도 취재하고 살면 내 인생에서 충분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도 듣지 못하는 그런 소수자의 이야기가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옥천신문 역시 지역 유지들을 중심으로 취재하는 거고 의회 중심으로 취재하는 거고 아무리 작은 공간이라도 작은 권력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작은 권력들에 의해서 눌러 있는 생명들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이주여성들이 도망치게 된 맥락에 대해서 처음에는 취재 방식으로 이야기를 듣다가 취재 정도로 끝날 수는 없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냥 도망친 단면만 보지만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이유들이 그 안에 존재해요. 도망친 이주여성의 남편이 저에게 “그 여성은 암캐 같은 여자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암캐 같다고 표현하는 게 도대체 뭘까. 동물권 운동하는 사람들도 암캐는 너무 소중한 존재인데 내가 발화하는 것과 그 사회의 맥락 안에서 암캐라고 불리는 건 다른 거니까 이게 왜 이런 사회 안에서 이렇게 불릴까. 이주여성의 남편이었던 취재원은 지역 유

지었고 상당히 사회적으로 진보적인 인사거든요. 진보적인 인사인데 자기 부인을 때렸고. 그분은 농민이고. 농민이다 보니까 국회 앞에서 트랙터 끌고 와서 시위하시고 이러는 분들이잖아요. 분명히 그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소수자였는데 왜 소수자가 소수자를 저렇게 차별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제가 서울에서 이주민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남성 가부장제성이 발동해서 여성을 때렸구나.’ 이 정도로 받아들였을 텐데 농촌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은 또 다른 맥락으로서 이야기될 수 있겠구나. 이전에 만났던 베트남 전쟁을 비판하는 여성운동 안에서 만났던 고학력 베트남 친구들과 다른 이주여성이구나. 잘 마주하지 못했던 제3세계라고 불리는 이들의 얼굴색, 그리고 여성과 남성으로 나뉜 안에서 여성, 또 더 군다나 가사와 양육을 하고 있는 여성 등 농촌과 혼인, 학력, 인종, 성별, 가사·양육 정말 많은 소수자성이 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데 그런 다양한 차별이 교차되는 지점에서 내가 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 굴절된 현실이라는 걸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사회가 하나하나 나눠서 연구했잖아요. 농촌 연구, 혼인 연구, 학력 연구, 인종 연구, 성별, 가사, 양육 다 나눠서 연구했던 걸 하나하나의 사람의 맥락 안에서 연구하게 되면 훨씬 그것이 역동적이고 재미있게 드러날 것이다, 이런 고민들을 나누게 됐고, 그러면서 이런 맥락 안에서 굴절된 행위를 드러내는 것은 현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이 책이 베트남어로 시작해요. 저한테는 되게 좋은 고민 중 하나였는데, ‘언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늘 지금도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저랑 같이 활동하는 이주여성협의회 분들이 이 책을 전부 다 읽은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같이 읽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저도 만약에 영어로 된 책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내용은 이해하겠지만 구체적으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이 언니들이랑 같이 활동하면서 베트남어로 앞부분에 이렇게 쓰여 있는 게 그래도 한국 독자들에게 낯설을 주고, 그렇다면 이 낯설의 세계에 들어설 주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주체가 한국에 있는 독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건네주고 싶었고요.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해준 이주여성들이 진짜 주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성공하고 싶었다는 말

오른쪽 맨 끝에 있는 분이 탄화 언니거든요. 제가 어머니까지 같이 만나봤었는데, 저 오른쪽에 있는 아기는 옆집 아기고. 이 사진이 유일하게 베트남에서 가지고 있던 사진이더라고요. 29살에 여기 넘어왔기 때문에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사진이 거의 남아 있는 게 없고. 7살 때부터 소를 키우는 노동을 했다고 하는데 한국 사회가 1960-70년대에 집 안에서 소나 돼지나 이렇게 키워서 오일장 나가서 팔았던 그런 시점들처럼 그렇게 생활했었고, 앞에 있는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전 때 10살, 11살 이렇게 있었고 큰오빠도 전쟁에서 잃었어요. 이 여성이 삶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 그래서 “딸이 갓을 때 기분이 어땠냐?” 그랬을 때 “딸이 그냥 잘 살길 바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평생을 못 본다고 하더라도 잘 살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던 그 어머니의 심정과 또 저 여성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신발 포장부터 시작해서 차에 들어가는 부품 이런 것들에 대한 노동을 했는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도 메이드 인 베트남이더라고요. 산업화 시기에 가난한 집 딸말로 태어났고 도시로 돈 벌러 가서 한 10년 가까이 일을 했지만 세계화 시대에 고강도 장시간 저임금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1960-70년대 한국 사회에서 돈을 벌어서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 불가능한 상태이고 아껴도 어려운 상황이고. 이주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또 고비용이잖아요. 현재 한국 사회 돈으로 해도 거의 1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2-3년 이상은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 이주여성 탄화 언니네 집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담보도 없기 때문에 이주노동을 할 수 없는 거죠, 비자가 안 나오니까. 그런 상황에서 결혼이주비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다고 하면서 E-6 비자는 것은 결국 이주노동비자를 갖지 못해서 차선택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결혼도 일도 삶도 성공하고 싶었다.” ‘선택지가 없다’라는 답과 동시에 ‘결혼도 일도 삶도 성공하고 싶었다’ 미래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 또 다른 태도가 존재했었어요. 되게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과정을 거치는 이들이 되게 용감한 거예요. 용감하니까 다른 나라로 와서 다른 나라에서 자기의 삶과 가족의 삶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주여성들이 되게 불행할 것이라고, 많이 맞고 힘들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삶을 살다 보면 되게 어렵고 힘든 일도 많지만 동시에 거기서 벌어지는 재미있는 일이 있거든요. 이주민을 괴롭히는 존재들도 분명 있지만 이주민과 함께하려고 하는 존재들도 있거든요.

동시에 기대와 달랐던 한국 생활이 있었고 언어나 문화적인 장벽은 당연하고, 동시에 이런 노동의 경계라고 하는 것이 여성의 노동이 가사와 출산, 육아, 더불어서 시부모 모시고 집안 농사를 짓고 공장 노동을 하는 등 그게 경계를 넘나드는 방식,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일이라는 논조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임금노동으로 한정할 수 없는 그런 노동을 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잘 살아보자’라는 기획, 그런데 그것을 더 크게 보자면 이것을 기획하고 그것을 구상하고 실현하는 생존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

이주민을 보는 시선

지금 이주민이라고 하는 이에게 한국 사회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불편하지 않은 정도. E-6 비자라고 하는 것은 결혼이주여성, 아이를 낳는 것. 아이를 낳는데 사실 방문교육 10개월은 별로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이주여성들이 한국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어느 정도만 하면 아이는 어차피 학교에서 교육을 시켜주니까 큰 문제라고 보지 않는 거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기의 답답한 건 안 풀리고. 소통에 대한 갈등이 있는데 이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전화해서 “우리가 이런 갈등이 있어요.”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소통해 주는 앱이나 전화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나, 다니엘 블레이크>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 1시간 정도 비비비~ 이거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런 갈등 때문에 화나 죽겠는데 사실 연락할 수 없잖아요.

20년을 살게 되더라도 늘 ‘뭔가 모르는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게 되는데 집안 식구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방인으로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 집 내부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선거권이 있잖아요,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국적을 취득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유세를 하지 않는 후보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한국 사회에서 인종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얼굴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라는 이런 사회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집안 내부에서도 아주 간단한 집안의 경조사를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미용실 갈 때 미용실 비용이 얼마나, 휴지가 필요하면 휴지는 낭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저금하는 방식도 본인이 벌어오는 돈은 계속 생활비로 사용하고 남편이나 다른 사람이 벌어오는 돈은 계속 저금하는 방식이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헤어지게 되면 돈 한 톨 없이 쫓겨나게 되는 거라고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이주여성들을 초청하는 토론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오신 분들을 초청할 때 보통 그쪽에서 통역을 붙이는데 베트남 이주여성이 왔을 때는 통역을 붙이지 않고 그

여성이 당연히 한국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방식. 영어를 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처럼 한국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서울에 사는 이주여성은 그나마 상황이 나아요. 폭력센터라든지 여러 공간이 조금 있지만 지역은 쉼터가 없고 6시가 되면 버스가 끊긴단 말이에요. 싸움은 보통 퇴근하고 서로 스트레스가 만빵 쌓였을 때 발생하는데 그렇게 싸웠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너 나가라.”라고 하지만 이주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나가야 되는 거죠. 맨날 여기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친정이 너무 먼 곳에 있는데 나갈 수가 없다.” 친정이 멀고 집이 멀다는 것은 일단 인프라가 부재한 거고, 인프라가 부재한 상황에서 차가 없는 여성들은 가정불화가 되면 논발에 뛰어나가서 진짜 소리 지르는 방법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인프라가 너무 부재하다 보니까 친구들 방식으로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고, 그 친구도 이주민 커뮤니티라고 하는 곳에 자기가 남편이랑 싸운 얘기를 계속하면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고립이 되고, 결국에는 도망을 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깔끔하게 이혼하지 왜 도망치냐?” 그랬을 때 이혼하게 되면 양육권을 박탈당한다는 고민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이혼하게 되면 소송을 해야 되고 변호사도 사야 되고 이런 고민들이 이주여성들에게 다 너무 어려운 장벽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지지를 해줄 수가 없고, 더군다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름부터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웬만한 경우는 이혼을 권장하지 않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군수나 이런 선거들하고 많이 연결돼 있고 지역 유지들과 연결돼 있고, 보통은 지역 유지들이 결혼이주여성들의 남편들이고, 그런 남편들이 가족협의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있는 공간들이 기존에 있는 권력을 옹호하는 기관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라면 제도가 존재해도 실질적으로 소수자에게 다가가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아이랑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들이 결국 그 안에 내부적으로 남아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화가 날 때는 그냥 아이랑 “됐어.”라고밖에 대화를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고요. 제가 이 책이 나오고 좋았다고 생각했던 게 이주여성들의 아이들이었거든요. 그 아이들이 이 책을 읽고 엄마들이랑 그간 대화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대화할 수 있게 되어서 좀 엄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표현을 해줬는데 그 부분이 가장 저에게도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탄화 언니는 왜 싸우는 이주여성이 되었나?

원래는 참는 이주여성이 최고라고 생각했대요. ‘나만 참으면 되겠지, 나만 잘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나만 잘살면 안 되는 거라고 하는 게 익산에서 있었던 다문화가족 자녀 모독 발언 사건이었어요. “생물학적,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잡종강세라는 말도 있지 않느냐. 똑똑하고 예쁜 애들을 사회에서 잘못 지도하면 파리 폭동처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문제적인 발언을 했던 익산시장이 자기는 좋은 의도로 다문화일수록 소위 잡종이라고 하는 이들이 훨씬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표현을 한 건데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나. 지역에서 이런 발언들이 상당히 많아요. 장애인 관련한 행사 때도 어떤 의원이 와서 자기도 늦게 일어나는 장애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든가. 너무 문제적이지요. 정말 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이 매우 많아요. “신부는 얼굴을 가리고 있을 때 가장 아름답지 않냐.” 이런 식의 발언을 한다든가 아주 문제적인 발언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인데.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옥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옥천신문 기자로 있으니 문제적인 발언을 듣고 쓸 수 있어요. 쓰면 지역에서는 오히려 그러죠. “아유, 뭐 이런 거 가지고 쓰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이 소수의 이야기라도 공론장에 올려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같은 지역이 없어요, 하나도. 그러다 보니까 문제적인 발언이 일어나도 그냥 묻혀버리는 거죠.

익산 같은 경우에는 다 물려갔단 말이에요. 이주여성들이 다 물려가서 시위를 하니까. 어떻게 주체성이 발현되었느냐. 시장이 와서 사과하게 되고 그러면서 뭐라도 하면 바뀌는구나. 실질적인 승리의 경험들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더 구체화되는 거고 싸울 용기가 생기는 거구나. 용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험을 통해서 확장되는구나. 당시에 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처음이었죠,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주여성들에 대한 이주민 관련 조례 제·개정을 해달라고 했던 것이. 인권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했고. 보통 지역에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하잖아요. 이걸 ‘해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으로 바꿔달라고 이야기했었고, 도대체 지역의 많은 조례들이 이렇게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는가 보면 의회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일단 없는 거예요. 지방의회 누가 과연 그걸 영상을 틀어보겠냐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역에서 가장 힘이 있는 건 공무원들이죠. 공무원들이 표도 다 끌고 오고.

여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시설 설치를 해달라고도 했어요. 저희는 폭력시설이 청주에 있거든요. 싸우고 눈탱이 맞아 죽겠는데 저녁에 택시 타고 한 6만 원 내고 거기까지 가는 건 말이 안 돼요. 근처 모텔 잡아서 3만 원 내고 자는 게 더 나은 상황이거나 아니면 저희 집에 와서 자거나 이런 식으로 폭력을 당했을 때 갈 수 있는 공간이 지금은 부재한 상황이라서 이런 걸 요구했었고요.

또 비영리 민간단체를 좀 지원해 달라고 했던 게 지역에 많은 단체들을 하려고 하면 센터장 조건이 박사 과정 이상 아니면 경력 몇 년 이상. 그런데 언니들이 다 고졸 아니면 중졸이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학력이 없다 보면, 학력은 결국에는 어떤 다양한 제도적인 걸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그런 거니까 이주여성이 지역사회에서 설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학력이 없는 거니까.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계절근로자를 보통은 MOU 당겨가지고 지역에서 지자체랑 연결해서 해요. 공무원들은 가장 편하죠. 왜냐하면 거기 브로커 끼쳐 데려오면 되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보내버리면 되는 거고, 도망치면 거기다가 문제 제기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됐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이주노동자를 어떤 물건으로 보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도 둘 다 입 다물면 끝인 상황인 건데 저희 지역은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족들이 들어오거든요.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족들이 들어오면 결혼이주여성들에게도 오랜만에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복지 혜택이 되는 거고, 동시에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족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미등록 이주민이 발생할 확률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또 결혼이주여성이 거기서 실무자로 일을 하게 되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고. 지역사회에 모두 다 좋은 형태인데 지역 공무원 입장에서는 문제를 안 일으키기에는 MOU가 최고이기 때문에 수많은 지역들이 지금 MOU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동시에 '농촌 인력난 해소'라고는 하지만 농업경영체를 가지고 있는 이주여성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지역에 농업경영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주여성들은 가족을 초청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내부의 갈등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주여성협의회

바람이라고 했던 이주여성이 했던 이야기는 우리가 이주여성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왜 이주노동자 이야기까지 하겠냐. 며느리나 어머니 부인 자리에 넣지 말라는 것. 끊임없이 나를 어느 존재의 자리에 넣으려고 하는 것들, 사회적인 어떤 위치에 넣으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그 위치에 맞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들,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바람을 이 여성들이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마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역에 있는 군 보은하고 영동 3개가 뭉쳐서 이주민협의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보은이랑 영동에 한 400-500명씩 이렇게 있거든요. 사실 서울에서 400명, 500명은 큰 숫자가 아니지만 5만 단위밖에 안 되는 지역에서 투표를 한 50% 생각한다고 쳐도 2만 5천 명. 지역에서 이주민들은 상당히 큰 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주민협의회가 만들어지면 군수들도 와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요. 보은하고 영동이 뭉치게 되면 일단 국민의힘의 박덕흠 의원이 저희 지역 국회의원이신데 박덕흠 의원과 면담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보은하고 영동, 괴산에 있는 이주민들을 뭉치자. 이건 정치적으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힘을 얻어야 조레도 바꿀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도 좋잖아요.

최근에 가장 기사 잘 뽑는 데가 조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주민들이 돈이 된다는 걸 가장 잘 알고 있는 신문사 같아요. 이주민 관련이 정치적으로도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이주민 협의회를 만들고 이들이 국적도 많이 따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것들이 함께 잘 싸울 수 있게 될지는 이주공동체를 꿈꾸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고민이고. 지금은 어쨌든 이주민 자체는 400명 가까이 되지만 여성협의회에 들어와 있는 구성원은 121명 정도이고. 이렇게 여성협의회를 만들었고, 이게 저희가 2021년에 만들었으니까 한 2년 조금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각 국가별로 존재하고 있고.

원주민들은 오히려 반응이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시끄러운 사람들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라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주여성들이랑 탄화 언니랑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거 냈대요.” 이런 식으로 얘기고 “TV도 나오고 좋겠어.” 그냥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시거든요. 원주민들은 크게 반

응이 없는데 충북에 있는 어디 의원들 이런 사람들은 관심이 많죠. 지역 단위에서 좀 더 큰 단위는 관심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되게 놀라요. ‘말할 수 없는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했지?’ 근데 오히려 차라리 지역에서는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이미 생각해 왔기 때문에 크게 놀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남편들 같은 경우에는, 탄화 언니가 했던 얘기인데 “우리 남편이 좋은 이유는 나를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까 사진에 나왔던 배** 오빠랑 저랑 가끔 얘기하는데 그 오빠가 얘기하는 거는 이주여성들이 이렇게 책을 내서 자기 부인이 어쨌든 이런 책을 내고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되게 멋있다고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이 남성 같은 경우에도 저소득층이고 경증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소수자로 살아온 거잖아요. 근데 같은 어떤 소수자들, 지역 주민들도 소수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 중에서 이렇게 나와서 TV도 나오고 이런 것을 보고 멋있다고 생각하는 반응들이 있거나 아니면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고요.

당사자 조직의 반향은 되게 큰 것 같아요. 저희 주변 지역 보은이나 영동 이런 데도 당연히 이주여성 단체가 만들어지기 거의 일보 직전이고 제주도나 이런 데서도 만들어져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오고. 동시에 보통은 지금까지 이주여성 단체들이 저같이 이런 이주여성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이끌어가는 단체에 들러리 같은 방식으로 사용 되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 장애인 단체 중에 전장연이 어쨌든 이런 이슈들을 끌고 오는 거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인으로서의 차별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게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게 전부를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당사자 조직들이 스스로 자기 조직들의 이름과 얼굴들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 아래 연락들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주민 정치의 가능성

저는 개인적으로는 2세들이 지역에 더 많이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은 있어요. 보통 결혼 이주여성이 결혼한 남성들의 계급적인 위치가 농촌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소위 본인들이 말하기에 ‘못난 남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역에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주여성들의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도권에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반이 필요하잖아요, 인프라도 필요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부모는 일단 보텔 능력이 없고. 그렇

지 않으면 정말 재능이 뛰어난 애들만 올라가고 나머지 친구들은 아버지가 지역에 남아서 정말 말 그대로 수도권에서의 기반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처럼 그냥 그런 것들을 물려받는 방식이 되거나. 다문화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랑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랑 갈등이 있는 경우도 되게 많고. 최근에 결혼이주여성들이 들어온 시점이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이 제일 많거든요.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부모랑 사춘기를 겪으면서 다양한 갈등 사례에 놓여 있는데 여기에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이 부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할머니랑 이 친구들이 많이 살고 있고 할머니, 아빠 이렇게 셋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역에 남아 있는 청년들이 될 확률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유권자로서의 어떤 가능성. 실제로 이주민들이 다수가 될 것이고. 지금 다문화 사회 5% 얘기한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거는 저는 맞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유권자들은 저는 이주민만은 아니라고 해요. 이주민이랑 연결되어 있는 많은 산업들이 있잖아요.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당장 계절노동자 조례가 만들어지면 누가 영향을 받느냐면 그 계절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들. 그러면 그 고용주들은 당연히 계절노동자 정책에 지지를 한단 말이에요. 이주노동자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수많은 세력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인원수가 늘어나고 있고. 일단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주민 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 말고도 한 500분 정도 계시고, 그리고 그 500분들이 일단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 가족들 포함하면 거의 4배 치면 2천 명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결혼이주여성만. 그랬을 때 2천 명이면 5만 단위 지역에서는 엄청난 숫자예요. 사실 공무원들이 허수로 갖다 놓은 숫자 빼고 나면 거의 선거판을 뒤집을 수 있는 정도의 숫자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무슨 행사만 한다 그러면 다 몰려와서 막 굽신굽신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주민 정치의 가능성은 지역에서 가장 발휘를 많이 할 것이다**. 이주민 내부에서도 고려인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번에 대회 할 때만 봐도 국회의원들이 많이 가서 앉아 있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이 가서 앉아 있다는 거는 미래에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누가 거길 가느냐. 저는 최근에 가장 눈치 빠른 의원들이 움직이는 곳이 이주민 단체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앞으로의 가능성도 분명히 열려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결혼이주여성 얘기는 유권자이기는 해도 실제로 노동정책이나 이런 데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로 표가 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얘는 해도 별로 관심이 없다. 근데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이야기를 내기 시작하면, 당장 많은 사

회정책들도 여성정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만 해도 “이화여대 출신들이 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부인들이 끼어 있는 일들이 꽤 많거든요. 저는 그것 때문에라도 앞으로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다만 내부에서도 이주민 대회에 가면 이주민 단체에도 격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해외 사례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이주민 내부에서도 한인들 아니면 유대인 이런 사람들의 격차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주민 내부에 있는 격차에 대한 연구도 좀 조사가 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싸우는 이주여성 안에는 조선족은 없어요. 우리는 이주민을 동포랑 나눠서 H-2 비자랑 E-6 비자랑 나누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주민들이 비자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 결혼이주로 오지 않아요. 이주노동 비자로 가장 오고 싶어 하죠. 근데 동포비자가 H-2 비자가 있기 때문에 동포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결혼으로 들어온 건 아니고 일하러 들어왔다가 한국 남성을 만나서 좀 더 안정된 삶을 유지한 거기 때문에 “나는 이 결혼이주여성에 속하고 싶지 않다.”라고 본인들은 말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오히려 기존에 국내에 있는 정치인들이랑 더 많이 얹혀져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장 이번에 외국인 가사지원도우미 법안이 나왔을 때 반대하죠. 본인들이 여기서 이권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 내부에서도 정치가 많이 활발한 것 같아요.

이주여성들이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아이를 낳고 지역과 함께 살아가야 될 존재로서 지금 본인들을 호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목소리를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내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주여성들이 만약에 노마드처럼 청년들처럼 계속 떠나는 방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모르는데 이 사람들 처음 선언이 그거거든요. “우리는 옥천에서 살아왔고, 옥천에 살아있고,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이다.” 보통 지역에서 옥천신문에 다니는 저만 해도 “재는 몇 년 있다 떠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근데 이 이주여성들은 여기 살 사람들이거든요, 앞으로 뿌리 내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훨씬 관심을 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정책을 바꿔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은 있는 것 같아요.

권리운동과 관계운동

“가해자성을 인식한다”라고 제가 써놔던 것은 동물 돌봄 하는 활동가들한테서 엄청 많이 발견한 인식 같아요. 저 역시도 결혼이주여성 판에서도 그렇고 이런 소수자 운동을 함께한다고 하는 이들이 가해자성을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최소한 멈출 수 있잖아요. 비건이라는 활동을 하면서 멈출 수 있고, 이주민 활동을 하면서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차별을 멈출 수 있고 훨씬 효능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효능감을 내가 갖게 해줬다고 하는 것은 저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인 방식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피해자 중심적인 운동이 아니라 이런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운동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권리운동뿐만이 아니라 관계운동을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나눴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권리운동, “여기 소수자 속에 있으니까 한 명 더 끌고 나와. 그러면 너 이거 권리 줄게. 그러면 넌 이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야. 대단해. 넌 이제 차별받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연결되어 있느냐를 얘기하게 되면 “차별하지 말라”가 아니라 차별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지 않는 것. 그렇게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결국 관계를 인식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위에 주목한다는 것

처음에 저를 움직였던 ‘암캐 같은 년’이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암캐 같은 년’이라고 하는 것이 비하적인 표현으로써 ‘그럼 암캐 같은 년에서 우리는 벗어나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암캐 같은 년들이 암캐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제 안에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고민들을 나누는 이들과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작은 이야기들, 생존자나 행위자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

사회학 수업 들을 때 행위와 구조 이런 거 얘기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행위에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분명히 구조라고 하는 것이 사회를 억압하지만 동시에 온전히 하나로 뭉칠 수 없는 남은 자들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고, 그런 남은 자들의 이야기들에 주목하는 것은 봄이 오는 소리가 아닐까라고 하면서 새벽 감성을 써서 여기다가 제가 좋아하는 겐지 씨의 책을 인용해 놔었는데요. 국회에 올 때마다 사실 드는 생각이기도 한 것 같아

요. ‘이렇게 제도적으로 완벽한 사회가 왜 이렇게 불행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히피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제 연구자로서의 목적이거든요. 히피들의 삶들, 이런 작은 이야기들에 대한 고민들.

싸우는 존재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우는’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생각하면 ‘노동하는’이라는 표현이랑 비슷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제가 여기 써놓고도 ‘싸우는’이라는 뜻을 진짜 실제로 이 팔뚝 쓰라는 걸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되게 바랐어요. 싸우기 위해서는 누군가 밥을 해줘야 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누군가 같이 잠을 자야 하고, 무언가 싸우기 위해서는 제가 방금 먹고 온 껌값 같은 게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싸운다’라고 하는 주체성을 너무 하나의 존재에게만 박아놓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싸우는 이주여성’이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 모두가 사실상 여기 앞에 가서 진짜 투쟁하고 막 오체투지하지 않아도 각자 자기의 방식으로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래서 소수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아니라 각자가 내재하고 있는 소수자성이 다른 타자의 소수자성과 연대하는 방식으로 이 사회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민의 지점

저희들끼리 얘기했던 거는 어떻게 지인 중에서 결혼이주민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지인 중에서 이주노동자를 만들 것인가. 그랬을 때 구성원이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비율도 높아지고, 이웃이 될 거라고 하는 긍정 응답도 높아지고, 결혼도 높아지고, 당연히 정치의식도 높아지고. 주변에 점점 분리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인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남는 고민은 ‘옆에 이렇게 가까운 존재를 만들지 않고도 소수자성을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도 동시에 드는 게, ‘지인으로 이주민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참여하게 하는 방법이 모든 이런 소수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드러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공간을 두고도 차별받지 않게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최근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주정책에 바라는 건 저는 이주 활동가들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

저 같은 연구자가 있어도 사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 있는 이슈가 너무 많아서 이주에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게 많아요. 누군가는 이 자리에서 끊임 없이 이 연구를 계속해야 되거든요. 당사자 활동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IL(자립생활운동) 예를 드는데 또래상담가처럼 장애에서는 일자리를 만들어놓고 그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 한 명한테 활동지원사 붙이고 근로지원인 붙이고 집 주고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우리 사회가 이주민 한 명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그런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필요하고 특히 그들이 자기 스스로 당사자 활동가로 나가 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자리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청년할당제 얘기하는 것처럼 이주할당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주민 같은 경우에는 할당제가 전혀 부재하잖아요. 이주민 정책이라고 토론회라고 열어놨는데 당사자 한 명도 안 온단 말이에요. 물론 이주센터의 김** 팀장님이 오지만 제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랑 탄화 언니가 와서 얘기하는 거랑은 차이가 클 거예요. 당사자들이 와서 그 공간에서 정책을 이야기하고 고민을 나누는 거, 그리고 반드시 수당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제공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설계를 만드는 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주할당제를 고려하는 부분이 잘못 고려하면 그냥 이주민 안에서도 얘기하는 그런 이자스민같이 고학력의 여성들만 들어올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는 되게 중요하고 고민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저도 아직 그 부분은 명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소수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낼 것인가, 그걸 할당제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어요.

지금 이런 싸우기 위한 요구 중의 하나가 생계를 병행하는 활동이 부재한 거죠. 기본적으로 이주여성과 결혼하고 있는 남성들이 경제적으로 일단은 저소득층이 많은데 그런 저소득층 가정에서 여성이 돈을 벌지 않고 활동만 하게 됐을 때 집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동시에 장시간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열악한 재정들 이런 고민들이 남아 있고요.

다문화지원센터에는 통번역사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사업이 연속성 사업이 아니라 비연속성 사업이어서 일단 호봉이 아예 없고요. 10년 일해도 월급이 다 똑 같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일단 다문화지원센터에 있는 여성들이 존재하지만 그 여성들은 거기에 생계, 목줄이 달려 있잖아요. 말 함부로 하면 자른단 말이에요. 다음에 재계약이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센터장은 여기저기서 모난 소리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앉아 있을 텐데. 그래서 목줄이 잡힌 이주여성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매우 적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의 수많은 지역 지원정책들이 지역의 공동체로 떨어지잖아요. “지역 공동체 일자리 줄 테니까 청년 데려와서 잘 해봐, 뭐 줄 테니까 잘 해봐.” 근데 지역에 내려온 이들이 서울에서 자유를 찾아서 지역에 내려갔는데 목줄이 또 묶이면 거기 뭐 하러 있고 싶겠냐고요. 당연히 떠나죠. 지역에서 효능감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오는 사람들의 욕구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하고, 그리고 그 면밀히 파악한 것들이 지역 전체에서도 정확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주여성도 어디에 얽매이지 않는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으면 지역만큼 자기 이야기를 제대로 뽐낼 수 있는 곳이 없고 연구자로서도 힘나는 곳이 그만큼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꼭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시골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저는 지금 부천에 있는데 부천에서 저희 교수님이랑 공원을 공론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지역에도 지역정치들이 있잖아요, 잘 안 보이지만. 그런 정치들에서 하고 있다 보면 되게 효능감을 느끼는데 보통 지역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떠올리는 건 진짜 시골 지역을 떠올리지만 서울 안에서도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한 방식으로 하려면 일자리에 얽매이는 방식으로의 지원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 자율성을 가진 이상한 존재들이 각 지역마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이상한 존재들이 이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2 싸우는 이주 여성이 말하는 것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 창발적 시민인가? 결혼이주여성의 이야기는 미래의 시티즌십의 관계를 생각하게 한다. 한국사회에서 이주자는 지난 20년간 늘어왔고 앞으로도 늘 것으로 전망된다. 그것은 한국사회가 어떤 식으로든 이들과 ‘준시민적’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상황을 상상할 때에 ‘싸우는 존재’로서의 이주자의 모습은 미래의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획득해 나가려는 실천을 드러내는 것이자 선주민들에게 새로운 관계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의 존재는 한국사회에 시민 관계를 새롭게 재편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 또한 창발적 시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미래전망이 다른 시민들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싸우는’ 이주여성의 목소리는 희망하는 미래사회로 가는 방법론을 새롭게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불평등을 확대하는 식으로, 이주자를 도구적으로 대하는 식으로는 선주민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경고를, 어떤 의미에서는 이들이 지역사회를 새롭게 조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동시에 담고 있다.

이들의 목소리(주장)이 내포하는 우리사회 미래 이슈와 대안은 무엇인가? 이주여성의 이야기는 현재의 문제가 되어 버린 ‘이민정책’의 방향성(김무인, 2022)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이 더는 도구적인 것이 되어서는, 차별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주민을 지역주민으로 인정(정동재·윤영근·염지선, 2022)하는 한편, 소수자 우대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 활동가’를 세우는 정책과 같이 한인정 작가의 말에 이미 여러 정책적 제언이 담겨 있다.

제2절

가족돌봄청년들(영케어러)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의 연구 배경

이머징 시티즌의 개념은 국가를 이루는 모든 시민이 민주주의적으로 동등한 시민권을 행사하는 시민적 주체가 되기까지 다양한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정치학의 기본적인 전제로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은 주어진 개인의 삶의 조건을 넘어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여 사회 변화를 위한 전략들을 구사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발언권을 획득하고자 경쟁한다.

그러나, 정치학과 사회학이 이러한 시민들의 다양한 투쟁의 동역학에 집중해 온 것에 비해, 이들 시민이 각자 지향하는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발언권 경쟁의 장에서는 어떤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어떤 방식으로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즉, 현재의 사회과학적 분석들은 ‘현재’의 시민권 경쟁에 천착하고 있으며, ‘미래’를 위한 시민권 경쟁에는 비교적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본 절은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들을 대상으로 질적 심층인터뷰를 분석하며, 이들이 처한 어려움, 미래에 대한 관점, 정책적 건의사항들에 대해 살펴본다. 이어서, 영케어러는 어떤 의미에서 이머징 시티즌으로 간주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머징 시티즌’의 사례로서의 이들 집단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영케어러는 가족돌봄청년으로 지칭되기도 하며, 가족에 대한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10대와 20대의 청년들을 지칭한다. 대한민국보다 노령화가 먼저 찾아온 일본에서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돌봄노동의 부담이 가정 내에 국한되어 분담되는 흐름 속에서, 이러한 부담을 과중하게 짊어지게 되는 일부 청년들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었던 바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영케어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것은 매우 최근의 일이다. 일부 영케어러 당사자들이 출판 시장에서 독자들의 반응을 얻으며 주목받기 시작했고(조기현, 2019; 조기현, 2022), 이와 관련된 SNS 동영상들이

많은 주목을 끌며 조금씩 한국 사회에서도 영케어러들이 가시성을 얻어가고 있다.

영케어러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구별 조례도 마련되기 시작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는 2022년 10월, 영케어러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했으며, 대전광역시도 2023년 6월, ‘가족지원청년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영케어러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케어러 당사자들에 대한 본 절의 연구는 크게 두 가지를 목표로 하여 수행되었다. 첫째, 여전히 부족한 영케어러 당사자들의 사회적 경험에 관한 사례를 질적으로 수집하고, 각 영케어러들의 처한 다양한 상황들을 질적으로 드러낸다. 이 부분은 효율적인 정리를 위해 인터뷰 본문을 인용하기보다는 체계적인 정리를 통해 보고서에 옮겼다(표 4-1 참조). 둘째, 이들의 사회적 어려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영케어러의 미래 정책에 있어서의 함의를 분석한다. 셋째, 어떠한 의미에서 영케어러가 ‘이머징 시티즌’으로 호명될 수 있는지 분석한다.

2 연구 참여자 사례 분석

□ 참여자1의 가족돌봄 상황

참여자1은 96년생 여성으로 중증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오빠를 돌보고 있다. 돌봄 대상자의 정신연령 수준이 5세 미만이기 때문에 식사, 목욕, 화장실 등 모든 일상생활을 케어 역할을 한다. 형제는 선천적으로 중증 정신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참여자1은 어릴 때부터 돌보기 시작했으며, 나이가 들수록 돌봄 역할의 범위와 강도가 늘어났다. 남자 형제가 성장하면서 신체적으로 커졌기 때문에 점차 참여자1과 어머니 모두 체력적인 한계를 경험하였다. 현재는 직장 등의 이유로 비동거 상태이지만 정기적으로 본가(돌봄 대상자)가 있는 집으로 가서 주돌봄자인 어머니를 대신해서 돌봄을 수행하고 있다.

□ 참여자1의 가족돌봄 부담

학교 다닐 때부터 장애형제를 돌봐야 했기 때문에 일정이나 약속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웠음. 본인은 늘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되어있었다. 직장을 다니는 등의 이유로 원가족(어머니, 남자형제)과 비동거 상태이지만, 완전히 돌봄 책임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비정기

적으로 본가를 찾아가 형제를 돌보고 있다. 비동거 이전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장애 형제를 돌봤지만, 일과 돌봄을 병행하기엔 너무 힘들었다. 특히 직장에서 돌봄 대상자의 걱정
에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현재 장기간 연애했던 애인이 있지만, 형제돌봄으로 결혼을 결
정하기가 어려우며 애인과 형제돌봄으로 인해 자주 다투기도 한다. 결혼 이후, 주돌봄자
인 어머니가 돌아가시거나 건강상태가 악화된다면 결혼한 자신에게 돌봄이 온전히 맡겨
질까 두렵다.

[표 4-1] 가족돌봄청년 참여자의 인적 구성

연구참여자	나이	성별	돌봄 대상자	지역	돌봄기간	비고
참여자1	96년생	여	여동생/정신적 장애	대전	4년	현재 비동거
참여자2	96년생	여	오빠/정신적 장애	대전	10년 이상	현재 비동거
참여자3	01년생	남	형/정신적 장애	대전	10년 이상	
참여자4	89년생	여	어머니/신체 질환	대전	10년 이상	
참여자5	97년생	여	어머니/신체 질환	전북	7년	현재 비동거
참여자6	94년생	여	어머니/신체 질환	대전	10년 이상	현재 비동거
참여자7	97년생	여	할아버지/신체 질환	울산	4년	현재 비동거
참여자8	96년생	여	할머니/신체 질환	울산	3년	현재 비동거
참여자9	94년생	여	어머니/신체질환	부산	3년	
참여자10	96년생	남	할머니/치매	울산	3년	현재 비동거
			삼촌/신체적 장애			
참여자11	91년생	남	어머니/정신, 신체 질환	부산	13년 이상	현재 비동거
참여자12	97년생	여	할머니/치매	서울	6년	
			어머니/신체 질환			
			삼촌/정신적 장애			
참여자13	99년생	남	어머니/ 정신적 장애	충남	10년 이상	
참여자14	97년생	여	할머니/ 치매	경기	6년	

□ 참여자2의 가족돌봄 상황

참여자2는 89년생으로 다중질환의 어머니를 현재 14년 이상 돌보고 있다. 어머니는 참여자2가 스무살 때 갑자기 쓰러지셨으며 그 이후에도 여러 질환으로 현재는 자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건강상태이다. 주요 돌봄 역할은 통원 동행, 복약관리, 식사, 가사노동 등이다. 돌봄 대상자가 와병상태는 아니지만, 질환 특성상 언제 쇼크사 등 위급한 상황을 올 줄 몰라서 참여자2는 항상 위급한 연락에 대비하고 있다. 스무살 때부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항상 어머니 돌봄을 수행했기에 학업, 직장, 진로, 대인관계 등에 지장이 발생해 왔다. 어머니를 돌보면서 학업, 직장생활 등 생애주기에 따른 과업과 돌봄을 병행해왔지만 돌봄이 장기화될수록 어머니와 참여자의 건강상태가 나빠지면서 모든 과업들을 포기하게 되었다.

□ 참여자2의 돌봄부담

참여자2의 어머니는 질환이 언제 쇼크가 올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참여자는 늘 연락에 예민하고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학교, 직장, 친구를 만나거나 모임을 해도 어머니가 걱정되어서 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고 불안해 결국 정신과에서 ‘범불안 장애’를 진단받는 등 심리적인 장애를 겪었다. 3년간은 직장, 인간관계, 개인적인 취미와 같은 여가생활 등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고 집에서 어머니만 간병하는 생활을 했다. 본인은 이 ‘잃어버린 3년’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돌봄을 수행하던 3년간 경력에 공백이 생겨서 이후 취업활동에 지장이 있을까 걱정하고 있다. 게다가 또래 친구들에 비해 모든 생애주기 과업이 늦춰지면서 뒤쳐질까봐 불안하기도 하다.

□ 참여자3의 가족돌봄 상황

참여자3은 97년생으로 전북 전주에서 대전으로 거주지를 옮긴 사례이다. 그래서 대전과 전주가 청년대상으로 하는 지자체의 지원 정책 서비스를 비교해볼 수 있다. 참여자3은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인해 고등학교 때부터 어머니 대신에 가사노동을 수행하며 이로 인해 학업에 지장이 생겼다. 유일한 생계부양자였던 어머니가 아프면서 기초생활 수급을 받을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어머니가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참여자3은 어머니 돌봄을 포함한 가사노동, 경제활동 등과 학업을 병

행하며 취업활동까지 수행하였다. 현재는 어머니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어 자립하실 수 있으며, 본인도 일자리로 인해 대전으로 오게 되었다.

□ 참여자3의 돌봄부담

시간을 관리하는 게 제일 힘들었다고 증언한다. 특히 취업준비 기간에 어머니 케어와 함께 가사노동을 했으나, 아르바이트 등을 함께 동반하려니 취업 준비에 신경 쓰기가 어려웠다. 전주에 비하면 대전의 청년 대상 정책은 체계적이고, 확실한 홍보가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대전의 경우는 구(區)마다 SNS 계정이 있어서 해당 구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확인할 수 있다. 전주시에서 대전시로 거주지역을 옮기자 행정복지센터의 공무원이 직접 연락을 하여 받을 수 있는 지원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였다. 참여자3은 현재 직장으로 인해 대전에 거주하지만 이러한 지자체의 지원정책을 경험하면서 향후에도 대전에 거주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 참여자4의 가족돌봄 상황

참여자4는 신체적 질환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3년 동안 돌보고 있다. 어머니가 주기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로 해당 참여자는 주기적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통원을 다녀야 한다. 문제는 통원치료를 주2회 받아야 하며, 평일 낮 시간대로 정해져 있다. 때문에 참여자는 정기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고 파트타임을 구하더라도 어머니의 통원치료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구할 수밖에 없다. 참여자4는 예체능 전공자로 더 나은 일자리와 경력을 위해서 대학원 진학을 해야 하지만 어머니 돌봄으로 인해 진학이 힘들며, 진학을 위해 타지역 이동하는 건 엄두조차 안 난다.

□ 참여자4의 돌봄부담

정기적인 통원치료로 인해 돌봄으로 인해 본인의 생활이 없으며 미래를 위해서 경력에 대한 시간 투자, 진로탐색, 연애 및 결혼 등 생애주기 과업에 지장이 있다. 참여자4는 형제자매가 없는 외동으로 부모돌봄의 부담을 홀로 짊어져야 한다. 이는 지금의 한국사회의 90년대생이 형제자매수가 많은 베이비부머 세대와 다른 맥락의 부모돌봄을 수행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나아가 가족돌봄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자원에 대한

어려움도 있지만 동시에 시간자원 또한 주요하게 작동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부산광역시
시의 경우, 전국 최초로 가족돌봄청년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본 인터뷰의
청년은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다. 이는 제정의 여부와 실효성에 대한 괴리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다. 즉, 조례가 있더라도 실효성이 없다면 유명무실하다.

□ 참여자5의 가족돌봄 상황

참여자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신체 질환의 어머니, 치매 할머니, 신체적·정신적 장애 삼
촌을 돌보는 삼중돌봄의 가족돌봄청년이다. 참여자가 스무살부터 장애 삼촌을 돌보는 할
머니가 치매에 걸리고, 다음 해에 어머니가 발병하면서 대학 생활과 돌봄을 병행하게 되
었다. 근로장학금, 생활지원금, 후원금 등으로 생계를 이어나갔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
이 있었으며 졸업을 하고서도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다.

□ 참여자5의 돌봄부담

참여자는 삼중돌봄으로 참여자들 중에서 제일 돌봄의 부담이 큰 사례였다. 돌봄을 제공
할 수 있는 사람은 혼자지만, 돌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3명이기 때문에 참여자는 늘 한
쪽의 돌봄 대상자를 보살피고 이쪽의 돌봄이 끝나면 다른 돌봄 대상자를 바로 돌봐야 했
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을 지원받지만 이마저 부족했기 때문에 부수적인 경
제활동을 수행해야 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등의 소득이 잡힐 경우 수급이 끊기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의 딜
레마에 빠지곤 했다.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 장학금과 근로장학생 수
당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했지만 높은 성적을 유지하려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돌봄으로 인해 높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는 공부 시간을 확보하기가 힘들었다.
참여자는 오랜 고민 끝에 자신의 돌봄경험을 경력화시켜 진로를 사회복지 쪽으로 바꾸는
등의 전략을 선택했다. 또한, 현재 진로를 바꾸게 되면서 어머니와 삼촌을 돌볼 수 있는
조건이 가능한 직업을 고려하는 등 가족돌봄청년의 진로탐색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매우 극소수일 것이다. 참가자5는 자신이 "가족돌봄청년"이라는
정체성을 깨닫고 '서울시 영 케어리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등의 경험을 했다. 서울에 거주
하기 때문에 '서울시 영케어리 지원사업'에 지원을 받으면서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가

족돌봄청년 지원정책 연구 등을 통해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지원사업이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자신의 돌봄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게 가능한지 보여주는 긍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 참여자6의 가족돌봄 상황

충남에 거주하면서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돌보고 있다. 한부모 가정으로 돌봄을 수행해야 할 가족원이 한정적이라는 가족돌봄청년의 주요 특징이 잘 드러난다. 정신적 질환 특성상 돌봄 대상자의 상태가 일관되지 않고 신체적으로는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더라도 옆에서 가족원이 계속 신경써줘야 한다. 참여자6도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걱정되어 지속적으로 건강을 확인하고 있다. 참여자 또한 지속적인 돌봄과 빈곤생활로 인해 심리적 장애를 앓고 있으며, 늘 어머니를 신경쓰느라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된 상황이다.

□ 참여자6의 돌봄부담

참여자6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가족돌봄과 자신의 생활을 양립하기 위해서 원하지도 않는 진로를 선택하였다. 이는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노동시장에 진입하더라도 돌봄을 할 수 있는지 등 지금의 상황이 제일 우선 조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돌봄청년들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진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의 가족돌봄은 정신적 신체적 질환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증상이 지속된다면 돌봄 당사자 또한 건강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인식이 있었는데,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신이 어머니의 경제적 부양을 전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참여자6이 거주하는 충남 지역에는 청년 지원정책 또는 가족돌봄정책이 없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지원정책이 가족돌봄청년에게 어떠한 파급효과가 있는지를 볼 수 있다.

3 가족돌봄 청년의 현상인식과 미래인식

이상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영케어러들은 각기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층위로 중첩된 사회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은 대개가 공유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매 순간 강도 높게 피돌봄자를 위해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즉, 영케어러의 사회적 어려움은 현재의 어려움에 그치지 않고, 미래를 대비할 수 없다는 장기적 어려움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참여자 6의 경우 홀어머니의 정신질환을 돌보기 위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진로를 설정해야만 했다. 참여자 6은 본인이 성장해 온 지역을 떠나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고 싶었지만, 가족 내 돌봄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가족의 품을 떠나 타 도시로 진출하는 미래를 아예 선택권에서 지워 버렸다. 그러나 정작 참여자 6은 이러한 본인의 선택이 아쉬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막상 다른 도시로 가서 지금과는 다른 진로를 선택했을지라도 크게 미래가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 또한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이 지불하고 있는 기회비용의 값이 얼마나 클 수 있을지에 대한 상상조차도 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참여자 2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지불한 기회비용에 대해 깨닫고 높은 정신적 불안감을 실제로 호소하고 있다. 참여자 2의 마음건강을 저해하고 있는 요소는 어머니의 ‘현재의’ 건강 상태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자신이 소모한 ‘과거’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 더 나아가 자신에게 닥쳐올 것으로 예견되는 암울한 ‘미래’에 대한 고민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참여자 2는 영케어러가 살아가는 일상이, 사실은 과거-현재-미래가 함께 공존하는 순간임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참여자 1도 이러한 의미에서 비슷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참여자 1이 가장 불안해 하는 것은 자신이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폐를 끼치는’ 사람으로 오랫동안 살아 오고 있다는 점이었다. 참여자 1은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실제로 가솔 돌봄 의무가 불시에 발생하게 될 시, 그녀는 다른 모든 활동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인간 관계는 사회적 자본의 형태로 개개인의 재화로 축적되며, 수많은 형태로 행위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참여자 1은 매 순간 사회적 자본을 지불하며 현재를 버텨 나가고 있는 셈이다.

참여자 5는 매우 드물게도 영케어러로서의 현재의 의무와 자신의 미래 진로 사이의 절충지점을 찾아 나가고 있는 사례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면서, 참여자 5는 자신의 일상을 직업훈련의 경험으로 승화시킬 방법을 찾았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 혜택을 탐색해 실제로 혜택을 받으면서, 현실적인 부담을 경감시킬 방법도 찾았다. 그렇다고 해서 참여자 5가 풍부한 사회적 지원을 받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는 이 정도만 해도 미래를 꿈꿀 수 있을 만한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작은 정책적 근거만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4 정책적 의제

가. 돌봄 대상자에 따른 돌봄 서비스 및 정책과 제도

중증장애인이 아닐 경우, 부양가족이 있다고 해서 지원 및 서비스의 양을 줄여버리는 경우가 있다. 부양가족의 연령과 성별을 고려해서 지원 서비스의 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병원동행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다. 병원 갈 때마다 경제적, 시간적 에너지가 소모가 심하다. 게다가 병원 갈 시간으로 인해 자신의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시기에 독박돌봄(돌봄자와 돌봄 대상자가 단둘이 있는 상황) 가구를 위한 격리 방안 및 대안돌봄 서비스도 필요하다.

나.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서비스 및 정책과 제도

진로탐색 및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 및 컨설팅이 필요하다. 제한된 자원으로 원하는 진로를 설정하기 어렵고, 향후 진로를 어떻게 선택해야 좋을지 막막할 때가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청(소)년 돌봄자의 상황을 고려해주면서 최적화된 상담을 위한 진로 컨설팅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 외 공부를 할 수 있거나 공부할 장소를 대여하는 등 학습서비스가 필요하다. 돌봄으로 인해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거나 학교생활 부적응은 물론이며, 사교육을 할 형편이 안 되는 등 청(소)년 돌봄자들 대부분이 공교육과정에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경우 무단으로 학교결석을 할 때도 있었다. 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공교육

이외에도 공부할 수 있는 과외연계, 무료 인터넷강의, 스터디룸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심리상담 서비스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불안정한 경제상황, 막막한 미래, 돌봄으로 인해 소진되어 우울한 가족분위기로 인해 심리적인 불안함, 무기력감, 우울감을 느낌.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양질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하다. 문화생활 등 경제적 여유를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이 있었으면 희망하였다.

대부분의 청(소)년 돌봄자들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또는 아픈 성인 가족원을 대신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과 돌봄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 돌봄청(소)년들처럼 문화생활 및 생활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다. 커뮤니티 연결과 단절

대부분의 참여자는 자신의 상황을 타인에게 밝히지 않았는데, 이러한 상황이 심화될수록 가족돌봄청년이 돌봄을 수행하면서 고립과 단절되는 문제로 작용한다. 한편, 자신의 돌봄을 상황을 공개하거나 간접적으로 알려져 주변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돌봄을 수행하는 데 긍정적인 사례도 있었다.

돌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제도와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커뮤니티와 공동체 또한 주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자신의 가족이 아프다는 점, 그로 인해 자신이 돌봄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약점'이라고 언술한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또래집단과 다른 상황은 더욱 자신 스스로 고립감을 느끼며,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게 된다. 일부 사례는 자신의 돌봄 상황에 대해서 이웃, 친구, 지인 등에게 공개하게 되면서 도움을 받거나 정서적 지지를 받는 등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라. 실효성 있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조례 제정

현재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조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영 케어러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실효성이 있는지 미지수이다. 지원조례 제정에 있어 선언적이기보다 실효성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

제3절

지방대학 인문사회대학원생들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가장 소외된 개인들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에서 가장 소외된 집단은 누구일까?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계층화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주요 대학과 지방대학 사이의 격차, 이공계와 인문/사회계열 사이의 격차, 취업 중심 학과와 그렇지 않은 학과 사이의 격차,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학과와 그렇지 못한 학과, 학부생과 대학원생 사이의 격차 등이 논의되고 있다.

2022년, 교수신문은 이중 인문/사회계열의 대학원생들, 그중에서도 소위 ‘수도권의 주요 대학’에서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학원생들을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천하제일 연구자 대회’ 연재를 마련하고, 다양한 대학원생들이 자신의 연구에 대해 원고를 기고할 기회를 마련했다. 2022년 3월에 처음 시작한 이 연재는 2023년 현재까지 59회를 맞이하여, 다양한 인문/사회계열 대학원생들이 자신의 연구를 소개하는 장이 되고 있다.⁹⁾

이 연재글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를 관찰할 수 있는데, 첫째는, 대한민국에 이토록 다양한 주제에 천착하고 있는 학문 후속 세대 연구자들이 있다는 점이다. 인문학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진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출판 시장과 대학에서 경험하는 인문학에 대한 배제의 벽은 여전히 굳건하다.

그런데도 어디에선가 누군가는 대체 불가능한 인문학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이들 학문 후속세대는 공통적으로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다양한 사람과 현상에 대해 연구하면서, 이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을 이야기한다. 이는 다시 말하면, 이처럼 다양한 인문학적 대상에 대해 주목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자들의 길을 지지해 달라는 뜻도 된다.

9) https://www.kyosu.net/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150&view_type=sm

그러나 다양한 인문학적 연구 대상에 천착하는 다양한 학문후속세대를 우리 사회는 기르고 지원하고 있을까? 한국 연구재단에서 인문학 및 사회과학 분야의 후속세대 연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사업의 예산 규모는 2023년 현재 A유형 520억원, B유형 453억원 등 총 973억여원 정도에 달한다. 이는 이공계 신진 연구자 지원 사업의 예산 규모가 170억원인 것에 비해서도 팔목할 만큼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비 지원사업의 존재에도 이러한 지원만을 믿고 선뜻 인문학 혹은 사회과학 계열 연구자의 길을 걷겠다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리 만무하다.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졌듯이, 인문계열 대학원에 진학하였을 때 꿈꿀 수 있는 진로의 폭은 여전히 너무나 좁다. 비정규직을 전전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며, 자신의 길을 지지해 주는 동료들을 만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더 나아가, 이들 중에서도 가장 소외되어 있는 집단은 소위 한국 사회에서 ‘지방대학’에 다니고 있는 대학원생들일 것이다. 이들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학술 활동의 인프라로부터 소외되어있을 뿐 아니라, 향후 직업시장에 진출할 때조차도 소위 ‘명문대학’의 후광은 얻기 어려운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절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이들은 누구이며 왜 인문학을 공부하고 있는가? 이들이 직업적인 소명을 이어나가는데 있어서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은 어떠한 것들인가? 이들은 어떤 미래를 상상하며 또한 원하는가? 본 장은 인터뷰 응답자들의 답변이 매우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고, 담론 자체를 드러내 보여야 하는 성질이 있어, 최대한 직접 인용의 형태로 인터뷰 자료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표 4-2] 지방대학 대학원생들 인터뷰 참여자 인적 구성

가명	전공	학위과정	지역 및 성별
A	사회과학	석사과정	충청권 남성
B	사회과학	석사과정	충청권 여성
C	역사학	박사과정	충청권 남성
D	문학	석사과정	충청권 여성

2 진로 선택의 이유

먼저 이들은 각자 다양한 지적 호기심을 계기로 하여 인문학 혹은 사회과학의 진로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지적 호기심은 매우 국소적인 형태로 특정 학자에 대한 호기심이기도 했고, 현장에서 느낀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답변을 찾기 위한 호기심이기도 했다.

C: 제가 고등학교 때 역사문화유산 답사 동아리를 친구들과 하고 한 은사 선생님하고 같이 했었는데요. 그때 전국으로 답사를 다니면서 전근대시대의 유적을 아무래도 많이 다녔지만. 그중에 저에게 특히 의미가 와 닿았던 부분들이 현대사하고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 졸업할, 한 3학년, 4학년이 되고나서 저도 진로를 고민을 한 적도 있었는데. 돈을 조금 벌더라도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B: 제가 지역에서 대전이든 홍성이든 여기 있으면서 이런 일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굉장히 모든 것이 취약하다, 그러니까 저는 언론 쪽 일을 했었는데 굉장히 중앙지, 중앙방송하고 지역 언론이 굉장히 비교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 취약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저도 옆에서 보고 있으면 굉장히 답답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지역이 문제다, 라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분명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사실 너무 이게 풀기가 힘든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장기적으로 좀 계속 고민해보면 좋지 않을까,

D: 논문을 쓰기는 미루다가, 살짝 포기한 상태에 가까워요. 지금은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원래는 제가 ‘파스칼 키냐르’라는 아직도 살아있는 소설가가 있는데, 그 사람의 소설에서 물이라는 테마, 그 상징을 잡아서 몇 개의 소설을 분석하는, 물이 죽음의 장면에서, 생의 장면에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장면에서 저는 여러 형태의 물을 보았고 그걸 가지고 논문을 쓰려고 했었고요. 그러니까 프랑스 현대소설을 전공을 하다가 지금은 찻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A: 저는 원래는 노동조합에서 계속 근무를 하다가 10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원래 인문대에서 철학을 전공을 하고 졸업을 한 뒤에 계속 노동조합에서만 주로 일을 하다가 이제 한 10년 정도 활동을 하고 다시 사회에 대해서, 노동사회학을 전공하려고 입학한 상태이고, (...)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고민됐던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이게 기존에 해왔던 방식들로만은 세상을 바꿀 수 없겠다, 라는 생각도 많이 해서. 스스로는 바뀌어 볼 수 있는, 진화하고 레벨업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3 이들의 선호미래와 가능미래

가. 핸디캡 기반의 내러티브들

인터뷰 과정에서 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왜냐하면 대화의 흐름이 주로 현재의 어려움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었기에,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인터뷰 전체의 흐름을 막아설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이들이 현재 겪고 있는 핸디캡의 형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해야 했다. 이들은 각기 스스로를 ‘소수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리고 이 ‘소수자성’의 핵심에는 ‘지방’이라는 공통의 키워드가 있었다. 이들은 인문사회계열을 전공한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에 있는 연구자들은 ‘주류’인 것으로, 본인들은 이들로부터 소외된 ‘비주류’이자 ‘소수자’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D: 저부터 얘기를 하면,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주 젊지는 않고 나이가 또 많지는 않은 30대 정체성도 있고, 또 여성이라는 정체성도 붙여져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약간 그렇게 단편적으로 소수자, 라고 설정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소수자성이 있는 편이에요. 스스로를 설명할 때. 그래서 주류가 아니라고 했을 때, 그럼 주류는 서울이나 수도권 대학이라든가, 일부 명문대라든가 그런 누구나 이름 대면, 그리고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정도의 대학교들을 주류라고 설정하면 저는 비주류라고 느끼는 부분이 분명 있는 것 같아요. 지방대라고 하고. 그리고 제가 저 스스로는 그냥, 비하하는 말 있잖아요. (...) 의기소침까진 아니었지만. 뭔가 그냥 좀 이렇게 내가 뒤

권에 있는 존재이구나, 그런 식으로 저는 받아들였던 것 같고. (...) 단적인 예시가 떠오르게, 교수님들과의 대화에서 지도교수님께서 너 너무 좀 외로워 보이는 것 같다, 혼자 공부하기에 어렵지 않냐, 자기가 너무 거리를 두고, 자기가 배웠던 대로 똑같이 했던 것 같은데. 본인은 서울대에서 공부를 하셨고... (...)

C: 일단 대학원생의 숫자가 굉장히 적은 편이었다는 게, 우선 지방에서, 지역대학에서 공부하기 어려운 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같이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역사연구 방법론이나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스터디를 한다거나 이런 노력들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B: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논문 주제가 지역하고 관련된 거고, 유관해서 공부하고 있음에도 아마 다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다음에는 서울로 대학원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랑 같이 학부를 나왔던 친구들도 대학원은 서울에서 다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저한테도 계속, 지금도... (...) 좋은 강연이라든지, 교육 같은 건 다 서울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아쉬워요. 굉장히 아쉽고. 우리가 문화공연 이런 것도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학교 커리큘럼 밖에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커리큘럼들이 있을 텐데, (...) 얼마나 좋은 교수진을 갖췄고 좋은 학생들이, 똑똑한 학생들이 있느냐 하고는 별개로 그 이름값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게 공유가 된다는 게 저는 좀 마음 아픈 부분인 것 같아요. (...) (그러나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인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뭐 하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종합적인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까 그런 말 씀을 드렸던 이유는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굉장히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많은 것들을 듣고 배우고 해야 되는데, 그런 토대 자체가 저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A: 네. 저는 약간 여러분들과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은데. (...) 어디 서울대, 연고대라고 꼭 잘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방대라고 꼭 못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개인적 역량은 확실히 그런 거에서 차이점을 많이 보는 걸 제가 이번 학회 때 좀 많이 봐가지고. 결국에 여기서도 하면, 가능성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 제 고향이 김천이다 보니 진짜 필요한 친구들은 고향 친구들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 지금 전문대만 두 개

있다가, 하나가 종합대학으로 바뀌었는데. 거기도 지금 없어질 정도의, 폐교의 위기까지 올 정도로. (...) 대전은 굉장히 축복받은 곳이 아닌가...

나. 과거와 지금이 다르지 않아 미래도 똑같이 암울할 것

이어서 이들이 상상하는 자신과 공동의 미래에 대한 담론을 수집하였다. 이들의 미래상은 자신들이 처한 현재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들은 단지 자신이 열정을 갖고 있는 연구를 계속 할 수 있는 미래 여건을 꿈꾸고 있지만, 이미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자신들의 현실을 자조할만한 다양한 증언들이 반복되었다. “시급 1,250원”, “의식주와 크게 상관없는 활동” 등의 발언이 그것이다. 이러한 발언들은 그들이 현재 지불하고 있는 지용에 대한 토로이기도 하지만, 미래에도 이러한 상황이 나아질 리가 없다는 굳은 믿음을 바탕으로 한 것들이기도 하다. 이들이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인 이유는, 자신들의 미래가 단기적인 지원, 혹은 심지어 대대적인 국가적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쉽사리 변하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행위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사람의 몫’을 하고 살아갈 기회를 잡기를 바라기는 요원한 일이라고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

C: 사진에 대해서 해제를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게 시간 계산해보니까. 정말 본인이나 이 정도 하면 양심적이다, 할 정도로 받아서 하면 시급 한 1,250원 정도 나온다고 했고. 정말 인터넷에서 그냥 굶어서 대충해서 하면 시급 1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게 왜 그럴까 해서 다른 원로 선생님한테 여쭙보니까. 자기가 그 일을 할 때 페이지가 그 정도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액수가 40년 정도 변화가 없는 거죠. (...) 교수님들은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비중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돈을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겸임연구원들이, 박사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실제로 실무를 하는 석사 급들, 박사 과정생들이 들어가는데. 실제 업무하는 거에 비해서 그들이 받는 비중들이 너무 적은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A: 인문대 같은 경우도 특정 몇 개 과만, 지금 국사학과니까 이 정도 받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 다른 과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대학원생에 대한 개념도 예전 같지가, 약간 다른 개념으로 받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불문과 같은 데, 독문과 같은 데 거의 없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철학과 같은 경우는 꽤 있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정년퇴임한 교수님이라든가, 다른 과 교수님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D: 세상에서 어떤 예술, 가난한 예술가, 이런 거를 저한테 대입을 시키면서 이게 잉여잖아요, 사실. 밥 먹고 사는 문제나 로켓을 쏘아 올리거나 그런 거랑 상관없는 일이라가지고. 이런 게 한국의 문제, 인문학의 위기라고 한다면 그냥 인간세상사에서 봤을 때도 지구에서 사실 밥 먹고 생활하는 의식주와 크게 상관없는 활동을 왜 이렇게 업으로 삼으려고 하고 이런 걸 쫓는지. 그런 인간일수밖에 없는 그런 고민을 저는 많이. 좀 예전보다는 덜하지만 지금도 사실 차를 한다는 게, 커피도 아니고 차도 자꾸 학문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비주류, 잉여, 이런 것이 주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다. 선호미래와 가능미래

따라서, 이들이 상상하는 선호미래 또한 극도로 소박하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교수가 되어 학문을 계속할 수 있는 미래를 깊은 마음속에서 꿈꾸지만, 이를 선불리 자신이 선호하는 미래라고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러한 미래를 꿈꿀 자격조차 없다고 너무나 오랫동안 설득당해 왔기 때문이다. ‘감히’ 그런 미래를 바라기보다, 이들은 훨씬 더 실현 가능한 수준의 목표를 제시하고, 그마저도 차마 자신들이 바랄수조차 없는 선호미래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 선호미래상은 여전히 소박하기 그지 없다. 반면, 가능미래는 훨씬 더 구체적이다. 이들중 자신의 가능미래를 정확히 예측하여 말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공동체의 가능 미래에 대해서는 거의 확실하게 동의하고 있는 듯 했다. 이들에게 닥쳐올 공동체의 미래는 더 이상 아무도 학문을 하려고 마음먹지 않는 미래다.

C: 한국에서 역사공부하는 사람들의, 사회의 미래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 굉장히 소수의 연구자들만 남아서 학문적인 다양성이 줄어들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만 이루어져서 역사에 굉장히 공백이 많이 생길 것 같고요. (...) 물론 희망하는 모습은 학문적 다양성이 굉장히 넓어지고 역

사연구가 굉장히 많은 바운더리를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 개인적으로는 역사를 공부를 하면 보통 박사를 40 넘어서 따더라고요. 40대 중반에 늦게 따시는 분들도 있고. 하면 그런 분들이 취직을 했을 때 연봉을 한 4천, 이렇게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하면 이게 말이 되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되지 못하면 다 망하는 거죠, 사실. 인문계 연구자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교수가 되지 않으면 실패한, (...)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 아마 역사와 관련된 연구기관에서 행정부속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삶을 살 것 같아요. (...) 제가 연구 아르바이트를 좀 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도 축소되는 마당에 정규직 연구자를 더 확대해서 뽑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런 기조가 앞으로 더 심화되지 않을까?

A: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은 아마 파시즘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회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젊은 친구들, 저보다 한 10살씩 어린 20대 친구들, 남자애들 만나보면 와, 생각이 상상 이상으로 좀 위험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고. (...) 제 미래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그냥 졸업을 하고 아마 계속, 저임금 노동자로 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건설노동자로 일하지 않을까, 계획은 그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 사회적으로 저 같은 사람이 계속 소수가 되어가고 있고, 고립되고 있다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 자기는 어차피 가장 저임금 노동자로 살면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혐오를 한다거나 (...) 긍정적으로 한국사회가 흘러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B: 저는 사회적 약자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받아들여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회는 반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 제가 느끼기에는 사회가 30년 전 뒤로 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점점 더 소통이 불가능한 사회가 되고 있구나, 라는 걸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파시즘적 사회가 될 수 있겠구나, (..) 개인적으로는 연구기관 같은 데에 들어가서 연구원으로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하는데. 아마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공무원 일 하면서 여생을 보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내가 150만 원 받고 그때 버틴다고 해도 그 이후에 나에게 제대로 된 미래가 있느냐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인문학적 토대, 그 인문학으로 먹고살 수 있는 토대가 되어야지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D: 저는 오염수 방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사실 그런 걸 너무 과학자들, 혹은 어떤 테크니션이나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많이 불편했어요. 어떤 시민의 목소리를 듣거나 이게 마땅한가, 혹은 해도 되는가에 있어서 과학이 다 설명하거나 타당하다고 (...) 모든 게 다 양극화 같거든요. 누구는 사상적으로 노동이나 여성, 페미니즘 문제나 그런 거에 대해서 (...) 확실히 옛날보다는 지금 그런 게 더 심한 것 같거든요. (...) 대전보다도 더 작은 도시들도 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수가 절대적으로 많아지고 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면 좋겠다, 라고 바람이 있는데. 저는 좀 비관적인 사람이라서 완전 반대로 갈 것 같아요. (...) 저는 시를 쓰고 싶거든요. 공부는 소설을 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창작에 있어서 시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는데. 시를 쓰면서 계속 차도 팔고 나중에는 차와 인문학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

라. 선호미래 실현을 위한 현재의 전략들

차마 꿈꿀수도 없는 선호미래, 그리고 공동의 운명으로 닥쳐올 것이 거의 분명한 암울한 가능미래의 사이에서, 이들이 선택한 전략은 함께 뭉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 응답한 4인의 연구자는 ‘인문학 협동조합’을 만들어 서로 의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협동조합이 이들의 무엇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일까? 장기적으로 이들은 ‘지속 가능한’ 연구자의 삶을 꿈꾸며 대안적인 공간을 찾아 조직화 했다. 소박하게는 이는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조금 더 원대하게는 학문적 ‘동료’를 찾고, 수익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이었다. 지방에 있음으로 하여 이들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던 문제들, 즉, 동료의 부재와 학문적 인프라의 부재에 맞서, 이들은 직접 동료와 인프라를 찾아 나서기로 했던 것이다.

C: 처음에 협동조합을 만들자는 생각을 제가 한 건 아니고, 저도 중간에, 저는 현실적인 이유로 이 조합을 만드는 데 참여를 했어요. 제가 학과에서 연구공간을 확보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것 때문에 도서관하고 여러 군데를 옮겨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인문사회과학 연구자들이 모두 동일하시겠지만. 저희는 노트북 하나만 가지고 가서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책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B: 이게 일종의 저한테는 생활공동체처럼 되었고, 저도 계속 공부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리고’ 생활을 하면서 대학원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저도 이것저것 배우고 듣고 보고 하면서 시작을 했고. 저는 사회과학 공부라든지 인문학 공부는 절대 혼자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 대화하고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배워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전에는 그런 풀이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대전이 괜찮다, 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 이 나이 대에 비슷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생활하고 관심사에 대해서 나누고, 토론하고 이럴 수 있는 공간, 사람들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4 정책적 의제

이상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지방대학 인문대생들의 담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이들은 경제적인 보상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겠다는 열정으로 대학원에 왔다. 이 열정은 학창시절로부터 이어진 지적 호기심이기도 했고, 사회문제에 대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도 했다.

둘째, “지방”에 있다는 것과 “대학원생”이라고 하는 정체성 사이에는 몇 가지 상충이 존재하였다. 먼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동료 커뮤니티가 크지 않은 비수도권지역의 특성상, 장기간에 걸친 상호 교육이 중요한 인문계 공부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가뜰이나 불투명한 자신들의 미래가 “지방대생”이라는 정체성으로 인해 더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셋째, 이들은 교수 임용 등 대학원생들이 “동경”할만한 미래를 실질적으로 꿈꾸기 보다는, 자족하며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정도의 소박하고 지속가능한 연구자로서의 인생을 지향하고 있었다. 이는 선호미래와 가능미래가 타협을 이룬 지점으로 보이며, 이조차도 쉽게 공언하기 어려운 미래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주관적 가능미래상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엿보인다.

넷째, 이러한 현재와 미래의 난점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함께 의의하고 학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몇몇은 대전시의 인문학 대학원생들이 함께 연구실 공간을 임대하고 학술활동을 이어나가는 협동조합을 만들어 꾸려나가고 있기도 했고, 실제로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머징 시티즌의 능동성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인문대 생들은 자신들을 위한 국가의 정책이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자신들이 그러한 것을 요구할 자격이 차마 없다고 생각하는 양가적인 감정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한 표현을 빌리자면, ‘누가 칼들고 협박한 것도 아닌데’ 이 길을 선택한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바랄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은 ‘월 100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다’고 말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꼭 필요한 일을 하지 못할 정도의 국가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정작 미래를 위해 돈이 쓰이는 데에는 인색하기 때문에, 그 수혜자에 자신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D: 150만 원 정도면 (전업으로 공부에 몰두가) 가능할 것 같은데. 분위기가 대학도 부실 대학이라곤 하지만 학교가 많이 없어지고 있고 다 통합되고 있고, 특히 너무 구태의연한 말이긴 하지만 취업사관학교,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취업률이 높고, 마찬가지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대학이라고 하면 마치 고등학교가, 중학교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플래카드에 걸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A: 독일을 보면 학부생들도 국가 장학금을 받잖아요. 일을 하면 한 달에 많이는 아니지만 10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거 정책 하시는 분들의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한민국이 예산이 없는 나라도 아니고.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이라고 맨날 입으로는 그렇게 떠드는데.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 결국엔 교육에 투자하는 건 세상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방법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인색하지 않나 (...) 대부분 이공계라든가 이런 데 사업에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 인문사회학이라는, 결국에는 단기적으로는 효용이 없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사람이 사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데에서 좀 투자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저

는 한달에 100만 원만 돼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 정도만 돼도 일과 병행을 하지 않고 전업으로 공부만 할 수 있는 그런 지식 노동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C: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가 석사 마지막 학기 정도 할 때, 대학 인문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대학원생 학부 3~4학년하고 석사과정생 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 생활비 형식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했었어요. 학부 3~4학년들이 대학원에 진학한다고 서약서 같은 걸 쓰면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부 때부터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고, 실제로 그 사업을 하면서 대학원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게 지급하는 게 한 달에 60만원인가 그랬는데. 그 정도만 지급해도 대학원생들이 실제로 늘어나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는 4년인가 5년인가 이렇게 짧게 지속됐던 사업이라서. (...) 인문학에서 전승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마치 문화혁명 이후에 중국이 인문학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듯이.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그냥 취미로 공부하고 싶은 애들이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 커뮤니티에서 많이 쓰는 표현으로 누가 칼 들고 협박 했냐, 그런 거죠. 인문학은 옛날부터 돈이 많은 유한 계급이 공부하는 학문이었고. 그거는 결국 자기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져야지. 이런 시각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5 시사점

이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를 고민하고 있었으며, 소액의 정책지원만으로도 자신들의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다. 대학원생들은 아무리 자신이 원해서 들어선 길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영위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 대한 자괴감을 호소했다. 즉, 누군가 강요한 길도 아니었고, 자신들이 사회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에 목소리 높여 주장할 수는 없지만, 인문학 연구를 국가가 완전히 포기할 생각이 아니라면, 최소한의 지원은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이는 생산성과 효율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투자”의 개념으로 수행되어 온 국가 연구개발 정책이, “사회적 의무”의 개념을 바탕으로 수행

되어야 하는 측면 또한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책 수립을 넘어선 다양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인문계 대학원생들의 경우, 이공계에 비해서는 열악하지만, 한국연구재단의 다양한 장학지원 및 연구지원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인터뷰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정책이 존재하는 것과 이들이 체감 사이의 간극이 컸다. 이는 다양한 이유들로부터 기인한다. 먼저, 자신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스스로를 인식하기까지의 장벽이 존재한다.

대학원생들의 경우 정책 효율성의 문제가 엿보인다. 상당수의 국가적 지원은 이미 궤도에 다다른 소수의 연구자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을 띄고 있는데, 이 경우 대학원생들은 이로부터 발생하는 낙수효과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대학원생들을 집중 대상으로 하는 정책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올해 한국연구재단에서 수여하기 시작한 박사과정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술연구교수B형 트랙과 같은 프로그램이 그 예시가 될 수 있겠다.

제4절 대안학교 교사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왜 이들을 만나야 하는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한 뒤, 2018년 서울시교육청 각종학교로 개교한 오디세이 학교는 한국형 애프터스쿨레로 불린다. 고등학교 1학년 학력을 인정하는 이 학교는 3개의 민간교육기관과 2개의 공교육팀이 운영한다. 이 학교에 들어오려면 중학교 3년 과정을 마쳐야 한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1년을 보낸 학생들은 다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학교로 돌아간다. 갭이어(gap year)처럼 1년을 이곳에서 생활하는 것이다. 이 학교는 오디세이 민들레, 오디세이 꿈틀, 오디세이 하자, 오디세이 혁신파크, 오디세이 이룸 등 총 5개의 분산된 학교 캠퍼스가 있다. 기관별 교육과정은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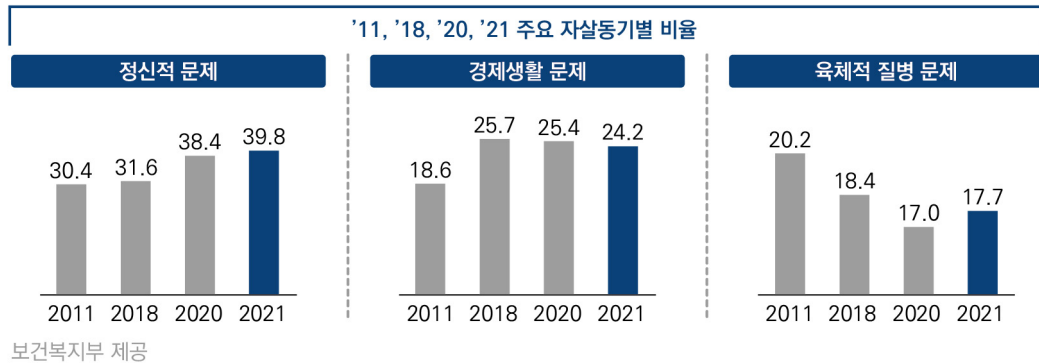
[그림 4-1] 5개 오디세이 학교 위치와 특성

연구진이 만난 김형신 교사는 오디세이 이름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그는 오랫동안 수학을 가르쳤는데, 이곳에서 김형신은 수학 외에도 다양한 교육 활동에 참여한다. ‘디자인 된 사회’에서 살아가는 나와 우리의 모습을 깨닫는 ‘세상과 나’라는 수업, 학생들이 스스로 의제를 던지고 결정하는 자치회의 프로젝트, 이야기로 풀어가는 수학 수업, 우리사회 다양한 소수와 약자의 삶을 체험해보는 토론 역할극 등에서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한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학생들에게 학교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다.

오디세이에 다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야말로 연구진이 찾고 분석하려는 이머징 시티즌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일지 모른다. 이들은 곧 성인 시민으로 자라날 청소년이고 이들의 생각과 행동에 우리사회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청소년들은 삶이 즐겁지 않다. 이들의 정신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이 그 증거다. 사실 한국인의 정신건강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매우 좋지 않다. 한국은 인구 10만 명 23.6명이 자살하는데, 이는 2003년 이후 줄곧 OECD 국가 중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노인들의 정신건강은 매우 위험한 수준이다. 한국의 노인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46.6명으로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다(2020년 기준). OECD 평균은 17.2명이다.

최근에 한국의 자살률 증가 현상에서 주목해야 할 변화는 청년들의 자살률이다. 통계청의 2021년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10~30대의 사망원인에서 자살은 1위를 차지했다. 특히 10대와 20대의 자살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인의 자살 이유는 정신적 문제가 1위, 경제생활 문제가 2위, 육체적 질환 문제는 3위다. 주목할 것은 정신적 문제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그림 4-2 참조).



[그림 4-2] 2011~2021년 한국인의 자살 동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은 2017~2021년까지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우울증 환자는 5년 사이 35% 증가했고, 불안장애를 호소하는 환자들은 32% 증가했다. 특히, 20대 우울증 환자수는 127% 상승해 나이별로 최고의 증가율을 나타냈고, 그 뒤를 이어 10대 환자는 90% 증가했다. 불안장애의 경우도 20대 환자가 86% 증가해 최고를 기록했고, 10대는 78% 증가해 그 뒤를 이었다. 20대와 10대의 정신건강이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우울하고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오늘의 청소년들. 이들에게 학교와 교육은 어떤 의미일까. 학교는 이들에게 불안하고 걱정스런 삶을 견뎌낼 역량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 더 나아가 이들이 장차 성인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있을까. 모든 교육과정이 ‘기승전-입시’로 귀결되는 사회에서 학생들은 어떤 꿈을 가질 수 있을까. 오디세이 학교의 김형신 교사를 만나 이런 궁금증을 물어보았다. 그와 연구진이 나눈 대화는 물론 그가 우리에게 발제해준 강의 등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가감 없이 인용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분석해 보았다.

2 대안교육과 새로운 시민의 등장

삶의 조건에 따라 바뀌는 능력

우울이나 특히 요즘은 공황이 많아요.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 과호흡이 온다거나, 요즘에 그런 친구가 학교에 많습시다. 그런 친구들은 교류할 기회가 없고 그런 면에서는 제가 이 친구들을 한 학급에서 데리고 1년을 지내려면 필수적으로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너무 필요하겠더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희 수업 중에 ‘세상과 나’라는 수업이 있어요. ‘세상과 나’라는 제목 자체가 내가 있고 세상이 있고 이렇게 뭔가 분절된 것이 아니고, 수업의 목표는 디자인된 사회에서 살아가는 나나 우리의 모습을 깨닫는 데 있어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게 초등학생처럼 선행을 베푼다는 관점이 아니라, 사회를 다르게 디자인해 나갈 때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인권, 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체득하게끔 하려는 수업이고요.

예를 들면, 현장체험학습으로 ‘어둠 속의 대화’라는 일종의 전시를 보러가는 것이 있어요. 이곳에 들어가면 진짜 어두워요. 빛이 거의 나오지 않아 눈을 똑바로 떠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 곳에 학생이 대여섯 명씩 세 그룹으로 나뉘서 들어가거든요. 교사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로드 마스터’라는 사람이 저희를 만나 그 안에서 100분 동안 인도합니다. 로드 마스터는 저희를 데려가는데 무리에서 누군가가 뒤떨어지면 금방 알아채요.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물건이 떨어지면 얼른 주워서 갖다 놔요. 학생들은 저 사람이 무슨 야간 투시경을 끼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가서 로드 마스터는 시각장애 인이다, 이렇게 자신을 밝힙니다. 이 수업을 통해 **다르게 디자인된 사회에 들어갔을 때 능력이 어떻게 뒤바뀌는지를** 말해보고 싶었어요. 밝은 공간에 있을 때 그 사람의 능력과 어둠의 공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능력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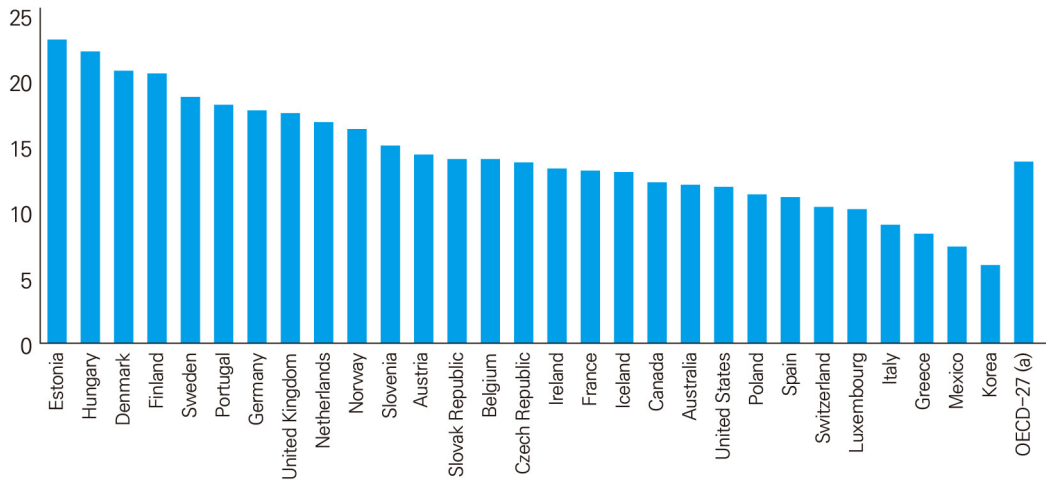
전원합의의 과정에서 배우기

프로젝트 수업과 자치회의 수업은 학생들 만족도가 제일 높은 수업이고요. 자치회의, 동그랗게 앉아서 하는 회의를 매주 두 시간 하고, 프로젝트 수업은 매주 네 시간합니다. 자율성을 발휘하도록 설계해놓은 수업입니다. 학생들의 합리적 자율성이 언제 많이 길러지냐면 공적인 장에서 구성원들과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서입니다. 그것이 자치회의에서 발현될 수 있고요.

자치회의 규칙 다섯 개가 있어요. 첫째 모두가 동의하는 안건을 상정한다. 규칙 2번은 비폭력 대화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대화해야 합니다. 내가 왜 이 안건을 내는가, 불편해서? 무엇이든 충분히 안건을 낼 수 있어요. 규칙 3번은 누구나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고, 4번은 전원합의를 한다. 저게 저희에게 어려운 지점입니다. 전원합의라는 게 매우 독특해서 무조건 발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즉시 실천한다. 처음 한두 번만 길잡이 교사가 전체 학급 규칙을 정하거나 샘플로 회의 진행을 보여주고 나머지는 전부 학생들이 진행합니다.

자기가 공동체에 있는 성인들과 동반자로 인식이 될 때 능력이 향상된다는 그런 연구결과들이 있는데, 학교 변화에서 교육과정과 교사들이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다수인 학생들이 사실은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관찰입니다. 학기 말이 될수록 학생들이 구조적인 제약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원합의라는 걸 보면서 기존에 절대 내가 귀 한번 기울이지 않았을 내용에 무게를 똑같이 실어서 발언한다는 것이 실은 학생에게 너무 어려운 거를 알게 되요. 학교에서 공부를 잘 안 하는 친구가 발언하면 보통은 무시하려고 하고 진지하게 다뤄보려고 하지 않지요. 그런 얘기를 왜 다 계속 듣고 있어야 되냐고 학생들이 교사에게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원합의를 지속하다보면 그런 어려움이 점차 해결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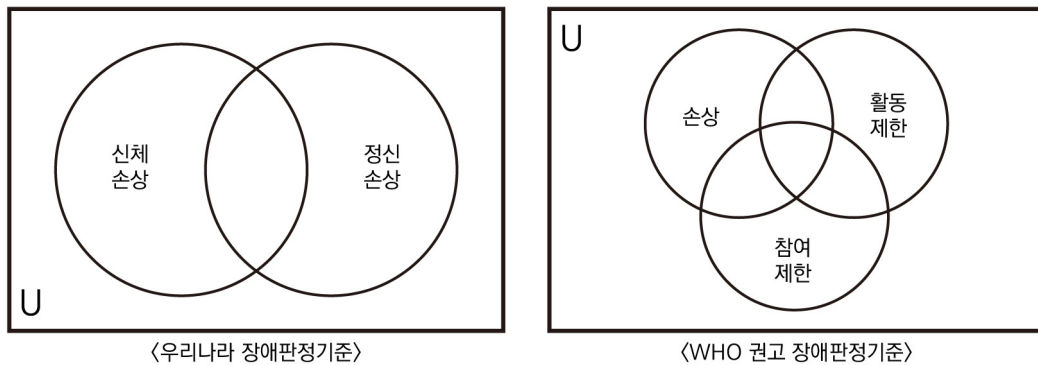
[그림 4-3] OECD 국가별 장애출현율

‘나는 멀쩡한가’를 다루는 수학 수업

(그림 4-3은) OECD 장애출현율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가 맨 오른쪽 끝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맨 오른쪽 두 번째입니다. 맨 오른쪽은 평균치입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일반적인 나라보다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요. 이 그래프를 수학 시간에 활용합니다. 장애출현율이라는 개념을 공부하고, 왜 우리는 장애인이 적은지 추측해 보게 하는데요. [그림4-4]의 왼쪽에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장애 판정 기준입니다. 신체 손상, 정신손상. 오른쪽은 WHO가 권고하는 기준이고요. 저것은 저렇게 집합으로 그려져 있지 않는데 벤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집합의 원리, 정의를 저렇게 수학 수업으로 가져오는 경험을 하고 더 나아가 상황극을 해서 몰입시킵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 2045년 즈음 나이가 들어서 사회에서 중요한 장애판정위원회 위원이 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자신의 역할은 논란이 되는 장애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면증. 기면증은 갑자기 잠드는 거고요. 뚜렛은 틱장애가 좀 더 심한 거예요. 자기가 갑자기 있다가 소리를 계속, 딸꾹질을 낸다거나 몸으로 크게 움직인다거나 하는 행동이죠. 저 수업할 때 학생들이 뚜렛은 현재 장애가 아니지만, 장애로 포함했습니다. 알코올 의존, 심각한 여드름, 전두 탈모, 전신 탈모 등은 실제 복지 선진국 중에는 장애로 인정합니다.

장애라고 하는 개념을 손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회 참여, 이런 개념으로 볼 때는 충분히 장애 개념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학생들에게 저것을 넣는다면 세금을 투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지요. 학생들은 부당한 차별, 삶의 어려움을 잘 감지하려면 장애의 기준이 단순히 손상에만 두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의사들이 손상의 정도로 장애를 판정하거든요. 다른 선진국들은 사회복지사나 다양한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판단합니다.



[그림 4-4] 한국의 장애판정기준과 WHO 권고 장애판정기준

수학여행과 점심시간

매일 아침 ‘하루 열기’라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처음에는 비폭력 대화 연습을 하고요. 천천히 충분히 자기표현을 하는 연습을 다 하고 나면 그다음에 주제를 정해서 해요. 예를 들어 어떨 때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 가져와서, 자기표현을 해도 안전하다는,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게 이 안에 들어 있는데. 비폭력 대화를 하면 심리적 안정감이, 점점 편해지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내가 평가받거나 하지 않겠다라는 안전한 느낌이 들어요.

5월에 여행주간이 일주일 여행이 있습니다. 그때는 한 주 수업을 다 쉬고 수학여행 가듯이 친구들과 같이 여행을 갑니다. 갔다 와서 항상 모든 수업이 피드백, 성찰, 자기 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데. 특히 여행은 정리해서 계속 공적인 자리에서 계속 발표하는 기회를 얻습니다.

점심 시간은 캠퍼스별로 다른데요. 한 캠퍼스는 서울의 정독도서관에 있어요. 정독도서관 식당 밥을 먹습니다. 학교 안에서만 있을 때 학생들이 보이는 활동이랑 사회에 있을 때 행동은 달라요. 막 뛰어다니면서 욕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학교에서 매우 흔하거든요. 자기네들끼리만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복도를 오가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이니까 교류하게 되는 거죠. 같이 사는 거죠. 밥 먹으면서 막 욕하고 그럴 수 없게 됩니다.

1년을 마치면 우리가 공식적인 용어로는 수탁해지라고 하거든요. 위탁 교육이 끝나니까. 저희는 수료하고 복교한다, 이렇게 편하게 말해요. 10월, 11월쯤 되면 학생들이 많이 불안해하죠. 왜냐면 학교에 돌아갔을 때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거라는 걸 뻔히 아니까. 그런데 저희가 해주는 말은 너와 뜻을 같이하는 동료든 선생님이든 어떤 사람들과 만나서 우리가 만약에 연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룹을 찾아보라고 많이 말하죠. 학생들이 ADHD나 우울증약을 복용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여기서는 그 약이 대부분 줄어들어 드는, 복용 안 하는 상태로 끝납니다.

여기 과정이 끝나면 학부모들은 보통 두 가지 걱정을 많이 하세요. 공부는 따라갈까, 친구 관계는 잘 맺을까. 중간에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돌아가면 친구 사귀는 것은 훨씬 더 잘하고요. 왜냐면 이렇게 대화 연습을 많이 했고 관계를 진하게 맺어보고 내가 평생 말을 안 해 볼 애랑 계속 어쨌든 지내보잖아요. 공부는, 그건 중학교 때 자기가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달려 있는데. 저희가 계속 이렇게 생활한 바탕으로, 쓰기도 되게 많이 하는데. 가서 수행평가 보면 읽기, 쓰기, 말하기, 국어나 사회나 자기 생각을 말해야 하는, 문학 해석이나 비문학 독해나 사회시간, 철학 시간 이런 것에서는 압도적으로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수학이랑 과학인데. 제가 수학교사라 관심 있게 보거든요. 근데 수업방식이 너무 다르니까. 예를 들어 같이 공부하면서 매우 성취감을 많이 느끼는 기록을, 제가 때 시간 기록을 받거든요. 근데 학교 가면 자는 거예요, 애들이. 가자마자.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 한 번의 큰 전환을 맞이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모님들이 선호하시는 이런 높은 그런 대학들도 가는 사례들도 계속 나오고. 대학 진학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들 공부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좀 동력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1년의 쉼에서 새로운 시민의 탄생

오디세이 학교의 시작은 인생학교라고, 1년의 쉼을 주자는 목표로 시작했고. 그러다보니 대안학교에서도 사실은 그거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1년의 쉼을 주자. 그 와중에도 어떤 대안기관에서는 시민성을 기르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공교육 교사로만 모여진 팀의 정체성은 이 친구들이 돌아가서 어쨌든 공부도 해야 되고, 살면서 이 공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부를 해야 할 텐데. 다른 방식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추구해보고 싶은 거죠. 공교육에서 하는 지금의 학교의 학습문화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안기관들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공부를 많이 시키냐, 예를 들면. 그리고 저희는 어쨌든 교과역량을 가진 교사들만 모여 있으니까. 저희가 국어, 영어, 수학 선생님이 저희 캠퍼스에 같이 세 분이 계시거든요. 독자적으로 수업을 진행해도, 우리는 그걸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대안기관에는 물론 자격증이 있지만 그분들은 그런 트레이닝을 덜 받은 사람들이어서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강남, 서초, 강동, 송파에 근무하면서. 혁신파크라고 은평구에서도 근무했었거든요. 종로구에서도 근무했고. 강남, 서초에서 4년째 근무하는데. 학생들이 너무 다른 거죠. 부모도 성향이 너무 다르고. 시민성 교육을 점점 더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되는 것이 강남 쪽 친구들이 가진 생각은 덜 민주적이고 우리가 하는 민주 시민성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은평구나 종로에 왔을 때는 사회현안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도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공정에 대한 이슈에서 능력주의 이야기를 다루었는데 강남에 있는 친구들은 복지비용에 불필요하게 돈이 많이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그 친구의 생각인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지 아니면 기성세대, 가정에서 그걸 듣고 하는지. 예를 들면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 이야기를 하면, 대치동 키즈들은 이걸 공산주의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학생들의 자치회의가 대립적인 관점으로 전개되면 학생들이 학교 룰이 왜 이래요?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할 때, 교사들은 당황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변을 해야할지 연습한 적이 없어요. 교사 교육과정에 그게 들어있지 않거든요. 연습한 적도 없고. 자

기가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항상 어떤 방식으로 끝나냐면 당연히 안 되지하는 학생들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원래 제도가 이래,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근데 그것이 공간이 트여있고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 많이 일어나는 공간이 되면 다른 얘기가 나오거든요.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많은 연구자가 말하지만 제도상, 절차상의 민주주의는 우리나라가 잘 되어 있지만, 일상의 민주주의라고 하거나 삶의 양식으로써 민주주의라고 미국의 교육학자 존 듀이가 말한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관계에서의 민주주의는 우리사회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아요. 민주시민이 되는 일은 실제 관계를 맺으면서 시민이 되어가는 것이지, 이런 나라에서 태어난다고 민주시민이 되는 건 아닙니다.

3 이들이 말하는 것

오디세이학교 김형신 교사의 이야기는 연구진에게 21세기에 학교는 학생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요약하면 나와 공동체를 위해서 생각하는 방법, 목소리가 없거나 작더라도 사회의 다양한 소수약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방법, 나의 생각을 지속해서 이야기하고 같은 뜻을 품은 친구들을 발견하는 방법, 다양한 방식으로 배우고 배움을 지속하는 방법, 어른들과도 동등한 시민으로 의견을 나누는 방법 등을 학생들은 배우고 있었다.

기승전-입시로 귀결되는 초중고 학창 시절에 어쩌면 가장 예민하고 세상에 호기심이 많을 때에 1년 동안 새로운 배움을 제공하는 학교가 있다는 것은 다행스럽다. 힘들면 쉬어가듯 공부도 때론 쉬면서 왜 공부해야 하는지, 어떤 공부가 나에게, 사회에 필요한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은 매우 중요할 것 같다.

청년들은 미래에 대해 전망하는 것을 불편해한다. 과거의 경험에서 미래를 생각해보고 계획한다는 것이 무용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다. 계획한대로 되지 않는 것이 미래임에도 이들은 지레 포기하는 것이다. 더 문제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계획할 기회조차 없다는 점이다. 이들은 주어진 과제와 숙제를 해내야 하지 스스로 과제를 만들어 실행해본

기회 또는 기억이 없다. 자연스럽게 미래를 기획할 수 있는 역량은 형성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오디세이 학교의 실험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스스로 수학 여행의 주제를 제기하고, 여행에서 만날 사람들을 스스로 찾아낸다. 이런 활동을 정리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애초에 계획대로 되었는지, 그렇지 않았다면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한다. 비록 작은 기회이고 실천이지만 중요한 경험임에 틀림없다. 이런 기회가 쌓이면 스스로 미래를 기획하고 실현하는 역량은 향상된다.

1년의 쉼을 청소년뿐 아니라 청년, 기성세대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부여할 수 있을까. 과로사회로 지칭되는 한국사회에서 1년의 쉼은 노동의 의미, 내 삶의 목표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쉬었다 가는 것이 먼길을 가는데 필요하듯, 가끔씩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쉼을 주는 제도가 필요해 보인다. 쉴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회는 더 먼 길을 가려는 사회 구성원들을 돌보는 사회다.

제5장

미래 시민성을 묻는 시민들

제1절 소년범

제2절 탈북여성 및 제3국 출생 자녀

제3절 성소수자

제 1 절

소년법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위기 청소년과 위기 사회

소년법의 이야기에 처음 떠올린 키워드는 범죄자였다. 일반 사람들이 ‘배제’할만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자리한 위치와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거꾸로 한국사회의 질서를 드러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탐색 과정에서 ‘소년법’에 닿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범죄라는 테마에 더해 한국사회가 ‘청소년’을 어떤 식으로 배제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소년법의 이야기는 2021년 작업과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연결되기도 한다.

소년법 이야기는 김광민 변호사가 해주었다. 김광민의 책 『나는 왜 소년법을 변호했을까』(2023)는 제목 자체에서 드러나듯 소년법에 대한 한국사회의 주류적 시각을 전복하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김광민 변호사와 나는 세미나 내용을 구술 기록의 형태로 정리했다. 그가 말하는 형식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구술 내용이 일관된 흐름으로 읽힐 수 있도록 연구자가 일부 내용을 생략, 수정, 재배치했다. 중간의 소제목은 발표자의 구술 내용을 참고해 연구자가 붙인 것이다.

형법 9조와 형법 305조, 청소년을 보는 상반된 시각

먼저 형법 9조랑 형법 305조를 소개하고 싶어요. 형법 9조는 14세가 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그 유명한 형사미성년자 조항이에요. 매년 형사미성년자 낮춰야 된다고 할 때마다 이슈가 되죠. 305조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라고 해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누군가와 성관계를 가졌을 때 그 성관계가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강간죄로 처벌하겠다는 규정이고요.

이게 2020년을 기준으로 개정됐는데요. 2항이 추가됐습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19세 이상의 자는 처벌한다.” 제가 그래도 명색이 변호

사인데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진 조문은 본 적이 없어요. 13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는 범죄의 대상은 똑같아요. 같은 범죄 대상에 대해서 범죄를 가한 사람이 19세 이상이나 여부에 따라 처벌이 되고 안 돼요.

305조나 9조는 범죄 대상의 연령에 따라서 범죄 성립 여부를 가리는 건데 이게 개정이 되면서 범인의 연령도 범죄 성립 여부를 가리는 요인이 됐어요. 그 유명한 N번방 사건으로 개정된 건데 그때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높여야 된다. 13세가 아니라 16세까지 높여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었고, 이런 여론에 따라서 2항이 도입된 건데요. 2항이 도입되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포섭되는 연령대가 엄청 많아지잖아요. 많아진 연령대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처벌하자고 하니 이게 부담이 되니까 이상한 조항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청소년을 바라보는 전형적인 태도예요. 성인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성인의 시각으로 재단해 버리는 거죠.

“14세 미만인 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사미성년자 조항은 14살이 되지 않는 자는 범죄에 대한 책임능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범죄자를 처벌하는 전제는 그가 책임능력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수형능력이 있냐 없냐도 고려할 수 있는데 핵심은 내가 한 범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냐.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면 그 친구를 처벌하는 건 의미가 없죠. 처벌할 수가 없죠. 이것을 한국 사회는 14세 미만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14세 미만인 친구들은 책임 능력이 없는 애기들이라는 거예요. 305조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냐 없냐입니다. 13세 미만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도 처벌하는 것은 13세 미만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네가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네 선택에 의한 게 아니라 강간이야.” 이런 의미예요.

이 두 조항을 같이 보면 형사미성년자 얘기할 때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된다고 해요. “야, 무슨 14세야? 요즘 애들이 어떤데. 야, 요즘 애들은 10살, 11살만 돼도 성인 뺄쳐.”하면서 낮춰야 된다고 얘기하죠. 더 어린 친구들도 책임능력이 있다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온전한 인격체로 대할 수 있는 나이를 책임능력 부분에서는 더 낮춰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동시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을 얘기할 때는 13세, 14세, 15세를 꼬맹이로 보는 겁니다. “야, 네가 무슨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어? 너는 애기야.”라고 보는 거거든요.

두 조항에 대한 한국 사회의 시각이 완전히 상반되죠. 처벌하겠다고 할 때는 성인 취급하고, 그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할 때는 애기 취급을 하는. 이 두 조문에서 드러나는 한국 사회의 태도가 한국사회가 청소년 비행, 청소년 범죄를 바라보는 태도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모순이 청소년 비행에 대한 정책이든 법제도든 모든 결정에서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쳐요. 그냥 무조건 처벌하고 싶은 거예요,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청소년들은 무조건 성관계에 노출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2항이 이런 식으로 들어온 이유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몇 살로 해야 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회적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도 안 한 거죠. 여기에 전문가는 아니니까 몇 세가 맞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예컨대 13세가 너무 낮아, 그래서 이걸 16세로 올리고 싶어. 그러면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야죠. 연구가 됐든 사회적인 논의가 됐든 장기적으로 그런 걸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는 게 아니라 N번방 사건이 터지고 나서 사회적 여론이 들끓는 속에서 입법자들이 부화뇌동을 해가지고 “야 그래, 그러면 16세로 올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16세로 올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야, 그럼 이렇게 하자. 범죄자의 나이를 조정하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와 버린 겁니다. 법률 개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특히나 청소년과 관련된 법률 개정에 대한 것은. 형사미성년자도 똑같아요. 형사미성년자 얘기를 하면 언제나 1950년도에 만들어진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제도가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오고 있고 1950년대, 1960년대 청소년이랑 지금 우리 청소년은 차원이 다르고 요즘 애들은 덩치도 크고 머리도 좋아졌고 그래서 범죄능력이 뛰어나고 어찌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사실은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과연 몇 살 정도 돼야 그 친구를 온전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주느냐를 생각해 보면 1950-60년대는 사실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공장 취업해서 일하고 돈 벌고. 이러한 현상이 옳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노동자든 사회구성체 시민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20대 초반만 돼도 결혼해서 아이 낳고 가정 꾸리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애 취급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인이나 아니냐는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 사람에게 어떠한 권한을 부여해 주느냐, 그 사람을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로 판단해야 하는데 한편으로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애 취급하는 연령을 높여 왔어요. 그러니까 20대 중반이 돼도

애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이면에 그들에게 온전한 권한을 주기 싫다는 태도가 있는 거예요.

연령대를 나누는 용어가 상당히 많이 있죠. 아동, 유아, 청소년, 미성년자, 청년, 장년, 노년 많이 있잖아요. 수많은 용어 중에 유독 독특한 용어가 청소년이에요. 다른 용어는 그 용어에 의해서 권리가 박탈되지 않아요.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권리가 박탈되지 않아요. 청년의 권리와 노년의 권리가 다르지 않아요. 근데 **청소년, 미성년자라고 하는 순간 우리 사회에서 법적 권한이 대폭 축소돼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이 상당히 권력적인 단어**라고 생각하거든요. 민법상 성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20대 중반까지 애 취급을 한다고 하면 그 친구는 민법상으로는 성인이더라도 온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우리 사회는 그들을 정의하고 그들을 규정지으면서 맨날 얘기할 때는 그들이 스스로 본인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규정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이러한 모순점들이 청소년, 특히 청소년 비행에 대한 시각에는 아주 공고하게 깔려 있고 우리 사회에서 그것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청소년 범죄의 추이

우리 사회가 청소년 비행, 청소년 범죄 얘기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나날이 잔혹해진다”, “나날이 저연령화된다”는 거잖아요. 대검찰청에서 나온 범죄백서를 보면 여러 가지 그래프를 놓고 보면 청소년 범죄율이랑 성인 범죄율의 움직임이 거의 비슷해요. 청소년 범죄율이 증가한 해에는 성인 범죄율도 늘어나고요, 준 해는 줄었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 사회의 어떤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 범죄를 얘기할 때 청소년만 갖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저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 범죄율이 늘어났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지만 청소년 범죄율이 늘어났더라도 성인 범죄율도 같이 늘어났다면 이건 청소년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죠. 요즘 청소년들이 독특해서 요즘 청소년들이 특히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범죄사회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한국의 언론들은 범죄를 바라볼 때 성인 범죄율은 거의 보지 않아요. 뉴스 보실 때 “요즘 성인 범죄율이 늘었습니다, 줄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없으시잖아요. 청소년 범죄율이 늘어나면 “요즘 청소년들이~” 이렇게 나와요. 실제 그래프 상으로는

그렇게 유의미한 증가는 없어요. 자료 집계 방식이 다른 2018년도의 왜곡을 빼고 보면 완만하게 우하향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다음은 ‘청소년 범죄는 잔혹해졌는가?’라는 부분이에요. 강력범죄가 ‘흉악’(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하고 ‘폭력’으로 최근 10년간 흉악범죄는 비율만 놓고 보면 꽤 올랐고 폭력 범죄는 약간 감소했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흉악범죄가 꽤 올랐네? 청소년 애들이 흉악해졌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소년 강력범죄(흉악) 죄명별 현황’이라는 표를 한번 살펴볼게요. 살인, 강도, 방화 이 부분들이 전부 다 감소했어요. 근데 성폭력이 드라마틱하게 증가했어요. 흉악이든 폭력이든 청소년 강력범죄는 전부 다 우하향인데 유독 **청소년 강력범죄 중에 성폭력 범죄가 드라마틱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비율 상승 추이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성인 범죄 중에 성폭력 범죄도 똑같이 증가했어요.** 제가 현장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것은 성범죄가 확실히 증가했는데 그와 동시에 성범죄로 포섭되는 범위도 증가했어요. 예전에는 ‘뭐 이 정도는.’ 이랬던 것들이 요즘은 전부 다 성범죄로.

연령층별 동향을 보면 10~13세 같은 경우는 범죄율이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2017년까지는 통계가 잡히는데 아예 없는 게 실제로 없어서 없는 건지 통계에 안 잡히는 건지 애매하니까 이제 2018년부터 애를 빼버린 겁니다. 애를 빼버리다 보니까 2018년도부터는 범죄율 통계가 2018년 이전과는 상당히 달라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죠. 하여튼 청소년 범죄 중에 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르는 연령대는 16~17세입니다. 그다음이 14~15세고, 그다음에 18세입니다. 이 비율이 10년 동안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2012년도와 2021년도를 비교해 보면 14~15세가 33.8%에서 37.7%로 늘어났으니까 한 4% 정도 늘어났고, 16~17세가 45.8에서 40.2로 갔으니까 한 5.5% 정도 이동은 했는데, 이 정도 이동을 가지고 청소년들의 범죄가 점점 저연령화되고 있다는 건 심각한 비약이에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중요한 연령은 10~13세예요. 근데 10~13세는 일단 통계도 제대로 안 잡힐뿐더러 통계로 잡았던 2017년 이전 내용을 보면 거의 없어요. 6년 정도 현장에서 청소년 활동을 했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인식 못 하는 정도 수준이고, 통계치로도 안 잡히고, 심지어 10~13세는 통계가 아예 없고. 그런데 언론에 나와서 “한국 청소년들의 범죄가 저연령화되고 있고 그렇기 때

문에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춰야 된다. 10~13세 애들도 처벌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그 수많은 전문가들은 도대체 뭘 근거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청소년 문제를 항상 얘기할 때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범죄가 저연령화됐다는 거, 이젠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된다는 논의로 이어지죠. 그리고 범죄가 증가한다는 거, 흉악해진다는 거. 이젠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논리로 이어지죠. 근데 최소한 통계 수치상으로는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얘기들은 전부 다 한 가지로 통하는데 우리 사회가 청소년에 대한 어떠한 환상과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청소년은 착해야 되고 어른을 공경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이런 게 있고, 여기서 벗어나는 친구들, **한국 사회가 정의해 놓은 청소년의 모습에서부터 벗어나는 친구들은 그 순간 그냥 악마화시켜 버려요.** 저는 이것을 청소년 혐오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거의 포비아 수준이다. 성인들이 정해놓은 청소년의 잣대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 사회는 그들을 그냥 혐오해 버리고 악마화해 버리고 개들을 어떻게 하면 처벌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서 격리시켜 버릴까. 이러면서—다른 혐오와 똑같이—관련돼서 사이버 전문가들이 튀어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그 혐오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근거들을 남발하고, 그게 계속 증폭되다 보면 “소년법을 개정해야 된다”,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나오죠.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소년법 개정,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 개정 이 내용들은 정말 사골 끓여 먹듯이 주기적으로 나오고 이거 한 번 개정안 내놓으면 뉴스에 스포트라이트 받고 인지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정치인 입장에서도 이거 아주 매력적인 주제죠.

그런데 지난 10여 년 동안 나온 무수한 개정안 중에 유일하게 개정된 게 미성년자 의제 공간 하나뿐이에요. N번방 사건이라는 정말 너무나도 어마무시한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거기에 편승해서 개정이 된 거고, 그것도 이상한 형태로 개정이 된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개별 의원들이 여론에 편승해서 개정안을 올렸지만 결국은 국회에서도 통과 안 되고 정부도 동의하지 않고 계속 무산돼 왔던 역사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심지어 법무부가 나서서 개정하겠다고까지 나오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법무부가 나서서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상해요. 법률, 형법 개정이기 때문에 법무부 소관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은 청소년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여가부에서 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청소년 혐오주의에 편승을 한 여론 추수주의, 대중 추수주의라고 생각해요.

범죄유형별 동향을 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하고 도로교통법이 청소년 특별범죄 중에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교통법은 청소년이 교통사고 낸 거고, 도교법은 청소년이 신호위반하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특별범죄 중에 청소년 문제는 전부 다 애들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하다가 사고 낸 것들이예요. 여기서도 좀 주의 깊게 볼 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 수적으로도 그렇고 비율적으로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증가 하죠. 성인 범죄도 똑같이 때문에 청소년만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기는 하겠지만 우리 사회가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면, 청소년 범죄를 줄여야겠다 어떻게 해야 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청소년 성범죄 얘기를 해야 돼요, 청소년 성범죄 얘기를 하지 않고 무조건 청소년 잔혹범죄, 지하철에서 할아버지들한테 만행 저지르고 이런 얘기만 합니다. 이런 자극적인 내용들만.

마지막으로 **범죄 원인을 보시면 가장 높은 게 우발적**입니다. 21년도 기준으로 거의 한 30%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 (유흥비 마련 등의) 이욕이 한 15%, 호기심이 한 13% 정도 돼요. 기타가 36%. 처벌 강화가 범죄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범죄학에서 정설입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지금도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야 범죄율이 낮아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특히 청소년 범죄는 더더욱 얘기를 하는데 처벌을 강화했을 때 범죄율이 낮아진다는 게 성립하려면 범죄자가 계산을 하고 범죄를 저질러야 됩니다. 내가 이 범죄를 저질러서 얻을 수 있는 수익, 만약에 범죄를 저질러서 발각될 확률, 그리고 발각됐을 경우에 받을 처벌의 정도 이걸 다 계산했더니 내가 범죄를 저지르는 게 훨씬 이득이다라고 생각해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면 페널티를 강하게 하면 이 사람은 범죄를 안 저지르겠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매우 합리적이라서 한 번 처벌을 받고 나서 보니 ‘와, 이거 세다. 내가 다시는 교도소 가지 말아야지.’ 이러한 매우 이상적인 인간이어야 합니다. 근데 청소년기의 특징이 충동성이 매우 강하다는 거예요. 관련 통계자료를 놓고 봐도 이 친구들의 범죄의 상당히 높은 부분이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우발적. 이욕 범죄 하나 정도만 어거지로 갖다 붙이면 처벌 강화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사회화가 덜 되고 충동성이 강한 청소년들이 한 번 혼나고 나면 ‘아차! 난 다시는 혼나지 말아야지.’ 이걸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우발적 범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청소년 범죄에서 “청소년들을 강하게 처벌해야 애네들이 범죄율이 낮아진다. 우리가 청소년들을 너무 약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청소년

년 범죄율이 높은 거다.” 이런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근데 그러한 주장들이 사실은 현실에서 현장에서 실제로 영향을 미칩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언론이 계속 보도를 하고 여론이 나빠지면 법원의 판결이 실제로 높아져요. 형법은 안 바뀌더라도 판사들 형이 높아집니다. 현장에서 느껴져요.

강화된 처벌

한국 사회가 실제로 처벌이 강화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벌이 법률 개정을 통해서만 강화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도 강화될 수 있어요. 검찰 처리현황을 보면 12년과 21년도만 단순히 비교해서 보면요. 우선 검찰이 법원으로 보내버리는, 형사사건 처리해 버리는 기소 비율이 한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소년보호송치는 36%에서 46%로 10% 정도 늘어났어요. 불기소율은 56% 정도에서 35%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기소율이 한 10% 올라갔고 소년보호송치가 10% 올라간거죠.

예전에는 검찰에서 판단해 보고 “야, 이 정도면 그냥 너 가정법원 가서 소년재판 받고 와.”라고 보내거나 아니면 아예 기소 안 하고 “너 그냥 집에 가.”라고 할 건데 그런 소년보호사건 보낸 사건 중에 상당수를 한 10% 정도를 그냥 아예 형사법정으로 보내버렸고, “그냥 너 집에 가라.”라고 한 사건 중에 한 10% 정도는 집에 안 보내고 소년보호사건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일단 검찰 단계에서 청소년에 대한 입장이 훨씬 더 강경해진 거죠. 이 정도면 저는 매우 강경해졌다고 봐요.

‘처벌 강화의 유효성 - 송치 기관’을 볼 건데요. 여기서 송치라고 하는 것은 가정법원 소년재판부에 송치한 사건입니다. 소년법에 따라서 송치하는 사건인데, 법원 송치는 검사가 형사재판부로 보냈는데 형사재판부가 판단을 해보니 애는 형사처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생각해서 형사재판부에서 재판을 통해서 소년법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검사 송치는 검사가 수사해서 보니까 애는 소년사건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보낸 거고요. 경찰 송치는 검찰이 보내듯이 경찰이 보낸 건데, 이진 소년보호송치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처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통고’라는 것도 있어요. 소년법 4조를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소년부로, 소년재판으로 보낸다는 얘기예요. 1번 “죄를 범한 소년” 이게 범죄소년입니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

세 미만 소년” 이게 그 유명한 촉법소년. 그 밑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이 부분이 우범소년. 그러니까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은 법률 용어가 아니에요. 법률 용어가 아니고 그냥 현장 용어인데 이게 거의 법률 용어처럼 사용이 되죠. 우범소년의 예가 밑에 나오는데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을 것”,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 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을 것.” 이걸 보면 뭐가 웃기냐면요.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청소년이 집단으로 몰려다니면 무섭죠. 근데 청소년만 그렇습니까? 그리고 청소년이 자기 혼자 다니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다음에 “가출.” 정당한 가출이 어디 있습니까? “술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것.” 청소년이 술 마시면 보기는 안 좋지만 이게 재판에까지 보낼 일인가. 그러니까 이걸 거의 **법률이 예측하는 겁니다. 청소년들 딱 보고 “어? 너 이 자식 하는 거 보니까 조만간 사고 칠 것 같은데? 일로 와, 재판받아라.”** 이게 통고입니다. “이게 말이 돼? 대한민국에 이런 법이 있어?”라고 하시겠지만, “법이 있어도 이거 이미 죽은 법 아니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통고 제도에 의한 송치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11년의 168건에서 21년도에 458건까지 상당히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죠.

통고하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돼요. 현실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소년재판부에서 통고를 정말 좋은 제도라고 홍보해요. 가정법원이 얘기하는 논리는 이거예요. 첫 번째, 애가 사고 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개입한다. “사고 칠 거 같으면 여기 보내세요. 그러면 우리가 애한테 적법한 처분을 해가지고 사고 치지 않는 아이로 탈바꿈시켜 주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고를 치고 경찰 조사를 받고 가정법원까지 가면 이 기간이 한 6개월 돼요. 6개월 되기 때문에 애가 사고 치고 비행할 때 바로 국가 권력이 개입을 해가지고 애를 교정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근데 통고를 하면 바로 달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적절한 시점에 적절하게 개입을 해가지고 이 친구를 교화시킬 수 있다. 세 번째는 소년보호 사건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가 안 남는다. 그래서 아무리 통고를 보내도 전과 하나도 안 남는다. 근데 애가 만약에 막 비행 정도가 높아져서 진짜 엄청나게 큰 사고를 쳐서 형사처벌을 받으면 전과자가 된다. 그러니까 기본 전제는 전과자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전과자로 뚜벅뚜벅 가고 있고, 뚜벅뚜벅 가고 있는 게 너무나 명확하게 예상이 되

니까 중간에 개입을 해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개중에는 학교에서 애가 계속 학교 안 나오고 가출하고 그러면 부모님 불러다가 “어머니, 애 통고합니다.” 선생님이 권유하기도 하고. 통고되면 대부분 시설로 갑니다. 부모님이 통고했으면 가정법원 입장에서는 ‘이 부모가 애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나?’ 혹은 ‘이 부모가 애를 부양할 의지가 없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를 다시 집으로 보내지 않아요. 그러면 보낼 수 있는 곳은 시설밖에 없죠. 소년법 1호는 보호자 등 위탁, 2호가 봉사, 3호가 교육, 4~5호가 보호관찰, 그리고 6호가 소년시설 위탁. 소년시설 위탁은 6개월에서 연장하면 2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7~8호가 치료시설이고. 근데 똑같이 소년원에 있는 치료시설이니까 소년원 가는 건데 7호는 단기 위탁, 8호는 치료시설 위탁 이렇게 되긴 해요. 그래서 6개월, 한 달 이렇게 되긴 하는데 이걸 거의 안 가고. 9호, 10호가 소년원인데 9호는 6개월, 10호는 2년입니다. 통고를 해서 보내면 6호 아니면 9호 아니면 10호. 범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통고로 온 친구들을 소년원에 보내기는 좀 그러니까 통고로 오면 대부분 6호로 가죠. 6호로 가면 6개월에서 연장하면 2년까지도 가능합니다.

6호 시설은 사회 내에 동네에 있어서 교도소처럼 완전히 격리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동네에 보낸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하게 사회화 과정에 있는 친구를 사회로부터 완전 격리시키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격리를 시키면서 교화를 시키겠다는 거 6호 처분입니다. 제도는 매우 훌륭해요.

그런데 이게 현실로 가면 간혹 6호 시설이 소년원만도 못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6호 시설은 민간시설이잖아요. 소년 한 명이 오면 한 명당 월 얼마씩 받아서 그걸 갖고 이 친구를 관리하는 시설인데, 문제점 수없이 많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부족하고. 두 번째는 법무부로부터 평가를 받는데 평가를 받는 것 중의 하나가 이탈률이 있어요. 6호 시설은 교도소처럼 완전히 철저히 가둬놓는 시설이 아니니까 좀 자유로우니까 이 친구들이 뛰쳐나갈 수가 있다고요. 뛰쳐나가면 이탈하면 다시 가정법원 끌려가서 처분 변경 받고 법원 처분이 변경되면, 6호에서 변경되면 무조건 소년원이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탈률에 민감하기 때문에 사회 내 처분인데 실제로 사회 외 처분인 것처럼 운영이 됩니다. 애들을 밖으로 못 나가게 해요. 철문도 다 막아놓고. 그걸 운영하는 민간의 열정과 그런 것들에 너무 의지를 하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곳은 안에서 아동학대 엄청나게 발생하고. 요즘은

소년원에 아동학대 없거든요. 없는데 6호 시설은 아직도 아동학대 있고.

정말 나쁜 사례는 청소년시설, 흔히 옛날 말로 하면 고아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통고해 버립니다. 협박을 해요. 애들이 시설 선생님 말 안 들으면 “야, 너 통고해 버린다.” 협박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실제로 통고해 버립니다. 사회복지시설장도 통고가 가능하거든요. 학교장, 사회복지시설장, 부모님 이들이 통고권자인데, 그래서 고아원 원장이 통고해서 보내버려요. 통고해서 보내버리는 이유는 이 친구들이 보통은 소년법상 6호 처분이라고 해가지고 청소년시설로 보내지는데 다른 시설로 보내는 거예요. 청소년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6호 시설로 가면 거기가 처우가 더 안 좋으니까 애들한테 협박도 되는 거죠.

통고가 정말 오만한 생각인 것은 첫 번째는 대한민국 법원이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대한민국 법원이 그 청소년에 대해서 정말—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부모와 같은 입장과 관심과 노력과 그런 게 다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한 능력도 안 되고 그럴 의지도 없으면서 “통고로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잘해줄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고, 현장에서 통고는 그렇게 운영도 안 되고. 또 하나는 청소년이 어떤 처분을 받았을 때 그 처분이 그 친구의—좋아하는 용어는 아니지만—교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은 이 친구가 자기가 받는 처분을 납득해야 됩니다.

통고 제도는 수사기관이 개입이 안 되니까 오로지 법원 내의 권위만 있습니다. 판사가 애를 데리고 애가 살아온 얘기 다 듣고 상담도 다 하고 모든 걸 다 한 다음에 얘기해서 “야, 그러면 내가 봤을 때 너는 지금 바로 사회에 나가면 또 사고 칠 가능성이 크니까 시설 가서 6개월 정도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을 이 친구한테 다 설득을 하고 이 친구도 납득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통고라고 해서 달려왔는데 저기 앉혀놓고 5분 만에 재판 땅땅땅 하고 “6호 처분 가.”라고 하면 어떤 청소년이 그걸 납득하겠냐고요. ‘그래, 나는 갔다 올 만한 짓을 했어. 내가 가서 열심히 생활하고 반성하고 새사람이 돼서 와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청소년이 범죄도 안 저질렀는데 “야, 너 생긴 거 보니까 너 조만간 범죄 저지를 것 같다. 일로 와 봐.” 데리고 가서 소년원 2년 보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청소년이 ‘아, 그래 맞아. 난 생긴 게 험악하게 생겼기 때문에 소년원 갔다 와야 뻔했어’라고 누가 생각하겠냐고요.

통고해서 갔다 오면 이 친구들은 분노 게이지만 올라가 있는 거예요. 분노 게이지만 올

라가서 나오면 이제 부모에 대한 원망, 사회에 대한 원망 이런 것만 쌓여 있고, 그래서 더 더욱 비뚤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제도인데 한국 사회에서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고 법원뿐만 아니라 수사기관도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제도는 중립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악법 중의 악법이에요. 성인 대상으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면 그 순간 위헌 나오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 판정 받고 그럴 겁니다. 근데 청소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좀 더 넓은 맥락에서 유기징역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2010년도에 형법 42조가 개정돼요. 최근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20년 나왔잖아요. 그 20년 나온 것에 대해서 여론이 “어떻게 그런 새끼한테 20년밖에 안 주냐?” 그리고 피해자는 20년 나왔다고 하니까 갑자기 오열을 하면서 “나보고 죽으란 소리냐. 저 새끼 20년 후에 다시 튀어나와서 나를 해코지하면 어떡하냐.”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20년형이 정말 적다, 이러한 분위기인데요.

과거에는 교도소에서 10년 사는 사람들이 드물었습니다. 무기징역 받아도 7~8년 살고 나오던 시절이었어요. 그때가 80년대라고 하면 지금 40년 지났잖아요. 범죄가 소프트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살인미수라고 해도 살인미수에 대해서 **20년형을 때린 것에 대해 형벌이 너무 약하다고 광분하는 사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범죄자들의 처벌 수준에 대해서 몇십 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분노가 세진 거죠. 저는 사실 20년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2010년도까지 유기징역의 최상이 15년이고 이것을 가중하면 25년까지. 최대가 25년이었어요. 2010년도에 형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정확하게 2배로 뛴니다. 유기징역의 상한이 30년, 가중했을 때 50년까지. 연쇄살인범들. 이런 사건이 유독 몇 년 사이에 막 터진 때가 있었습니다.

형법은 민법하고는 다르거든요. 민법이 개정되면 돈 잃거나 뭐 이런 문제인데 형법은 사실 사람 인생이 달린 문제고 그 사회의 어떤 규율을 바꾸는 내용이기 때문에 형법 개정을 이렇게 쉽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때도 유기징역 상한의 한도가 얼마가 적정하냐라는 사회적 논의는 전혀 없고 그냥 분노 게이지만 커져서 거기에 편승해서 어느 날 갑자기 2배로 높여버린 거예요. 유기징역의 상한을 한 방에 2배로 높여버린 건 정말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을 거예요.

강화하고 나서 범죄율이 어떻게 됐느냐를 보면 변화가 거의 없든지, 심지어 몇몇 범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늘어나든지 그렇습니다. 소년법 얘기하면서 굳이 이런 말씀을 드

리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이미 처벌을 강화시켜봤자 그게 유의미한 범죄율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경험했어요. 물론 이거에 대한 유의미한 연구도 없는 것 같아요. 이미 경험을 해봤으면서도 지금까지도 특히 청소년에 있어서는 “처벌받아야 된다. 우리가 처벌을 안 해서 재들이 저렇게 사고를 친다. 처벌만 강화하면 범죄율이 줄어든 거다.” 이걸 거의 무슨 마법 외듯이 이렇게 외우고 있는 거예요.

학교 폭력 이야기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다룰 때 학폭위라고 하잖아요. 요즘 학폭위가 이슈잖아요.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기구입니다. 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악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할 법을 하나 뽑으라고 하면 저는 이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폭위가 만들어진 과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1990년대 중반에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성수동 여중생 투신사건 등 그때는 ‘이지메’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지메에 의한 청소년 자살사건이 유독 몇 년 동안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나타난 움직임이 피해 부모들이 조직화되는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저는 그 현상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근데 조직화된 이 피해 부모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갔는데 “학교를 못 믿겠다. 학교 너네는 빠져라. 니네가 잘못해서 우리 애가 죽었어. 난 너네 신뢰 못 하겠어. 너는 빠져. 학교폭력 문제는 이제 우리가 직접 하겠어.” 이런 분위기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문제에서 학교가 계속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몇몇 정치인들이 결합을 하면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학폭위가 만들어지는데 처음에는 ‘자치위원회’라고 있었고 지금은 ‘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자치위원회는 개별 학교에서 한 거고, 심의위원회는 지역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자치위 때 얘기를 말씀드리면 “과반수를 학부모로 선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심의위를 보면 이 과반수가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학부모의 비율이. 과반수를 넣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핵심은 학교를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겠다이 논리입니다. 5명에서 10명까지로 위원이 구성되잖아요. 여기서 당연직 위원들이 있습니다. 교감 선생님, 학생부장 선생님, 그리고 SPO 학교전담경찰, 그리고 지역위원 이런

게 4명이 당연직이에요. 4명이 당연직이면 학부모가 50% 돼야 되니까 매칭으로 학부모 4명이 들어오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가 이렇게 8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10명은 안 채우고 8명으로 구성돼서 학폭을 하는데 딱 봐도 이 8명의 균질성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특히나 학부모의 균질성을 맞출 수 없잖아요. 이 4명의 학부모 중에 심각한 학폭 피해 경험 이 있다든지 아니면 비행청소년에 대한 혐오주의가 세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만 있으면 그 학폭위는 난리 납니다. 나오면 무조건 “저 나쁜 X! 저 X 처벌해야 돼. 잘라버려야 돼.”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다보니 학폭위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세계 처벌 나가고 회의도 이상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소송을 걸고, 소송을 거는 족족 패소를 합니다. 운영 자체가 너무 높은 수준의 처분만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요. 소송이 자주 걸리고 소송 한 번 걸리면 학교 행정이 마비가 되고 이러니까 이거를 20년부터 교육지원청으로 다 모아 버렸습니다. 모아서 교육지원청으로 가면 거기에 장학사들이 한 대여섯 명이 달라붙어서 운영을 해요. 학부모들이 과반수 들어왔을 때의 부작용들을 봐버리니까 학부모들의 비율을 3분의 1로 줄여버리고 거기에 전문가들을 계속 투입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죠.

학교폭력이 접수되면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합니다. 접수돼도 사안조사를 하고 인지해도 사안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접수되면 무조건 사안조사로 가요. 사안조사에서는 거의 95% 학교폭력 사안으로 분류가 됩니다. 학교에서 전담교사가 사안조사를 하는데 학교폭력 전담교사는 거의 90%가 기간제 교사입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 전담교사라는 직책이 3D 업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규직 교사는 이거 안 합니다. 정규직 교사 안 하고 기간제 교사 채용할 때 기간제 교사 중에 학폭 전담교사를 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그걸 어필을 합니다. “저를 뽑아주시면 제가 교과도 하고요, 학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그 친구들을 뽑아요.

기간제 교사의 약점 중의 하나는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잘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면 학부모들은 상대가 기간제 교사면 무조건 계약 해지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기간제 교사들이 학폭 전담으로 들어와서 사안조사를 할 때 이거를 학폭 아님 처분을 하지 않아요. 학폭 아님 처분을 하는 거는 피해자로부터 어마어마한 이의 제기를 받을 것을 감수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고 심의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학폭위로 내려오고.

학교장 자체해결도 있긴 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들이 있어요. ‘진단서가 안 들어왔을 것’, ‘성 사안이 아닐 것’, ‘화해가 됐을 것’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당사자들이 화해를 해야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게 별일이 아니야. 그냥 좀 투닥투닥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굳이 학폭위까지 보낼 필요 없이 그냥 학교에서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화해를 해야 되잖아요. 학폭위가 발생하면 사안이 접수되는 순간 가·피해자를 분리시켜 버리거든요. 화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학교가 중재를 해서 화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화해가 돼야 교장이 나서서 “그러면 우리 이거 학교장 자체해결로 해서 그냥 정리합시다.” 이게 되는데, 학교에서 화해 중재를 못 합니다. 학교에서 화해 중재를 하려고 하면 “아, 이거는요, 학폭위로 올라가는 건 교육적으로도 안 맞고 아드님이 피해자지만 아드님한테도 이게 좋은 경험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서로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바로 대변에 나오는 얘기가 “선생이 가해자한테 돈 받아 지금 가해자 감싸고돈다.” “왜 가해자 편 드세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걸 하지 못합니다. 유명무실해요. 결국은 올라가고 올라가서 처분으로 가는데 처분으로 가면 처분 또한 탐탁지 않고.

유일하게 이 제도를 좀 보완할 수 있는 제도는 학교장 자체해결이에요. 그러니까 화해 시키고 “앞으로 너네 잘 지내라.”라고 하는 건데, 이것 자체도 지금 현실에서는 안 되는 거죠.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결국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 교실에서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정순신이나 이동관 그 사건을 보면 피해자들이 고통을 아직까지 호소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피해회복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표면적으로 나오는 것은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못했다. 가해자는 승승장구한다.’ 이인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해자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과를 받고 서로 화해를 하고 관계가 다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형법 체계는 뭐냐 하면 사안이 발생하면 바로 분리조치 시키고 그에 맞는 처분 내리고 “니네 앞으로 평생 보지 마.”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저 친구가 어떤 처분을 받든, 제일 센 처분은 퇴학이거든요. 근데 퇴학처분 안 나옵니다.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퇴학처분이 아예 안 나오고 고등학교도 퇴학처분 거의 안 나와요. 세면 전학처분입니다.

한국 사회가 피해자도 상당히 극단화되고 있는데 학폭이 발생하면 “무조건 재 퇴학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해요. 근데 학폭위에서 실제로 전학처분도 잘 안 나오거든요. 학급

교체, 봉사활동 이런 게 나오는데 학급교체, 봉사활동 이런 거 나오면 그 어떤 피해자도 납득하지 못합니다. 결국 학폭의 결과는 가해자 역시도 내가 과하게 처분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피해자는 처벌 전혀 안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둘이 앞으로 만나서 화해할 가능성은, 그냥 졸업할 때까지 접근 금지 때려버려요.

이러한 제도에서 정말 피해자가 제대로 된 피해회복을 받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사회에서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청소년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청소년 폭력에 있어서 피해회복이 뭘지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 제도 하에서는 피해회복이 불가능합니다.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담임선생님이예요. 학생들을 제일 잘 아는 건 담임선생님이잖아요. 담임선생님한테 많은 권한을 주고 담임선생님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 상담하고 혼낼 건 혼내고 응원해 줄 건 응원해 주고 해서 화해시키고 잘 지내게 만들고 해야 되는 건데 학폭위에서는 철저하게 담임이 배제됩니다. 학폭이 발생하자마자 담임 바로 배제되고 학폭전담교사가 와서 사안 처리하고 그걸 학폭기구를 통해서 교육지원청으로 보내 교육지원청에서 처분해서 끝내버려요. 담임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고 어쭙잖게 담임이 개입했다가는 가해자 편 든다고 해가지고 난리 나고 징계받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폭위 체제는 학교폭력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다.

우리가 학폭을 운영한 지 오래됐거든요.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 이 정도 운영했는데 여전히 학교에서 학폭은 발생하고 우리 사회에서 학폭 문제는 점점 더 이슈화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도가 잘못된 겁니다. 이 제도가 학폭을 어떻게 개선하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포기를 해야죠, 제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열심히 거의 기우제 지내듯이. 기우제 지내는데 비가 안 오면 기우제 그만 지내고 우물을 파든지 뭘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기도가 부족하구나. 더 열심히 기도하자. 더 열심히 기도하자. 기도를 하다 보면 언젠가 비가 오겠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학폭에 대한 우리 사회 분위기, 그러니까 학폭 경력이 나타나면 그냥 아예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리잖아요. 최근에 경기도에 있는 모 학교에서 집단 성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임용고시 합격해서 교사로 임용이 됐어요. 근데 이걸 어떤 유튜브가 밝혀내고 난리가 나니까 이 교사가 자기 스스로 면직을 해서 사표를 냈습니다. 사건이 터지자 뉴스는 “이런 자가 교직에 들어올 수 있는 제도가 문제다. 다 스크린 해가지고 이런 자들은 교직에 아예 못 들어오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 건데 제가 너무 관대한

지 모르겠지만, 그게 형사처벌도 아니고 소년보호처분이었거든요. 소년보호처분은 3년 지나면 기록 삭제해 버립니다. 그리고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 조회는 안 돼요. 그리고 소년보호처분은 전과를 안 남기는 게 그 제도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거고 소년보호처분에 따라서 이 친구는 보호처분을 받고, 다 이수했고, 기록도 안 남았고, 그래서 사범대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임용고시에 합격해서 교사가 됐는데 청소년 때 저질렀던 그 사건을 가지고 “얘는 교사 하면 안 된다. 잘라야 된다.” 이거는 정말 마녀사냥이죠.

제가 생기부 문제를 써놓은 이유는 이게 생기부에 들어가면 학생부종합전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송이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다 그냥 소송 걸어서 없애고 없애고 없애고. 대학 가야 되니까. 예전에는 이 조항이 졸업 6년 후 삭제였어요. 졸업과 동시에 삭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막겠다고 바뀐 게 대부분 졸업과 동시에 삭제, 졸업 후 2년 후 삭제.

학교폭력 조치기준을 보면 0점부터 4점까지 판정 점수가 있어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화해 정도에서 0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매겨요. 위원들끼리 점수를 매긴 다음 밑에 가서 매칭을 해서 점수에 맞는 처분을 하게 됩니다. 살펴보면요. 6호 처분이 출석정지예요. 이 위의 5가지 요소들이 전부 다 보통이면 10점 나옵니다. 근데 출석정지 6호 처분은 되게 센 처분이거든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이걸 판단이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사건 내용을 보면 반성, 화해 이거는 어떻게 판단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건 발생하자마자 분리조치가 돼요. 전화도 못 합니다. 어떻게 화해를 해요? 제도적으로 화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놔어요. 제도적으로 화해를 불가능하게 해놓고 화해 정도의 점수를 매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물론 강제조항으로 나가지는 않지만 1호 처분이 서면사과인데 전제를 따지고 보면 이거 위헌이에요. 양심의 자유 침해입니다. 사과라는 것은 나의 윤리적 판단을 표출하는 양심을 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라는 건 강요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형법 조항을 아무리 찾아봐도 “사람을 죽인 자는 사과해야 된다.” 이런 내용 없습니다. 사과라는 건 강요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만 판사가 판결할 때 사과를 해서 합의를 보면 양형에 이걸 넣죠. 그렇지만 처벌로 사과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과를 강제한다는 것은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사과를 하고 싶었는데 그걸 강제하면 그나마

낮지만 예컨대 나는 잘못된 게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된 게 없어, 1호 처분이 나와서 강제로 사과해야 돼, 이렇게 되면 양심의 침해죠. 근데 이렇게 누가 봐도 조금만 생각하면 헌법상 양심의 자유 침해가 명확한 게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에 규정이 되고 남발되고 있습니다.

처벌이 아닌 통제의 모습

통제 강화랑 처벌은 좀 다릅니다. 6호 처분이 사실 통제 강화죠. 우리 현행 법체계 중에 통제를 강화하는 아주 좋은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역시 현실에서 그렇게 안 되는 문제인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게 있어요. 검찰이 기소유예를 해주는데 그냥 기소유예해서 집에 보내는 게 아니라 선도를 붙이는 거예요. “야, 너 집에 가. 니네 동네 가면 법사랑위원회라는 데가 있어. 그분들한테 선도 받아. 이걸 조건으로 해.” 이런 거거든요. 이게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이죠. 처벌을 하지 않고 다시 집에 보내는데 가면 동네마다 법사랑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연락도 받고 주기적으로 가서 상담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에게 통제를 일정 기간 동안 받아가면서 우발적인 범행에 나아가는 것을 최대한 자제시키고 이렇게 가는 제도인데 저는 이런 게 통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작동을 안 해요. 법사랑위원회 면면을 보면 로타리나 라이온스클럽이랑 똑같습니다. 지역에 있는 유지들. 검찰에서 무슨 위원회 만든다고 하니까 검찰에 줄 좀 달고 싶은 지역 유지들 이런 사람들. 검찰 역시도 동네에서 자기네들과 관계를 설정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유지들을 포함하는 조직이에요. 청소년 전문가는 1도 없고. 거기 가서 선도 받으라고 하니 선도가 안 돼요. 똑같은 게 각 경찰서마다도 선도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경찰서에 있는 선도위원회도 그 위원들의 면면은 똑같습니다.

지역사회에 수많은 청소년 인프라들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복지시설,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등 수많은 인프라가 있는데 원래 사실 이거는 일단은 가정에서 통제가 됐든 보호가 됐든 있어야 되고, 가정 밖을 나가면 지역 커뮤니티가 그 역할을 해야 되고 학교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회는 학교가 그 역할을 못 한 지 이미 오래고, 지역 커뮤니티에 그 역할을 기대할 수도 없고, 가정으로 가야 되는데 가정은 이미 해체돼 버렸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쨌든 충동성 있는 청소년들을 케어해야 되는데 케어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들이 많이 있

는데 그건 단지 그네들의 개인적인 헌신에만 의지하는 경향이 크죠.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청소년 활동가들이 다 박봉입니다. 인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까 그 영향을 제대로 못 미치고. 근데 개중에 그러한 곳과 연계돼서 활동을 했던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의미한 개선효과를 본 청소년도 많이 있어요.

범죄라는 것을 온전히 범죄자에게 전부 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청소년은 더더욱 그렇고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이면에는 최소한 절반 정도는 사회적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그렇다면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는 범죄자 개인만 놓고 보면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미국 시카고에 모란센터(Moran Center)라는 데가 있어요. 시카고 슬럼가에 있는 유색 인종 청소년들, 태어나는 순간부터 범죄에 노출됐던 청소년들을 케어하는 센터인데 이 센터의 고민이 뭐였냐면 애들이 사고 치고 경찰에 잡혀가고 변호사가 도와줘서 풀려나면 또 사고 치고 풀려나면 또 사고 치고 풀려나면 또 사고 치고 이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한 게 이 친구들의 환경이 문제다, 환경이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 지원 백날 해봤자 소용없고 법률 지원과 동시에 환경 개선을 해줘야 된다, 근데 이 친구들한테 환경 개선을 해주는 게 슬럼가 지역을 바꿀 수는 없으니 이 친구들을 사회복지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선택을 합니다.

법률 지원과 사회복지 지원이 동시에 가야지만 이 친구들이 비행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게 시카고에 있는 모란센터입니다. 변호사도 많고 사회복지 전문가도 많고 예산도 많고. 근데 이거를 부천에서 한국의 모란센터를 만들어보겠다고 만들었는데, 변호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행정직원 1명 셋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거의 없고 인건비가 다고. 이 3명 갖다 얹혀놓고 모란센터를 하려니 못 하죠. 못 하니까 사실상 변호사 혼자 원맨쇼를 하면서 돌아다니고 해야 되는 이러한 곳이 됐어요.

2014년도에 만들어진 센터니까 거의 한 10년 됐죠. 10년 동안 사실은 시에서 계속 예산도 지원하고 규모도 늘리고 해서 확대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게 또 전국적으로 퍼지지도 않고. 물론 제가 홍보를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시도는 매우 좋았으나 명확한 한계는 있는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가해 청소년을 지원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예산을 늘리려면 우선 주무 부서를 설득해야 되고, 주무 부서가 설득이 되면 시의회를 설득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피해자 지원

한다고 하면 주무 부서도 쉽게 설득이 되고 시의회도 예산도 쉽게 되고 하는데 가해자 지원한다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가해자를 왜 지원해?” 이러면 거기서부터 이게 왜 지원해야 되는지 설득해야 하고, 설득 좀 된다 하면 공무원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피해자 지원기관은 많습니다. 본인이 공적으로 지원해 주는 걸 받기를 원치 않아서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상담치료를 받고 싶으면 공적으로 지원해 주는 상담치료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관 가서 사설 상담을 받겠다. 그렇게 돼서 못 받을 뿐이지 본인이 공적인 걸 원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가해자로서의 청소년이 일종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적 조직이나 제도는 없죠. 변호사 입장에서 그런 사건 맡으려면 목숨 걸고 맡아야 됩니다.

응보주의의 한계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응보주의가 호소력을 갖는 이유는 학교가 신뢰를 잃었고 국가가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 범죄자가 적법한 정당성 있는 프로세스 하에서 합리적인 처벌을 받을 거라는 신뢰를 안 하는 겁니다. 피해자들이 언제나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차기남 20년 제가 봤을 때는 ‘와, 20년 대박이네.’ 이러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20년밖에?’ 국가의 형벌 시스템이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국가의 신뢰회복은 응보주의로 해결될 수는 없어요. 응보주의로 가면 그 시스템은 더더욱 신뢰를 잃고, 신뢰를 잃으면 응보주의는 더 세지고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응보주의로 가고 이것 때문에 신뢰가 더 흐트러지고 더 세지고 이렇게 됐다고 해도 이 과정 속에서 피해자가 회복될 수가 없고요.

저는 어떠한 사회의 인권 수준을 바라볼 때 가장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건 사형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사형을 선고받을 정도의 흉악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 대한 처우가 어떤지. 그것이 그 사회의 인권 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명확한 척도라고 봅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처우도 있겠지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또라이가 아니면 반대하지 않거든요. 예컨대 유럽 사회에서 유색인종에 대해서 인종 혐오를 하면 모두가 욕하잖아요. 그 사회에 인종 혐오가 존재하지만 그걸 대놓고 했을 때는 욕하잖아요. 근데 흉악범죄자들에 대한 비난이나 공격 이런 거는 욕하지 않습니다. 돌려차기남이 대표적이죠. 온 사회가 그 사람을 욕하잖아요. 온 사회가 그 사람을 욕하고 어쨌든 그 사람에게 변

호사가 나타나서 “이 사람은 변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변호사까지 욕 먹죠. 그래서 그 흉악범죄자 처우가 어떤지, 그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그 사회의 인권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봤을 때 한국 사회에 있어서 인권 수준은 상당히 낮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어떤 사회가 돼야 할지는 너무 거시 담론이고 고차원적인 문제라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소년범죄자가 됐든 흉악범죄자가 됐든 그러한 범죄자들 혹은 비행청소년도 온전한 권리를 보장받고 온정적인 시선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2 소년법 이야기가 말하는 것

소년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측면에서의 ‘시티즌십’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청소년은 그 자체로 미래의 시티즌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집단이다. 그것의 의미는 성인으로서의 온전한 위치를 갖지 못한 이들의 권리를 더욱 강하게 보호한다는 취지여야 할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국사회는 반대로 청소년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책임을 더욱 강하게 묻는 방식으로 이들의 ‘시민’으로서의 가능성을 억압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응보주의의 논리로 일탈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조하는 경향성은 청소년 범죄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전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추이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것은 곧 한국사회가 어떠한 형식으로든 일탈자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오늘은 청소년일 수 있지만, 내일은 이주자일 수 있고, 모래는 성소수자일 수도 있다.

이러한 끝없는, 강화된, 국경 긋기(bordering)의 실천(발리바르, 2010)은 일종의 묵시론적 예언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어느 곳에서, 그렇게 배제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 범죄, 학교 폭력 문제를 바라보는 김광민 변호사의 시각은 한국사회가 외면하는 시각이다. ‘위기 청소년 뒤에 위기 사회가 있다’는 자명한 현상을 외면하고 ‘나쁜 놈’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결백함을 강박적으로 주장하는 사회에서 ‘과연 우리 모두는 자유로운가’라고 묻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후속 세대를 기르고 있는가, 라는 메

타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김 변호사의 시각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 사회의 미래를 더욱 정확하게 전망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이야기에서 내포하는 우리사회 미래 이슈와 대안은 무엇인가? 소년법의 이야기는 한국사회의 형사법체계 전반의 문제를 새롭게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특히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을 어떠한 관점에서 설정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다. 최근 교권 대 학생권의 대립 구도나 학교폭력에 대한 쟁점 등은 이 이야기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구도가 잘못되어 있다.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거나 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거나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거나 하는 식의 엄벌주의적 조치는 문제를 푸는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자율적인 조율의 가능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에 관한 형법 규정을 개정할 필요도 있다. 방향은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미래세대로서의 청소년의 위치성을 이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데에 활용하지 않고, 이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에 활용하는 것이다. 김광민 변호사는 구체적인 제안도 한 바 있다. 통고 제도를 없애거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 보호시설을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중재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제2절

탈북 여성 및 제3국 출생 자녀¹⁰⁾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이들을 왜 만나야 하는가?

사회주의권 붕괴 및 기존 동구권의 한국과의 관계개선에 따라 국제적 고립에 직면한 북한은 1990년대 중후반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했다. 이 시기부터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해, 1999년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선 남한 입국 탈북민 숫자는 2001년 기점으로 매년 천 명을 넘어서고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2천 명대를 지속했다.

2009년 2,914명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김정은 정권이 등장한 2012년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에도 천 명대를 유지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북한의 국경봉쇄에 따른 그 수가 현격히 줄어들어 2020년 229명, 2021년 63명, 2022년 67명, 2023년 99명이 남한에 입국했다. 2006년 이후 전체 탈북민의 70%를 넘어선 여성 입국 결과, 2022년 현재 탈북민 인구학적 구성은 여성이 75.5%를 차지하고 40대가 (27.8%), 30대(24.3%)로,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특징을 보인다(남북하나재단 2022).

[표 5-1]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현황(2023년 6월말 입국자 기준)

구분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6월 (잠정)	합계
남(명)	831	565	510	474	626	424	515	573	608	662	591	795	404	369	305	251	302	188	168	202	72	40	35	23	9,533
여(명)	116	478	632	811	1,272	960	1,513	1,981	2,195	2,252	1,811	1,911	1,098	1,145	1,092	1,024	1,116	939	969	845	157	23	32	76	24,448
합계(명)	947	1,04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2,914	2,402	2,706	1,502	1,514	1,397	1,275	1,418	1,127	1,137	1,047	229	63	67	99	33,981
여성비율	12.2%	45.8%	55.3%	63.1%	67.0%	69.4%	74.6%	77.6%	78.3%	77.3%	75.4%	70.6%	73.1%	75.6%	78.2%	80.3%	78.7%	83.3%	85.2%	80.7%	68.6%	36.5%	47.8%	76.8%	71.9%

통일부,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 (검색일: 2023.9.12)

10) 이 소절의 일부는 유희수 외(2023), 6장 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사회통합의 pp.112~113, 115, 120의 내용을 축약, 수정했다.

2016년 국내 입국 누적 탈북민 3만 명 시대에 들어섰으나, 2010년대 한국 사회는 **전체 국민 평균보다 심각한 탈북민들의 자살률**, 늘어나는 탈북민 무연고 사망 사건에 직면해 탈북민 사회통합 현실에 대한 우려와 정책적 자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2019년 한성옥 모자 사망사건은 연고가 없이 고립된 환경에서 아사에 이른 탈북여성 한부모가정의 현실에 대한 깊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이준삼 2019). 5년간의 탈북민 지원정책 수혜 이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탈북민 취약계층에 대한 행정 및 공동체적 뒷받침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졌음에도, 비슷한 무연고 사망 사건이 지속되는 등 실질적 변화가 결핍된 현실이다(정다민 2023).

최근 증가한 탈북여성의 정착, 통합 관련 연구에 따르면,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 정의가 실제 탈북민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처한 현실, 정책효과 측면에서 갖는 한계는 분명하다. 즉 탈북민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생산가능인구 연령대의 여성 가정의 안정적 정착과 통합의 시각에서 현재 탈북민 지원제도 및 정책이 갖는 제약, 결핍에 대한 다양한 문제제기가 존재하며 젠더적 관점에서의 개혁, 전환이 필요하다(장명선·김선옥 2017).

특히 2000년대 이후 논의가 늘어난 ‘탈북의 여성화’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세계적 차원의 ‘이주의 여성화’ 맥락, 인신매매, 강제결혼, 성매매, 원거리 가족 부양 등 탈북여성의 초국적 이주 및 적응, 북한, 제3국, 혹은 한국 출생 자녀의 이주 및 교육 등 탈북민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탈북여성들의 이주의 성격과 정체성, 통합과정에서 떠오른 주요 이슈 및 수요 등에 주목해야만 한다(이희영 2012; 이화진 2014; 김성경 2017; 이지연 2018; 2020).

[표 5-2]는 탈북여성과 이들이 북한, 중국, 남한에서 출생한 자녀와의 법적 관계에 대한 다양성을 보여준다. 남한에 정착한 탈북여성의 북한 출생 자녀는 남한에 함께((1)-b) 들어오지 못하고 현지에 거주하더라도((1)-a) 헌법 3조에 따라 자식도 해당 여성의 자녀로 등록, 인정되지만 **실제 북한 자녀들에 대한 모성의 수행은 송금 등 불법적 수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중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자녀를 출산할 당시 중국에서 ‘무국적’ 상태로 체류한 탈북여성과 마찬가지로 무국적 상태에 놓이거나 중국 가족들의 도움으로 중국 국적을 획득할 수 있으나, 어느 쪽이든 **남한 정착 탈북여성과의 모자관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2)-a),. 중국 출생 자녀가 국내 입국하는 경우 이들은 ‘다문화’ 자녀로 국적을 획득, 탈북여성과의 모자관계가 인정된다((2)-b).

[표 5-2] 탈북 여성 자녀들의 정치적 소속과 지위

소속 출생지	국적 (모자 관계 법적 등록, 법적 어머니 지위 인정)	
	현지(북한 혹은 중국) 거주	남한 거주
북한 출생	(1)-a 북한 (등록, 인정)	(1)-b 남한 북한이탈주민 (등록, 인정)
중국 출생	(2)-a 중국/무국적 (미등록, 불인정)	(2)-b 남한 제3국 출생 자녀, 다문화(등록, 인정)
남한 출생		(3) 남한 (등록, 인정)

출처: 이지연(2018, 148).

한국 사회의 탈북민 구성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탈북 여성과 그들이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이머징 시티즌의 관점에서 주목할 존재들이다. 이들이 탈북, 이주의 연쇄에서 경험하는 초국적 네트워크, 이들의 가족 구성·실천 자체가 드러내는 무국적, 초국성은 미래 사회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이주민, 난민의 경험과 그들 현실에 천착한 사회통합의 대안 마련에 있어 의미있는 참조점을 제공한다.

탈북 여성 및 그들의 자녀들은 초국적 이주라는 맥락 뿐만 아니라 미래 통합, 평화의 단 위로서 한반도를 설정하고 한반도 전략을 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이머징 시티즌이다. ‘먼저 온 통일’로 불리기도 하는 탈북 여성과 그들의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는 통합의 문제는 그대로 상이하고 비대칭적인 관계의 남북이 어떻게 공존하고 제 3의 새로운 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2 이들의 가능미래와 선호미래

탈북 여성 및 제3국 출생 자녀들의 한국 사회통합과 관련해서는 연구자, 창작자의 인터뷰를 통해 이들의 한국 사회에서의 위치, 향후 통합 전망 및 이들이 갖는 미래선호를 들었다. 학원가 등 교육자본으로 인해 다수 한국 부모들이 이주를 선택하는 서울의 한 지역에 위치한 '통일 초등학교'(가명)에서 임대주택 단지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학생들과 한국 출신 학생들의 생활, 한국 원주민과 북한이탈주민 학부모 간 접촉, 학교에서 운영하는 그룹홈 등 방과후 활동의 시도 및 효과 등을 분석한 연구자는 일종의 '리미널 스페이스', '역지대'로서 '통일 초등학교'의 공간을 읽으면서 탈북민 통합정책이 사실상 '분리' 정책으로 실천되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특정 교육현장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제3국 출생을 포함하는 탈북민 학생, 그리고 학부모에 해당하는 탈북 여성들이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적응, '통합' 되고 있는가를 통해 연구자는 향후 이러한 탈북민들이 늘어날 수 있는 미래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질문을 던졌다. 한편 초국적 이주의 경험을 한 탈북 여성들의 월경과 이주 정착을 추적하면서 다큐멘터리, 극영화로 재현한 창작자의 경우는 그가 만난 탈북 여성 및 가족들이 어떤 삶의 궤적을 가지며 무엇을 원하는지,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한국 사회의 태도와 관련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밝혔다.

제3국 출생을 포함한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분리'된 커뮤니티

제가 기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북한이탈주민 아이들은 일종의 이중의 차별 구조에 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사실 가장 큰 거는 임대주택의 사느냐 살지 않느냐의 구분이 이 아파트에서 가장 큰 것으로 보여요. 임대주택에 사는 아이들은 일단 이 아파트 몇동에 사는 아이들과, 이 아파트 임대주택 단지가 아닌 목동 3단지 무슨 아파트에 사는 단지의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방과 후 수업을 몇 개를 더 참여하는가, 그리고 이후에 학원을 가는가 안 가는가 이런 것들로 다 구분이 되는데요. 북한이탈주민 아이들은 그 안에서 또 한 번의 분리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사는 아이들 중에서도 북한이탈주민만을 따로 모아서 그 아이들만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방과 후에 이

제 그 대안학교 같은 것들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북한이탈주민의 아이들이 자기들끼리만 어울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냐면 후에도 계속, 그렇게 계속 그루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3국 출생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중국어가 더 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임대 주택에 사는 아이들 중에서도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엄마가 탈북 민이냐? 우리 엄마도 탈북민이다.” 이러면서 그 아이들끼리 뭔가 끈끈한 어떤 유대관계를 만들어낸다거나. 그리고 이제 이후에 대안학교를 같이 가기 때문에,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비인가 대안학교로 같이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만들어지는 커뮤니티가 존재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학교

이제 여기에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통일 전담 교사라는 것이 있어요. 이 통일 전담 교사라는 분은 주로 탈북인들이시구요. 북에서 교사를 했던 분들이 <하나재단>에서 고용해서 학교로 내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이탈 주민들을 지원하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를 지원하고 아이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데, 많이 하는 수업은 이중 언어로 하는 수업입니다. 이제 중국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정말 속사포처럼 조선말과 북조선말, 조선말과 중국어를 섞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요. 이유 중에 하나는 제3국 출생 아이들 중에 중국말밖에 못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탈북 학생을 주로 하고 있는 방과 후 수업이기 때문에, 트라우마 치료 이런 거 많이 하고요. 그리고 글 읽기, 책 읽기 수업, 그다음에 통일 교실, 이중언어 교실, 이런 수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탈북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의 경우에는 남한 출신의 학생들의 참여는 극히 드물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탈북 전담 선생님이 자신의 일은 탈북 학생들을 봐주는 거지 남한 학생들까지 지도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공고하세요. 만약에 남한 학생이 만화 수업에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오면, “재네는 저희가 가르쳐야 되는 애들이 아닌데”, 자기한테 일이 계속 부과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재단>에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보고를 해야 되는데, 남한 출신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이 자신의 실적이 되지 않는 또 그런 문제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탈북전담교사의 역할과 방과후 학교 이후 탈북민 운영 대안학교

그런데 뭔가 긍정적인 효과를 마련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이 가시적이면서 비가시적인 표식 같은 것들 분명히 확인되는데요. 하나는 이 탈북 학생 전담 교사입니다. 근데 이 교사들도 되게 힘들어 하세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는 교사인데 교사 취급을 못 받는다, “나는 교무실에 내 책상도 없다”, “내 책상은 이 탈북 학생을 전담하는 또 다른 독립된 공간에 자기 책상을 두고...” 계속 탈북 학생을 기다리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근데 이분들 대부분 교원들이시거든요. 북에서 교원들도 상당히 교육 수준이 높은 분들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또 뭘 많이 시키냐면, 부모들 정신 상담 이런 거를 또 많이 시켜요. 그래서 이분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부모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실제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근데 이 부모들이 또 엄청난 어려움인 거죠. 대부분 학부모, 어머니인 경우가 많겠죠? 근데 학부모 어머니들이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을 케어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일하면서 아이 키우고, 그리고 서울은 막 너무 경쟁도 심한 것 같고, 교육 체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어떤 방식을 쓰냐면, 다른 지역에 일을 하러 가는 엄마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저 옆에, 세 번째에 쓴 이 비인가 기숙형 대안학교에 집어넣어놓고, 임대 아파트는 그냥 두고, 자신은 지방에 다른 지역으로... 공장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지역의 다른 자신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일하는, 다양한 서비스 직종 같은 데서 일을 하면서 다른 데로 가버리고요. 아이는 저 비인가 기숙형 대안학교에서 머물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부분 다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공부도 하지 못하고,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는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탈북민 사회통합 정책에서 1.5세대, 2세대 문제의 부상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금 탈북 여성에 굉장히 집중해서 정책이 많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1.5세대라고 얘기되는, 혹은 2세대라고 얘기되는 친구들이 이제 어떤 측면에서 대안학교의 인터스트리기도 해요. 여명학교 이런 쪽에서 있잖아요. 물론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남한 사회와 접촉을 할 때 갈등이 많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비인가 학교에 있다가

바로 중고등학교는 탈북민이 하는 또 탈북민 대안학교로 가요. 그럼 그 탈북민 대안 학교에서 아이들이 탈북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다가, 이제 이제 탈북민 집단의 정치화가 되면서 이 친구들이 거의 다 또 이제 정치 운동... 그러니까 정치 운동을 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다양한 시각을 아는 정치 운동이 아니라 이 탈북민 집단 내에서의 정치 운동으로 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게 제가 만나본 많은 교육자랑 활동가들의 진단이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런 분리 교육이 정말 북한 이탈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적절한 모델인가. 근데 여 명학교나 이런 학교들은 사실 북한이탈주민 1세대들의 '밥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 니까 이 1세대들은 또 아이들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재단이 사실 이런 학교를 지원하고, 그걸로 또 이 하나재단에 100명 넘는 공무원이 채용돼 있죠. 통일부의 예산의 60%가 북한이탈주민 관련이예요. 계속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 구 도, 남북 관계를 풀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강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향후 한국 사회의 어떤 모델, 그러니까 통합적이고 다문화적이고 열린 한국 사회라는 모델에 적절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치열한 고민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인다. 그냥 탈북민 단체들 지원, 하 나재단의 더 예산, 이걸로는 해결되지 않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탈북민 사회통합의 미래

결국은 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사회 내에서 보면 3만 명 이잖아요. 아까 저 '통일 초등학교' 사례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은 5분의 1 정도 줘야요. 그러니까 이제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선주민에게 위협이 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중국인 집단, 중국인이 많이 사는 가리봉동이나 구로동 같은 데 초등학교 가면, 이미 남한 선주민들이 다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 실 관계 맺는 동안에 굉장히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이 선주민이 자기가 주도한다거나 누구를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들이 더 주도적 인 거죠. 그 중국에서 온. 그러면 중국 문화에 대해서도 훨씬 더 다양하게 받아들이 고. 근데 여기는 이제 이 정도 되니까, 약간은 눈에는 거슬리는데 아직은 주도권을 우 리가 가진 거고, 그렇다고 이들이 우리한테 위협은 되지 않으니까 대놓고 배제하지

않는 정도의 애매한 거죠. 예를 들면 지금은 3만 명이지만 만약에 서울 시내에 이들이 10만이 된다. 그리고 정말 중국 동포처럼 만약에 60만 70만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문제의 양상들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선주민이, 위협감을 느낀 선주민들이 내놓고 심하게 배제하는, 그러니까 정말 제도적으로 배제하는 것도 막 나올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지원금 이렇게 쓰냐” 왜냐하면 이제 남동구에서 보여지는 거거든요. 남동구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차상위들끼리 싸우는 건데,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센터에서 정보비(?)도 갖다 주고 뭘 갖다 주는데 우리는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는 안 주고 재네들만 주냐” 이런 갈등이 많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지역은 이제 북한이탈주민이 그 만큼 가시화된 거죠. 그래서 눈엣가시가 되는 거고,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 것도 한 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3만 명인데... 그런 시나리오는 세우시지 않으세요? 만약에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집단 탈북이 더 많아지는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탈북민들의 가시화 욕구 혹은 선택적 비가시화

개방적이라고 하면, 사실 어떤 목적 의식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죠. 마담B(다큐멘터리 주인공) 같은 경우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되게 적극적이고 개방적으로. 특히 마담B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정말 하고 싶어 했어요. 영화를 통해서. 뭔가 세계에 알리고 싶었고, 나 같은 사람을 취재하면서 나와 비슷한 사례들도 많을 것이고, 그러면서 되게 알리고 싶어 했어요. 주위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만난 다른 탈북자분들도 비슷한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같이 저녁도 먹고 밥도 먹고 얘기도 하면서 놀았지만, 너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얘기도 하고 싶고 이웃 얘기도 하고 싶고. 사람들이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쪽에서 무척 개방적이셨죠, 사실. 어떤 자신의 목적 의식이 있으니까. 어떤 분은 이제 청도에서 만난 식당 아주머니인데, 마담B 통해서 만난 친구분인데, 그분은 이제 탈북을 했다가 보위부에 잡혀서 복송됐다가 거기서 감방에 가서 3년 있다가 다시 탈출해서 나오신 분인데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고. 그런 분은 또 의외로 자기 얘기를 되게 하고 싶어 하셨어요. 좀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되게 알리고 싶어 했어요. “나는 억

울한 일을 당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이제 결혼한 친구, 한국에 와서 결혼한 친구는 억울한 일은 안 당했는데 그냥 알리고 싶지 않아 했어요. “내가 중국에 와서 애 낳은 거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고, 난 그냥 여기 와서 새로운 삶을 살래.” 그런 친구들은 전혀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해요, 자기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또 어떤 친구는 아예 북한 억양을 완전히 없애버려서... 완전히 100% 한국인처럼, 옷 입는 것부터 해서 화장, 말투까지 그냥 한국인이거든요, 네. 그리고 싶은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마담B 아들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사실 첫째 아들은 제가 취재할 때만 해도 막 노동을 많이 했어요. 부산의 영도까지 가서 공사장 막노동하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취재를 한 적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애들은 사실 일단 더 여자들보다 더 작고, 탈북한 그 규모가 더 작고,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어요.

탈북 여성들은 누구인가

이탈 주민 여성들을 만나면, 다 페미니스트라고 또 보거든요. 결혼 제도 같은 거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본인들의 생존이고 자신들의 삶이잖아요. 근데 남한의 여성들 대부분은 사실 그 정도의 의식을 가진 여성이 별로 없거든요. 남의 눈 의식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마음 맞으니까 내가 좋으면 할 수 있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성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탈 주민 여성들이, 사실 거기까지 오기도 굉장히 고통스럽겠으나, 그 모습들이 주는 함의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 근데 그걸 받아들일 때 우리가 자꾸 피해자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나러 갑니다>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재현들. 저는 이제 <마담B>에 가장 좋은 건, 그녀는 피해자가 아니잖아요. 그녀가 선택하잖아요. 제가 보는, 제가 만난 여성은 사실 그런 모습이 실제 많아요. 근데 다른 영화 속에서는 다 피해자인 거예요. 막 울거나 애원하거나 사정하거나 이런 모습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좀 더 많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3 미래이슈와 대안

이머징 시티즌이 미리 겪은 일상으로서 미래 이슈, 그리고 먼저 온 미래를 경험한 이머징 시티즌으로서 이들이 주장하는 이슈에 대한 해법, 대안을 고려한다. 여기서는 기존 연구 및 관련 입법 분석을 통해 이슈와 대안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 당사자, 연구자의 인터뷰를 인용함으로써 핵심 이슈, 대안적 가능성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북한 국경을 넘은 이후 중국 및 제3국에서의 장기 체류, 한국 입국 혹은 다른 국가로의 난민 신청 및 이주 등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이주의 맥락을 갖는 탈북민들의 현실은 이들의 사회통합 문제가 단순히 한국 정착 이후 일정한 물리적 지원, 시민권 획득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낸다.

2000년 이후 탈북민들의 구성에서 여성이 70-80%를 차지한다는 점, 다수의 탈북여성들이 정착한 한국에서는 물론 이들의 탈북과정에서 북한, 중국 등에 가족이 있고 이들을 지속해서 부양하는 특성은 북한을 떠나 한국을 택한 이들의 정착이라는 탈북민의 법적 범주에는 포괄되지 않는 제3국 출생 탈북여성의 자녀들, 가족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서 현실에 적합한 통합 정책이 어렵다는 것을 알려준다.

다양한 탈북 관련 연구, 정책 담론들은 탈북민 사회통합의 외적, 물리적 조건 뿐 아니라 내적 통합을 위한 요인으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사회 전반적 인식 및 태도변화 필요성을 지적하는 한편, 난민, 이주 관련 국제사회 보편적 규범의 관점에서 탈북민 사회통합을 비교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탈북 여성 및 제3국 출생 자녀들과 관련해, 21대 국회 처리, 계류의안들은 어떤 방식의 정책적 대안이 가능한지 최근의 흐름을 보여준다.¹¹⁾ 최근 입법 경향은, 탈북민들의 현재적 난관, 정책적 수요에서 출발하는 방향, 동시에 보다 넓은 보편적 인권의 문맥, 다문화, 이주민, 난민의 ‘대안적’ 관점에서 정책 담론, 입법을 선도하는 정치적 경쟁의 방향이 나타난다.¹²⁾ 지금, 여기 탈북민들의 현실에 밀접한 요구, 수요에 대응하는 입법의 경우 탈북민들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들의 관점, 이들의 이주 및 가족 실천이 갖는 초국적 이주

11) 21대 국회 회기(2020-2024)에서는 2023년 10월 15일 현재, ‘북한이탈주민’ 관련해 총 54건의 의안이 제출된 상태다. 공포된 의안은 6건, 대안반영폐기가 10건, 철회가 2건이며, 나머지는 계류중이다.

12) 구체적 탈북 관련 21대 입법안에 대해서는 유희수 외(2023) 6장, pp.124-132를 참고.

의 맥락을 반영하는 정책을 지향한다. 이와 동시에 보다 추상적인 차원에서 탈북민들의 사회통합을 둘러싼 학술·정책적 ‘관점의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바, 일부 개정안들은 다문화, 이주민, 난민 관점에서 탈북민들을 정의하는 이론적 진전을 보이는 한편 당파적 관점에 따라 탈북어민 강제송환 등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들에 대한 정치적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

이머징 시티즌으로서 탈북 여성 및 제3국 출생 자녀들이 제기하는 이슈는 이들의 한국 사회에서의 통합, 예컨대 교육 현장에서 통합이 실상 ‘분리’ 정책에 가깝다는 현실로부터 이들과 같이 초국적 이주의 문맥에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보이는 이주민들의 통합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의 문제다. 특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형편, 정착한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조건에서 탈북민 1.5세대, 2세대가 겪는 교육의 불평등은 향후 직장, 거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다양한 소외, 차별과 배제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세대들이 탈북민의 위치를 어떻게 내면화하는가, 나아가 한국의 청년세대에서 탈북민 우대정책에 대해 공정 프레임을 역제기하는 등의 상황은 매우 문제적인 사회통합 현실을 보여준다.

다양한 가족 형태

“한국이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환대받는가? 그리고 이제 자신들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북한이탈주민 가족들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부모인 경우도 있고요, 엄마가 혼자 키우는 경우도 있고요. 중국인 아버지가 와서 같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아버지가 아이들과 상당한 친밀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아이도 중국말을 하고 아버지도 중국말을 하고, 아버지도 외롭고, 여기서 살면서. 그래서 중국말을 하면서 같이 있는 이런 또 많이 있는 거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탈북 여성이 제3국에서 아이를 데려온 후에 남한 남성과 결혼하거나 혹은 함께 살면서 이제 다른 아이를 또 낳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구도의 가정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상당한 정체성의 혼란 같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그 방과 후 수업을 참관했을 때 굉장히 당황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물론 수업의 내용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지 못하다 이런 여러 가지 비판도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학습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교육 자본이나 문화 자본에 상당히 제한된 어떤 접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한국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환대받고 있다... 사실 그런 생각은 별로 많이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자신들을 중국어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엄마가 거의 많이 부재하거나 아빠가 부재하거나 이런 경험을 함으로써 상당히 사회 속에서 소외된 경험을 하고 있다.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 환경

제가 굉장히 가슴 아프게 들은 것 중에 하나는, 그때 이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랑 많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하나센터>에서, 지역에서 학부모들과 아이들을 실제로 케어하는 공부방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하게끔 하고,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엄마들 정신적 트라우마 지원도 하고 취업을 알선하고 이런 일을 하는 선생님들인데, 이런 선생님들이 특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높으세요. 그러니까 아까 감독님께서 “접촉을 많이 하면 좀 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접촉으로 인해서 그 부정적인 편견이 더욱더 강화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했던 그 얘기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얘기는 뭐였냐면, “똑같이 못 사는 집이라도 남한의 부모들은 자식을 버리지 않는데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그 비인가 대안학교에 맡기고 나가서 이제 다른 지방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을 두고, 복지사의 시각으로 볼 때는 “자식을 버린 거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상당히, 한두 명의 아이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아이의 어떤 문화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북한 이탈 주민,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직장을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여성이 만약에 안산 지역의 서비스업에서 일하게 됐다라고 치면, 이제 그 하나원 동기 여성 혹은 같은 임대주택에 사는 여성들을 모집을 해요. 그래서 그 여성들이 다 같이 안산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은 다 집단 거주시설에서 머무는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경험하는 소외감 같은 것들은 상당히 걱정할 수준이다. 다른 저소득층의 엄마 아빠들도 바빠서 아이를 잘 케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더군다나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남한 사회 공정 프레임

세대가 교체가 되면서 저는 그런 것도 많이 현장에서 보는데. 예를 들면 1.5세대 같은, 탈북민 1.5세대 있잖아요 그 1.5세대는 지금 교육의 기회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20대들이 정말 불만이 많잖아요, MZ들이. 공정과 정의라는 부분이 엄청 큰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도 그런 경험을 해요. 예를 들면 탈북민 출신 1.5세대 학생들과 남한 출신 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탈북민 출신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가는 경우도 있는 거죠. 뭐, 미국 유학기회 같은 것들은 탈북민들은 마음을, 원하면 갈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또 막... 그 이렇게 뭔가 이 아이들이 전형적인 그거죠. 트럼프 때도 했던 것처럼. 소수자들을 비슷하게 출발선을 해주려고 했던 지원 정책이 확 뒤집히면서 보수화되는 담론으로 막 이제 막 뒤집혀가지고. 그런 걱정들도 많이 되고, 이제 대학 특례 입학 같은 경우도, 지금은 아직은 얘기 안 되고 있긴 합니다만, 탈북민들 특례입학 얘기를, 분명히 굉장한 내관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을 거다, 라는 생각도. 근데 이제 사실 특례입학이나 이런 교육의 기회는 탈북민들 중에서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대부분은 사실 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원 정책이 정말 보통의 탈북민들에게 적절하게 지원되고 있는가. 이 부분과, 그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거는 또 이제 어느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뭔가 또 대단한 악순환 같은 것들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지금 그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사회통합 관점에서 행위자들의 문화적 역량이 만들어내는 가능성

탈북민 1.5세대, 2세대의 사회통합이라는 단기, 중장기 미래와 관련해 탈북 여성 및 제3국 출생 자녀들의 정착 과정에서 발견되는 대안에 대해서는 앞서 이들의 미래 전망, 미래 선호에서 이들이 가시화, 혹은 비가시화를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등 다양한 적응을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을 맞이하는 한국사회 내 원주민들의 준비, 역량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주의, 이주의 맥락에서 사회통합을 고려한다면, 탈북민들의 사회통합은 그들의 한국사회 내 적응과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수용하는 한국사회의 포용과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교육 현장의 통

함으로 본다면 학교 리더십, 방과후 탈북민 교사를 포함한 교사와 대안학교, 한국출신 학부모, 더 넓게 탈북민 학부모가 근무하는 노동환경, 주거환경 등을 포괄하는 맥락에서 행위자들이 서로 어떤 성격, 질의 상호작용, 접촉을 하는가, 그러한 역량을 가지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특히 탈북민을 ‘먼저 온 통일’, 미래 한반도 통합적, 연합적 정치체의 실험적 수행자로서 이머징 시티즌의 위치를 부여한다면, 이들과의 공존, 통합의 문제에서 한국사회가 어떤 변화를 준비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중장기 한반도 미래전략에서 중요한 참조점이 된다.

역지대(liminal space) 이런 얘기를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공간이 어떻게 보편 되게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안에 행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 공간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교장 선생님이 그런 모습을 사실 보여줬던 거고. 그게 2019년도까지 되다가, 2019년도 이후부터 그 교장 선생님이 떠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고 난 다음에 남한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걸어요. 그래서 뉴스에서 나왔어요. 행정소송의 이유는 그 바로 옆에 새로 지은 제일 비싼 아파트의 엄마들이 내는 건데, ‘통일초등학교’에 배정되는 게 안 된다는 행정소송을 내요. 그 이유가 “건널목을 한 번 건너야 되는데 그 건널목이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학교가 아니라 옆에 학교로 조정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막 갖다 들이댄 거죠. 행정소송에서는 결국은 남한 주민들이 패하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한두 번씩 일어나면서 그 공간이 이제 굉장히 차별과 낙인의 공간으로 변하는 거죠. 그 남한 엄마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 이제 선생님들 굉장히 수동적이고 그 엄마들의 마음에 더 들려고 했고.

그리고 그 교장 선생님이 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학부모 교실을 열어요. 그래서 학부모 교실에서 이 북한이탈주민 엄마들과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해요. 취미 활동이에요. 음악, 악기 배우는 활동이라든지 뜨개질 이런 거를 하면서, 그 선생님은 사실은 그 여성들과 아이들의 삶을 좀 이해하려고 하셨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일단 교장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굉장히 존중해주니까 학교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변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아졌다.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

이어서, 다들 이제 “그때는 좋았는데” 이런 식으로 회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남한 아이들은 오히려 북한이탈주민 아이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정말 편견이 처음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저는 문화적 역량 같은 거 같거든요. 근데 그 역량은 부모로부터도 내려오는 게 있는데, 만약에 부모가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들한테 끊임없이 “저 사람들은 또 저런 게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문화적 역량과 자본이, 문화적 자본이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도 사실 훨씬 더 열린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아까 이제 소송 저는 엄마들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사실 이렇게 만나는 것이 과연 어떤 경험을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접촉을 그냥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준비를 하고 접촉을 할 것이냐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고요.

4 입법 및 정책적 시사점¹³⁾

탈북 여성 및 제3국 출생 자녀를 포괄하는 탈북민 사회통합 정책입법은 일차적으로 최소주의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공동의 노력을 구축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최소주의적 합의를 구축하는 기준과 관련해, 국회는 중장기(15-30년) 한반도 미래전략 프레임워크를 확립하고 그 안에 탈북민 관련 정책입법을 위치시켜야 한다.

여기서 중장기 한반도 미래전략은 일련의 단일하고 총체적인 단위로서 국가의 미래전략이라기보다 국민 개개인에 초점을 맞춰 이들이 맞이하게 될 중장기 미래환경에 대한 트렌드 전망, 그리고 이들이 갖는 미래선호 및 회피를 바탕으로 정책 패키지를 디자인하는 미래전략으로서 정의한다(박성원 외 2022, 김태경 외 2022). 국회의 정책입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국회발 미래전략은 이렇듯 개별 국민의 관점에서 중장기 미래를 대비하는 단기 우선순위 및 중장기 전략으로 상정하며, 다양한 영역, 의제별로 그를 둘러싼 다층적 균열, 갈등을 ‘침묵’시키기보다 드러내며 심각한 사회적 분열의 지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13) 본 소절은 유희수 외(2023), 6장의 pp.138-140의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전제로 최소한의 합의주의적 지형을 만들어나가는 전략적 접근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예컨대 탈북민 정착·통합 의제 역시 앞서 탈북민에 대한 명명 자체가 지속해서 변화해 왔고 현재 정책상 한계가 이들의 고유한 현실 자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괴리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점을 이해할 때(이화진·최대석 2011; 박종민 외 2022; 류이현·이덕로 2021), 우선 이들을 누구로 볼 것인가, 어떻게 포괄할 것인가의 문제, 즉 탈북민에 대한 맥락화된 이해에 바탕해, 이들 스스로의 관점, 참여 그리고 이들의 미래선택에 기초해 정책입법을 시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다수가 탈북여성 가장을 갖는 한부모 가정(평균 2.3인)이라는 현실과 ‘직행’으로 국내 입국한 엘리트 출신에 이르는 탈북민 사회 다양성과 변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이들에 대한 기존 한국민 사회의 포용, 인식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중장기 한반도 미래비전은 향후 30년 전망 15년 전략의 지평에서 단기적 우선순위와 중장기 전략을 제출해야 한다. 국회미래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사회는 중장기 미래 지평에서 다원성의 인정과 공존, 출신에 관계없이 삶의 질 보장하는 방향성에 대한 선호를 갖는다(박성원 외 2022;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2021). 이러한 미래비전을 탈북민 사회, 나아가 남북관계로 확장하는 관점에서 적용하면, 탈북민 사회통합은 △단기적으로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이주민 통합으로서 탈북민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부터 출발해 이들의 현실을 개선하는 정책입법, △중장기적으로 탈북민들의 경험을 미래 한반도 통합에서 고려해야 할 주권적 공백, 인권 보호의 구체적 ‘증거’로서 참고하면서 미래 공동의 한반도의 다문화, 이주민 통합, 한반도 주민의 삶의 질 제고의 차원에서의 정책입법 방향에서 추진가능하다.

탈북민 사회통합의 단기적 우선순위와 관련해서는 우선 현재 탈북민 사회 관련 지표들의 실질적 개선, 시급한 정책수요 대응을 진행해야 한다. 자살률, 정신건강, 소득수준, 교육수준, 의료수준, 소속감, 신뢰 등에서 한국사회 전체 평균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표를 기록하는 탈북민 사회통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서 분석했듯이 2000년대 이후 탈북 지형 변화, 탈북민 구성 변화 결과 탈북의 ‘여성화’, 젠더적 관점에 기초한 정책적 전환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최근 21대 국회 계류의안 일부에 반영되었듯, 다수 탈북여성, 한부모가정의 보호, 정착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성범죄로부터 보호, 신변보호담당관, 성평등 교육, 법·인

권 교육, 일/가정 균형 위한 육아 지원, 취업알선 등 성인지적 제도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제3국 출생 자녀 통합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탈북민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중국출생 탈북여성 자녀에 대한 실질적 지원 법제화, 사회문화적 통합 노력 등이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주의적 사회통합 관점에서 기존의 탈북민 적응에서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한 정책적 노력으로서 외적, 경제적 통합과 함께 내적, 사회심리적 통합 위한 공동체 기반 조성, 무연고 고독사, 자살 방지 지자체, 지역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

탈북민 사회 현실에 초점을 맞춘 정책입법 노력과 함께, 사회통합을 위한 인지·대응이 필요한 쟁점은 북한이탈주민의 특수한 보호 및 정착지원 수혜와 관련된 역차별, 공정 프레임 문제, 사실상 ‘분리정책’의 성격을 가지는 교육, 취업 등 정책지원 관련 평가 및 개선, 국내 탈북민들 중 존재하는 국민 개념에 친화적인 반면 이주민, 난민 개념 관련해서는 쉽게 인정하지 않는 인식적 괴리, 2000년대 이후 국내 정착했다가 해외 난민신청, 이주를 시도하고 추방, 귀환되는 등 탈북민들의 초국적 이주 맥락이 복잡해진 최근 현상¹⁴⁾ 등이 존재한다.

중장기적 미래전략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한국사회가 아니라 향후 미래 한반도 권역에서 다문화, 이주 통합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의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탈북민 사회통합을 넘어서는 전제로서, **한반도 단위에서 상이하고 비대칭적 정치체 공존, 평화의 제도적 디자인, 정체성 문제 관련 정책·연구 담론이 필요하다.**

한반도 통합과 관련해서는 동질성을 강조하는 획일적인, 일방적인 개념을 지양하고 다원주의, 합의주의적 개념을 지향하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틀에 기반할 때, 탈북민 사회통합, 북한인권 제기가 한국사회 중심적 접근의 한계에 머물거나 남북한 및 주변국과 갈등적 사안으로 비화되는 흐름을 예방하는 것이 가능하다.

궁극적으로 한반도 인권에 대한 지속적 협의와 개선 노력은 남북한 사회 인권에 대한 포괄적(holistic) 접근, 즉 정치화, 양극화의 대립을 넘어 인권 문제를 한반도 인권의 총체적 관점에서 다루는 방식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에서 한국사회 이주민, 난민, 장애인, 노인, 여성, 성소수자, 다문화, 노동자, 경제적 취약계층 등 인권, 사회통합 정책, 입법 관련 진전이 필수적인 한편, 탈북민 통합에서 나아가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기본권 신장을 위한 조건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14) 2000년대 중반 서구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난민신청 받으면서 국내 정착했던 탈북민 중 이주 시도, 2010년대 중반 이후 난민신청 절차 강화되면서 추방, 귀환 혹은 다른 국가 난민 재신청 등 패턴도 나타났다(이지연 2020).

제3절

성소수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이들은 왜 이머징 시티즌인가?

성소수자, 퀴어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성소수자 정의와 관련해서는, 성별정체성, 젠더표현, 태어났을 때 지정받은 성별, 성적으로 끌리는 대상, 감정적으로 끌리는 대상 등의 범주를 다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성소수자는 퀴어(Queer), 혹은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바이섹슈얼(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 퀘스처닝(Questioning), 무성애자(Asexual), 간성(Intersex) 등을 포함하는 LGBTQ+, LGBTAIQ+로 표기하기도 한다(성소수자부모모임 2023, 18-19).

타인에 대한 △감정적 끌림(로맨틱 지향), △성적 끌림(성적 끌림을 느끼지 않는 무성애자, 성별에 관계없이 끌리는 범성애자도 존재)의 측면, 태어날 때 생물학적 특징을 기반으로 정해지는 지정성별과 스스로 인지하는 △성별정체성의 일치 여부(양자가 일치하는 시스젠더, Cisgender), 차이를 보이는 트랜스젠더, 여성, 남성의 이분법적 정체화를 거부하는 논바이너리(Non-binary) 혹은 젠더퀴어(Gender queer)도 존재), 개인이 자신의 성적 특징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하는 △젠더표현(트랜스여성이라면 여성스러운 표현을 강요받는 등 성별정체성과 젠더표현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등에 따른 성정체성은 개인마다 천차만별일 수 있다(성소수자부모모임 2023, 19-30). 이러한 성정체성의 관점에서 사회의 이성애규범성, ‘정상성’의 규정에서 벗어나 소수자적 지위를 경험하는 이들을 성소수자라고 이해할 수 있다.

성소수자 인구를 추정하는 국가 수준의 통계가 없음을 고려해 해외 성소수자 인구 통계를 비교적으로 참조하면, 2020년 미국 갤럽 조사는 미국 인구의 5.6%가 스스로 성소수자로 밝힌다고 조사했고 다른 나라들의 결과도 적게는 3.5%에서 많게는 5%까지 수준의 결과를 보인다고 한다(성소수자 부모모임 2023, 42). 성소수자부모모임¹⁵⁾은 성소수자

15) 성소수자부모모임은 성소수자의 부모, 가족 그리고 지지자들의 모임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성적 지향, 성별 정

인구를 한국 전체인구수의 약 4%로 잡아 약 200만 명 정도로 추산하는 한편, 커밍아웃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소수자들의 비율이 82%에 달한다고 지적한다(성소수자 부모모임 2023, 42-43).

서구 페미니즘, 레즈비어/게이 연구·실천의 장에서 1980년대 말까지도 비하적 의미로 쓰였던 ‘퀴어’가 혁신적 정치, 이론적 함의를 가진 언어로 부상한 것은 1990년의 일이라고 한다.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트러블』, 이브 세지윅의 『벽장의 인식론』, 데이비드 해퍼린의 『백년 동안의 동성애』 출간과 함께 테레사 드 로레티스의 ‘퀴어 이론’이라는 용어가 나타난 것도 1990년이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1990년을 ‘퀴어 원년’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정민우 2012, 55). 호모/헤테로의 이성애규범성에 도전하며, 정체성은 고정화된 본질주의적 속성에 환원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을 퀴어를 정의하는 중요한 속성으로 보면, 이론적·정치적으로 퀴어는 사실상 모든 ‘정상적인 것’의 체제에 대한 저항을 말하는 것까지 확장되며, 인종·젠더·계급·섹슈얼리티의 교차하는 적대에 대한 광범한 사회적 비판의 인식론적 출발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정민우 2012, 57-58).

퀴어 이론에서 말하는 성소수자, 퀴어의 정체성, 그 정치적 가능성, 의미에 견주어, 2023년 한국 사회에서 퀴어는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도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반대하는 인권운동이 확장되었고 2020년 트랜스젠더 군인 제대 사건,¹⁶⁾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학생 입학 포기 사건 등이 사회적 이슈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홍성수 2021, 53). 여전히 성별정체성, 성적 지향을 둘러싼 한국 사회 내 논쟁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지속되고 있으나, 국제사회에서 차별금지사유로 자리잡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SOGI)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서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는 입법안들이 2020년 제출되었고,¹⁷⁾ 2023년에는 혼인평등법(민법 개정안), 생활동반자법, 비혼출산지원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¹⁸⁾

체성, 성별 표현에 따른 차별 없이, 있는 그대로 존중받는 세상을 이루기를 바랍니다.”를 비전으로 2014년 활동을 시작한 단체다.

16) 2020년 1월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한 육군의 전역처분 결정은 성별정정이 인정되는 변 하사의 성정체성을 부정한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은 변 하사가 세상을 떠난 2021년 10월에 나왔다(참여연대 2021).

17) [2101116] 차별금지법안(장혜영의원 등 10인), 2020.6.29. 발의, [2110822]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상민의원 등 24인), 2021.6.16. 발의, [2111964] 평등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3인), 2021.8.6. 발의, [2112330]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권인숙의원 등 17인), 2021.8.31. 발의

18) [2122404]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장혜영의원 등 14인), 2023.5.31. 발의; [2121647]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한편 2022년 11월 미성전자 자녀의 존재 여부가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정정을 불허하는 독자적 요건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2023년 2월 동성부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 2023년 3월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MTF(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전환) 트랜스젠더 여성의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서울지방법원 판결(2021년 FTM(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전환) 트랜스젠더 남성 성별정정 허가) 등 성소수자 인정과 관련된 주요 판결들이 나왔다.

2000년대 이후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와 좌절의 굴곡과 함께 성소수자의 인권, 평등을 위한 정치적 노력, 한국 사회에서 비가시화된 이들의 존재, 목소리 자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은 현재진행형이다. 이머징 시티즌으로서 성소수자를 바라보는 것은 보편적 기본권의 인정, 차별과 혐오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삶의 기회를 요구하는 이들의 투쟁이 적어도 근미래에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 특히 최근 한국사회의 인권, 평등을 향한 운동에서 이들의 가시화를 위한 투쟁이 부상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러한 최근 변화에는 국제적 영향, 지역적 변화의 맥락도 존재하며 개인의 정체성, 인권과 관련된 가치·담론의 변화가 드러난다.

서구의 경우 2000년대 들어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고, 동아시아에서는 2019년 대만이 최초로 동성 결혼을 법제화하고 2023년 5월에는 (기존에 독신이거나 한쪽 배우자의 생물학적 자녀에 대해서만 가능했던) 동성 부부의 입양권을 확대했다(임아영 2023). 일본의 경우 2015년 도쿄 시부야구에서 동성 커플에게 사실혼 관계 증명서를 발급하는 조례가 통과된 ‘파트너십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되어 2023년 5월 현재 700여개 중 328개 지자체가 파트너십 제도를 채택한 상태이며, 2022년 3월 삿포로 지방재판소가 동성 커플에게 혼인의 법적 효과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놓은 이같은 판례가 다른 지자체로 확대되고 있다(임아영 2023). 2023년 10월에는 일본 최고재판소가 트랜스젠더 여성이 직장 내 여자화장실 사용을 제한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호적상 성별 정정을 위해 성전환수술을 받아야 하는 현행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일본 의회는 관련법 개정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최근 한국 하급심에서도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판례가 나오면서 법률 제정이 신속하게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홍윤지 2023).

법률안(옹혜인의원 등 11인), 2023.4.26. 발의; [212239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의원 등 12인), 2023.5.31. 발의; [212239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의원 등 15인), 2023.5.31. 발의

가족구성권, 성별정정 인정 등 기본권을 보장받고자 하는 성소수자의 투쟁은 이들 자체가 미래에 수적으로 많아진다는 전망에서라기보다 몸으로 겪는 그들의 인권, 시민권의 문제가 가리키는 사회, 즉 기존의 이성애규범성, 정상성의 체제가 개인을 배제하고 혐오, 폭력의 위험을 부가하는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가 증장기적 관점에서 다양성과 포용,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는 미래비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국가증장기아젠더위원회 2021, 박성원 외 2022).

2 미래전망과 미래선호

이머징시티즌으로 이들이 전망하는 미래, 이들이 선호하는 미래는 무엇인가. 여기서는 당사자, 연구자들의 인터뷰에 바탕해 이머징 시티즌 관점에서 바라보는 미래전망과 선호를 드러낸다.

성소수자들의 한국 사회 미래에 대한 전망, 선호 관련 논의는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사회적 무지, 무관심, 혐오와 차별이 여전히 만연하며 단기간 쉽게 바뀌기는 어렵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최근 일부 판례, 입법 노력에서 변화가 조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 인권, 평등을 보장하는 법제의 미비, 그리고 성소수자 현실에 대한 전반적 인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교육의 공백을 해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요구라는 점을 드러낸다. 특히 성소수자부모모임은 ‘당사자’의 부모, 가족이라는 위치에서 점차 정체성에 대한 인지와 관련해 심리적, 사회적 난관을 겪는 성소수자 청소년들의 연령이 내려가고 있는 현실에서, 이 미래세대가 스스로를 긍정하고 기본적 인권의 존중, 사회적 인정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기본 법제 마련 및 교육 및 인식 변화 단기, 증장기 미래에 확립되어야 한다는 절박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마찬가지로 〈서울 퀴어의 주거와 일상〉을 주제로 한 연구자는 그가 만난 성소수자들의 기록, 인터뷰 등에 바탕해 이들이 주거, 직장, 병원 등 일상에서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등 스스로 정체성에 대한 침해, 폭력의 불안 없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일상을 원한다는 것을 공유했다.

퀴어 인정: 차별금지법 제정, 결혼 인정

미국에는 헤이트 크라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수자에 대해서 차별하는 거는 좀 더 가중 처벌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게 없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되는 건 아니더라도 이제 법적으로만 좀 그런 혐오 표현 규제법이라도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동성혼 법제화에 혼인 평등 얘기 나오는데, 이제 상징하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분들이 오랫동안 같이 살았는데 한 분이 아플 때... 저는 실제로 그런 커플들 얘기 듣거든요. 병원에서 보호자로 사인도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막 몇십 년 동안 재산을 일구었는데 딱 죽고 나면은 오히려 연 끊고 살았던 가족한테 가고, 막 재산이.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네. 40년 동안 살았는데, 아마 연세는 우리 나이 정도 되신 분일 것 같은데. 그냥 같이 살아서... 그 파트너분은 소파 하나도 못 건졌대요. 보호자들 연결도 안 되고, 연도 끊고 사는데 보호자 찾아서 사인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은 관계라도 저렇게 건강보험처럼 딱 인정을 딱 해주면 일단은 나을 텐데.

교육의 중요성: 당사자의 자기 인정

사실 저희가 제일... 항상 이거 활동하면서 중요한 거는,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이 돼 있어야지만 당사자도 내가 좀 남하고 다를 때도 그렇게 좀 쉽게 자신을 인식하고 본인이 그렇게... 뭐라 그러나, 부정적인 감정을 갖지 않고 자기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는 수도 있고. 요새는 좀 들었다 그래도. 홍석천밖에 없고... 다 안 좋은 얘기만 듣고 이러다 보면, 그분들이 이제 좋을 수가 없는 거죠. 항상 마음이 불편하고... 자책이... 그래서 사실은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이 돼야 되는데, 또 그런 걸 알아야지 또 상대방이 좀 행동을 이상하게 해도 받아들이고 내가 그 상대방을 도와줄 수도 있고. 워낙 그런 교육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관련 입법 필요성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그 법적인 문제 얘기, 판사마다 다 다르다는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트랜스젠더들이 모든 사람들이 수술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안 하고도 살고 다 원하는 정도가 달라요. 어떤 사람, 진짜 어떤 사람은 호르몬조차도 안 하고 싶어 해요. 근데 호르몬은 기본으로 많이 하지만, 호르몬조차 안 해도 나는 내 정체성으로 그냥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MTF분들도 이미 화장하고 그러고 다니고 있어서. 자긴 그냥 이대로 살래, 하는데. 어디 가면 항상 주민번호가 문제가 되니까.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수술을 하거든요. 근데 수술을 하는 게 돈도 엄청 엄청 많이 들고. 문제는 무진장 힘들고.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이게 악순환인 게 돈을... 성별이 다르니까 돈을 못 벌고, 또 돈을 못 버니까 성별을 바꿀 수가 없고. 지금 이게 묶여가지고선 트랜스젠더 특히 MTF들은 더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법을 바꿀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수술을 안 하고도 바꿀 수 있는 걸... 외국은 그렇게 해요. 자기 지향, 정체성 가지고. 성기 재건, 고환 적출까지 안 해도... 뭐, 호르몬 치료만 한다든지, 아니면 “내 성정체성은 이거다.” 이렇게 해도 성별 정정해주기도 하고 외국은 이제 되는데, 한국은 아예 수술을 다 하고 가도 아직도 안 될 수도 있는. 돈만이 문제가 아니라 수술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해놓고도 굉장히 애를 먹어요. 수술이 제대로 안 돼서. 원하지도 않는데. 본인이 원하면 괜찮죠. 그래서 법이 만들어져야...

퀴어 문제 관련 미래 전망

약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금 달라지기는 하는 것 같고. 더 나가려고 하다 후퇴하다 이러기는 하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더 후퇴가 된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은... 왜냐하면 퀴어퍼레이드도 서울 광장을 못했잖아요. 이번에 못했잖아요. 이번에 대구 퀴어퍼레이드 때도 그렇게 막 강력하게 반대하고. 그리고 학생인권조례도요. 그나마 있던 것도 지금 이제 후퇴할 상황이니까. 지금은 더 후퇴됐고. 그렇기도 하지만, 또 저 건강보험이라든지 또 뭐 군인 그 판결문 나온 거 보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조금씩은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네, 조금씩은 나아지고. 그런데 의외로 또 한국은 또 바뀌기 시작하면 또 확 바뀌기도 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사실 그 몇 년 동안에 그렇게 제일 많이 올랐다는 거는 한국이 워낙 바닥이기 때문에 오른 거지. 이제는 아마 그렇게 절대로 못 오른다고도 보입니다.

교육의 미래 가능성

외국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성소수자가 사회에서 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제... 한국도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은 그렇게 좀 달라지고는 있어요. 지금 요새 중고등학교는 잘 모르겠긴 한데. 한 6년 전이긴 하지만 어느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각 반마다 설문조사 “너네 반에 동성애자가 있다고 생각하냐. 있으면 이름 적어라.” 막 이런 걸 해고, 해가지고. 굉장히 차별적인... 예. 그런 게 난리가 났었죠. 그 당사자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불안하고. 그런 거를 한다는 거랑. 교사들 중에 혐오를 표현하고 수업시간에 그러는 거.

단기, 중장기 미래 선호

일단은 이제 아까 단기부터 말했을 때가 이제 저기 말하는 법들이 이제 생겨야 된다는. 차별금지법, 혐오표현 규제법 막 이려고, 이제 성확정 수술, 아니, 저기 성별 정정 절차 뭐 이런 거, 성중립 화장실 이런 것들이 최대한 빠르게 단기적으로는 저희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혼인 평등은 바로 되지는 않더라도 지금부터 가시화를 해서 시작을 이제 막 해나가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의외로 또 빨리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혼인 평등도 이렇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미 미국이나 다른 나라, 이제 동성혼 법제화 된 데는 이제 결혼해서 입양도 하잖아요. 그리고 자식도 낳고, 아까 그 커플분들처럼. 그러면 이제 그 자녀들까지 이제. 그래서 저는 미국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카스트로 빌리지라고 이렇게 게이 커플, 게이 레즈비언 커플들 모여 사는 데들이 있거든요. 뉴욕에도 조금 <섹스앤더시티>에 나온 그린위치 그런 부자 동네인데 그런 데도 있고 한테. 보면 거기는 많이 모여서 사니까 학교에 가도 부모가 게이 커플도 있고 레즈비언 커플도 있어서 애들이 그렇게 차별되지 않고, 이렇게 좀 모여 사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점점 이제 성소수자면서 부모인 사람들의 모임도 생기지 않을까, 외국처럼.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제 부모들이 너무 이제 편견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모임이 생겼지만, 그런 이런 모임이 필요 없는 시스템, 사회까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퀴어들의 주거, 일상을 위한 선호: 비퀴어의 미래 주거에 대한 참고도 제공

〈서울 퀴어 주민의 미래 만들기〉 사례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무지개집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집은요, 〈함께주택〉이라는 주택 협동조합이 있는데 거기에서 2호로 만든 프로젝트이고, 공식적으로 알려진 한국 최초의 성소수자 공동주거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생기게 된 배경에는, 그 전신은 게이인권단체인 〈친구사이〉에서 있었던 〈퀴어타운 프로젝트〉인데요. 아무래도 성소수자들은 거주지를, 물론 서울에서 누구나 집을 구하는 것이 어렵고 주거 불안성이 높은 곳이긴 하지만, 특히 성소수자 경우에는 안전한 집을 찾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버림을 받거나, 그래서 급하게 주거가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고, 혹은 파트너와 같이 살고 싶지만 집을 같이 구하는 것 자체가 곤란한 경우도 있고, 이 속에서 알게 되어서 굉장히 험한 일을 당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안전한 곳에서 남 눈치 보지 않고 재미있게 살아보자”라는 의도에서 같이 뜻을 모은 분들이 함께주택을 통해서 집을 짓고 같이 살고 계십니다. 작년에 이 프로젝트를 소개한 〈여기는 무지개집입니다〉라는 책이 나왔고요. 또 이 과정을 전부 다 기록해서 만든 자료집이 있어요. 그 자료집은 〈무지개집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이고 그 부제가 〈개인의 주거 문제, 공동이 해결합니다〉라고 해서. 제가 이 사례에 주목한 이유는, “서울” 하고 “공간”이라고 한다면 퀴어와 비퀴어를 떠나서 사는, 그러니까 집 문제가 가장 크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소수자들이 겪고 있는 곤란함을 말하기 시작한 게 2020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구가 나오고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게 그즈음인데, 그 전에 이미 이런 문제를 자력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고. 더군다나 협동조합 주택이라는 형태가 독일에서는 굉장히 흔한 형태이긴 한데 한국에서는 드물고, 이것이 어떤 주택의 시장화, 주택의 본래 기능이 아니라 사고 파는 재산상의 기능이 굉장히 도드라지는 한국 상황에서는 어떤 미래, 어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않나 해서 소개해드립니다.

3 미래이슈와 대안

이머징 시티즌이 미리 겪은 일상으로서 미래 이슈, 그리고 먼저 온 미래를 경험한 이머징 시티즌으로서 이들이 주장하는 이슈에 대한 해법, 대안을 고려한다. 여기서는 기존 연구 및 관련 입법 분석을 통해 이슈와 대안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 당사자, 연구자의 인터뷰를 인용함으로써 핵심 이슈, 대안적 가능성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성소수자의 기본적 인권, 시민권의 인정 투쟁은 한국 사회의 소수자 집단의 요구로서 지금, 여기 현재적 쟁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중장기 미래비전이 다양성의 가치, 차이의 공존이 가능한 성숙사회에 있다면, 한국사회의 이성애규범성, 정상 가족의 체제를 넘어서는 성소수자의 이슈란 기존의 질서, 규범을 의문시하고 저항하는 시민이라는 특성에서 그 창발성(emergence)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성소수자가 투쟁하는 당면 이슈는 2000년대 이후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평등법 입법안이 증명하는 것처럼, 사회적 ‘차별’과 ‘혐오’로부터 자유롭게 스스로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 권리를 보장받는 것, 주거, 노동, 의료 등의 경제적, 사회적 인권을 평등하게 누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홍성수 2018; 2021; 박한희 2021; 김종우 2021; 이승현 2023).

[표 5-3] 차별금지사유 비교

법률/ 법안	2000 국가인권위원회법	2006 인권위 법안	2007 법무부 법안	2020 차별금지법안	2020 평등법시안
차별 금지 사유 목록	성별	성별	성별	성별	성별
	종교	종교	종교	종교	종교
	장애	장애	장애	장애	장애
	나이	나이	연령	나이	나이
	사회적 신분	사회적 신분	사회적 신분	사회적 신분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지역	출신 지역	출신 지역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국가	x	출신 국가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출신 민족	출신 민족	출신 민족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용모 등 신체 조건	신체 조건	용모 등 신체 조건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 ·사별·사별·재혼· 사실혼 등 혼인 여부	혼인 여부	혼인	혼인 여부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임신 또는 출산	임신	임신 또는 출산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x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인종	인종	인종	인종	인종
	피부색	피부색	피부색	피부색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전과	x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전과
	성적(性的) 지향	성적지향	x	성적지향	성적지향
	x	x	x	성별정체성	성별정체성
	학력	학력(學歷)	x	학력	학력
	병력(病歷)	병력	x	병력 또는 건강상태	병력(病歷)
	x	x	x	언어	x
	x	x	x	국적	x
	x	고용형태	x	고용형태	고용형태

출처: 홍성수(2021, 52)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입법 노력은 이른바 가족구성권 3법(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 (김병록 2023), 성확정수술에 대한 요구 없이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을 가능하게 하는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성별인정법)¹⁹⁾도 존재한다(김진영 2023). 특히 미성년자 자녀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정정을 허용, 동성부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용 등에 대한 법원 판결이 최근 이어지면서 판결의 기준이 되는 법 제정의 필요성도 더 부상한 현실이다. 이렇듯 성소수자의 인권, 평등을 보장하는 법의 정비에 대한 시급성에 대해 성소수자들은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동시에 성정체성의 형성이 이미 청소년기에 이뤄지는 현실을 고려해, 학교 교육 일선에서 성소수자 관련 인식 개선, 교육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도 핵심적 이슈로 거론된다. 대학은 물론 초중고등학교 수준에서 성정체성, 성소수자 관련 교육을 통해 당사자들의 자기부정이 아닌 긍정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전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수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의 문제는 미래세대 성소수자의 인권, 평등의 문제, 특히 청소년 성소수자의 높은 자살률 통계, 괴롭힘의 현실로부터 이들의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게 제기되어야 한다.

교육을 통한 사회 인식의 변화

이쪽에서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문제는 나라에서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걸 막고 있어요. 교육을 해도, 성교육이라는 거를 하면서도 양성 교육만 하지 거기에 성소수자 말만 들어가도 교육을 못하게 돼있거든요. 그리고 단어도 ‘양성’이라고 하면 안 되고, 성... ‘양성평등’ 말고 ‘성평등’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양성이 아니니까. X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인권단체는 이미 “성평등” 하고, 대학에서도 “대학 인권 성평등센터” 이렇게 하는데. 여가부만 아직도 <양성평등센터>란 말이에요.

19) 2023년 11월 20일 장혜영 의원은 성별인정법 관련 발의를 예고했다. 장혜영 의원은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따른 성별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별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변경하는 것을 ‘성별의 법적 인정’이라고 정의하고, 모든 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의 인권 존중과 차별 금지를 주장했다. 또한 ‘성별의 법적 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성전환수술을 포함한 의료적 조치를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심문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가능성을 고려해 심문절차를 임의절차로 하며, 심문조서와 결정문 작성을 의무화했다. 마지막으로 ‘성별의 법적 인정’의 신청과 동시 또는 심리 중에 개명하기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법 시행 이후 3년마다 국제인권규범 등을 고려해 성별의 법적 인정 절차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개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김진영 2023).

어쨌든 제일 큰 게 선생님들이라든지 아이들 교육이 제일 중요한데, 그게 안 돼 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사실 장애인 부모들은 하거든요. 원래 장애인 부모들도 어디 가서 말도 못하다가... 장애인 부모들은 그래도 몇 년 이랬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해요. 학교 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도 얘기하고. 그런데 성소수자는 어디 가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게 지금 제일 급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인식이 바뀌지. 그나마 있던 학생인권조례도...

성정체성 형성기 청소년 퀴어 문제

특히 MTF트랜스젠더가 진짜 괴롭힘 많이 당하거든요. “너 남자 맞아?” 화장실 가서, 끌고 가서 벗겨보고 이런 거 진짜 많이 겪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 그만 뒀요. 네, 시달려가지고. 요새는 (성소수자부모모임에 오시는) 트랜스젠더 부모님들. 그나이가 다 어려워요. 제이, 제이들도 중학교 애들이 제일 많아. 그러니까 요새는, 어... 옛날에는 거의 성인 됐을 때 커밍아웃 했는데 요새는 청소년 시기에도 많이들 해가지고. 요새는 애들이 그런 거를 빨리 깨우치는 거죠. 아, 내가 이렇다는 거를. 근데 이제 부모들은 못 쫓아가고. 물론 아이들도 거기서 정체성을... 계속 힘들어 하지만, 부모들이 더 못 받아들이죠. 크면 ‘아,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어린애가 그럼 아까 말씀대로 “니가 뭘 알아?” 이런 식... 이렇게부터 나오니까.

외국에서는 성소수자를 어떻게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동성혼에서 난 아이들을, 어떻게 아이를 가질까부터 시작해가지고.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는 성확정 수술을 하기 전에 자기 난자를 얼린다든지 정자를 얼린다든지. 이런 것도 자연히,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순서적으로 내가 원하면 할 수 있는 그런... 한 삼십 넘어서 트랜스젠더들은 그런 생각을 할 여지가 없이 호르몬을 한 거예요. 내가 애를 가지고 싶어도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아예 그런 개념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민을 하는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에 호르몬 치료 시작을 이제 너무 2차 성징이 이렇게 발전하기 전에 하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키도 크고 덩치도 이렇게 된 다음에 하지 않으려고 많이들... 일부러 발 안 커지게 하려고 작은 신발 신고 막 그래요. MTF 트랜스젠더분들 청소년 때 안 먹고, 일부러. 키 안 크고 싶어서.

그걸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나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내가 뭐 여자다 남자다, 이제 트랜스젠더를 표시를 하면 일단 병원을 데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병원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내가 예를 들어서 (지정성별) 남자인데 “나는 여자야” 그러면 여자 옷처럼 입게 하고, 학교도 그러고 다녀보고, 이렇게 어렸을 때 사회적으로 먼저 살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커서 이제 2차 성징이 시작되려고 하면은 2차 성징을 발현하지 못하게 호르몬을 억제제를 줘요. 그래서 억제제를 맞고 나서 몇 년 지나고 나면 이제 애들이 이제 열몇 살 되고 내가 좀 확실하게 정말로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게... 되면 그때서 호르몬 치료를 하고, 본격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들어가야지, 어린애를 내가 여자로 했다고 그때부터 여자로 바꿔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정을 시켜줄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한편 성소수자, 퀴어들이 삶의 일상에서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하는 경제적, 사회적 시민권의 관점에서 주거, 직장, 의료 등 영역에서의 안정, 평등은 현실적으로 중요한 이슈다. 이러한 일상의 이슈들은 성소수자들의 권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사회의 어떤 측면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이들이 실제 어떤 위험, 차별에 맞서 투쟁하고 변화를 쟁취하고 있는가를 들여다 볼 수 있게 해준다.

퀴어로서 사는 일상

(인터뷰 등을 통한 연구결과) 퀴어주민의 현실을 요약해보자면 이성애중심주의에 어떤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 친구, 집단 및 직장에 만연해 있고 여기서 퀴어는 지속적으로 소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퀴어 커뮤니티는 20~30대의 게이 남성과 레즈비언 여성 중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령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중년 이후에 이런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 넌바이너리에 대한 몰이해가 있는데 여기에는 세대차가 존재한다는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퀴어들이 모이는 곳에 간다, 레즈비언 여성들이 있는 곳에 간다, 게이 남성들인 곳에 간다 해도 “그저는 너 혼자 불편한 거 아니니? 뭐 사실은 트랜스젠더 아니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말들을 듣

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별화된 의료가... (아직) 몇 개 되지 않는 일기였지만, 공통적으로 드러난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의료 자체가 시스젠더 및 이분법적 성별을 전제하고 있고, 따라서 젠더 플루이드나 넌바이너리, 트랜스젠더는 적절한 의료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공간은 자연스러운 만남의 대안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신뢰도가 낮으며 신분 노출의 위험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안을 주는 기능 또한 맡고 있습니다.

퀴어와 주거의 문제

주거의 문제는 다른 것보다도 연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래 전망, 미래 선호... 그러니까 안전과 안정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다고 보이고. 주거 안정은 사실 퀴어와 비퀴어를 떠나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잖아요. 근데 퀴어의 경우에는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않았지만 받고 있는 차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초년생이면, 이제 청약을 주는데 청약 대상, 특히 신혼부부 우대를 받죠. 그런데 신혼부부이지만, 뭐 혼인과 유사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혼인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에 못 들어갑니다.

주거 문제는 퀴어 안에서도 굉장히 상황이 다양해요. 트랜스젠더인 분들은 원치 않아도 사람들이 자꾸 읽어내고 뭐 폭력을 당하거나 차별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기가 한 번 찾은 동네에서 안전하다고 느껴지면은 거기에 완전 환경이 안 좋다 그래도 머무는 경우가 있어요.

퀴어 공동 주거와 삶의 태도의 변화, 새로운 가능성

사회적으로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려면 접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루어지고 그래야 단지 그냥 혼자서 ‘아, 나는 성소수자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도 성소수자로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 같고. ... 무지개집분들이랑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들끼리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한대요. “우리 퀴어 맞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항상 불안하고, 예를 들어서 가스 검침원이 온다고 하면 집을 다 치우고, 그러

니까 애인이랑 찍은 사진, 퀴어 퍼레이드 가서 얻어온 이런 거 다 치우고 숨기고. 아니면 같이 살면 부모님 올라오신다고 내보내고. 이런 게 계속 반복돼 있었는데. 그래서 항상 불안함을 안고 살았는데. 여기 오니까 다 그냥 이제 너무 일상적인 거고 남다른 게 없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퀴어인지?”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종로라든지 홍대라든지 퀴어인 분들이 많이 가는 곳에 안 나가게 된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냥 맨날 같이 일상에 있으니까.

주거와 이웃, 동네의 문제

지금 무지개집에 ... 옆에 신축 건물이 올라왔어요. 그 동네가 좀 핫한 동네이기 때문에. 근데 좀 걱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잘 됐다, 차라리.” 그래서 “우리가 오며가며 여기 지금 퀴어주택 이런 데 오며가며 사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보이면 애들도 뭔가 생각이 바뀌지 않겠냐?”라는 분이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너무 싫다.”아웃팅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세요.

‘무지개집’과 같은 성소수자들의 주거와 관련된 일종의 실험적 대안 찾기는 흥미롭게도 이머징 시티즌으로서 성소수자들의 일상에서 시민권을 보장받기 위해 만들어나가는 노력이 비성소수자들의 사회적 요구, 전반적 사회의 수요에 대한 대답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합리적 가격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주거 환경에 대한 서울 시민의 공통된 문제를 서울에 사는 퀴어 시민들이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하는 노력은 공동의 협의 과정을 통해 공동의 주거를 만드는 방식, 개인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공동체를 부여하는 대안으로서 이머징 시티즌의 이슈와 대안이 한국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확장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앞서 원폭피해자, 탈북 여성 및 제3국 출생 자녀들의 이슈와 대안이 그렇듯 결국 이머징 시티즌으로서 성소수자가 제시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규범적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 어떤 변화, 혁신이 필요한가의 방향이다. 미래비전을 위한 혁신을 촉구하는 동력이라는 점에서 이머징 시티즌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4 입법 및 정책적 시사점

21대 국회에서 혼인평등법(민법 일부 개정안), 비혼출산지원법(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 생활동반자법 등 ‘정상가족’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가족구성권 3법’이 계류중이다. 현행 민법상 동성 간 혼인을 금지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음에도 관습적인 차별로 인해 동성 부부의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못했던 장벽을 없애는 취지로, 혼인평등법은 혼인의 성립을 이성 또는 동성의 당사자 쌍방의 신고에 따라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한다.²⁰⁾

비혼출산지원법(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은 보조생식술 시술 지원 대상을 난임 부부뿐만 아니라 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을 개정하는 법안으로, 임신을 원하는 여성이라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보조생식술 등의 출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²¹⁾ 생활동반자법은 기존의 혼인, 혈연, 입양의 세 가지 방법 이외에 생활동반자관계라는 새로운 법적 관계를 만들어 혼인 중이 아닌 성인 두 명이 서로를 생활동반자관계로 등록할 경우 법적 권리를 보장받고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는 제정안이다.²²⁾ 장혜영 의원이 입법 예고한 성별인정법과 함께, 가족구성권 3법은 성소수자는 물론 비성소수자를 포괄하는 다양한 가족, ‘비정상성’에 대한 인정을 목표로 한다.

차별금지법은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제정이 추진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권고법안 제출(2006년), 법무부 법안 발의(2007년) 등에도 불구하고 좌절되었으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보수 기독교계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2013년 철회된 이후, 21대 국회에 들어서야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입법안이 상정되어 계류중이다. 2020-2021년 상정된 차별금지법, 평등법안은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모두의 인권 기본법을 제정하는 노력으로, 2000년대 초 이후 계속된 논쟁 와중에도 시민사회의 입법 연대, 차별과 불평등에 대항하는 인권 담론 증대 및 국제사회의 지속적 압력 등을 배경으로 현재진행형이다.

20) [212239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의원 등 12인), 2023.5.31. 발의

21) [212239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의원 등 15인), 2023.5.31. 발의

22) [2122404]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장혜영의원 등 14인), 2023.5.31. 발의; [2121647]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옹혜인의원 등 11인), 2023.4.26. 발의

[표 5-4] 차별금지법안 목록

국회 회기	의안명	제안 일자	경과	비고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권고법안	2006.7.25.		
-	빈부격차차별시정위 추진기획단 차별금지법안	2007.7.4.		
17대 국회	법무부 차별금지법안	2007.12.12.	임기만료폐기	
17대 국회	차별금지법안(노회찬의원 등 10인)	2008.1.28.	임기만료폐기	시민단체안 반영
-	법무부 차별금지법(동등대우법)안	2010.12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내부 논의안(비공개)
18대 국회	차별금지기본법안 (박은수의원 등 11인)	2011.9.15.	임기만료폐기	
18대 국회	차별금지법안(권영길의원 등 10인)	2011.12.2.	임기만료폐기	차별금지법제정 연대안 반영 회기만료 폐기
19대 국회	차별금지법안(김재연의원 등 10인)	2012.11.6.	임기만료폐기	
-	법무부 차별금지법(동등대우법)안	2013		내부 논의안(비공개)
19대 국회	차별금지법안(최원식의원 등 12인)	2013.2.20.	철회 (2013.4.24.)	
19대 국회	차별금지법안(김한길의원 등 51인)	2013.2.12.	철회 (2013.4.24.)	
21대 국회	차별금지법안(장혜영 의원 등 10인)	2020.06.29	위원회 심사	
-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 (국가인권위원회)	2020.6.30		
21대 국회	평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민 의원 등 24인)	2021.6.16.	위원회 심사	
21대 국회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 의원 등 13인)	2021.8.9	위원회 심사	
21대 국회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권인숙 의원 등 17인)	2021.8.31	위원회 심사	

출처: 홍성수(2018, 4), 김종우(2021, 87), 홍관표(2021, 4), 의안정보시스템 종합해 작성

성소수자의 경우, 이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법제 마련 자체가 시급하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함께 거주, 직장, 의료, 교육 등의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일상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성애적 “정상성” 규범 바깥의 성소수자가 스스로 정체성을 긍정하고 사회적 인정을 바탕으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인권의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제를 확립하고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코 성소수자 시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시민권이 존중되는 사회 전반의 인권 의식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제6장

정치의 미래에서 온 시민들

제1절 청년정치인들과 미래대화

제2절 성장사회의 대안과 실천 과제

제 1 절

청년정치인들과 미래대화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미래대화 추진의 배경

청년정치인들과 미래대화는 청년정치인들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미래대화에 참여한 청년정치인들은 4차산업혁명, 기후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미·중 신(新) 냉전 체제 돌입,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내외 정치·사회·경제에서 급변의 이슈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들은 완전히 새롭고 근본적인 사회변화를 마주하여, 국가 차원의 총력적 대응과 중장기적 발전전략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는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예측·전략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런 기회가 없었다고 했다.

이들은 많은 미래연구가 더욱 의미 있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집단인 청년정치인들의 선호미래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미래연구들과 청년정치인들과의 미래대화에서 도출되는 내용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통점을 극대화하고 차이점을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치가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5년 단임제, 4년마다 있는 국회의원과 단체장 선거 등 정치인들이 지금 당장 시급한 이슈에만 매몰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와 이러한 제도가 자리 잡은 문화적, 사회적 측면의 다양한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청년정치인들에게 국가와 사회의 중장기적 바람직한 미래를 꿈꾸고, 그러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스스로 도출하는 미래대화의 기회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이들의 미래대화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들과 미래대화를 통해 현재의 청년정치인들이 20년 뒤의 대한민국의 미래에서 회피하고자 하는 미래와 선호하는 미래는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선호하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국가적, 사회적 과제를 제시하는지, 더 나아가 청년정치인들이 앞으로 어떤 과제들을 실현하고자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파악하려고 했다.

우리는 청년정치인들이 현재 대한민국의 미래와 현재의 정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조사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미래대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퓨처씽킹센터와 공동으로 청년정치인들과의 미래대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23년 7월과 8월에 미래대화 참여 청년정치인을 모집하고, 그 사이 퓨처씽킹센터 연구진 5명을 대상으로 미래예측 연습 및 퍼실리테이팅 실습의 기회를 제공했다. '23년 9월 <청년정치인들과의 미래 대화>를 개최했다.

2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진행 과정

가. 참여자 모집 방법 및 인구학적 특성

정치권에서 청년으로 간주하는 20대에서 40대 초반까지 모집했다(표 3-7 참조). 모집 대상은 대한민국의 미래 대응·관리에 책임 있는 지위에 있거나 과거에 있었던 전·현직 국회의원 및 기초·광역 단체장은 제외했다. 그러나 청년의 주요 정치 등용문에 해당하는 기초·광역 지방의원은 포함했다.

남성 11명, 여성 5명 등 총 16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의 정치적 성향이 한쪽 정당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했다. 참석자들은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 힘 3명, 정당바로세우기(비영리단체) 2명, 민생당 1명, 미래당 2명, 정의당 2명이었다. 이들은 전·현직 정당 대표, 최고위원, 비대위원, 대변인 등을 지낸 이력이 있다.

참석자들의 평균 연령이 36.2세로 사회 일반적으로 청년층 중에서도 나이가 많은 축에 들 수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대학생'과 '청년'을 구분하는 문화가 상당히 자리 잡고 있고, 현재 정치영역에서 정치 행위자로 있는 정치인들의 전반적인 연령을 고려해 보았을 때, 참석자들이 정치영역에서 청년에 해당한다고 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거주지로 보면 대전, 경기에서 온 참석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서울 거주자들이 많았다.

[표 6-1] 청년정치인 미래대화 참가자 인구학적 특성(총 16명 답변)

성별	연령	소속 정당
여성(5명, 31.3%) 남성(11명, 68.7%)	20대(3명, 18.8%) 30대(8명, 50%) 40대(5명, 31.2%)	더불어민주당(6명, 37.5%), 국민의 힘(3명, 18.8%), 정의당(2명, 12.5%), 미래당(2명, 12.5%), 민생당(1명, 6.2%), 정당바로세우기(2명, 12.5%)

나. 미래대화 진행 과정

참석자들은 미래대화의 행사장 입구 테이블에 놓인 4종류 색깔의 종이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참석자는 자신이 고른 같은 색종이가 부착된 테이블에 앉았다. 이를 통해 16명이 4개의 팀에 속하도록 했다. 주황색을 고른 참석자는 경제의 계속 성장 미래에, 노란색을 고른 참석자는 붕괴의 미래에, 파란색을 고른 참석자는 보존사회에, 녹색을 고른 참석자는 변형사회를 논의하는 팀에 속하게 된다(그림 3-2의 미래상 참조). 참석자들을 무작위로 팀별 배치한 것이다. 각 조에는 퍼실리테이터 1명씩 배치했다.

이런 방식은 앞서 소개한 부산지역시민들과 미래대화에서는 적용하지 않았다. 부산지역에서는 팀별로 4가지의 미래를 모두 논의하도록 했지만, 청년정치인들과 미래대화에서는 팀별로 특정 미래사회를 전망하고 깊이 있게 토론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물론, 청년정치인들도 팀별 특정 미래 토론 이후, 전체가 모여 논의 결과를 공유하면서 4가지 미래사회를 이해하는 시간은 주어졌다. 두 미래대화에서 최종적으로 각 개인의 선호 미래를 파악하려면 4가지 미래사회를 이해하는 과정은 필수다.

그런데도 청년정치인들의 미래대화에서는 팀별로 특정한 미래만 논의하도록 한 이유는 미래별로 정책적 대안을 깊이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부산지역시민과 미래대화에서 연구진이 수집하려는 의견이 시민이 선택한 가능미래와 선호미래의 이유였다면, 청년정치인과 미래대화에서는 각 미래의 정책적 대안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 싶었다. 청년정치인의 특성이 사회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풀어낼 대안을 내놓는 것에 더 많은 관심과 의견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4가지 미래를 모두 논의하는 것보다 특정 미래의 상황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에 맞는 대안을 내놓는 시간을 더 할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진행은 세션 1(정치 분야 과거-현재-미래전망: 문제 진단 및 미래예측)과 세션2(우리가 맞이할 4가지 미래: 테이블마다 해당 미래의 도래 원인, 해당 미래에서 정치적 이슈 예측, 악화하거나 새로운 정치적 문제의 해결 방법 모색)로 구성했다. 각 조에 편성된 퍼실리테이터들은 모든 참석자가 골고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발언 기회를 조정했다.

세션 1과 2의 마무리 이후 테이블별 논의 내용을 발표하면서 전체가 공유하고 각 미래가 도래한 원인과 각 미래에서 정치적 문제에 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도록 했다. 모든 발표와 토론을 듣고 난 후 참석자 전원은 투표의 방식으로 각자 개별적으로 가능미래와 선호미래를 선택하도록 했다. 투표 결과를 공유하면서 전체 토론에서 각자 선택의 이유를 언급하면서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사회와 전략을 논의했다. 모든 논의 내용은 퍼실리테이터들이 기록함과 동시에 녹음하고 전사했다.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기록하지 않았고, 녹음은 전사 이후 폐기했다. 전사한 내용은 미래대화의 분석을 위해 활용되었다.



[그림 6-1] 청년정치인과 미래대화 과정

미래대화가 모두 끝나고 참여자들은 사후설문지에 자신이 예측한 가능미래와 선호미래의 근거를 작성해서 제출했다. 연구진은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에서 참여자들의 의견 변화를 조사하고 분석했다. 참여자들이 제시한 ‘이대로 가면 맞이할 미래’(가능미래)와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바람직한 미래(선호미래)’의 다양한 이유를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했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의 미래에 관한 희망, 기대, 걱정, 우려를 파악하려고 했다.

3 청년정치인들과 미래대화 결과

가. 미래대화 이전 참여자들의 미래 선택

청년정치인들은 ‘이대로 가면 맞이할 미래’와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선호미래’에 대해 사전 숙의자료를 읽고 자신의 미래인식을 밝혔다(표 6-2 참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대로 가면 맞이할 미래’에서 사회의 붕괴가 47.3%로 가장 높았다.

[표 6-2] 미래대화 개최 전, 사전설문에서 응답자의 선택(19명 답변)

미래유형	이대로 가면 맞이할 미래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선호미래
경제의 계속 성장	0%(0명)	15.8%(3명)
사회의 붕괴	47.3%(9명)	5.3%(1명)
보존사회 등장	31.6%(6명)	36.8%(7명)
변형사회의 시작	21.1%(4명)	42.1%(8명)

그 이유로 참여자들은 “자원 고갈과 환경 재앙 등을 대비한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2050년 경제성장률이 0%까지 하락, 저성장이 아니라 ‘무성장’ 국가가 되는 것”, “성장과 확대의 흐름은 지속가능할 수 없다”,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노동시장 변화, 기후위기 등에 대한 논의와 대응은 거의 전무”, “급성장한 국가인 만큼 부작용이 있을 텐데 그런 걸 보완할 정도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없는 것 같아”, “소비주의 물질주의를 고치지 않으면 인류문명은 지속하기가 힘들어” “정당 간, 계파 간 극단의 대립을 달리고 사회적 신뢰가 무너져 ‘나만 살면 그만’ 이라는 인식이 모든 분야에 퍼져가고 있는 듯”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그 뒤를 이어 보존사회의 등장이 31.6%로 2위에 올랐다. 참여자들은 그 이유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다른 국가에서 이주하는 인구를 받아들여 등장한 미래”, “소멸에 이르기 전에 지속 및 순환성을 회복하는 시점이 올 것”, “자원 소비를 제한해서 성장이 정체될 가능성이 크다”, “듀스 포인트 상황(좋다고도, 나쁘다고도 할 수 없는 지루한 균형 상태)” 등을 언급했다.

변형사회의 시작은 21.1%로 3위였다. 참석자들은 그 이유로 “AI를 필두로 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 사회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갈 것”, “새로운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지금과는 또 다른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것”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경제의 계속 성장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다.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선호미래’에서 변형사회의 시작이 42.1%로 1위였다. 참석자들은 그 이유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지점에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동력이 새롭게 생겨날 수도...”, “남한과 북한의 통일 한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 “기술간 융복합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긍정적 미래 모습을 사람들은 희망하지 않을까”, “결국 기술의 진보를 통해 해결”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갈 미래이기에” 등의 이유를 들었다.

그 뒤를 이어 보존사회의 등장이 36.8%로 2위였다. 이들은 그 이유로 “적정인구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회를 기대하는 사람들 증가”, “우리가 겪어야 할 변화와 그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 “저성장 상태 하에서의 성장이란 곧 불평등 격차를 줄이는 실질적 성장이어야 하고, 적극적인 노동시장 개혁과 산업전환,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갔으면...”, “기후 재난을 막고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성장 만능에서 벗어나야” 등을 거론했다.

경제의 계속 성장은 15.8%로 3위였다. 그 이유로 “발전과 성장의 과실을 맛보지 못한 청년세대들은 우상향으로 꾸준히 발전하는 국가모델을 바라고 있음”, “가장 이상적이고 안정적인 그래프”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사회의 붕괴는 5.3%, 1명이 선택하는 데 그쳤다. 그 이유로는 “줄어들고, 축소되고, 수축하는 것은 상수, 이 전환점을 잘 받아들이어야 함”이라는 의견을 남겼다.

나. 미래대화에서 논의한 미래별 주요 이슈

1) 경제의 계속 성장 미래

이 팀에 속한 참여자들은 ‘경제가 앞으로도 지속해서 성장한다면’을 가정하고 우리사회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사회의 경제가 지속해서 성장하려면 우선 에너지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표 3-9 참고). 예컨대 핵융합의 성공으로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기존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미래는 ‘대한제국주의’ 또는 ‘경제성장주의’라는 구호로 국내의 정치세력을 통합하고 더 나아가 남북 통일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가족제도에는 많은 변화가 생겨서 결혼이나 입양 등 전통적 가족 구성 방식이 아닌 선택가족제도 같은 새로운 제도가 확산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신권위주의가 등장하고, 우주 자원의 독점적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보았다. 정치적 제도에서는 소외된 세력을 대변하는 다당제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미래가 지속될 경우 생겨날 수 있는 새로운 미래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표 3-10 참고). 이들은 이 미래에서 인공지능(AI)기술의 발전으로 인간 소외 현상은 가속화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노동 문제가 등장한다고 전망했다. 국회 예산안 심사와 결정도 인공지능이 주도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이 미래에서는 코로나19 같은 재난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이같은 재난의 일상화에 대비하는 지역정치의 역할이 부각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국외 여건으로 대만과 중국의 전쟁 가능성을 언급했고,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내전과 시민들의 폭동 가능성도 제시했다.

2) 붕괴의 미래

이 팀에 속한 참여자들은 우리사회가 왜 붕괴의 미래를 맞이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논의했다(표 3-9 참고). 이들은 에너지 전환의 시대에 한국은 도태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생에너지 생산을 대폭 늘려야 삼성이나 에스케이(SK) 반도체나 현대기아그룹의 자동차 등의 수출이 가능한 미래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국내 원전 폭발 사건이 발생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못해 지역별 피해가 커지는 등 사회 전체가 혼란의 상황에 직면한다. 이 때문에 사회적 불신의 확산과 공공

성 약화, “나만 아니면 돼”라는 의식이 확산한다. 중앙정부의 통제와 조정 능력이 쇠퇴하면서 국내 각 지역은 300개의 공동체로 나뉘어 각자 생존의 길을 개척한다. 인구는 많이 감소했다.

이런 미래가 지속될 경우 생겨날 수 있는 새로운 미래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표 3-10 참고). 1극 체제 정당에서 다극 체제 정당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았다. 전략의 도출보다 숙의의 과정이 더 중요한 시대라는 것이다. 수도권 중산층 중심의 정치가 도래하고, 외국인을 위한 정당의 출현도 예상된다.

시민사회와 멀어진 국회가 등장하고, 여성과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생존이 전례 없이 불투명한 사회가 될 가능성도 있다. 기후위기의 심화를 해결하지 못해 중앙집권적인 대의제 민주주의는 쇠퇴하고 지역정치가 강화한다. 일자리가 감소하고 기본소득의 논의가 다시 등장하는 미래도 예상되었다. 늦었지만 기후위기에 대응하도록 모든 기업은 기후대응 관련 노력을 공시하고, 이런 노력은 지역정부의 실사를 통해 평가받는다.

3) 보존사회의 등장

이 팀에 속한 참여자들은 우리사회가 왜 보존사회의 미래를 맞이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논의했다(표 3-9 참고). 이들은 국내 각 지자체가 타 국가의 지역 간 협약으로 국내 지역을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약화하면서 지역 분권화가 활발해 각 지역사회는 해외 지역과 교류의 기회를 확장한다.

이 미래에서는 고령층의 일자리 확보가 중요하다. 인구가 줄어들어도 사회를 유지하는 노력은 계속할 필요가 있어서다. 경제적 성장률이 거의 제로 수전이어서 공정한 분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 따라서 정해진 국가의 파이를 누가 공정하게 분배하는지가 중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국민의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인물로 추정할 수 있다.

한국은 보존사회로 접어들면서 선도국가가 되려는 목표를 폐기했다. 재택근무는 일상화되어 있고, 각종 위기가 정치적 타협의 계기를 만들었다. 보존사회는 새로운 시도를 위해 잠시 멈춘 미래이다. 실버 데모크라시에 대응하는 방편으로 중학생까지 투표권을 갖는다. 국가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전환된 미래, 기계문명과 도시문명의 차가움을 보완하는 따뜻한 보존사회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런 미래가 지속할 경우 생겨날 수 있는 새로운 미래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표 3-10 참고). 이들은 정치에서 강성지지층 중심의 정치를 탈피할 것으로 보았다. 다양한 세대와 세력의 목소리를 담는 것이 정치의 주요 목표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경제적 뒷받침이 없는 청년들은 성장의 기회를 찾기 힘든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세금은 내지 않고 복지만 요구하는 실버 세대의 등장도 전망되었다. 이 때문에 청년층은 일하지 않는 풍조를 확산한다. 인구가 줄어 고령층의 국방 의무가 새롭게 나타날 수도 있다. 쓰레기로 이뤄진 섬과 산이 등장할 수도 있다. 한편, 북한이 개방되어 남북간에 새로운 협력의 기회가 올 수 있고, 여성 중심의 사회 강화, 결혼 제도 약화도 언급되었다.

4) 변형사회의 시작

이 팀에 속한 참여자들은 우리사회가 왜 변형사회의 미래를 맞이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논의했다(표 6-3 참고). 이들은 우주에서 새로운 생명체를 발견할 수 있는 미래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인공지능기술이 급진전되어 가정마다 모두 안드로이드(기계인간)를 구비한다. 심지어 안드로이드끼리 국가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았다.

초고효율의 대체 식량이 등장하고, 폐기물은 재활용된다. 기계인간의 발달에 따라 인류는 인간성에 집중한다. 인공지능로봇 등 다양한 지적존재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정치도 변화하는데, 추첨 민주주의가 등장한다. 로봇의 권리가 당연시되고 그에 따라 로봇 정당이 나타난다. 어떤 로봇은 인류의 민주주의를 거부하기도 한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 인공지능의 뛰어난 데이터 처리와 현명한 의사결정에 의존하면서 인간의 일이 사라지고 인간 정당도 소멸의 수순을 밟는다. 기술을 통제하는 사람이 정치인이 되고, 로봇의 노동 대체로 인간은 정치와 예술을 발전시키는 길로 나아간다.

이런 미래가 지속될 경우 생겨날 수 있는 새로운 미래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표 6-4 참고). 이 미래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무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의식이 팽배해지면서 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소수약자는 차별 받는다. 이들은 기본소득에 의존해 생존한다. 인공지능의 인간의 일 대체 탓에 중숙련자는 감소한다. 자식이 부모를 선택하는 문화도 등장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나타난다. 다문화이주민은 전체 인구의 30%까지 증가한다.

[표 6-3] 4가지 미래그룹별로 '왜 그 미래가 등장했는지' 이유를 논의한 내용

미래상	논의된 주요 내용과 키워드
계속성장	핵융합 성공으로 에너지 문제 해결, 대한제국주의와 경제新성장주의로 국내 정치세력 통합, 남북 통일, 선택가족제도 확산, 新권위주의 등장, 우주 자원의 독점적 개발, 소외된 세력을 대변하는 다당제 정착
붕괴사회	에너지 중심의 시대에 한국은 도태(재생에너지를 만들어야 삼성의 반도체 수출이 가능한 시대), 원전 폭발, 기후위기, 사회적 불신의 확산과 공공성 약화, “나만 아니면 돼”, 부족사회의 도래로 300개 공동체로 나뉜 한국.
보존사회	지자체와 타 국가 간 협약으로 국내 지역 개발, 고령층 일자리 확보, 인구는 줄어드는 것이 사회 유지에 도움, 정치인에 대한 신뢰 확대, 선도국가의 포기, 재택근무 일상화, 위기가 정치적 타협의 계기, 보존사회는 새로운 시도를 위해 잠시 멈춤 미래, 실버 데 모크라시에 대응해 중학생까지 투표하는 권리 부여, 국가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전환, 안정화 시기, 기계문명과 도시문명의 차가움을 보완하는 따뜻한 보존사회 등장
변형사회	우주에서 새로운 생명체 발견, 초고효율의 대체 식량, 폐기물의 재활용, 가정마다 1개의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끼리 국가 형성, 다양한 생명체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정치의 변화(추첨 민주주의 등장), 로봇의 권리, 로봇 정당, 로봇의 민주주의 거부, 인간 정당 소멸(AI 계산이 더 중요), 기술을 통제하는 사람이 정치인, 로봇의 노동 대체로 인간은 정치와 예술을 발전시킴

[표 6-4] 4가지 미래그룹별 '그 미래에 새롭게 떠오를 미래 이슈' 논의 내용

미래상	논의된 주요 내용과 키워드
계속성장	AI 발전으로 인간 소외 현상 가속화, 새로운 노동 문제 등장, 국회 예산안 심사와 결정도 AI 주도, 코로나19 같은 재난 일상화, 지역정치의 역할 부각(재난의 일상화에 대비하는 지역사회 대응), 대만과 중국의 전쟁 가능성, 정신적 문제의 중요성 공감(국가 성장지표를 GDP → GHP로 변경, H는 Happiness), 정치적 내전과 시민들의 폭동 가능성
붕괴사회	1극체제 정당에서 다극체제 정당으로(전략의 도출보다 숙의의 과정이 더 중요한 시대), 수도권 중산층 중심의 정치, 외국인 정당의 출현, 시민사회와 멀어진 국회, 미혼 여성의 생존 불투명 심화, 무한 생존 경쟁의 사회, 기후위기와 민주주의 붕괴, 야만의 시대, 일자리 감소와 기본소득의 등장, 기후공사와 기후실사 보편화
보존사회	강성지지층 중심의 정치 탈피, 다양한 세대와 세력의 목소리를 담는 정치, 권리금 사회(경제적 지원이 없는 청년들은 성장의 기회를 찾기 힘든 사회), 세금은 내지 않고 복지만 요구하는 실버 세대의 증가, 이 때문에 청년층의 일하지 않는 풍조 확산, 고령층의 국방 의무 부활, 쓰레기 섬과 산 증가, 김정은의 변신(북한 개방화), 여성 중심의 사회, 결혼 제도 약화
변형사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 부족, 기술 성장 만능주의, 생명 감수성 확장, 유튜버 같은 새로운 노동 증가, 중속권자의 감소, 자식의 부모 선택제 실시, 다문화이주민은 전체 인구에서 30% 차지, 기계와 친하지 않은 인간 차별 증가, 다양한 가족 형태, 기본소득 확산

다. 미래대화 종료 이후 참여자들의 미래 선택

참여자들은 미래대화에 참여한 이후 자신의 변화된 미래인식을 밝혔다(표 6-5 참조). 참석자들은 ‘이대로 가면 맞이할 미래’에서 보존사회의 등장을 62.5%로 가장 높게 보았다.

그 이유로는 “경제 하락과 개혁의 실패를 자성하고 보존사회로 향할 것”, “붕괴보다 보존의 가능성이 큼”, “성장의 한계 봉착”,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 “인구 감소는 불가피”, “기후위기 등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침체를 맞이해도 걱정 시점에서 적응할 것으로 전망”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표 6-5] 미래대화 이후, 사후설문에서 응답자의 선택(16명이 숙의토론하고 결정)

미래유형	이대로 가면 맞이할 미래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선호미래
경제의 계속 성장	0%(0명)	0%(0명)
사회의 붕괴	31.3%(5명)	6.2%(1명)
보존사회 등장	62.5%(10명)	50.0%(8명)
변형사회의 시작	6.2%(1명)	43.8%(7명)

그 뒤를 이어 사회의 붕괴가 31.3%로 2위였다. 이들은 그 이유로 “정치가 답을 제시하지 못함”, “욕망 제어 실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변형사회의 시작은 6.2%로 3위였다. 경제의 계속 성장은 사전선택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다.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선호미래’에서 참석자들은 미래대화 이후 어떤 미래를 선택했을까. 이들은 **보존사회의 등장을 가장 선호**한다고 밝혔다. 50%로 1위였다. 그 이유로는 “물질문명의 전환 필요”, “연착륙으로 고통 줄이기” “지구생태계와 공존, 조화 필요, 질적 성장 추구” “생존에 필요”, “일과 삶의 균형, 행복, 여유를 추구해야”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그 뒤를 이어 변형사회의 시작이 43.8%로 2위였다. 1위와 격차는 1명 차이였으니 큰 차이는 아닌 셈이다. 참석자들이 변형사회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도전과 돌파 문화 필요”, “새로운 가능성과 삶의 가치를 만들 것 같아”, “기술발전으로 해결”, “인간의 기술적 도전과 혁신에 대한 기대감” 등을 거론했다.

사회의 붕괴는 6.2%로 3위였고, 경제의 계속 성장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다.

라. 사전 조사와 사후 조사의 결과 차이 분석

미래대화 이후 참여자들은 보존사회의 등장 가능성을 31.6%에서 62.5%로 더 높게 예측했다. 사전조사와 달리 사후조사에서 보존사회의 등장을 가능하다고 답변을 바꾼 응답자들은 “다른 미래들은 해결할 과제가 많았지만, 보존사회는 그렇지 않아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임”, “붕괴를 막으려는 노력이 생각보다 많이 이뤄지고 있어서” “하락과 실패를 경험하면 보존사회로 가는 모멘텀이 생겨날 것이기에” 등을 언급했다.

경제가 지속성장할 것으로 보는 의견은 사전과 사후 모두 0%였다.

미래대화 이후 선호미래조사에서는 보존사회의 등장이 36.8%에서 50.0%로 상승한 것이 주목된다. 의견을 바꾼 참석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 “지금 상태에서 꾸준한 발전과 노력이 있다면 유지는 될 것이고, 그 결과가 경제의 상승은 아니더라도 나쁜 결과는 아니기에”, “워라벨, 행복, 여유를 추구하는 것이 주변인들이 추구하는 미래일 것으로 판단” 등을 언급했다.

변형사회의 선호도는 사전조사에서 42.1%였으나 사후조사에서는 43.8%로 증가했다. 사전 선호조사에서 선호를 변형사회로 바꾼 이유는 “인간의 기술적 도전과 혁신에 대한 긍정 및 기대감 상승”을 답변으로 제시했다.

제2절

성장사회의 대안과 실천 과제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종합토론: 보존사회와 변형사회의 대결

청년정치인들과 미래대화에서 우리는 가능미래와 선호미래를 확인하고,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이 선호미래로 선택한 것은 보존사회와 변형미래였다. 보존사회를 지지하는 참여자들이 조금 더 많았지만, 순위를 매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선택이 내포하는 의미를 찾는 것이다.

더 중요한 논의는 두 미래의 지지자들이 어떤 문제를 두고 갈등하고 있는지, 그 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야 갈등을 완화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이런 갈등을 통해 서로 더 나은 미래사회를 전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두 그룹의 참여자들이 주고받은 주요 내용을 가감 없이, 그리고 의견이 나온 순서대로 풀어보았다.

(보존사회 선호그룹) “보존사회처럼 조금이라도 사회적 붕괴의 고통을 좀 줄이는 정도의 미래가 필요하다.”

(변형사회 선호그룹) “인간을 대변하는 정당과 인공지능을 대변하는 정당이 생길 것이다. 인간다움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정치인의 역할은 커지지 않을까?”

(보존사회 선호그룹) “변형사회로 가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더 많은 로켓을 쏘아올려야 하고, 더 많은 탄소 배출이 필요하고, 더 많은 사람의 노동력을 갈아 넣어 만들어야 하잖아요. 이렇게까지 되면 너무 슬플 것 같다. 지금은 발전이 아닌 지구적 생존을 얘기해야 할 때다.”

(변형사회 선호그룹) “지금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인은 정치보다는 과학기술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정치의 역할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과학기술이 하드캐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갈 것인가, 기득권의 저항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런 새로운 과제들이 또 정치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보존사회 선호자) “변형사회는 기술로 사회의 변영이 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 택시와 타다의 갈등²³⁾에서도 (변형사회처럼) 우상향으로 성장하는 미래를 그릴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택시업계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정치권이 택시업계의 의견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걸 하나의 선례인데 앞으로 그런 사례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이다. 변형사회처럼 우리사회가 급진적으로 발전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변형사회 선호그룹) “대한민국은 암울하게 하향 곡선을 탈 건데 제 아이의 미래는 지금보다 더 나았으면 좋겠다. 변형사회의 모습이 경제적 성장이라기보다 행복의 성장으로 달리 보였고, 그래서 이 미래를 선호하게 되었다.”

(보존사회 선호그룹) “지구 인구가 100억 명, 200억 명이 된다면 우리는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여기서 더 나은 삶을 살겠다고 욕망하는 순간, 우리는 서로의 욕망이 부딪치고 그것의 과잉으로 치달을 때 우리사회는 그냥 꼬꾸라지지 않을까. 변형사회는 더 위험한 사회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정치인들의 역할은 그 욕망을 조금 더 억제시키고 좀 적당한 미래로 찾아가도록 해야 한다.”

(변형사회 선호그룹) “인간의 욕망은 제어할 수 없다. 다만 그것을 적당히 이 사회 안에서 잘 유지하고 그런 것들이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다. 우리나라가 보존사회의 미래 정도에 만족하고 산다고 한들, 북한부터 또 미국 중국 다른 나라들은 비약적인 발전을 어떻게든 해나가려고 할 때, 우리만 가만있을 수 있을까.”

(보존사회 선호그룹) “보존사회가 성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 성장을 추구 하는

23) 2020년 국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재정안, 소위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을 도모하려면 타다 서비스는 목적지를 가려 받지 않고, 넓고 쾌적한 공간과 친절한 서비스로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택시업계의 반발로 타다 서비스는 종료되었다. 택시업계는 택시 면허도 없는 사람들이 기술을 활용해 택시업을 하는 것에 반대했다.

사회로 봐야 한다. 우리의 경제 규모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삶의 만족도나 질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고 본다. 적정 수준의 욕망과 적정 수준의 개발을 유지하면서 질적 성장을 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적정 성장을 유지하는 것만큼 지능적인 사회도 없다. 무엇보다 지구 생태 역량에 한계가 왔음을 인식해야 한다.”

(변형사회 선호그룹) “질적인 성장도 양적 성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아직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는 기본적인 물질문명을 못 누리고 있다. 우리만 보존사회를 추구할 게 아니라 더 앞을 내다본다면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도 같이 따라와야 하는데, 결국에는 양적인 성장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분명히 기후 위기든 정치적 위기든 맞을 거라고 본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증명된 거는 아직 우리나라도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나는 변형사회의 미래 곡선이 우상향하는 것을 경제 성장 곡선으로 본 게 아니라 전환 곡선으로 봤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전환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더 절망적으로, 더 급격한 하락으로 내려갈 수 있다.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려면 혁신적인 기술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그게 결국에는 규제 완화가 될 텐데 이 규제 완화도 우리가 상상하는 수많은 윤리적인 그런 잣대들을 한 번은 내려놔야 정말 다양한 실험을 통해 획기적인 기술이 나올 것 같다. 그 획기적인 기술로 우리가 그동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어서 양적인 것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도 이뤄내지 않을까.”

2 청년정치인들은 어떤 변화를 바라는가?

연구팀은 미래대화를 마치고 2주 뒤에 다시 모여 참석자들의 논의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읽어보고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청년정치인들의 주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이들이 두려하거나 걱정하는 문제는 무엇인지, 더 나아가 어떤 해결방법을 지향하고 있는지 논의했다. 이를 통해 청년정치인들이 다수가 되는 미래에는 어떤 변화가 가능한지 가늠해보았다. 연구팀은 연구책임자를 포함해 총 5명이었고, 국회미래연구원에 속한 1명의 연구책임자를 빼면 4명은 모두 청년정치인들이었다. 이들이 정리한 참석자들의 이야기는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했다.

가. 미래대화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

“당시 나눴던 이야기들을 전사해서 다시 보니까 그날 치열하게 미래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우 재미있게 봤고 한두 번 더 볼 생각입니다.”

“참석자들은 한국이 저성장 국가가 아니라 이제 무(無)성장 국가다, 과거처럼 양적 경제적 성장을 지속할 수는 없다, 불평등 노동시장과 기후위기 이거 매우 중요한데도 정치권에서 논의와 대응은 거의 없다는 등의 말이 기억납니다.”

“정당 간 계파 간 극단적 대립, 사회적 신뢰의 약화, 나만 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의 확산으로 한국사회는 붕괴할 것 같다는 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전설문 조사 당시 참석자들은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망하지 하면서 사회 붕괴 쪽으로 생각을 했다가 막상 미래대화를 통해 다른 참석자들과 얘기를 해보니 ‘그렇지 우리 정치가 많은 역할을 해왔고 또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 이러면서 붕괴에 대한 위기의식 같은 게 완화된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정당 출신은 붕괴의 가능성을 크게 예측했다면 다른 정당은 그렇지 않다든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민주당이 약간 미래에 회의적이었고, 국민의힘 분들이 기술의 발전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나. 왜 보존사회를 더 선호하는 것일까?

“청년 정치인들이 지금 느끼는 거는 개인주의가 엄청나게 발달했잖아요. 그 상황에서 어떤 대화의 한계 그리고 양보할 수 있는 개인주의의 한계에서 의견 일치를 볼 수 있는 거를 생각하다 보니 보존 사회를 지지한 것이 아닌가.”

“어떤 이데올로기나 사회적 이상향이 강한 집단이었다면 도전적인 미래를 제시해 볼 수 있을 텐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은 거죠. (바꿀 수 없는) 현실을 너무 잘 아니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속에서 생활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변형 사회나

경제의 계속 성장은 현재로서는 합의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선뜻 선호한다고 밝히지 않은 것 같아요. 반면에 기후변화라든지 환경 복원, 에너지 고갈 이런 문제는 대응에 합의할 테니 보존사회를 결과적으로 선호하지 않았을까.”

“저는 **보존사회는 브레이크 사회**라고 보거든요. 서로 견제하는, ‘하지 말자. 이거 하면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사회. 혁신적 도전보다는 사회가 지켜야 할 최저선을 유지하는 게 앞으로는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이 보존사회를 지지한 이유 같아요.”

“보존사회의 장점이 **타협과 합의가 가능한** 것이잖아요. ‘뭐 하지 말자’고 브레이크를 걸려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기득권이 강하면 합의가 잘 안 되잖아요. 기득권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보존사회가 되려면 기득권이 좀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양당제가 아니라 다당제, 그리고 현재 지역 중심의 정치 제도가 바뀌어서 정치 기득권이 좀 바뀌어야 보존사회가 가능합니다.”

“변형 사회는 첨단기술이 이끌어가고 기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정치인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때 모였던 청년정치인들은 기술 친화적인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래가 오면 내 자리는 많지 않겠다, 그러면서 보존사회를 지지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보다 사회가 경제적으로 더 나아지려면 막 영혼을 갈아넣어야 하는데 이들의 삶의 어떤 경험으로 보서는 그거는 싫고. 그렇다고 특정 세력이, 자기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막 주도해 나가는 미래는 싫고. 그래서 변형사회보다 보존사회를 지지한 듯싶어요.”

“미래대화에서 느꼈던 청년 정신은 막 돌파구를 찾고 혁신하고 이렇다기보다는 망가지지는 말자, 마지노선은 지키자, 이런 것 같았어요. 망가지지는 말자는 게 새로운 희망이나 가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청년들이 경험한 현실에서 상상할 수 있는 범위가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더 희망을 갖거나 꿈을 꿔볼 때는 위험해진다, 내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럴 능력

이 있는지 검증도 안 됐고, 그럴 의지도 없고, 그 길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뭔가 사고가 확장이 되기보다는 제동이 걸려 있다 보니까. 보존사회는 상호 간의 어떤 욕망에 제동하는 사회라고 보거든요. 정당도 다르고 이념도 다른데 최소한의 합의를 보자면 서로 제동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죠.”

“뭔가 더 큰 변화를 도모할 만큼의 상상력도 없고 용기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변형 사회를 희망한다는 분들끼리 대화해도 구체적인 과제로 나온 거는 거의 유일하게 규제 완화였어요. 규제 완화 정도로 변형사회를 상상하는 게 아쉬웠어요.”

“저는 대화하면서 느꼈던 게 청년정치인들이 정치가보다 행정가가 되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다는 것이었어요. 요새 청년 정치 이야기할 때 민생 정치나 생활 정치를 많이 거론하는데, 본인 스스로 이런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 같아요.”

다. 다시 거대 비전의 시대로?

“통일 해보겠다거나 어떤 거대 담론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 일단은 먹고 사는 거, 내 눈앞에 당면한 거,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에 시야가 갇혀 있다 보니 더 넓게 생각할 겨를도 없고 여유도 없고 또 그런 기회를 받지도 못했고. 심지어 본인들이 기성 정치인들이 만들어온 전쟁터 같은 이 판에서 살다 보니 ‘일단 내 것부터 해야 해’ 이런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뭔가 스스로 어떤 사고의 확장을 억압하고, 미래 자체를 상상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정치를 몇 년 하면서 계속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제 나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 그래서 하고 있거든요.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별거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정치에 들어온 사람들은 결과도 없고 어디 가서 치이기만 하는데 주변의 친구들 보면 승진하고 잘 나가고. 그런 상황에서 생존해야 하니까 미래 비전이나 이념적인 것은 잡기가 쉽지 않아요.”

“정치는 사회가 가야 하는 길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은데. 내 인생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는 거고. 다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사회를 바꿔도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어려워요. 정답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어렵고, 미래는 안 보이고.”

“변형사회 이야기를 할 때 완전히 새 판이 짜여진다는 건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 되더라구요. 그런데 그때부터 뭐가 느껴졌냐면 이 미래에서 내가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어떤 희망적인 기대감이 투영된 것 같고요. 변형사회에서 완전히 새 판이 짜여지면 지금 이 판을 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나갈 테고 그 안에서 내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심리가 투영된 것 같아요.”

“변형사회는 뭔가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미래라면, 보존사회는 새로운 연대 같은 희망이 있는 미래 같아요.”

“보존사회를 실현하자면 정치인들의 도덕성이나 공정한 배분이 엄청나게 이슈가 될 텐데. 당장 시민들이 ‘보존사회가 되면 덜 쓰고 덜 먹자는 거냐’고 질문할 때 어떤 리더십과 전망으로 보존사회를 이야기 할 것인지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사람들이 깨달을 때쯤에 이제 안전을 던지고 해야 그렇게 갈텐데 새로운 미래를 정치인이 리드한다는 건 어려워요. 우리사회에 녹색당이 그런 의제를 제시하지만 현실적인 영향력은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라. 청년정치인의 새로운 역할

“청년정치인이라는 파이가 예전보다 커졌어요. 이준석 씨도 국민의힘 대표가 됐고. 그러면 정치인이 되려는 청년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청년정치인들은 늘어나지만, 여전히 기성세대의 세계관을 그대로 내재화해서 다른 전환적 발상을 못 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진다면 보존사회나 변형사회 실현은 쉽지 않잖아요?”

“청년을 굳이 청년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기존과는 다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좀 덜 때 묻은 것들 때문이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많이 참여할수록 변화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결국 우리나라 정치로 바뀌지 않을까.”

“현재의 체제로 변화는 불가능해요. 청년정치인들이 뭔가 주도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정치를 스포츠 구단에 비유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치도 FA(프리에이전트) 육성으로 가야합니다. 예전처럼 명망가들, 운동했던 사람들, 저명인사들을 영입해서 정치하는 시대에서 이제 지방자치 기초의원, 광역의원 되고, 거기서 잘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도 되는 경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로가 없어요.”

“지방자치가 발전할수록 정치인들이 해야 할 게 진짜 많아지거든요. 정치인들이 차근차근 성장해야 하는데, 여전히 명망가 정치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총선을 앞두고도 계속하는 이야기가 인재융합 이런 것뿐이고, 지금까지 잘 키워놓은 어떤 인재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생각 못 해요.”

“기초의원들 가보면 지역위원장들한테 계속 줄서기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 능력은 좀 떨어져도 충성한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어요. 결국, 지역 유지라든지 돈 많은 사람, 나이 많은 분이 정치하게 됩니다. 어디 가나 청년정치인의 성장 경로가 닫혀 있어요.”

“젊은 정치인을 보좌한 적이 있는데, 이분도 결국은 혼자 움직이게 됩니다. 그나마 선거가 있으면 어쨌든 지역구도 눈치를 봐야 하고, 지도부 눈치도 봐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이 큰 뜻이 있어도 이걸 쟁겨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정치적 자산과 경험, 능력이 없이 그냥 영입돼서 온 사람들이 국회의원하면서 2년은 적응하느라 보내버리고 나머지 1년은 뭔가 해보다가 결과 없이 끝나버리고 남은 1년 선거 준비하다 끝납니다. 정치 활동을 못해요. 나랑 같은 생각을 갖고 저변에서 움직이고 있는 분들을 끌고 오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없잖아요.”

“쿠폰 기본 소득 같은 것을 전 국민에게 10만 원씩 주면 어떨까요? 시민들이 마음 가는 청년정치인에게 이 쿠폰을 기부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정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청년정치인들은 정치적 의제를 계속 내놓아야 합니다. 시대는 계속 바뀔 거고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 리더십도 변화할 텐데 거기에 준비된 사람들은 기회가 온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영역의 어떤 정치를 그냥 각자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언젠가 나한테 기회가 오겠지 하면서 각자 정치를 해야 합니다. 보존사회와 변형사회를 본인의 지역사회에서 그냥 만들어 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중에서 누군가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서 법과 제도의 권한을 가지고 사회를 바꾸는 사람도 나오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지금 있는 자리에서 본인의 관심 분야를 가지고 정치 활동을 해나가야죠.”

“그냥 각자 흩어져서 정치를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사례를 몇 번 봤거든요. 이를테면 서울 성북구에서 지방의원 선거를 하는데 정의당 후보가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그 후보가 젊은 사람이었는데 환경조례라든지 이런 걸 계속 강하게 이야기를 했던 말이에요. 결국은 지금 현역 구의원인 민주당 의원이 그걸 받아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계속 아이디어를 던져라.”

“조례를 만들었다는 건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만든 거 아니에요 이제 계속 누적되고 쌓이다 보면 세력이 될 거고 그 세력이 뭔가 추동할 수 있는 어떤 저변이 되려면 어젠더에 대한 어떤 선정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7장

이머징 시티즌과 함께 성숙사회로

제1절 이머징 시티즌의 미래 인식은 사회적 경고등

제2절 혁신적인 시민들의 미래인식과 대안

제3절 미래대화의 심화 과정 고도화

제4절 ‘더’ 포용적 사회를 위한 미래대화 연구

제1절

이머징 시티즌의 미래 인식은 사회적 경고등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부산 주민들, 원전마을, 원폭피해자, 소년범, 다문화 이주여성, 탈북 여성과 그들이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들, 성소수자, 영케어러, 지방대학의 인문사회학과 대학원생, 대안학교 교사, 청년 정치인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이들이 발신하는 우리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그 근원과 파급성을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었다.

원전마을 주민들로부터는 탈핵이 갖고 있는 문제가 지역별로, 주민별로 매우 상이하고 다양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단순히 규범적으로 탈핵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 원자력발전의 역사가 수십년을 지나온 만큼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자가 있고, 원전과 함께 성장한 주민들의 의견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여러 삶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원전마을에서 주민들이 택한 최선의 생존 방식은 적절한 보상을 받고 지역을 떠나는 것임도 이해할 수 있었다.

‘지역을 떠나는 게 정답’이라는 이들의 선택이 우리사회의 미래에 시사하는 점은 매우 무겁고 무섭다. 결국, 인간은 자신이 살던 곳의 문제를 풀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적 존재인가라는 자성, 더 나아가 지구에서의 생존이 불투명하면 늘 하던대로 지구를 떠날 것이란 공상과학영화의 시나리오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라는 자괴감도 들게 한다.

우리사회가 소년범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인터뷰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청소년의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다면 성인들의 범죄율도 증가하고 있다는 인식은 소년범의 문제가 단순히 소년범만의 개인적 문제가 아님을 시사한다. 한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질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원전마을에서도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이듯 소년범을 다루는 방식도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이다. 잘못을 저지른 청소년들을 시설에 가두는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예측하고 이들을 미리 가두는 일도 자행한다.

2021년 장애인을 이머징 시티즌으로 보고 추진했던 인터뷰에서 우리는 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주장한 바 있다. 이들과 함께 살아가려는 사회적 정책이 필요함에도 우리사회는 이들을 시설에 가두어두고 가급적 밖으로 못나오도록 막는다. 이들의 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한국사회의 효율적 작동을 위해 이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들이 사회에 나오면 나올수록 도시는 느려지기 때문이다.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고정적 시선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은 어떠해야 한다는 암묵적 규범을 적용하고, 그 틀에 맞지 않으면 사회적 제재를 가하는 법과 규범은 개선의 필요가 있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사회에 맞는 교육 정책과 청소년 교육 방향이 고집된다면 모든 청소년은 학교와 집을 암전히 오가는 대상이어야 한다. 무리를 지어 다니거나 엉뚱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범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이들을 최대한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가두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확산된다.

소년법을 변호한다는 것이 한국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점도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이들도 인권이 있고,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도 이들은 사회의 영원한 낙인을 받아야 한다. 쫓값을 치르고 나와도 낙인이 찍혀 있어 새로운 삶을 기획할 수 없다. 유전적으로 뛰어난 개인만 생존하는 공상과학영화 ‘가타카’와 다를 바가 없는 사회인 셈이다. ‘소년법’이라는 주제는 경제적 성공을 넘어 우리사회가 인권이 신장한 나라, 차별과 혐오가 완화되는 사회를 국가의 주요 목표로 설정해야 하지는 않는지 무겁게 묻고 있다.

다문화 이주여성, 탈북여성, 성소수자 등의 인터뷰에서는 우리사회의 차별과 혐오가 복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박성원(2023) 연구를 보면 지난 10년(2013~2023년) 동안 혐오, 차별을 주제로 발표된 논문을 조사한 결과, 총 3,336건이 혐오, 차별을 주제로 다루고 있었다. 이중 941건은 혐오와 차별의 특정 대상을 언급한 문헌으로 분류할 수 있다(표 7-1 참조)

장애인, 젠더(여성), 다문화이주민, 노인, 성소수자 순으로 혐오와 차별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에 대한 차별 문헌은 증가 추세이며 노인여성, 노인 비정규직, 고령장애인 등의 단어에서 복합차별의 표현과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외국인 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등도 지속해서 혐오와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 임대주택 거주자, 한 부모 등에 대한 혐오와 차별도 계속되고

있다. 기술의 발달에 따른 포스트휴먼(인간의 기계화), 로봇, 유전자 등도 혐오와 차별의 새로운 대상으로 등장해 주목된다. 이들은 앞으로 우리의 연구에서 다루는 이머징 시티즌의 새로운 연구 대상이기도 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우리사회의 차별은 복합화 양상을 띈다. 차별과 혐오를 경험하는 대상은 한 분야가 아닌 여러 분야에서 복합차별을 당하고 있어서다. 예를 들면, 여성이면서 장애인이고 다문화이주민인 경우 이중삼중의 복합차별을 경험했다. 여성, 빈곤, 이주민, 노인, 장애 등이 겹친 시민들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표 7-1] 최근 10년 혐오와 차별의 대상 및 복합차별을 다룬 문헌 분류

혐오와 차별의 대상	건수	복합차별을 겪고 있는 사람들
장애인	226	여성 장애인, 장애인 사회복지사, 장애인 교도소 수용자
젠더/여성	221	저학력 여성, 미혼모, 빈곤 여성
다문화 이주민	141	결혼 이주여성, 무슬림 이주민, 중국 출신 이주민 청소년
노인	99	노인 여성, 노인치매환자, 고령장애인, 노인 1인가구
성소수자	43	교도소 내 성소수자, 트랜스젠더 자녀의 부모, 동성애자 군인
비정규직/기간제	42	장애인 비정규직, 노인 비정규직
인종	39	무슬림 유학생, 외국인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유학생	35	
북한이탈주민	18	북한 출신 장애인, 북한이탈여성
(전염병) 환자	18	여성 환자
종교	13	
난민	10	난민 남성
포스트휴먼/로봇	9	
저소득층 아동/청년	5	저소득층 여성, 이주 아동
유전자	4	
정치인	4	
재일조선인	3	재일 조선인 여성
임대주택 거주자	3	
한 부모	2	한부모 여성
출소자	2	
1인가구	1	
원폭 피해자	1	
지방대생	1	
특성화고 학생	1	

출처: 박성원, 2023, 국민대 성폭도서관 온라인 DB, 2023년7월29일 검색

원폭피해자의 인터뷰에서는 우리사회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원자탄을 활용한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미래에 벌어질 최악의 시나리오인 지구 전체가 핵전쟁의 화염에 휩싸이는 것이다. 원폭피해자들의 여러 고통과 문제점도 하나씩 풀어가야 할 중요한 숙제지만, 이들의 증언과 고통이 암시하는 가장 큰 위험은 미래의 핵전쟁이다. 앞으로 핵전쟁은 1945년 일본에 투하된 핵무기와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위협적일 것이다. 인류의 생존을 붕괴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원폭 피해자의 인터뷰가 갖는 의미는 몸서리를 치게 한다.

영케어러와 지방대학의 인문사회과학대학원생들의 인터뷰도 우리사회의 근원적인 미래비전에 의문을 제기한다. 경제와 정치적 성장을 근대 이후 한국의 가장 자랑스러운 성취로 꼽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껍데기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여전히 소수와 약자에게 필요한 복지는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경제적 성장에 덜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짙게 깔려있다.

이 두 집단은 각각 서로 다른 이유로 이머징 시티즌으로 호명될 수 있다. 이머징 시티즌은 완벽한 시민사회의 주류계층으로 편입되지 못한 현재 시점에서의 소수자 집단이며, 그 런데도 앞으로 그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여기지는 집단이다. 이들의 목소리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과정에서 거의 참고되고 있지 못하지만, 미래 사회에서 이들의 발언권을 더욱 커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이들의 ‘숨겨진 목소리’는 변화해가는 한국사회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경청해야 하는 목소리이기도 하다. 수적으로나 권력적으로나 소수자이기 때문에 도드라지지 않지만, 이들이 말하는 사회문제와 선호미래상에 대한 관점은 한국 사회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먼저, 영케어러들의 경우 한국사회의 돌봄의 미래가 무엇인지 고찰할 수 있게 한다. 즉, 영케어러들을 이머징 시티즌으로 호명하는 것은 가족과 그 구성원을 돌봄의 주체로 상정하여왔던 대한민국 복지의 패러다임에 혁신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학원생들의 경우 투자 대비 효율성 중심으로 수립되고 집행되던 한국의 R&D 정책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한다. 이들은 비록 소수지만 학문 후속세대를 육성하는 국가의 철학이 효율성 중심으로만 치우쳤을 때, 인문학 연구의 맥이 완전히 단절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또한 지방에서 거주하는 비 경제인구의 일원으로서 느끼고 있는 소외감에 대한 증언은,

대학원생을 넘어 다양한 사회집단들이 유사한 어려움을 호소할 것이라는 점을 추측하게 한다.

이들 이머징 시티즌의 경고는 한국사회 전체가 경청하고 대비해야 할 만한 메시지들을 던져준다. 먼저 영케어러들의 목소리는 그들 자신들의 소수자성으로부터 기인한 증언들임에도 불구하고, 장차 우리 사회의 상당수가 마찬가지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인구감소와 고령화, 혼인 연령의 고령화로 우리 사회는 서서히 ‘영케어러의 사회’로 전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먼저 영케어러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였던 바 있다. 부모가 자녀를 완벽하게 돌보고 난 후 돌봄의 대상으로 편입되는 기존의 정상가족의 생애주기가 더는 작동하지 않는 사회가 오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대학원생들의 목소리는 노동의 의미와 형태가 다변화될 미래 사회에서 다수의 청년 노동자들이 처하게 될 상황을 예견한다. 지금 우리 사회가 고부가 가치의 노동이라고 여기는 상당수의 직종이 미래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클뿐더러, 인간 노동의 가치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낮아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학문을 공부하기 위한 인문학 대학원 공간은 지금은 부가가치가 낮은 장소로 여겨지지만, 다른 산업 분야 또한 그 부가가치의 측면으로 보았을 때 미래 사회에서는 마찬가지로 될 수 있다. 또한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원이라는 공간의 재해석 또한 진행 중이다. 지금보다 훨씬 많은 대학원생이 생겨날 것이고, 사실상 고등교육의 기본 범위가 대학원으로 확장될 뿐 아니라, 직업자 재교육의 장소로 대학원을 찾는 인구도 더욱 많아질 것이다. 따라서 대학원생들의 사회 인식과 미래상은 소수의 목소리를 넘어서 미래의 한국사회에서 더욱 풍부하게 제기될 목소리들과 유사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비관적인 자신의 미래를 확신에 찬 목소리로 예견하는 이들 집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며 각자의 선호미래를 구현하고 살아가야 하는 집단들임을 직시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이 남는다. 이러한 미래를 만드는 열쇠는 아이러니하게도 현재에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 미래를 대가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영케어러들을 현재의 피돌봄자들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미래를 기회비용으로 소모한다. 대학원생들은 불투명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소명 혹은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의 고난을 버텨낸다. 사회적 지원과 안전망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우리는 지역시민들과 미래대화, 청년정치인과 미래대화, 여러 이머징 시티즌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우리사회가 어떤 경로로 '붕괴'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전망해보는 작업이 필요함을 느꼈다. 실제 우리사회 시민들은 대부분 우리사회가 이대로 간다면 4가지의 미래 유형 중 붕괴로 갈 것으로 전망한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비관적으로 전망하지는 않았다.

여기서 사회의 붕괴는 이 단어가 내포하듯 한국사회의 전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지금까지 한국사회가 유지했던 방식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제까지 성공을 일궈온 방식, 문제를 풀었던 방식이 더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붕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

붕괴의 미래를 전망하는 시민들은 붕괴를 바라는 시민들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붕괴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붕괴한다는 시민들의 미래인식,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늘 경험하고 있는 위험 요소들, 풀리지 않는 사회의 문제들, 문제를 푸는 주체의 실종 등을 목격하면서 시민들은 앞으로 미래가 더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올해 우리 연구의 결과는 붕괴의 사회를 매우 구체적으로 전망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사회가 어떤 과정과 인과관계를 통해 붕괴할 것인지, 붕괴에 따른 시민들의 삶은 어떤 고통을 겪을 것인지, 지역별로 붕괴의 정도는 어떻게 다를 것인지 분석하고 예측해야 한다. 붕괴의 과정이 자세한 인과지도로 제시된다면 이 문제를 풀어갈 대안이 보일 것이다.

많은 사람이 붕괴의 과정과 원인, 결과에 공감한다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나설 것이다. 우리사회가 아직 대안을 발견하기 못했다면 그것은 위기와 문제에 대한 공감의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들, 뭐지 않아 괜찮아지겠지라면서 위험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붕괴의 시나리오를 시민, 전문가, 정부 관료들이 모여 전망하는 작업은 꼭 필요해 보인다. 위기의 공감대를 이룬다면 대안은 나올 수 있다.

제2절

혁신적인 시민들의 미래인식과 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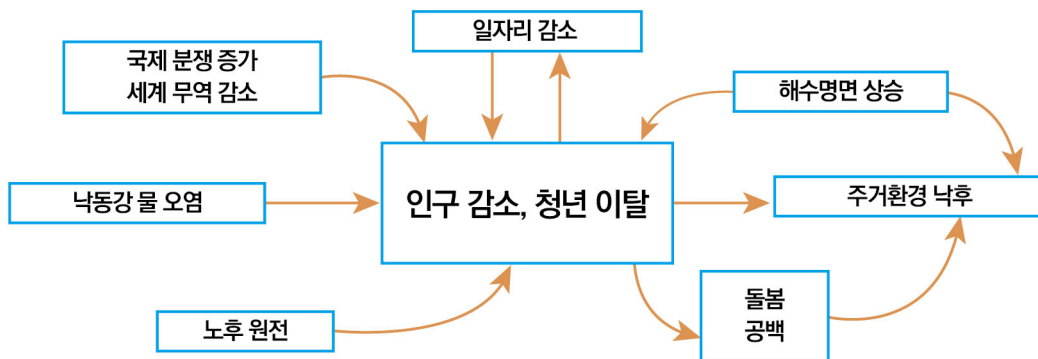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미래학이나 미래연구의 경험이 없어도 일반 시민들은 다양하고 균형 있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며 바라는 미래사회를 제시할 수 있다. 이들이 미래대화에 쏟아내는 말들에서 과거와 현재의 문제점도 있지만 다가올 미래사회의 문제들도 많아 전문가그룹이나 정책 그룹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는 새로운 성장과 대안 도출에 고려해야 할 필수 요소이며 이를 해결할 경우 시민사회의 연대감이 강해질 수 있다. 부산시민과 미래대화에서 우리는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붕괴의 미래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시민들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붕괴의 주요 원인, 붕괴를 촉진하는 요인, 그리고 붕괴의 연쇄효과에 대해 일종의 ‘마음 지도’를 그려볼 수 있었다(그림 7-1 참조).

미래유형	이대로 가면 맞이할 미래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선호미래
경제의 계속 성장	0%(0명)	15.5%(9명)
사회의 붕괴	62%(36명)	1.7%(1명)
보존사회 등장	29%(17명)	46.5%(27명)
변형사회의 시작	9%(5명)	36.3%(21명)

(총 58명이 숙의토론하고 결정함)



[그림 7-1] 시민들의 마음에 그려져 있는 붕괴의 원인과 파장

[그림 7-1]을 보면 시민들은 부산이 ‘현재대로 간다면 맞이할 가장 가능한 미래’로 붕괴사회를 꼽았고, 그 붕괴의 중심 이유가 무엇인지 나타낸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회적 현상은 부산시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그 원인으로 청년층의 이탈이 있다. 실제 부산의 청년 인구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김경수 외, 2022).

미래대화에 참여한 시민들은 연구자들의 해법이 겨냥하는 문제보다 더 복잡한 문제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민들은 인구 감소와 청년층 이탈이 일자리 감소와 관련이 있지만, 국제 분쟁의 증가, 세계 무역 감소, 낙동강 물 오염, 노후 원전, 해수면 상승 등도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그림 7-1 참조).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은 물론 국제관계와 노후 원전의 위험성 등 부산지역에 특화된 요인까지 거론했다.

더 나아가 시민들은 인구 감소와 청년층 이탈의 연쇄작용으로 돌봄의 공백, 주거환경의 낙후를 제시했다. 독거 노인의 증가, 고령장애인의 증가 등은 고령화 추세에서 피할 수 없는 요소들이고, 이 때문에 이들을 돌봐줄 사람들이 더욱 필요하지만, 가족의 해체, 공동체의 와해, 의료인의 부족 등으로 돌봄 문제는 악화한다.

특히 고령장애인의 증가는 도시에 구조적 변화를 요청하기에 단순히 이들을 시설에 수용하거나 재가요양사 등 돌봄 노동자를 확충한다고 풀릴 문제가 아니다. 이들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외출 및 사회 활동을 하려고 할텐데, 이들이 휠체어를 타고 나갈 수 있는 도시 공간은 매우 제한적이다. 휠체어를 타고 동네 한바퀴를 돌 수도 없는 지역이 많기 때문이다. 도시의 모든 도로는 소위 일반인들을 위한 도로다. 계단이 많고, 걸을 수 있는 공간도 좁다.

이들에게 향한 혐오나 차별의 시선도 사회구조적 문제다. 도시는 노동효율성을 높이려는 명목으로 장애인에게 시설 거주를 강권하고 이들의 외출을 가급적 지양하라고 요청한다. 이들이 도시에 나갈 경우 도시의 흐름이 늦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성원(2023)은 ‘혐오와 차별의 미래’에서 지난 10년 동안 혐오와 차별의 대상을 다룬 문헌을 조사한 결과, 장애인, 여성, 다문화이주민, 노인, 성소수자 순으로 많았다고 밝혔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한국사회에 혐오와 차별은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장애인이면서 노인이거나 성소수자이면 차별의 강도는 더 세진다. 여성이면서 노인이고 장애인이면 더 복합적인 차별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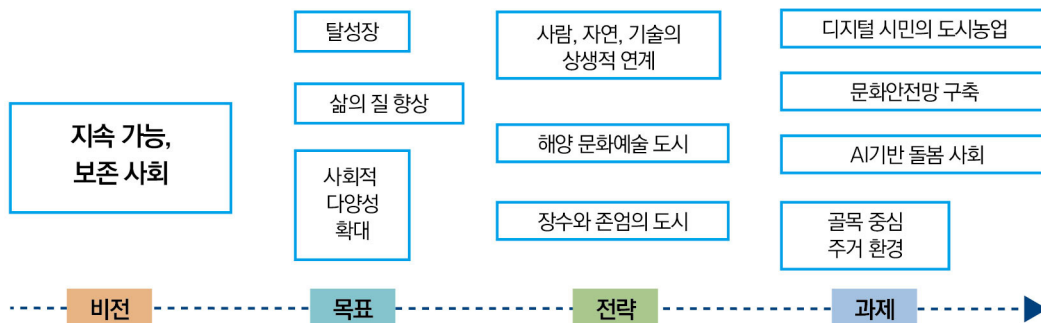
결국, 돌봄의 문제는 돌봄 노동자의 확충만이 아니라 인권의 신장을 위해 사회가 구조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시민들이 제기한 붕괴의 원인으로 인구의 감소

와 돌봄의 공백은 이런 점에서 단편적이고 표피적인 대응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돌봄의 공백은 주거환경의 낙후를 초래하고 다시 인구 감소를 부추긴다. 시민들은 해수면의 상승도 주거환경의 낙후를 초래하는 주요 이유로 꼽았다.

이번에는 시민들이 바라는 미래사회의 모습에 대해서도 살펴보자(그림 7-2 참조). 부산시민들은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가 바라는 미래상으로 보존사회를 꼽았다. 보존사회는 경제적 가치보다 사회적 가치(연대, 신뢰)나 환경적 가치(생물다양성 보존, 기후변화 대응)가 더 중요하다고 믿는 사회다.

미래유형	이대로 가면 맞이할 미래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선호미래
경제의 계속 성장	0%(0명)	15.5%(9명)
사회의 붕괴	62%(36명)	1.7%(1명)
보존사회 등장	29%(17명)	46.5%(27명)
변형사회의 시작	9%(5명)	36.3%(21명)

(총 58명이 숙의토론하고 결정함)



[그림 7-2] 선호미래 실현을 위한 시민들의 제안

[그림 7-2]에서 제시한 것처럼 시민들이 일목요연하게 선호미래 실현을 위한 비전과 목표, 전략과 세부 과제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의 논의를 정리하다보면 이런 흐름으로 정리도 되고 분류도 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지속가능한 사회, 환경과 자원을 보존하는 사회라는 비전, 이를 목표로 세분화하면 탈성장, 삶의 질 향상, 사회적 다양성 확대로 나눌 수 있다. 탈성장은 성장을 멈추자는 것이 아니라 경제만 성장하려는 성장의 중독증에서 벗어나자는 뜻으로 읽힌다. 이는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와 연결되고,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시민, 개인들을 포용하고 연대한다는 목표와도 연계된다.

이런 3가지 목표를 실현하는 전략으로 사람과 자연, 기술의 상생적 연계, 부산지역의 특성을 살린 해양 문화예술 도시의 추구, 그리고 고령화를 부정적인 요인으로만 보지 말고 장수의 지역으로, 더 나아가 나이가 들어도 존엄을 유지하는,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지역을 제시했다. 또한 기술을 인간의 소외로 연결 짓지 말고 기술 개발을 통해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만들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세부 과제로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돌봄 사회의 강화, 문화안전망 구축, 디지털 시민의 도시 농업 시도, 골목 중심의 주거 환경 개선 등이 언급되었다. 이 중에는 시민들이 미래대화에서 제시한 아이디어도 있지만, 시민들의 논의를 들은 연구진이 추가로 제시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시민들이 일상의 언어로 언급한 것을 연구진은 정책의 용어로 바꿀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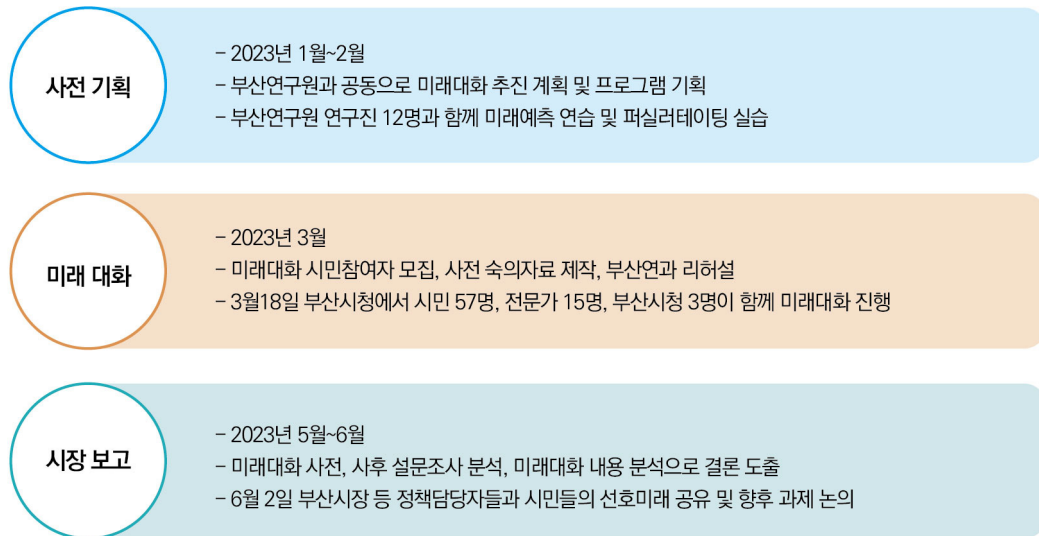
이상에서 시민들이 논의한 이대로 가면 맞이할 미래와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선호미래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를 정리해보았다. 정리하면서 도식화해보니 붕괴의 원인에서는 정책담당자나 연구자들이 놓친 부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선호미래의 논의에서도 시민들은 일상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를 전략과 정책의 언어로 재해석할 때에도 유용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시민들도 우리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비전, 중장기적 전략과 단기적 과제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은 미래대화에서 얻은 성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 연구진이 해야 할 숙제는 이런 논의들을 논의에서 그치지 않고,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미래대화 연구진은 시민과 미래대화를 지역정부의 최고의사결정자인 부산시장과 공유하고 필요한 정책을 논의하는 일련의 과정을 실행해보았다(그림 7-3).

우선 국회미래연구원은 부산연구원과 23년초부터 회의를 갖고 공동으로 미래대화를 추진할 계획을 수립했다. 부산의 미래비전과 실천계획을 꾸준히 연구한 부산연구원은 지역적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거시적 관점에서 부산의 미래를 전망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리고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인터뷰도 진행해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가 매우 높다.

이번 미래대화에서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망 프로그램을 운영한 장점을 살려 부산연구원의 연구진 12명을 대상으로 2차례 미래전망의 기본 이론과 방법론,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미래에 관한 논의를 이끌어가는 퍼실러테이팅 기법을 공유했다. 실제 프로그램으로 리허설도 하고, 사전숙의자료를 공동으로 작업하기도 했다.

부산시청은 시민과 미래대화에 참석하면서 실제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생각, 고민, 표정 등을 학습하는 기회를 가졌다. 미래대화에서 시민들이 제시한 가능미래와 선호미래를 함께 듣기도 했다. 국회미래연구원과 부산연구원의 연구진이 미래대화의 내용을 정리한 자료는 23년 6월 박형준 부산시장과 주요 정책담당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공유되었다. 이 과정에서 부산시장은 시민들의 목소리, 요구 사항을 듣고 부산시가 이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지 논의했다.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김현곤 원장과 연구진, 부산연구원에서는 신현석 원장과 오재환 부원장 등 연구진이 참석했다.



[그림 7-3] 부산시민과 미래대화의 3단계 추진 과정

부산연구원은 부산시가 추진하는 부산 2050 비전에 ‘부산시민과 미래대화’ 내용을 참고해서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그림 7-3 참고). 이처럼 부산과 미래대화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할 경우, 대한민국은 정기적으로 시민들과 전문가, 정부가 만나 새로운 미래, 바람직한 미래를 논의하고 실현하는 사회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미래대화의 심화 과정 고도화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부산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미래대화를 나눴고, 시민들의 의견을 부산연구원과 함께 분석하고 부산시청과 내용을 공유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실행하지 못한 부분은 실제 변화를 일으킬 조직과 시민들, 그리고 삶의 터전에서 실천할 다양한 과제들의 도출이었다. 큰 그림에서 부산의 미래를 전망하고 중장기적 과제를 제시했지만, 어느 지역에서 누구와 함께 이 변화를 실현할지는 논의하지 못했다. 1년의 연구 과정이 짧았던 탓도 있지만 24년 지역주민과 미래대화 연구에서는 변화를 구체적으로 일으켜볼 섬세하고 구체적인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충남 홍성군 마을연구소 이야기²⁴⁾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에는 전국에 없는 특이한 마을연구소와 마을학회가 있다. 연구소 이름은 일소공도 협동조합, ‘일만 하면 소가 되고 공부만 하면 도깨비가 된다’는 다석 류영모 선생의 말을 지침 삼아 앞글자를 따서 이름을 지었다. 창의적 생각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이 목표다.

산업화와 도시의 확대,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개발정책으로 농업과 농촌의 삶의 질은 지속해서 악화하고 있지만, 대안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 지역정부가 주민에게 하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는 오랜 관행 탓에 마을 주민들은 변화에 수동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마을연구소와 마을학회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설립되었고, 주민 스스로 문제 해결의 대안을 마련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마을연구소는 매월 주민들과 공부 모임을 하는데 지난 23년 11월에는 마을공동체수당을 다루기로 했다. 이 수당은 마을 공동체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 필요한 활동자금이다. 예를 들면,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의 풀을 깎는다거나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운반하는

24) 이 글의 일부는 박성원의 다음 글에서 인용하고 발췌함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18893.html>

일, 독거노인들의 집수리 등에 쓰일 수 있다.

읍면별 지역정부가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 지원사업이 일시적이고 마을별로 지원 액수가 천차만별이라는 점이다. 마을공동체를 유지하려면 지속해서 할 일들이 있는데 지역정부의 보조금에만 의존하니 많은 일이 주민들의 희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마저도 초고령화, 인구감소의 추세에 일할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

구자인 마을연구소 소장은 “전국에 4만8천개의 읍면별 단위의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 해마다 3백만원을 지급하면 1,44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정부가 해마다 지역소멸 대응기금으로 1조원을 쓰는 것과 비교하면 해볼 만한 액수”라고 말한다. 시행착오를 고려한다면 첫해에 시범사업으로 일부 읍면을 선정해 실시하고 부작용을 줄여가면서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다.

이 제안이 흥미로운 이유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유지와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면 해마다 4만8천개의 새로운 제안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0년을 지속한다면 48만개의 신사업을 실험할 수 있다. 마을들이 선의의 경쟁을 벌이면 상상하지도 못했던 제안이 나올 수 있다.

수백만원으로 어떤 혁신적 제안이 나올까 싶지만, 시골에서는 다양한 실험이 가능하다. 마을 승강장 환경을 정비하거나 마을영화관 운영, 독거노인 반찬 배달, 여성 귀농인 안심거주 지원, 마을 문화유산의 조사 및 자료 제작, 마을풍물단 복원, 유희농지 활용 공동작업, 이웃 마을 연계 공동 활동 등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나올 것으로 마을연구소는 기대한다.

이 월례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한 청양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노승복씨는 “마을공동체수당이 매년 마을에 주어진다면 일상적인 공동체 활동이 강화되어 선주민과 귀농귀촌인의 갈등이 완화되고 마을에 필요한 일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마을의 자율성과 주민주도성의 강화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논의를 지켜보면서 혁신은 작은 실천을 직접 해볼 수 있는 여건에서 탄생한다는 것, 작은 마을에서도 세계적인 문제를 풀어낼 대안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전세계로 확산한 슬로시티도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했다.

연구진은 충남 홍성의 마을연구소를 찾아가 지역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과정과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서 들어왔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변화를 일으킬 주민들을 조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변화는 근사한 구호나 비전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미래 비전에 공감하고 비전을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과제와 자원, 동력이 주어져야 비로소 변화가 일어난다. 마을연구소 일소공도의 구자인 소장과의 나누는 이야기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진: 왜 농촌에서 변화의 구조를 실험하게 되었나.

구자인: 서울은 넓은 공간인데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지역에 뭔가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좀 더 지역에 밀착을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이런저런 활동 경험을 해야 한다. 그런데 공동체가 발달하면 재개발 철거로 이동하고 또 직장이나 아이들 교육 때문에 자주 이동을 하니 도시 문제 해결은 주민주도로는 잘되지 않는다. 차라리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농촌이 안정되고 또 지속 가능한 그런 지역사회가 되고, 이들의 소득 구조가 어느 정도 확보될 때 도시 문제는 차츰 해결될 것으로 봤다. 그래서 오래전 지역사회로 내려왔다.

연구진: 작은 마을에서 미래를 만들 희망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구자인: 주민들과 마을좌담회부터 토론회를 많이 했는데 결국 느끼는 거는 주민들은 누구나 꿈과 희망을 품고 있고 뭔가 바꿔보려고 항상 노력한다는 것이었다. 사람의 생존 조건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왜 그 꿈과 희망이 잘 실현이 되지 않을까 궁금했다. 그래서 마을로 들어가 마을 단위 활동가를 발굴하고 토박이 주민 중에 활동가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발굴하고 교육, 훈련시키면서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이렇게 마을 단위 변화를 모색하면서 읍면 단위에서 시군 군 전체에 확산하려고 했다. 10년 동안 내린 결론이 중간지원 조직의 구축의 중요성이었다.

연구진: 중간지원 조직의 구축이 왜 필요한가.

구자인: 우리가 10년 동안 여러 가지 경험들을 쌓고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찾

있는데 결국은 권한이 너무 센 행정을 어떻게 통제할 거냐는 문제에 직면했다. 그러자면 주민들의 입장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 집단들이 필요한데 이게 흔히 말하는 일반 민간 단체 그런 활동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중간지원 조직을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우리 시대에 지금 가장 큰 과제로 생각했다.

연구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구자인: 중간조직이 없으면 지역행정부의 예산 갑질 속에 주민들은 수동적으로 등장할 뿐 정책 수립 과정에 개입할 수 없다. 민간의 대표성을 가지고 훈련된 사람이 등장해서 공동체법인으로, 또 이 주민그룹이 정부의 정책위원회에서 정책을 공동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 중에 중간지원조직의 대응이 필요한 일이 많다.

연구진: 국회미래연구원은 부산시와 함께 부산지역 주민과 미래대화를 했는데, 지역공동체 활동가의 시각에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구자인: 광역 지자체는 현장에서 너무 멀다. 지자체 출연 연구원이 읍면동리 등의 작은 지역에 가서 주민들의 꿈과 희망을 확인하고 모아내는 절차와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국회 차원에서 광역 단위로 미래대화를 한다면 주민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정책 체계를 어떻게 짜면 좋을지를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지역 단위에서 실험을 해보고 모범 사례를 발굴해서 다른 지역주민들과 논의하면서 점차 광역시 차원으로 확대하면 좋겠다.

단체장 바뀔 때마다 지자체는 기초지자체 포함해 10년, 20년 중장기 계획 수립하지만 사실 작동되는지 조사해 보면 보고서는 목록상은 남아 있을 뿐 속지하는 사람도 없고 보고서가 어디 있는지도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지방자치라고 하면 주민들의 실생활에 가까운 기능들은 읍면까지 내려줘야 되는데 시군이 다 흡수, 통합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읍면은 그냥 출장소고 잠깐 머물다 가고 정책 기능은 아무것도 없다. 주민들이 문제 제기하면 그냥 군청에 바로 가라고 한다. 결국, 읍면 정도의 주민자치회가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연구진: 광역시 단위가 아닌 읍면동 단위에서 미래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다.

구자인: 읍면동 단위로 2040년 미래 계획을 만들어보고 그걸 모아보면 해당 시군에서는 공통적인 것도 있고, 충돌되는 것도 발견할 것이다. 예를 들면 여기도 건물 짓고 싶어 하고 저기도 건물 짓고 싶어 하면 그 공통적인 기능을 여기다 좀 더 하면 되지 않겠냐는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 면 단위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읍면동 단위로 수립하고 그걸 모아 전체 조정을 해보면서 미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을 것 같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광역 차원에서 기초 시군에 몇 개 사례를 만들어봐도 좋을 것 같다. 가볍게라도 비전 체계도를 채우는 방식으로 시군 차원에서 각자 만들고 그 과정을 유튜브로 만들어서 서로 올리고 하면서 공모전 비슷하게 해보면 어떨까.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이런 광역 조직이 없는 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있다고 보고 그런 조직의 사업의 일환으로 공모전처럼 우리 지역의 2030 비전은 이렇다고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

연구진: 주민 주도의 마을 변화에서 가장 어려운 점을 꼽는다면.

구자인: 초기에 학습 조직을 구성하고 주민자치회에서 회의하면서 공론장을 만들어 마을의 발전 계획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이를 실천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주민조직이 강화된다. 그런데 이 과정들을 누가 어떻게 설계하고 일정한 기간을 버틸 거냐는 문제가 발생한다. 성공 경험이 있어야 더 많이 참여하고 더 목소리가 모인다. 초기에는 주민들 간의 가치 차이 때문에 계속 충돌할 텐데 이 갈등을 관리하면서 넘어가야 한다. 이 과정을 버틸 힘이 내부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공공행정, 기초지자체, 광역단체의 정책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이 과정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사람과 조직이 지역 내에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읍면 단위로 내려오면 관변 단체라고 부르는, 그런 거는 어디나 똑같다. 지역만의 특화된 주민들이 만들어낸 조직이 없다. 만들어본 적이 없다. 그나마 이제 주민자치회는 제도적으로 공적으로 길을 열어준 셈이고 거기 모여서 토론하는 경험들은 이제 막 지금 축적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는 주민자치의 상근자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전라남도는 1명씩 배치했는데 내년부터 그것도 없어진다.

구자인 소장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미래대화의 궁극적 목적은 기초적인 공동체 단위에서 실현할 수 있는 과제의 기획과 실천의 재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주민들의 조직화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래연구는 예측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예측의 결과에 대응하는 정책적, 전략적 과제를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의 구성이라는 오래된 명제를 확인한 셈이다. 이 조직을 통해 미래계획이 예상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새로운 변화의 동인이 발생했을 때 애초의 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할 것은 없는지를 확인하고 개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계획은 책상의 서랍 속에 잠들게 된다.

생태도시 전남 담양의 사례

연구진은 구자인 소장에 이어 최형식 전 담양 군수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전남 담양군에서 3선 군수를 역임하면서 담양을 세계적인 생태도시로 만들어낸 베테랑 행정가다. 최 전 군수를 인터뷰한 이유는 구자인 소장과 달리 행정가의 처지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주요 동인이 무엇인지 듣고 싶어서였다.

연구진: 2000년 초반부터 생태도시 정책을 추진하셨는데, 당시엔 생소한 개념이 아니었을까 싶다.

최형식: 그때 담양은 경제발전을 명분으로 유해 시설을 들여오고 공장이 마을 안에 들어서고, 축사가 마을 근교에 가까이 들어서고 했다. 그때만 하더라도 사회는 환경을 규제 대상으로 보고 환경론자들은 사상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취급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환경이 돈이고 자본이고 자산이었다. 만약 주거환경권이 무너지면 생존할 수 없다고 보았다. 당시 행정대학원에서 논문을 쓰면서 생태도시화 정책을 통한 환경 정책을 내가 태어난 담양에서 해보자고 했다.

연구진: 담양군은 인구 5만 명이 안되는 작은 지자체인데 당시 생태도시 정책이라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정책적 목표가 아니었을까.

최형식: 군수가 되어서 도나 정부의 도움을 많이 받기는 했지만, 전라남도나 국가에 의존

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발전 전략을 갖자고 생각했다. 담양의 자원이 무엇일지 고민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담양으로 들어오게 할 것인가, 사람들이 오게 할 수 있는 요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연구진: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실천했는가.

최형식: 담양에서 거의 쓸모없는 것으로 간주했던 대나무에 주목했다. 대나무 신산업이라고 하고 대나무를 심고 보존하는 데 주력했다. 당시 반대가 많았지만 지금은 담양의 정체성을 강화했고 하천변 영산강 자전거 도로에 심어놓은 대나무 구간이 자전거 동호인들이 제일 아름답다고 할 정도로 유명해졌다. 한 도시가 아름답게 만들어져야 국가 전체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 관광도시로서 경쟁력을 갖는다고 믿는다.

농업 부문에서도 친환경 농업을 추진했다. 농정 분야에 기술센터 소장한테 딸기 신품종을 개발해 종자 수출국이 되자고 했다. 처음에 이 소장이 “군수님 우리가 군 단위에서 어떻게 종자를 개발합니까?”라고 하길래 내가 당장 개발해서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라 20년 목표로 해보자고 했다. 예산을 주고 필요한 전문가도 영입해서 해보자고 했다. 결국, 7년 만에 죽향 딸기를 개발했는데 이 품종이 앞으로 담양을 50년 동안 먹여 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²⁵⁾

연구진: 지역변화를 일으키는데 행정가의 어떤 역량이 중요하다고 보는가.

최형식: 군수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성을 잘 잡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다. 담양을 친환경적 도시를 만들어서 살려내겠다는 생태도시 정책을 군의 정책 이념으로 삼고 군정의 모든 방향을 맞췄다. 예를 들어, 어느 이익단체가 와서 군 정책에 반대하고 데모하면 군수가 흔들리고 정책을 바꾸더라 하면 공직사회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 군수는 또 저거 가다가 중단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나는 기본적으로 작은 부분부터 실천해야 큰 것이 바뀐다고 믿는다. 작은 정책을 전부 시행하도록 노력했다.

25) 전남 담양군이 자체 개발한 딸기 품종이 유럽에서 2040년까지 품종보호권을 확보했다.(연합뉴스 2020년12월14일자, 담양 딸기 ‘죽향, 담향’, 유럽서 2040년까지 품종보호권 확보). 품종보호권 확보로 담양은 세계시장에서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증식, 생산, 수출입, 양도, 대여의 권리를 갖게 되었다.

연구진: 군수로서 변화를 이끌었다는 점은 인상적이지만 그 변화가 주민들의 주도로 지속할 수 있는 토대까지 만들었는지는 궁금하다.

최형식: 담양이 생태도시의 기반을 다졌다고 하면 다음 단계는 생태도시의 주민 생활화다. 생활 단계로, 일상의 단계로 접어들어야 하는 건데 이 단계까지는 오지 못했다. 농촌 지역은 행정의 힘이 너무 커서 행정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된다. 결국 주민 주도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지역 의회와 주민자치회라는 두 조직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의회는 조례나 예산을 심의하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 주민자치를 위해 시민들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유럽에 가보면 자기 지역에 대한 정체성, 애착심이 강하다.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생태교육과 비판 교육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다. 생태도시화 정책은 관념적으로 풀어갈 수 없다. 깨어있는 주민들이 나서야 한다.

충남 홍성과 전남 담양의 사례를 보면서 연구진은 미래대화를 고도화하려면 사회전환에 공감하는 주민들을 조직하고 이들이 실제 실천할 수 있는 조건과 제도를 만드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2024년 연구과제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을 토대로 실제 지역사회의 변화를 일으켜보는 실험으로 진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제4절

‘더’ 포용적 사회를 위한 미래대화 연구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이머징 시티즌과 미래대화 연구의 시사점은 ‘포용적 사회’를 넘어 ‘더 포용적 사회’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 포용적 사회가 되려면 미래사회를 상상하는 힘이 필요하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려면, 달리 말해 우리가 사는 현재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를 인지하려면, 뛰어난 상상력이 필요하다. 지금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를 이해하려면 현실 세계를 자세히 그리고 꼼꼼하게 관찰하고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는 작은 변화들을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복잡한 현실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평균적 사고를 발달시켰다. 예컨대 ‘정규 분포 곡선’은 좌우 대칭이며, 중앙에 가까울수록 많은 사례가 모여 있다. 가장자리로 갈수록 사례 수가 적어진다. 가장자리의 사례는 우리가 아웃라이어라고 부른다. 평균에서 벗어난 사례라는 뜻에서 그렇다. 이런 사례는 예외적이라는 이유로 우리의 주목을 받지 못한다. 평균적 사고 때문에 이들의 존재는 간과되거나 무시된다.

‘더 포용적 사회론’의 핵심은 이런 아웃라이어를 어떻게 찾아내고 이들을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이들에게 동등한 권리와 사회 참여의 기회를 줄 것인지와 관련이 있다. 사회는 제자리에 머물지 않고 늘 변하며, 그에 따라 아웃라이어는 새로 생겨난다. 기존의 아웃라이어가 새롭게 주목받기도 하지만, 예전에 없던 아웃라이어가 새로 등장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정보화사회와 디지털 전환이 급속하게 이뤄지면서 정보화에 뒤처져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 각종 스마트 기기, 컴퓨터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보에서 소외되고 사회의 각종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정부들은 정보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전개한다.

기후 난민, 각 이코노미 근로자, 트랜스젠더 및 논바이너리(non-binary), 노령화된 성소수자, 한부모 가족 등은 최근에 등장한 소수약자로 거론되었다. 조금 더 미래를 전망한다면 또 다른 미래의 소수약자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디지털 원주민 및 디지털 이민자를 들 수 있다.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 시대에 성장한 사람들(디지털 원주민)과 나중에 이에 적응한 사람들(디지털 이민자) 사이에 세대 간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기술과 정보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려면 이러한 그룹의 다양한 디지털 활용 능력 수준과 요구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AI로 인해 일자리를 빼앗길 개인은 어떤가.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발전하면서 일자리 대체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러한 변화의 영향을 받는 개인을 지원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아울러 보편적 기본 소득(UBI) 수혜자도 등장할 것이다. UBI 또는 유사한 경제적 지원 시스템이 더욱 널리 보급됨에 따라 수혜자는 독특한 경제적, 사회적 역할을 가진 별개의 그룹을 형성할 수 있다.

게놈 시민(Genomic Citizens)도 생각해볼 수 있다. 유전학 및 맞춤 의학의 발전으로 유전 정보, 개인 정보 보호 및 차별과 관련된 고유한 윤리적, 법적,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는 "게놈 시민" 그룹이 생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전 정보 연구나 조작에 대한 대중의 참여를 촉진하는 게놈 시민 과학 이니셔티브가 번창할 것이다.²⁶⁾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데이터 기증 연구부터 가정 및 지역 사회 실험실에서 수행되는 생물학적 실험, 자가 실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우리는 바이오해킹, 시민 과학, 지역 사회 과학, 유전적 개인 정보 보호 등 게놈 시민과 관련된 새로운 문제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가상세계의 시민은 어떤가. 가상 현실과 증강 현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은 가상 세계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가상 시민"은 가상 신원 및 상호 작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권리, 책임 및 과제를 제시한다. 오늘날의 가상 시민권은 대부분 부자나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미래에는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까?²⁷⁾

에스토니아는 이미 블록체인에서 시민 의료 등록을 운영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의 기반이 되는 암호화 기록이지만 통화 거래를 넘어서 컴퓨터 작업 증명을 통해 기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블록체인 거버넌스를 통해 영토적 민족 국가와는 다른 가상 시민권과 자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26) <https://pubmed.ncbi.nlm.nih.gov/36032504/>

27) www.theatlantic.com/technology/archive/2018/02/virtual-citizenship-for-sale/553733/

아직은 공상과학의 영역에 있지만 인공지능 시민도 등장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 사회에 더욱 통합되면서, 특히 AI 시스템이 더욱 자율적이고 유능해짐에 따라 AI 시민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자신의 여권을 가진 최초의 로봇인 소피아를 보자.²⁸⁾ 홍콩에 본사를 둔 헨슨 로보틱스(Hanson Robotics)가 개발한 이 로봇은 인공지능(AI), 안면 인식,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 연결을 사용해 인간의 62가지 표정을 모방할 수 있다. 소피아는 너무나 실제와 비슷해 2017년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그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다.

더 먼 미래까지 고려한다면 우주 식민지 개척자도 예상해볼 수 있다. 우주 탐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다른 행성의 식민지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주 식민지 개척자"는 우주에서의 삶과 관련된 특정 요구와 과제를 가진 독특한 그룹으로 나타날 수 있다.

물론 이들은 아직 우리 주변에서는 발견하기 어렵지만, 사회가 변화하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런 새로운 아웃라이어들은 지속해서 등장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개인을 '이머징 시티즌(emerging citizen)'으로 개념화하고 연구한다. 이런 시민들을 발굴하고 이들의 사회적 필요를 예측하지 않으면 사회가 이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사회가 이들을 통해 새로운 혁신을 시도할 기회를 잃어버리거나, 이들이 사회로부터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서 17년째 발의만 했지 법으로 통과하지 못한 법안이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여러 이유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발의만하고 입법하는데 실패했다. 지금도 발의는 되어 있는데, 통과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요 이유는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성적 소수자들이 한국 사회에 증가한다는 것이다. 주로 기독교에서 반대한다. 포용적 사회가 되려면 모든 개인들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인종, 성별, 성적 지향성, 계급, 종교, 직업, 나이 등을 이유로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한국 사회에 혐오와 차별이 끊이지 않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자. 우선,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에게 익숙한

28) www.britishcouncil.org/anyone-anywhere/explore/digital-identities/robots-citizens

것에 편안함을 느끼며,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노출이 제한적인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수 있다. 이러한 두려움은 편견으로 나타난다.

자원 경쟁도 주요 이유다. 일자리, 주택, 기회와 같은 자원이 희소하다고 인식되면 개인은 해당 자원을 두고 경쟁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그룹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될 수 있다. 이는 차별과 편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수약자들의 노출 부족도 이유다. 편견은 다양한 사람과 경험에 대한 제한된 노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상호 작용이 거의 없다면 사람들은 고정관념에 의존한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혐오와 차별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다. 인구 통계나 문화적 규범의 변화와 같은 사회적 변화는 일부 개인에게 불안을 유발한다. 이들은 확립된 사회적 지위나 생활 방식을 잃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

이머징 시티즌 연구는 이러한 요인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첫 번째 전략은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머징 시티즌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이들 집단의 고유한 요구, 경험 및 과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증가는 더 넓은 공감과 이해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 연구진은 지난해 고령장애인들을 인터뷰한 적이 있다. 한국은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나이든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런데 여러 이유로 이들은 장애를 입기도 한다. 어떤 노인이 넘어져 다리를 다쳐 휠체어를 타야 한다고 생각해보자.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생활하기에는 매우 불편하다. 이들은 현재 수적으로 많지 않아 이들의 요구, 즉 대도시에서도 남들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프라를 조성해달라는 요구에 관해 서울시나 정부가 경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지속해서 증가한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부터라도 이들을 위한 생활기반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이머징 시티즌 연구는 고정관념에 도전한다. 이머징 시티즌의 삶과 이들이 처한 상황을 깊이 탐구함으로써 기존의 고정관념과 편견에 도전할 수 있다. 편견은 제한적이거나 부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것일 수 있어서다. 한국 사회에서 성적 소수자들의 정보가 더 알려져야 하고 이들의 불편함과 불안함에 관해 더 많이 공유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도 기독교계의 반대 때문인데, 주로 성적 소수자의 증가에 대한 우려다. 이미 한국은 도시 곳곳에서 성적 소수자들

의 축제가 열리고 있고, 성소수자 연예인들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고령자 성소수자에 대한 새로운 배려도 필요하다. 이들은 젊은 시절 당당하게 성소수자임을 밝히고 생활했지만, 나이가 들어 고령자가 되고 요양원에 들어갈 경우, 그곳에서 또 다른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걱정하고 있다. 고령화된 성소수자들을 치료할 의료진도 매우 부족하다.

세 번째로 이머징 시티즌 연구는 미래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이머징 시티즌의 미래에 대한 더 넓은 사회적 대화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는 더 많은 포용성과 다양한 배경과 상황의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지원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미래의 편견을 예방하는 것은 이머징 시티즌 연구의 또 다른 전략이다. 우리 연구는 이머징 시티즌이 직면한 문제를 조기에 이해하고 해결함으로써 미래의 편견이 뿌리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부록

1 미래대화 숙의자료 및 사전질문

※ 부산시민과 미래대화에 오시기 전에 꼭 읽어주세요. 부산의 미래비전을 세우려면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 대략 20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추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단기적 성과주의와 시장경쟁을 통한 효율성 향상에 집중한 결과로 비정규직 비율, 남녀의 임금 격차, 자살률, 산재 사망률, 노인빈곤율이 지속해서 높아졌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개인이 증가하고 개인 간의 협력보다는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감소하고, 1인당 주거 면적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눈에 띕니다. 그러나 소득 하위계층의 자가주택보유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가격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과 열대야까지 심해져 소득 하위계층과 소수약자의 주거환경은 여러 위험에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교육과 일자리]

시민들의 주관적 사회이동성 인식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면 계층 상승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도급 기업의 원사업자 의존도가 심화해 두 기업군의 노동자 임금 불평등이 벌어지고 있으며 제조업종의 중소기업 임금은 지난 20년 동안 대기업의 50% 수준을 맴돌고 있습니다. 창업은 수도권에 주로 집중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수도권의 대기업 노동자와 지방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격차는 더욱 벌어지거나 고착화하고 있습니다.

[경제]

미국과 중국의 대립, 갈등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 이익을 극대화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두 강대국의 눈치를 더욱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심화하고 있으며,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기계나 인공지능의 사람 대체 경향은 강화하는 등 경제의 내외부 환경이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다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일례로 전체 기업 수의 0.5%에 불과한 대기업이 연구개발비는 전체 기업의 연구개발비에서 61.4%를 차지합니다. 대기업과 수도권 기업 중심의 불균형 발전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국회와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낮은 신뢰 탓에 집회와 시위, 온라인 의견 제시 등 시민의 직접행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환경보호, 양성평등, 정치와 경제적 의사결정 참여에서 자신의 의견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따지는 정부의 효과성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최근에는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갈등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증가 추세입니다.

[국제]

경제, 기술, 외교, 규범 등에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유럽, 일본, 아세안 등 미국과 중국 외에 세계의 흐름을 주도할 국가들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 심화와 남북관계의 불안정성에서 국력을 키우고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가지 주목되는 점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아프리카에 우리나라가 지속해서 투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기술과 문화 교류를 통해 아프리카 여러 국가와 협력의 기회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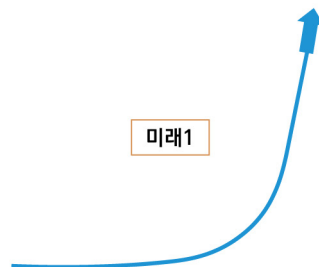
■ 적어도 20년 앞의 미래를 전망한다면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림 1] 과거와 현재를 그린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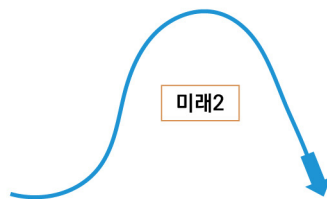
[그림1]은 과거와 현재를 그린 그림입니다. 인간이 수렵 채집 시절부터 농경사회를 지나 산업사회를 거쳐 지금의 사회를 만들면서, 인구는 천천히 증가하다가 [그림1]처럼 19세기 이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경제적 생산성도 가파르게 높아졌지요. 자, 그래프의 오른쪽 위 꼭지점이 현재라면 앞으로 어떤 모양을 그리게 될까요?

미래학자들은 다음의 4가지 미래 중 하나의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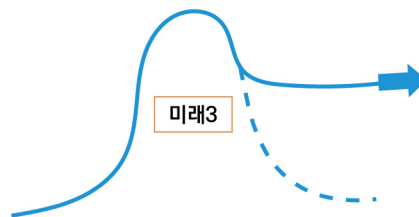
[그림 2] 미래1의 모습

미래1: [그림2]의 미래1을 봐주세요. 이 미래에선 우리 사회가 인구도 증가하고 경제적으로 계속 성장한다고 가정합니다. 사실상 지구상의 모든 정부나 기업은 계속성장의 미래를 원합니다. 계속성장의 미래를 예상하려면 예측의 대상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중심 동인, 예컨대 인구의 지속적 증가, 과학기술의 발달, 기업활동의 자유, 문화적 역동성 등의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사회는 이 미래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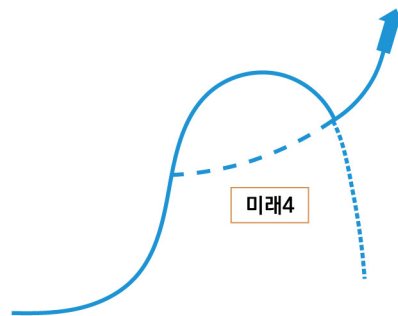
[그림 3] 미래2의 모습

미래2: [그림3]의 미래2를 봐주세요. 이 미래는 경제적 위기, 자원 고갈, 환경 재앙, 전쟁, 도덕적 타락, 전염병의 창궐 등 다양한 원인으로 등장합니다. 이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사회가 낭떠러지로 떨어진다”고 경고합니다. 이 미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맞이하는 미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미래를 예측하려면 예측 대상이 미래의 어느 시점부터 존재감을 잃고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고 사라질지를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우리사회는 이 미래로 가는 것일까요?



[그림 4] 미래3의 모습

미래3: [그림4]의 미래3을 봐주세요. 이 미래를 예상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미래사회가 미래1과 미래2 사이에 놓이거나, 놓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붕괴하지만 아직은 시간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과거의 경제개발 방식이 환경을 파괴하고 자원을 고갈시키며 경제적 양극화를 확대해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1970년대 로마클럽에서 내놓은 ‘성장의 한계’, 2015년 파리의 기후협약 등은 이 미래를 향한 전 지구적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이 미래로 가는 것일까요?



[그림 5] 미래4의 모습

미래4: [그림5]의 미래4를 봐주세요. 이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는 무엇인가가 벌어지고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어요. 음모론은 아닙니다.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빠르고 엉뚱해서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배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다는 기대감도 있어요. 기술 낙관론자들이 예측하는 신세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인공지능, 로봇공학, 생명공학, 나노기술, 우주공학 등이 융합하면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매우 변형적인 사회가 창조되고 있다고 믿는 것이지요. 우리사회는 이 미래로 가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간략하게 네 가지 미래를 살펴보았습니다. 각 미래는 가정이 다르고 그에 따라 추구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규범, 전략도 다릅니다. 주의할 점은 현재로서는 4가지 미래의 실현 가능성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부산시민과 미래대화를 통해 어떤 미래가 ‘이대로 간다면 맞이할 부산의 미래’인지, 어떤 미래가 왔으면 좋을 것인지 논의하겠습니다.

니다. 미래대화가 시작되는 3월18일 전까지 저희가 제시한 4가지 미래를 살펴보고, 각 미래의 가능성과 여러분의 선호를 생각해주세요.

우선, 아래 사전질문을 읽어보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전질문의 답변은 3월17일 까지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프린트해서 3월18일 미래대화의 장소로 가져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질문]

선생님의 선택은?

① 위에서 제시한 4가지 미래 중에서 부산시민이 맞이할 가능성이 높은 미래는 무엇인지 하나를 골라주세요. 가능성이 높다는 뜻은 '이대로 가면 맞이할 미래' 또는 '현재의 행동이나 생활습관을 유지할 때 등장할 미래'입니다. 적어도 20년 뒤의 미래라고 생각해주세요.

()

② 위에서 제시한 4가지 미래 중에서 나 자신과 가족, 친구들뿐 아니라 미래의 후손들이 바라는 미래는 무엇인지 하나를 골라주세요.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그다지 크지는 않아도 여러분이 선호하는 미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적어도 20년 뒤의 미래라고 생각해주세요.

()

※ 사전 질문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시민과 미래대화의 당일 반갑게 뵙겠습니다.

참고문헌

1. 문헌자료
2. 웹사이트

참 고 문 헌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문헌자료

- 곽귀훈. (2013). 나는 한국인 피폭자다, 민족문제연구소
-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2021). 최영준·배주현. (2016).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 국회미래연구원.
- 권혁태. (2009). 히로시마/나가사키의 기억과 유일피폭국의 언설, 일본비평 1
- 김경수 외. (2022). 부산 청년인구 유출입 특성과 청년인구 유지 방안. 부산연구원.
- 김승은. (2012). 재한(在韓)원폭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인식과 교섭태도 (1965~1980), 아세아연구 55(2)
- 김원. (2017). 밀항, 국경 그리고 국적 - 손진두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62
- 김재형·오하나. (2019). 이행기 정의를 통해 본 일본 한센인 운동, 1946~2009, 사회와 역사 121
- 김종우. (2021). 한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담론 지형과 이중화된 인권: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과정을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129
- 김태경 외. (2022). 한반도 중장기 미래전략: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 국회미래연구원.
- 김병록. (2023). 가족구성권 3법에 관한 고찰 - 동성결혼을 중심으로 -. 이화젠더법학 15(2)
- 김성경. (2017). 이동하는 북한 여성의 원거리 모성: 친밀성의 재구성과 수치심의 가능성. 문화와사회, 23
- 김광민. (2023). 나는 왜 소년범을 변호했을까: 우리 사회에서 낙인찍힌 그들을 위한 변론. 인물과사상사.
- 김무인. (2022). 다문화 쇼크. 스리চে어스.

- 김우창. (2022). 원전 마을: 월성원전 인구 주민들의 투쟁 이야기. 한티재.
- 남북하나재단. (2022). 2022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I
- 남북하나재단. (2022). 2022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 류이현, 이덕로. (2021). 탈북자와 다문화가족 정책담론 비교 연구-WPR(What's the Problem Represented to be) 접근을 기반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11(4)
- 모종린. (2022). 탈산업화 시대의 상권 기반 지역발전: 마용성 모델. 국회미래연구원 발제자료
- 박성원. (2019). 미래공부. 글항아리
- 박성원 외. (2019). 한국인 선호미래 조사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 박성원. (2020). 2050년 서른살, 민서가 바라는 미래.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2호. 국회미래연구원
- 박성원 외. (2022). 미래정책의 국민선호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 박성원 외. (2022). 대한민국 미래전망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 박성원·박현석·이상직·김태경·박상훈·전준·이승환·한국미래전략연구소·박경숙·양철·류유선·전희진·심미경·좌민석. (2022). 미래정책의 국민선호 연구: 이머징 시티즌과 미래 대화. 국회미래연구원.
- 박성원. (2022). 이머징 시티즌의 등장과 사회적 전환: 6개 지역 시민과 미래대화. Futures Brief 9호, 국회미래연구원.
- 박성원. (2023). 혐오와 차별의 미래: 정책과 입법적 대안들. 국회미래의제 23-01호, 국회미래연구원.
- 박종민 외. (2022).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지난 23년간 ‘북한이탈주민’을 어떻게 보았는가?: ‘북한이탈주민’, ‘탈북민’, ‘새터민’ 관련 언론 보도 빅데이터 분석. 한국언론학보, 66(1)
- 박한희. (2021).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의의와 필요성. 안과밖: 영미문학연구, 50
- 성소수자부모모임. (2023). 웰컴 투 레인보우. 한티재
- 양동숙. (2018). ‘히로시마현 조선인 피폭자 협의회’의 결성과 원수폭 금지운동, 기억과 전망 38

- 양동숙. (2019). ‘반핵·평화를 위한 조선피폭자협회’의 결성과 북일 원폭피해자의 교류·지원활동 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 78
- 오은정. (2014). 관료제적 문서주의 속에서 기록과 기억: 한국 원폭피해자의 일본 피폭자 건강수첩 취득 과정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47(2)
- 오은정. (2018a). “완전 왜년이지, 왜년으로 살았제”: 히로시마 재일조선인 1.5세·2세의 귀환 서사와 해방공간, *한국문화인류학* 51(2)
- 오은정. (2018b). ‘제국의 신민’에서 ‘재한피폭자’로: 한국 원폭피해자 운동에서 한·일 시민연대의 사회문화적 토대와 그 변화, *기억과 전망* 39
- 유희수 외. (2023.) 국회상임위원회별 미래의제 분석, *국회미래연구원*
- 이승현. (2023). 트랜스젠더 차별과 차별금지법의 쟁점: 차별금지사유를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14(1)
- 이지연. (2018). 탈북 여성의 어머니되기와 소속의 정치학. *한국여성학*, 36(4)
- 이지연. (2020). 탈북 여성들의 초국적 이동과 유연한 시민권의 명암: 서구 국가에서 난민 경험을 하고 남한에 재입국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6(4)
- 이지영. (2017). 한·일 원폭피해자의 고통의 감정 연대와 균열, *한국민족문화* 62
- 이화진, 최대석. (2011). 탈북이주민 정착정책의 인식과 과제: “정착지원을 넘어 사회통합으로”. *통일정책연구*, 20(2)
- 이화진. (2014). 이주공간의 변화에 따른 탈북 여성의 모성갈등 양상과 극복과정. *한국여성학*, 30(3)
- 이희영. (2012). 탈북-결혼이주-이주노동의 교차적 경험과 정체성의 변위: 북한 여성의 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다문화*, 2(1)
- 이희영. (2013). (탈)분단과 국제이주의 행위자 네트워크: ‘여행하는’ 탈북 난민들의 삶과 인권에 대한 사례연구. *북한연구학회보*, 17(1)
- 장명선, 김선욱. (2017).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법제의 쟁점과 과제 : 젠더적 관점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29(3)
- 정민우. (2012). 퀴어 이론, 슬픈 모국어. *문화와 사회* 13

- 정용하. (2019). 일본의 한국인피폭자 차별과 책임: 피폭자들의 재판투쟁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72
- 키무라 아키라. (2018). 원폭투하문제의 공통인식, 한국민족문화 69
- 홍관표. (2021). 차별금지법 제정 방안에 관한 검토. 이화젠더법학, 13(2)
- 홍성수. (2018).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평등기본법을 위하여. 이화젠더법학, 10(3)
- 홍성수. (2021). 차별이란 무엇인가: 차별금지법상 차별금지사유의 의의. 법과 사회, 66
- 발리바르, 에티엔(Étienne Balibar). 2010. 우리, 유럽의 시민들?: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재발명. 진태원 역. 후마니타스.
- 정동재·윤영근·염지선. (2022). 데니즌십(Denizenship)을 통한 체류 외국인의 사회통합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최종렬. (2012). “사회학, 서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이론』 41:121-168.
- 페르낭 브로델. (1982). “역사와 사회과학: 장기지속”, in 신용하(편), 사회사와 사회학, 창작과 비평사, pp257-296.
- 한인정. (2022). 어딘가에는 싸우는 이주여성이 있다. 포도밭.
- Creswell. John W. and Cheryl N. Poth. (2021).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3rd). 조흥식·정선옥·김진숙·권지성 역. 학지사.
- Dator, J. (Ed.). (2002). Advancing Futures: Futures Studies in Higher Education. Connecticut & London: Praeger.
- European Committee of the Regions. (2019). From Local to European: Putting Citizens at the Centre of the EU agenda.
- Kohler, H., Billari, F., Ortega, J. (2002). The Emergence of Lowest-Low Fertility in Europe During the 1990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8(4):641-680

- Ortegon-Sanchez, A. & Tyler, N. (2016). Constructing a Vision for an 'Ideal' Future City: a conceptual model for Transformative Urban Planning. *Transportation Research Procedia* 13: 6-17.
- Park, S. (2018). A possible metric for assessing self-efficacy toward postulated futures. *Foresight* 20(1): 50-67.

2 웹사이트

- 김진영. (2023.11.20). ‘차별금지법안’ 장혜영 의원, 이번엔 ‘성별인정법’ 발의 예고. 기독교 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30200#share> (검색일: 2023.11.25)
- 대한적십자사. (2023). 원폭피해자 지원 https://www.redcross.or.kr/business/atomicbomb_support.do (검색일: 2023.10.15.)
- 이준삼. (2019). 탈북민 모자, 6개월 만에 영면... '하늘에서는 행복하기를'.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8159200504> (검색일: 2023.9.12.)
- 임아영. (2023.10.25.). 금기 넘어 달라지고 있다...사회가 먼저, 정치도 응답하라. 경향신문. <https://m.khan.co.kr/national/gender/article/202310251802001#c2b> (검색일: 2023.11.15)
- 정다민. (2023.7.10.). 북한: 성공 사례 뒤에 감춰진 진짜 탈북민의 삶... 아무도 모르게 죽는 2030 청년들. BBC 코리아. <https://www.bbc.com/korean/features-66063021> (검색일: 2023.8.30.)
- 참여연대. (2021). [판결비평] 힘을 보태어 이 변화에, 존엄과 평등이 보장되는 군을 논의해야.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831169> (검색일: 2023.11.25)
- 통일부 홈페이지, 북한이탈주민정책, 최근현황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 (검색일: 2023.9.12.)
- 홍윤지. (2023.10.30) 트랜스젠더 법원 판결에 ‘미묘한 변화’.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192578?serial=192578> (검색일: 2023.11.15)

Abstract

A Study on Dialogue with Citizens Regarding the Future: Finding Emerging Citizens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Dialoguing with citizens regarding the future is the core part of a research project in which researchers forecast the future together with citizens who discuss their preferred future society. The research is meaningful in that the future should not be the exclusive domain of a few experts or the government, but should rather be completed with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individuals while carefully considering the daily lives of citizens.

This year, we met a variety of citizens, including residents of Busan, young politicians, atomic bomb victims, nuclear power plant villagers, multicultural immigrant women, youth in family care, teachers at alternative schools, local graduate school students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ttorneys for juvenile offenders, women defected from North Korea and their children, and sexual minorities.

Together, we forecasted several possible futures and discussed which of them we hoped would come to fruition and what necessary policies they would entail. When looking at the future, these people said that they wish there would be more opportunities like this.

This study analyzes what kind of future our society should pursue from the perspective of minorities and the weak. These efforts are an essential process to realize a mature society that takes care of minorities and the vulnerable community above all else according to the preferred future presented by the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for 2021.

Researchers prefer the expression ‘emerging citizens’ rather than minorities and the vulnerable community. Minorities and the weak in our

society are considered objects of one-sided benefits that society must take care of. However, the researchers believe that the problems they raise are ones that our society must solve for the future. In that respect, they are not beneficiaries but rather innovators in our society.

Citizens who participated and cooperated in this year's research testify that we can create a new future together with them.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deepest gratitude to the researchers who pursued the study by meeting citizens from various fields,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and held future outlook workshops. Additionally,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deepest gratitude to the local citizens, social activists, experts, and young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research. We believe that future alternatives can be found in the activities of these people, and that policies developed together with them will be useful. Dialogue about the future with emerging citizens must continue.

We hope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productive data to present and advance an alternative future in our society.

국민과 미래대화 연구: 이머징 시티즌을 찾아서

발 행 2023년 12월 31일
발 행 인 김 현 곤
발 행 처 국회미래연구원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전 화 02)786-2190
팩 스 02)786-3977
홈페이지 www.nafi.re.kr
인 쇄 처 명문인쇄공사 02)2079-9200

©2023 국회미래연구원

ISBN 979-11-986487-1-6 (95330)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